

---

11-1092000-000067-01

연구보고 20-R39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책임연구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권향원 (아주대학교·교수)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최한수 (경북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연구요약

### 1. 연구추진 개요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관련 계획 및 정책방안, 청년 실태 및 정책여건 등을 분석하여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역할과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도출하는데 있음.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안)의 초안을 마련해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①정책대상자인 청년 실태 및 청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 ②청년정책 기본계획, 대책 분석 및 정책사업 분석·평가, ③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방향 도출, ④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구성(안) 제안, ⑤성과목표 및 측정지표(안) 개발을 내용으로 함. 청년 실태 분석 및 청년정책 분석·평가를 위해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이 활용되었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을 위해서 청년정책분야별 정책델파이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구성(안)은 부처·지자체 정책 실무협의회 및 청년 간담회,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통해 수립하였음.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안) 개발은 2차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음.
-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이 연구는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년정책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음. 일자리 분야와 교육 / 참여분야, 주거 / 복지분야, 행정 / 재정 / 성과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음.

연구 추진절차는 1단계 청년 실태 및 환경 분석, 2단계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책 및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3단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과 기본계획 구성(안) 제안으로 이루어짐.

## 2.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 **(정책 대상 분석)** 대상자로서의 청년에 대한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대상자로서의 청년은 일반 청년(전체 청년, 청년 취업자,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학생)과 취약계층(미취업 청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청년 니트 및 고립청년, 단독가구 및 주거 취약 청년, 저소득 청년,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전체 청년) 청년인구는 1,08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이며 청년인구 중 남성은 577만명, 여성은 511만 명임. 청년인구의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52%, 광역시·특별자치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도·특별자치도(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27%임. 청년인구는 급격히 감소 중이며, 특히 19세 인구는 '00년 84만 명에서 '25년 43만 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함. 청년 한 명이 매우 소중해지는 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역할 증진이 필요함.
- (청년 취업자) 청년(20세-34세) 취업자수는 601만 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4만 명 감소하였으며, 청년 고용률은 20세 - 29세 54.6%, 30세 - 34세 76%, 20세 - 29세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38%, 30 - 39세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24%임. 청년 내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최근 3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있기에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 안정망 확보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상반기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청년 일자리 감소, 임금수준 하락, 비정규직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39세 이하 자영업자 수는 88만 8천명이며, 전체 자영업자 중 15.7%에 해당함. 39세 이하 대표가 있는 기업의 수는 105만개소이며, 전체 기업 중 16.8%임. 청년 창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대표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접근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함.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함.
- (미취업 청년) 청년(20세 - 34세) 실업자수는 54만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1천명 감소하였으나, 이는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수는 20세 - 29세 42만명, 30 - 39세 23만 명으로 각각 작년 동월대비 11만명, 4만명 증가하였음. '18년부터 '19년까지 청년 고용지표가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부터 경제지표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신규 학교 졸업자의 큰 피해가 예상됨. 따라서 고용 중심 청년정책에서 사회정책 차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2020년 이후 학교 졸업자 이행 점검이 중요함. 또한, 확장실업률과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자만 아니라 단기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 등에 대한 지원 필요함.
- (대학생) 전문대에 재학 중인 청년은 약 60만 명,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은 약 198만 명, 대학원에 재학중인 청년은 약 22만 명임.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는 17,145건이며,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이자 수는 17,000명임.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인상 규제로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으나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신용유이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비부담 완화가 여전히 중요한 상황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의 휴학 및 졸업유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졸업 예정자 및 졸업 유예자들에게 대한 심리적·경제적 대응책 필요.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비진학률은 29.6%이며, 약 17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음.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57.5%, 특수목적고 졸업생의 42.5%는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등 다른 경로로 나아감. 최근 일반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비진학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반계고의 대학 비진학자들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교육정책과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 취업 연계 강화 및 실습 내실화가 필요함.
- (니트 및 고립청년) 청년(15 - 29세) 니트비율은 19.2%로, 약 185만명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고립 청년 비율은 2.7%로, 약 29만명으로 추정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는 무직 및 미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가장 심각한 상태임. 학교 -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니트상태 및 사회적 고립은 장기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청년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함.
- (단독가구 및 주거 취약 청년) 청년단독가구는 153만 가구(23%), 청년 부부가구는 143만 가구(21%), 부모동거가구는 357만 가구(53%), 기타 동거가구는 27만 가구(4%)임. 청년단독가구의 월세비중은 71.7%,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은 35.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8%로, 청년

부부가구, 청년부모가구보다 높음. 증가하는 청년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춘 청년 주거정책 확대가 필요함. 단독가구의 월세 부담 및 최저주거 기준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임대료 부담 및 주거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 중 청년의 수는 14만 5천명이며, 이는 전체 수급자 중 8.8%에 해당함. 초기청년(19세 - 24세) 일수록 경기충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빈곤을 악화가 예상됨. 청년빈곤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초기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함. 청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며, 부채는 최근 3년 간 증가함. 코로나 19로 인해 더딘 소득 증가와 급격한 부채 증가 경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다문화가구원 중 20 - 29세의 인구수는 82,177명, 30 - 39세 인구수는 171,022명으로, 전체 20 - 30대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임.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총 33,501명이며, 입국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20 - 29세는 28%, 30 - 39세는 29%를 차지함.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2세대 자녀들의 차별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주배경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 사회적 관계망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국민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민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일자리 확대, 재무 교육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청년) 20 - 34세 미혼모 수는 7,124명, 20 -

34세 미혼부 수는 1,211명이며, 30대 이하 한부모가구는 2015년 646 가구에서 2018년 725가구로 12% 증가함. 30대 이하 한부모의 학력은 고졸 및 중졸이하가 54%, 대학 이상이 46%으로, 청년층 인구의 대학교육 이수율 70%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한부모 청년에 대한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함. 한부모가구의 90% 이상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 - 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한부모와 미혼모, 미혼부는 사회적 차별 및 배제로 인해 빈곤, 주거 불안정성, 건강악화 등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부모 청년과 미혼모, 미혼부 청년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함.

- (장애를 가진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은 155,994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1.4%에 해당함. 15 - 29세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33.9%였으며, 이는 전체 청년경제활동 참가율보다 13.8%p 낮음. 청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12.3%로, 전체 청년실업률보다 1.8%p 높음. 장애 청년 맞춤형 학교 - 일자리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청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함. 또한, 청년층 장애인의 일자리 질은 전체 청년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므로 정부 및 민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수 확대, 대학교육 이수 및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등을 통해 역량개발 지원이 필요함.

- **(정책 환경 분석)** 청년을 둘러싼 환경은 거시체계 변화와 미시체계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거시체계 변화는 인구(저출산고령화), 경제(포스트 코로나 19), 사회(불평등), 국제(글로벌화), 기술(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미시체계 변화는 가족, 직장,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인구) 저출산 확대에 따른 아동, 청소년, 청년인구 감소 경향이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 경향에 따라 노인부양비 증가 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
- (경제) 2010년 이후 저성장 기조(3% 이하)가 유지되고 있으며, 청년에게 미치는 경기 악화와 재난 영향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수준의 경기 악화가 예상되며,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나 다른 파생효과(소득 감소, 불평등 확대, 계층 간/세대 간 갈등 심화, 차별 확대 등) 동시 고려, 사회통합적 접근이 중요함. 경기 악화에 따라 고용 위기 촉발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위기 최소화 정책이 필요함.
- (사회) 소득불평등 감소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함. 계층 이동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사회이동성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이 중요함.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 추세이나 코로나19로 악화가 예상되므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시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노동소득 확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함.
- (국제) 수출입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음.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경쟁 심화와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현상, 고용 없는 성장 초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체류외국인 및 유학생이 급증하였으며 외국인 입국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감소가 예상됨. 다문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통합 이슈의 부상이 예상되며,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이해 교육 등이 중요함.

- (기술) ICT를 비롯해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빠른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 심화와 기술적 실업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가족) 가족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청년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함.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함.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살 경우 자녀 독립 불가 사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는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였음. 결혼이나 출산 등은 명시적인 정책 방향으로 정하기 어렵고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직장)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증가 중이나 코로나19로 감소가 예상되므로 청년들의 소득 수준 유지 노력이 필요함. 일과 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하는 시간도 감소 추세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함. 비정규직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취업을 위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관련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 (학교) 교육 기회 여건에 대한 긍정응답은 크게 증가했으며 학교교육 효과 긍정 응답도 늘었으나 30% 수준으로 낮음.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학교 교육의 효과는 낮은 수준으로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학교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아닌 미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 직업 이행에 관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졸업 유예를 통해 재학 기간을 연장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늘어나는 유예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졸업과 취업에 대한 유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사회)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여건이나 전반적인 사회 안전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큰 불안요인은 범죄발생으로 나타남.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이 필요함. 지역사회(시도)에 대한 소속감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사회 삶의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인한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 (온라인)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 증가로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 추진 활성화가 필요함. 청년층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많고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 청년들의 디지털 콘텐츠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진출 확대가 필요함. SNS 활용(게시글 확인, 본인 게시글 업로드, 댓글이나 좋아요 등) 빈도가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를 활용한 정책 추진과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정책 추진여건 분석)** 청년정책 추진여건 분석을 위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으며, 182개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였음. 청년정책 예산여건 분석을 실시하였음.

- (법률)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연장됨. 청년기본법 개정(청년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청년시설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고 청년기본법이 타법의 모법으로 기능하도록 타법과의 관계를 명료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기본법이 신규로 제정되었으므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부처별로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금융·건강 등의 영역에 걸쳐 정책사업 추진이 확대됨. 청년정책 사업 182개 중

일자리 사업은 94개(51.6%)로 전체 관리과제 중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41개(22.5%), 주거 13개(7.1%), 참여·권리 17개(9.3%), 생활 17개(9.3%) 순이었음. 청년정책 정의에 부합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산 연령이 청년기본법이 제시한 19세 - 34세를 80% 이상 포괄하는 사업은 총 28개(15.4%)에 불과하며, 주요사업은 48개(26.4%), 기타사업은 106개(58.2%)였음. 182개 과제의 예산 중 핵심정책 예산은 전체 청년정책사업 예산의 67.0%임. 정책사업의 문제점은 각 부처에서 정의하는 청년정책 범위가 달라 제출 자료가 제각각이라는 점, 정책 영역의 불균형(5개 정책 영역중 일자리 영역 정책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 정책 유형의 불균형(청년 당사자 지원 외에 청년을 둘러싼 환경 개선(근로환경 등)을 위한 정책사업 제약), 대상 선별기준의 제약(대상자 선별을 가구단위로 하여 다수 청년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이 분석됨. 정책방향으로 청년정책 정의에 따른 정책 범위 명확화, 청년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책 영역 포괄성 확보, 정책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상자 확대 및 선별기준 조정 방안 마련, 중앙 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청년정책 기본 계획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함.

- (예산) 2019년 부처 제출 원안 총예산 21조8,178억 원 중 주거(54.8%), 교육(22.7%)이 일자리(21.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참여·권리와 생활 분야의 예산은 1천억 원대로 0.5%였음. 대상지원 예산은 77.1% (환경개선 22.9%), 보편사업은 전체 예산의 3.8%, 금전지원이 70.1%였음. 청년정책사업 예산 범위 문제(주거 및 건설), 정책 영역별 불균형 문제(주거 예산 집중), 중앙부처 매칭 사업 문제(중앙부처 - 지자체 매칭 사업이 거의 없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방향으로 균형적 접근을 통한 영역별 예산 조정(복지, 금융, 건강 관련 사업 예산 증대), 청년 당사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예산 증대, 지역적 상황에 맞는 특화정책 설계가 필요하나,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 필요함.

- **(기존 청년정책 분석 및 평가)**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청년 관련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33개 기본계획, 58개 대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건강 영역 등 5개 청년 정책 영역별로 기본계획 및 대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 (일자리) 취업, 창업, 일자리 환경개선 중 취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청년연령에 부합하고 청년을 위해 추진한 핵심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자활동지원금,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등이 있음. 직장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일자리 환경 관련 정책이 미흡하며,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취업, 일자리 환경개선보다 낮은 편임. 취업, 창업과 더불어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경영 관련 사업(갑질근절,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 청년창업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정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조정 검토가 필요함.
- (교육·훈련) 교육·연수·실습, 교육비 지원 중 교육비 지원에 집중(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분야 핵심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희망사다리 장학금, 일·학습병행제 등이 있음. 교육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은 높은 편이지만, 재학생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 기술 등을 습득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증진 관련 사업이 미흡함. 교육훈련 영역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은 주로 재학생(중고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취업자와 미취업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책방향은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의 지속적 확대, 청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서비스를 통한 역량 증진 사업 확충,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 하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재학 청년, 학교 밖 청년, 소외계층 청년, 직업훈련기 청년, 대학비진학 청년, 재직 청년 대상 사업 등) 구상이 필요하며, 현재 사업들이 주로 간접지원(기관이나 프로그램 지원) 방식을 따르고 있어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가 필요함.

- (주거)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여건 개선 사업 중 주택공급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중이며, 주택공급 중 대부분 예산은 주택건설, 대출금에 집중됨. 핵심 사업으로는 청년 전·월세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대학기숙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음. 높은 예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실효성은 다른 영역보다 낮은 수준임. 신혼부부 등에 집중되어, 청년 수혜자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만족도도 낮은 편임.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은 비체계적임. 주된 지원이 대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연령기준과 소득기준도 달리 운영 중이며, 융자한도와 대출 이율도 다름. 정책부담 가능한 주거비 지출과 안정된 주거 점유형태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정책방향으로는 청년 주거안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 확대, 신혼부부 이외에 1인 청년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청년을 위한 지원 확대, 지하,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청년지원확대가 필요함.
- (활동·문화·참여) 참여·활동 관련 청년정책 사업 과제 수와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핵심 사업으로 청년 참여 플랫폼,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등이 있음.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정책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별 의견수렴 기구 역시 미흡함. 실효성도 낮은 편임.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서비스 지원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정책방향으로 청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단위 의사수렴기구 재정립. 다양한 활동,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복지·금융·건강) 금융, 소득·자산, 건강 관련 사업 등이 추진됨. 핵심 사업으로는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청년 국가건강검진, 건강상담지원 서비스 등이 있음. 금융 및 소득·자산 정책의 경우 가구단위 저소득층, 부채부담이 큰 특정집단 대상 사업 추진으로 수혜자 수가 매우 적고, 정책 실효성도 낮은 편임. 건강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심리정서 관련 건강서비스 등이 미흡. 정책 방향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보편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또한, 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 청년기 고위험 특정 질병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함.

●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정책담당자 의견 수렴)** 청년 당사자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로서 청년 간담회를 진행함. 청년 단체 관계자 간담회와 일반 청년 간담회를 운영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청년 간담회의 주요 초점은 기본계획(안)의 비전, 목표, 과제 등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임. 청년들은 비전과 목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 하였으나, 현재의 비전과 목표를 유지하거나 미시적인 수정을 하는 수준에서 만족하였음.
- 구체적 정책 영역에서는 단순한 일자리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자리 환경의 개선, 일 - 생활 균형 및 일 - 가정 양립 보장,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교육과 훈련의 낮은 질을 개선하는 방향 제안, 주거 영역에

서는 안정적 주거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안전한 주거에 대한 과제 마련을 제안하였음. 참여·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청년 활동과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제안, 복지·금융·건강 영역에서는 심리상담 및 자산격차 완화 등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음. 이외에도 코로나 19 이후의 대응, 젠더 관점의 반영 등 기본계획(안)의 추가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 청년들의 목소리는 자신의 삶의 질과 권리 차원에서 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있어 청년정책이 청년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음. 청년들은 여러 정책들이 생성되어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환영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다만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이나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음. 청년층이 공평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 이 연구에서는 1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 기본방향을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음.

-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① 청년당사자 접근, ② 균형적 접근, ③ 실효적 접근, ④ 협력적 접근 등 4가지를 제시함.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정하고 비전, 목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기존 청년 청년 관련 생애주기 기본계획, 대책, 방안 등을 분석하였음.

### 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 **(정책 비전 및 목표(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안)은 “행복한 삶을 사는 청년, 함께 성장하는 사회”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로 “청년의 다양한 권리 실현”,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한 이행 여건 조성”을 제시함.
  
- **(정책과제(안) - 일자리)**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안)는 1-1. 청년 노동기본권 보장, 1-2. 청년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직장환경 개선, 1-2.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1-3. 청년 공정 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 1-4.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인프라 체계화,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등 6개 과제로 구성되었음.
  -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는 청년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처벌 강화, 청년 대상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감독 강화, 청년 산업 안전 개선, 연구실 안전 보장 강화, 청년 및 청소년 노동조건 보호 강화,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의 과제가 포함됨.
  - (1-2) 청년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직장환경 개선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청년 일·생활 균형 직장 문화 확산, 가사, 출산, 육아 참여 권리 보장, 청년 친화기업 인증 및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 청년 친화기업 정보통합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등의 과제가 포함됨.
  - (1-3) 청년 공정채용 및 구직활동지원에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한국형 청년 보장제 단계별 도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별도 유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 증지요건 개선 및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청년 직장 체험 및 박람회, 청년 취업아카데미 활성화, 청년 여성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 완화, 위기청소년 및 청년 사회복귀 지원, 청년 장애인 취업 지원, 탈북 청년 취업 지원청년 장병 및 제대군인, 사회복지무요원 취업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됨.

- (1-4)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에는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 사업화 지원, 분야별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체계화, 청년 창업 지원체계 연계강화 및 통합 플랫폼 마련, 청년창업 활동공간 확대 및 청년창업 청년 상가 공급, 소셜 벤처 육성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체계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및 확대, 청년전용창업자금 조성 및 창업펀드 추가 조성, 분야별 청년 창업 펀드 조성, 청년 콘텐츠기업 펀드 조성 및 확대,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 및 수산 모태펀드 조성 및 확대 등의 과제가 포함됨.
-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분야별 청년 일자리 및 인턴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정책 자금 지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청년 고용 의무제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실화, 직업 계고 졸업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등의 과제가 포함됨.

● **(정책과제(안) - 교육·훈련)** 교육·훈련 분야 추진과제(안)는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임.

-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과제에는 대학생 및 군인 진로탐색 및 자기 계발 기회 확대사업,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을 청년 취성패 방식으로 변경(개선과제),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 포함됨.

-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 보장 과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및 학내 민주주의 강화, 교육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강화, 대학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포함됨.
  -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과제에는 국가장학금 확대(개선과제),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개선과제),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국가근로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이 포함됨.
  -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구축 과제에는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 사업(개선과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고교취업연계장려금, 기업대학, 일학습병행제,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개선과제), 대학생 현장 실습제도 개선 사업이 포함됨.
  - (2-5)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 조성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 성인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내실화,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유급학습휴가제 확산이 포함됨.
- **(정책과제(안) - 주거)** 주거 분야 추진과제(안)는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 교육 확대, 3-2. 청년 주거부담 완화,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임.
-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과제에는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개선과제)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주거관련 정보에 관한 교육과 관련 컨설팅 제공(개선과제)이 포함됨.
  - (3-2) 청년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급여 청년가구를 분리지급 하는 방안과 취약 청년 주거지원 확대와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개선과제)가 포함됨. 개선과제인 청년 전·월세 지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이외에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토부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및 보증부 대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과제에는 저렴한 주거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공급 체계화가 포함됨. 저렴한 주거공급 확대 과제에는 공공 임대주택 진입 기회 확대,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수요자 맞춤형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이 포함됨. 청년 주거공급 체계화를 위해 청년 주거포털을 통해 정부의 주거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제공함.
-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과제에는 지옥고 등 청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 환경 개선이 포함됨. 노후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 지옥고 등 비주택 거주 청년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정책과제(안) - 참여·문화·활동)** 참여·문화·활동분야 추진과제(안)는 4-1. 청년정책참여 및 권한 강화, 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4-4. 청년 참여 및 활동 추진여건 조성임.

- (4-1) 청년정책참여 및 권한 강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관 지정 및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 일정 비율 청년 위촉, 청년 참여 플랫폼 체계화 및 확대, 청년참여 기반 청년 정책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청년 고용정책참여단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청년 참여단 운영, 청년 참여를 통한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군·경 장병 대상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청년 체감 공정과제 제도 개선 및 국민생각함 청년 참여 확대 등의 과제가 포함됨.
- (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에는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청년 인권

교육 활성화, 세대 간 상호이해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성 평등 문화 확산 및 의식 제고 등의 과제가 포함됨.

-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에는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청년 문화 및 교류 사업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등의 과제가 포함됨.
- (4-4) 청년 참여 및 활동 추진여건 조성에는 청년의 날 운영, 청년정책 포럼 운영, 생활 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청년 공간 조성 사업(활동 공간, 문화공간, 여가공간 등) 등의 과제가 포함됨.

● **(정책과제(안) - 복지·금융·건강)** 복지·금융·건강 분야 추진과제(안)는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 출발 보장, 5-4. 청년 부채경감,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임.

-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과제에는 청년 재무역량 강화 및 금융교육 확대를 개선과제로 제안함. 현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을 청년저축계좌(청년 사회 첫출발 계좌)와 연계해 지원하고, 청년활력센터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임.
-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과제에는 청년을 위한 예방적 건강 서비스 확대와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가 포함됨. 청년을 위한 예방적 건강서비스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우울증 검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개선하는 것과 군복무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이 포함됨.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를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개선과제)와 청년기 자살예방 사업의 생애주기 연계 내실화를 제안함.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심리, 정서적 문제에 관한 상담서비스 지원 확대를 개선과제로 제안함.

-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과제에는 청년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와 청년기 자산형성을 통한 사회출발 보장이 포함됨. 시설보호 종료 아동, 시설퇴소 청소년, 한부모 청년 대상 자립수당과 기초보장수급가구 청년기 자녀의 일시적 별도가구 인정이 포함됨. 청년기 자산형성을 통한 사회출발 보장은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청년 사회첫출발계좌(개선과제)와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으로 구성됨.
- (5-4) 청년 부채경감 과제에는 청년 부채부담 완화와 사회초년생 신용 지원을 포함함. 청년 부채부담 완화 과제에는 저소득·저신용 청년 및 대학생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포함됨. 사회초년생 신용지원 과제에는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을 제안함.
-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과제에는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확대와 청년 생활지원이 포함됨.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확대를 위한 빈곤 청년(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인센티브 확대, 청년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청년 생활지원 과제에는 청년형 ISA의 신규가입시한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개선과제),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발급제도 폐지가 포함됨.

#### 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지표(안)

- **(개발방향 및 방법론)** 성과지표 개발의 목적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의 핵심 과제 달성을 실질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기본계획의 성과치 측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 정책과제들의 연속성, 정책효과의 실질성, 성과지표들의 연계성, 그리고 측정의 단계별 연속성들을 고려해야 함.
  - 본 장에서는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 분석 틀 개발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지수 개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4단계로 설정하였음. 1단계에서는 범부처가 추진해온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검토를 실시하였음.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청년정책지수 개발단계로 대상자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과 과제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음. 3단계는 각 부처의 기존 성과지표들이 청년정책지수에 포함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부적합 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로 설정하였음. 4단계에서는 청년정책지수에 포함된 핵심과제들의 단계적 완수를 위한 정책입안자들의 목표치 설정검토가 포함되었음.
  
- **(기존 청년정책 성과지표 분석)** 1단계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분석에서는 정부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182개 청년정책 현황 및 성과지표 현황을 분석하였음.
  - 부처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182개 청년정책 중 고용부(22개)와 과기부(21개), 국토부(18개), 금융위(15개), 중기부(15개)등 5개 부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6대 대분류별 정책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이 60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자리(50개, 27.5%), 주거(21개, 11.5%), 생활(13개, 7.1%), 참여(9개, 4.9%), 추진체계(7개, 3.8%)의 순으로 나타남.

- 예산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2개 청년정책 중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143개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예산규모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25조 8,855억 원으로 파악되었는데 6대 대분류 정책 영역 중 주거 부분이 15조 2,3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5조 7,882억 원), 일자리(3조 4,480억 원), 생활(1조 4,820억 원), 참여(15억 원)의 순이었음.
  - 기존 범부처 182개 청년과제 중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경우는 162개 (89.0%)이었으며, 성과지표에 따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158개로 파악되었음.
- **(청년정책지수 개발)** 2단계 청년정책지수의 프레임워크 개발에서는 청년정책 지수를 개발하였음.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의 정책과제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21개 중분류 과제들을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과 차원간의 관계를 중요도로 연결한 후, 개별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치 달성비율을 중요도를 반영해 통합 점수화 하는 청년정책지수의 세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음.
    - 중요도 산정은 ① 정책 수혜자인 청년이 어떤 청년정책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 ② 정부예산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5대 차원 중요도와 22개 요인 중요도, 182개 개별 과제 중요도를 산정해 청년정책지수의 중요도를 산정하였음.
- **(기존 성과지표 검토·수정)** 3단계 기존정책의 성과지표 검토에서는 청년정책 지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성과지표들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으며, 성과지표가 없었던 경우는 신설하였음.

- 182개 개별 과제 중 신설된 지표는 20개, 변경된 지표는 35개, 기존 지표를 유지한 경우는 127개였음.

● **(기존 목표치 검토·수정)** 4단계 목표치 검토에서는 기존 청년정책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검토하였으며, 목표치가 없었던 경우는 목표치를 신설하고, 기존 목표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치를 변경하였음.

- 182개 개별 과제 중 새롭게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54개로 파악되었으며, 목표치 설정 기본방향에 따라 각 과제의 '21년도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5.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언

● **(정책추진 측면)** 이 연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비전, 목표, 과제(안)를 청년 당사자 실태분석, 환경분석, 정책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안)를 신규과제, 개선과제, 유지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신규과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 사업을 담고 있어서 해당 부처와 추진 여부를 비롯하여 사업 방향에 대한 조율과 구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사회 첫 출발계좌 도입, 청년센터 설치 등). 개선과제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처 및 지자체 협의에 있어서 개선과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유지과제는 기존 부처에서 시행 중인 과제로 과제 자체에 변동이 없음. 기존 사업들을 청년정책 사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부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추진에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1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들을 정해 이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셋째, 이미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의 사례가 있으므로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1년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추진체계와 추진사업 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 진단 및 평가 측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 목표에 따라 정책과제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함.

- 본격적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는 향후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에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성과지표를 균등하고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보고 11-1092000-000067-01

## I. 연구추진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3.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 ..... 13

## II.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 1. 정책 대상 및 환경 분석 ..... 19
- 2. 기존 청년정책 분석 및 평가 ..... 124
- 3. 청년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 수렴 ..... 195
- 4.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 ..... 212

## III.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 1. 정책 비전 및 목표(안) ..... 221
- 2. 정책과제(안) ..... 224
- 3. 정책 추진 기반(안) ..... 256

**IV.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지표(안)**

-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 측정의 개발 방향과 방법론 ... 267
- 2.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분석 ..... 270
- 3. 청년정책지수의 개발 ..... 278
- 4. 기존 정책의 성과지표 검토 및 수정 ..... 286
- 5. 기존 정책의 목표치 검토 및 수정 ..... 287
- 6. 청년정책 개발지수의 한계점 ..... 288

**V.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언**

- 1. 정책 추진 측면 ..... 293
- 2. 정책 진단 및 평가 측면 ..... 297

**참고문헌** ..... 299

**부 록** ..... 309

## 표 목차

표 II-1. 주요 정책 대상 청년	20
표 II-2. 청년의 일반적 특성 및 정책방향	24
표 II-3. 청년 취업자 특성 및 정책방향	28
표 II-4.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특성 및 정책방향	30
표 II-5. 미취업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33
표 II-6. 대학생 특성 및 정책방향	35
표 II-7.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37
표 II-8. 니트(NEET) 및 고립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38
표 II-9. 주거 빈곤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40
표 II-10. 저소득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43
표 II-11.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46
표 II-12.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48
표 II-13. 장애를 가진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50
표 II-14. 미래 영향 요인별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전망	51
표 II-15. 청년 연령별 합계출산율 추계	54
표 II-16. 인구(저출산·고령화)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55
표 II-17. 경제(포스트코로나)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59
표 II-18. 사회(불평등)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64
표 II-19. 국제(글로벌화)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66
표 II-20. 기술(4차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68
표 II-21. 가족 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72
표 II-22. 직장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77
표 II-23. 학교 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81
표 II-24.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85
표 II-25. 온라인 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88
표 II-26. 청년정책 추진여건 분석 : 법률	90
표 II-27. 청년정책 추진여건 분석 : 정책사업	91

표 II-28. 182개 관리과제 청년정책분류체계 대분류별 과제수 및 예산 .....	95
표 II-29. 복지예산의 생애주기별 분류 .....	96
표 II-30. 182개 관리과제 청년정책분류체계 중분류별 정책 과제수 및 예산 .....	98
표 II-31. 중분류별 정책 대상 전체 지원 및 소득 제한 여부 (사업수 기준) .....	100
표 II-32. 중분류별 정책 대상 전체 지원 및 소득 제한 여부 (예산액 기준) .....	101
표 II-33. 중분류별 정책 대상 및 환경 여부(사업수 기준) .....	103
표 II-34. 중분류별 정책 대상 및 환경 여부(예산액 기준) .....	103
표 II-35.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비전·전략 및 주요 청년정책 ..	112
표 II-36. 부처별 청년정책의 주요 위탁기관(공공부문) 및 위탁형태 .....	118
표 II-37. '청년인턴채용 기업' 사업의 수행주체(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시 .....	119
표 II-38. 지역청년센터 현황 .....	121
표 II-39.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참여거버넌스 운영현황 .....	122
표 II-40. 청년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 청년정책 프레임별 분석 결과 .....	125
표 II-41. 청년 일자리 관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126
표 II-42. 청년 일자리 관련 종합대책 주요 내용 .....	128
표 II-43. 청년 일자리 관련 종합대책을 제외한 주요 대책 내용 ..	130
표 II-44. 청년 일자리 주요 부처별 정책 과제 .....	132
표 II-45.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	135
표 II-46. 중앙부처의 청년 교육·훈련 관련 주요 기본계획 .....	140
표 II-47.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사업 .....	145
표 II-48.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	149
표 II-49. 2020년 주거종합계획 상 공공주택 공급계획 .....	153
표 II-50. 청년 주거지원 관련 종합대책 주요 내용 .....	154
표 II-51.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중 주거분야 .....	156
표 II-52.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전용상품 지원 실적 .....	157

표 II-53. 청년 주거정책 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159
표 II-54. 청년 참여·활동 관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62
표 II-55.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중 참여·활동분야	164
표 II-56. 청년 참여·활동정책 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165
표 II-57.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68
표 II-58.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대책 주요 내용	170
표 II-59.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중앙부처 사업 현황	176
표 II-60.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	178
표 II-61. 청년 복지·금융·건강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179
표 II-62. 유럽연합 청년보장제의 프로그램 예시	185
표 II-63. 영역별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193
표 II-64. 델파이 조사 진행 개요	196
표 II-65. 델파이 주요 문항	197
표 II-66. 델파이 참여 전문가	198
표 II-67.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타당성 검토	199
표 II-68.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타당성 검토	200
표 II-69. 청년정책 추진과제 타당성 검토	201
표 II-70. 청년단체 관계자 간담회 참여자 정보	203
표 II-71. 일반청년 간담회 참여자 정보	203
표 II-72. 청년 간담회 개요	205
표 III-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처 제출사업 현황 (2020년 2월, 7월)	225
표 III-2. 국무조정실 부처 제출사업 연구진 재분류(2020년 7월기준)	225
표 III-3.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과제(안)	227
표 III-4.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핵심과제(안)	227
표 III-5. 청년정책 기본계획 코로나 19 과제 및 취약계층 대상 정책과제(안)	229
표 III-6.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존중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과제(안)	231
표 III-7.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과제(안)	232

표 III-8.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공정 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 과제(안) .....	233
표 III-9.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과제(안) .....	234
표 III-10.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과제(안) .....	235
표 III-11.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취업자 고용 유지 및 고용안정' 과제(안) .....	236
표 III-12.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과제(안) .....	237
표 III-13.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과제(안) .....	238
표 III-14.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과제(안) .....	238
표 III-15.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과제(안) .....	239
표 III-16.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과제(안) .....	240
표 III-17.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과제(안) .....	241
표 III-18.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부담 완화' 과제(안) .....	242
표 III-19.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과제(안) .....	243
표 III-20.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여건 개선' 과제(안) .....	243
표 III-21.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부여 강화' 과제(안) .....	244
표 III-22.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과제(안) .....	245
표 III-23.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과제(안) .....	246
표 III-24.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참여 및 문화, 활동 추진여건 조성' 과제(안) .....	246

표 III-25.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금융역량 강화’ 과제(안) .....	247
표 III-26.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과제(안) .....	248
표 III-27.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과제(안) .....	249
표 III-28.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방안 대안 검토 .....	250
표 III-29. 매칭형 선별지원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부여 관련 검토 .....	252
표 III-30.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방안 .....	254
표 III-31.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부채경감’ 과제(안) .....	255
표 III-32.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과제(안) .....	255
표 III-33.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과제(안) .....	257
표 III-34.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추진 체계화’ 과제(안) .....	258
표 III-35. 소득기준이 있는 청년 정책사업의 가구소득 판별기준 .....	259
표 III-36. 주요 청년정책의 가구소득 판정 기준 개선(안) .....	260
표 III-37.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과제(안) .....	260
표 III-38. 청년센터 설치 관련 주요 검토내용 .....	261
표 III-39. 청년센터 설치(안) 비교 .....	262
표 III-40.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중앙·지자체,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과제(안) .....	263
표 IV-1.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현황 .....	271
표 IV-2.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의 예산유무와 규모 (부처별) .....	273
표 IV-3. 청년기본법 제정 전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의 예산유무와 규모 (중분류별) .....	274
표 IV-4. 청년기본법 상 중분류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존재여부 .....	275
표 IV-5. 청년기본법 상 중분류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존재여부 .....	277

표 V-6. 청년정책지수 (가안) .....	280
표 V-7. 청년정책지수 산정의 구성요인과 내용 .....	280
표 V-8.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년정책지수의 중요도 산정 .....	282
표 V-9. 개별 정책과제의 예산 규모를 활용한 개별과제의 중요도 산정 .....	283
표 V-10. 정책 목표별 중요도 산정(안) .....	284
표 V-11.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의 검토 결과 및 변경 상황 .....	286
표 V-12.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의 검토 결과 및 변경 방식 .....	287
표 V-13.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결과 .....	288
표 V-14. 거시지표 대안 .....	290

## 그림 목차

그림 I-1. 청년정책 델파이조사 추진 절차 .....	9
그림 I-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안) 마련 절차 .....	10
그림 I-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기본계획 TF 구성(안) .....	11
그림 I-4.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참여연구진 .....	13
그림 I-5. 주요과업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참여연구진 역할 .....	14
그림 I-6. 단계별 연구추진 절차 .....	15
그림 II-1. 청년인구 추세 (2000 - 2025) .....	21
그림 II-2.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 조건 .....	23
그림 II-3. 청년 취업자 수 추세 (2000 - 2020) .....	25
그림 II-4. 청년 고용률 추세 (2000 - 2020) .....	26
그림 II-5. 청년 월평균 임금 추세 (2006 - 2019) .....	27
그림 II-6. 자영업자 중 청년 비율 (2007 - 2019) .....	29
그림 II-7. 청년 실업자수 추세 (2010 - 2020) .....	30
그림 II-8. 청년 실업률 추세 (2000 - 2020) .....	31
그림 II-9.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응답자 수 (2000 - 2020) .....	32
그림 II-10. 학자금 미정리체납 건수 및 금액 (2014 - 2018) .....	34
그림 II-11. 대학 비진학자 수 및 비진학률 .....	36
그림 II-12. 청년 가구 형태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 .....	39
그림 II-13. 청년 가구 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40
그림 II-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수 (2010 - 2018) .....	41
그림 II-15. 청년 빈곤율 (2006 - 2016) .....	42
그림 II-16. 청년 다문화가구원 수 (2015 - 2018) .....	44

그림 II-17. 북한이탈 주민 입국자 수 .....	45
그림 II-18. 청년 미혼모, 미혼부 .....	47
그림 II-19. 청년 한부모가구 .....	47
그림 II-20. 장애를 가진 청년 .....	49
그림 II-21.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와 미시체계 .....	52
그림 II-22. 합계출산율과 노인부양비 추세 (2020 - 2025) .....	53
그림 II-23. 성별 장래 기대수명 추세 (2010 - 2025) .....	55
그림 II-24. 경제성장률 추세 (2010 - 2020) .....	56
그림 II-25. 세대별 출생기간 중 국내 GDP 성장률 (연평균) .....	57
그림 II-26. 경기심리지수 (E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추세 (2003.04 - 2020.04) .....	58
그림 II-27. 최종소비지출 및 소비자 경기전망 (CSI) 추세 (2000 - 2020.04) .....	59
그림 II-28.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 추이 (2011 - 2018) .....	60
그림 II-29. 임금노동자 소득격차 (9분위/1분위) 추세 (2000 - 2016) .....	61
그림 II-30.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2018년 2/4분기 - 2020년 1/4분기) .....	62
그림 II-31.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2006 - 2019) .....	62
그림 II-3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2000 - 2018) .....	63
그림 II-33.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 건수 (천 건, 2000 - 2019) .....	64
그림 II-34.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및 내국인 출국자 수 (천 명, 2000 - 2018) .....	65
그림 II-35. 우리나라 ICT 기업체 수 및 매출액 추이 (2000 - 2018) .....	66
그림 II-36.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별 기업 도입 전망 (%, 2018 - 2022) .....	67
그림 II-37.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별 고용변동 영향 .....	67
그림 II-38. 청년층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 2000 - 2025) .....	69
그림 II-39. 60세 이상 자녀 동거 사유 변화 추이 (%, 2009 - 2019) .....	70
그림 II-40. 청년 결혼 선호도 및 조혼인율 추이 (%, 1,000명당 건, 2010 - 2019) .....	71

그림 II-41. 40대 대비 청년층(15 - 29세) 월평균 임금수준 (%, 2006 - 2019) .....	73
그림 II-42. 청년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 (%, 2003 - 2019) .....	74
그림 II-43. 청년 고용안정성 '매우 많이 느낀다' 응답 추이 (%, 2011 - 2019) .....	74
그림 II-44. 청년 일과 생활 균형 '일 우선시' 응답 추이 (%, 2011 - 2019) .....	75
그림 II-45. 수도권 순유입(1인 기준) 사유별 추이 (천 명, 2010 - 2019) .....	76
그림 II-46.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응답 추이 (%, 2008 - 2018) .....	78
그림 II-47. 고교 졸업자 계열별 졸업 후 미상자 비율 추이 (%, 2010 - 2019) .....	78
그림 II-48. 대학 졸업자 계열별 졸업 후 미상자 비율 추이 (%, 2010 - 2018) .....	79
그림 II-49. 대졸자 휴학 경험 여부 및 사유 추이 (%, 2007 - 2019) .....	80
그림 II-50. 청년(15-29세) 졸업 후 첫 취업 평균기간 추이 (%, 2004 - 2019) .....	80
그림 II-51.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많이 좋아짐" 응답비율 (%, 2009 - 2019) .....	82
그림 II-52. 사회 안전수준이 "많이 + 비교적 개선" 응답비율 (%, 2009 - 2019) .....	82
그림 II-53. 20대 청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응답 추이 (%, 2008 - 2018) .....	83
그림 II-54.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점, 2013 - 2019) .....	84
그림 II-55.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 2000, 2009, 2019) .....	84
그림 II-56. 수도권 청년 순유입(1인 기준) 추이 (천 명, 2010 - 2019) .....	85
그림 II-57. 인터넷, PC, 게임을 활용한 여가활동 비율 (%, 2000 - 2019) .....	86
그림 II-58. 세대별 디지털 콘텐츠 이용비율 추이(%, 2015 - 2019) .....	87

그림 II-59. 세대별 SNS 이용비율 추이(% , 2017 - 2019) .....	87
그림 II-60. 세대별 SNS 활동 유형별 “하루에도 여러 번” 빈도 (% , 2019) .....	88
그림 II-61.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체계 .....	113
그림 II-62. ‘청년정책추진단’ 조직도 .....	114
그림 II-63. 청년정책추진체계 현황(기본계획 시행 이전의 현황) ..	116
그림 II-64. 재정투입의 사일로(silo) 방식 개념도 .....	117
그림 II-65. 청년인턴채용 사업 사례로 보는 사업분절성과 정책대상의 행정부담 .....	120
그림 II-66. 장기주거종합계획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청년 주거지원 .....	152
그림 II-67.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율 .....	174
그림 II-6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령별 수급률(2018년) .....	174
그림 II-69.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의 서비스제공 진행경로 .....	184
그림 II-70. 유럽연합 구조화된 대화 운영 추진체계 .....	189
그림 II-7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본방향(안) 도출과정 .....	216
그림 II-7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본방향(안) .....	217
그림 III-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1안) .....	222
그림 III-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2안) .....	223
그림 IV-1.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을 위한 Framework .....	269
그림 IV-2. 청년정책의 성과측정 프레임워크 .....	279

# ○ ————— 제1장 연구추진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용불안과 더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동시에 청년들은 소득 감소와 함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불안감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청년들의 어려움이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정책추진 체계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이 구성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1)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하고 있다. 이어서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인 진단과 더불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대책과 사업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관련 계획 및 정책방안, 청년실태 및 정책여건 등을 분석하여 국가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역할과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안)의 초안을 마련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정책대상자인 청년 실태 및 청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

#### (1)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전체 청년의 특성과 더불어 취업자, 학생, 미취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계층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와 사이버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2017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2019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고용률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들어 청년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양적인 고용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여건 개선도 필요한 상태이다. 청년들의 임금 수준은 최근 3년 간 개선되었으나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첫 직장 근속기간은 짧아졌고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평균 10개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년 가구의 전년 대비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비중은 증가하였고 독립생활이 불가능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집값이 걱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증거 기반 정책(evidence - based policy)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의 실태와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동시에 환경 분석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청년정책 실태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청년 실태 및 환경 분석은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 주거실태조사 등 국가 승인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책 분석 및 정책사업 분석·평가

### (1)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을 포함하는 각종 기본계획 및 대책, 방안과 정부에서 추진해 온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청년 관련 사업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58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청소년, 장애인과 같이 대상 중심 기본계획은 26개였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특정 기능 중심 기본계획 중에서 청년 관련 과제나 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은 33개였다. 특정 분야를 다룬 기본계획 중에서 청년 관련 과제나 사업을 포함한 기본계획은 교육 및 훈련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자리가 6개, 건강이 5개, 참여 및 문화, 교류와 복지 및 생활안정이 4개였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대체로 5년간의 장기계획을 담은 기본계획 외에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거나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마련되는 대책이나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책이나 방안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정책 유형별로 보면, 청년과 같이 특정 대상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은 14개였고 고용, 교육과 같이 특정 기능 중심의 대책이나 방안은 25개였다. 기본계획과는 달리 2개 이상의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이나 방안은 2개였고 대부분은 특정 분야를 다루는 대책이나 방안이 발표되었다. 특정 분야만을 다룬 대책이나 방안 중에서 일자리분야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및 훈련분야가 7개, 주거 분야가 6개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17. 5. 10.)이후 직접적으로 청년정책을 다룬 대책이나 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 이후 고용 이외에 주거나 금융 관련 지원을 추가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13개였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방안이 5개였고 청년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책이 3개,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관련된 대책이나 방안이 3개였다. 이밖에 주거 대책이나 방안을 비롯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등이 발표되었다.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룬 대책으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에서 2020년 3월 ‘청년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 2020).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은 162개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 영역은 취업 분야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2019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 제출한 청년정책 182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배진우, 이민정, 2019). 182개 관리과제 중 일자리 사업은 94개(51.6%)로 전체 관리과제 중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41개(22.5%), 주거 13개(7.1%), 참여·권리 17개(9.3%), 생활 17개(9.3%) 순으로 높았다.

2019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은 각각 724개, 2,837개로 총 3,561개였다. 청년온라인센터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취업 분야 사업은 27.0%, 창업 분야 사업은 23.1%로 일자리 사업 비중이 50.1%로 나타나 중앙부처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기초 지자체는 취업 및 창업 분야 사업 비중도 51.0%였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 대책 및 청년정책사업 분석과 더불어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변금선 외(2019)에서는 국무조정실로부터 182개 중앙행정기관 사업을 분석하였다. 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사업 182개를 핵심사업, 주요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한 결과, 청년정책 정의에 부합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산 연령이 청년기본법이 제시한 19세~34세를 80% 이상 포괄하는 사업은 총 28개(15.4%)였으며, 주요사업은 48개(26.4%), 기타사업은 106개(58.2%)였다.

변금선 외(2019)에서는 19~34세 2,36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도(평균 38.3%)과 수혜율(평균 7.2%)은 매우 낮았고, 필요수준(평균 85.9%)보다 도움 정도(73.4%)가 더 낮게 나타났다. 사업 수와 예산규모가 높은 수준인 사업의 인지도, 수혜율, 필요수준, 도움 정도가 낮은 정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정책의 수요와

공급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변금선 외(2019)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느낀 청년정책에 관한 욕구나 평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향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2020)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을 개발하고, 2019년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18가지 핵심 청년정책에 대하여 실효성 진단·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김기현 외(2020)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존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청년 관련 기본계획, 대책과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은 정부 자료 및 기존 연구 등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내용은 기존 기본계획, 대책 및 방안 96개를 대상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중심 기본계획의 경우 비전, 목표, 과제,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능 중심 기본계획의 경우 과제와 성과지표 중심으로 분석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집한 182개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한 선행 연구(변금선 외, 2019) 결과를 활용해 중앙부처 청년 정책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사업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179개로 조정되어 최종 원고 작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요청해 추진 중인 협동 연구(김기현 외, 2020)의 18개 정책사업 평가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정과제 평가와 일자리 및 주요정책 평가 자료와 중앙부처 자체 평가 중 주요정책과제 평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

#### (1)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당사자 실태 및 환경분석, 기존 청년정책을 포함하는 각종 기본계획 및 정책방안을 분석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의 관계 정립 및 합리적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수립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서 5개 청년정책분야별(일자리, 교육, 주거, 참여·권리, 생활) 총 24명 규모의 정책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6월 초에 조사표를 구성한 후 7월 초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림 1-1. 청년정책 델파이조사 추진 절차

#### 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구성(안) 제안

##### (1)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 ~ '25년)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정기준을 포함하여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동시에 청년정책의 효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체계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유지 과제와 더불어 신규·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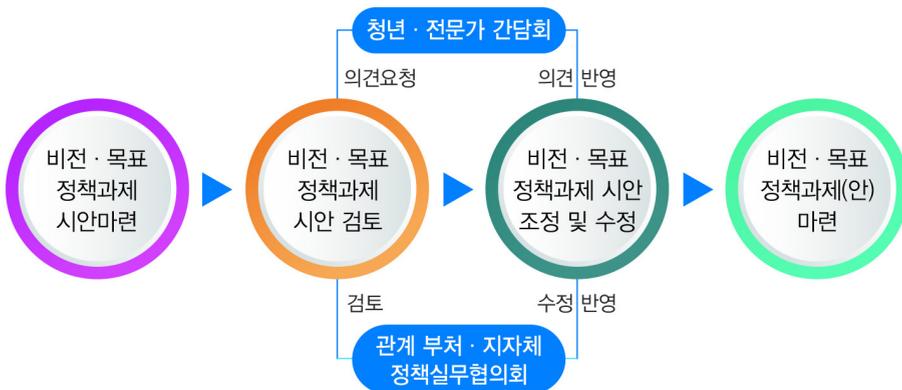


그림 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안) 마련 절차

##### (2) 연구방법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안)는 관계 부처·지자체 정책실무협의회 및 청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립하였다. 부처·지자체 정책실무협의회는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 성과지표(안)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사안별로 추진한 결과를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청년 간담회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현장 기반 신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안)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년간담회에는 청년 단체, 성별·연령별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28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비전, 목표, 과제에 대한 검토와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 전문가 간담회는 신규과제 중 보다 엄밀한 논의가 요구되는 청년 자산형성계좌, 청년 주거 수당, 학자금 부담 완화 금리비율, 청년 센터를 비롯한 전달체계 구축 등에 대해 자문과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운영하는 민·관 합동 자문단을 통해 연구 추진 단계별로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과 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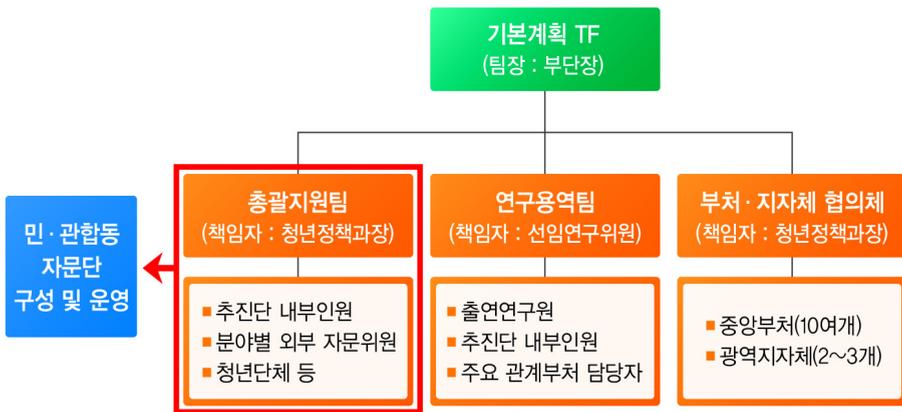


그림 1-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기본계획 TF 구성(안)

## 5)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안) 개발

### (1)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각 분야별 중기(5년) 성과목표 제안,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안)를 개발하고 지표 선정근거와 적절성·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정책 전반의 성과 달성을 촉진하는 방안과 함께 정책과제별 부처·지자체의 자율적 개선 등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안)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주요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4가지 영역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2022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총괄 성과지표로 세 가지(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와 4가지 정책 분야별로 10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최상위 지표로 2가지(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를 제시하고 3가지 정책 영역별로 10가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과 같이 대상 중심 정책의 기본계획에서는 정책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총괄 혹은 최상위 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총괄 혹은 최상위 성과지표는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 같은 정성적인 지표를 다루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목표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에 대해서 합계출산율과 노인 상대빈곤율을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성과지표로 12개를 제시하였다.

## (2) 연구방법

성과목표와 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2차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정책추진단에 제출한 각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 자료와 국가 승인통계의 청년 관련 지표 결과 등이다.

## 3. 연구추진체계 및 절차

### 1)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년정책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청년정책 영역은 일자리 분야와 교육 / 참여분야, 주거 / 복지분야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림 1-4.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참여연구진

주요 과업	연구내용	수행방법	담당자
① 청년정책 수립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특성 분석</li> <li>청년을 둘러싼 환경분석</li> <li>기존 청년정책 분석</li> <li>기존 정책사업 분석 /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li> <li>2차자료 분석</li> <li>전문가 자문</li> </ul>	김기현, 성재민, 배정희, 김창환, 박미선, 유민상
②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비전수립</li> <li>정책 목표 및 전략수립</li> <li>정책 과제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델파이조사</li> <li>청년 간담회</li> <li>부처 협의회</li> <li>지자체 협의회</li> </ul>	김기현, 변금선, 배정희, 유민상, 권향원, 최한수
③ 성과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 구성</li> <li>성과지표 측정방법 마련</li> <li>연도별 이행 목표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분석</li> <li>2차자료 분석</li> <li>전문가 자문</li> </ul>	김기현, 이철선 변금선, 유민상 배정희

그림 1-5. 주요과업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참여연구진 역할

정책 영역별 분석에 참여한 공동연구원들은 일자리분야의 성재민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교육분야의 김창환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주거 분야의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 등이며 청소년정책연구원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로는 행정 및 조직 분석과 관련하여 권향원 교수(아주대학교)가 참여하였다. 재정 및 예산 분석과 관련하여 최한수 교수(경북대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성과목표와 측정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이철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하였다.

## 2) 연구추진절차

연구추진절차는 1단계로 청년 실태 및 환경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책 및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이 2단계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과 기본계획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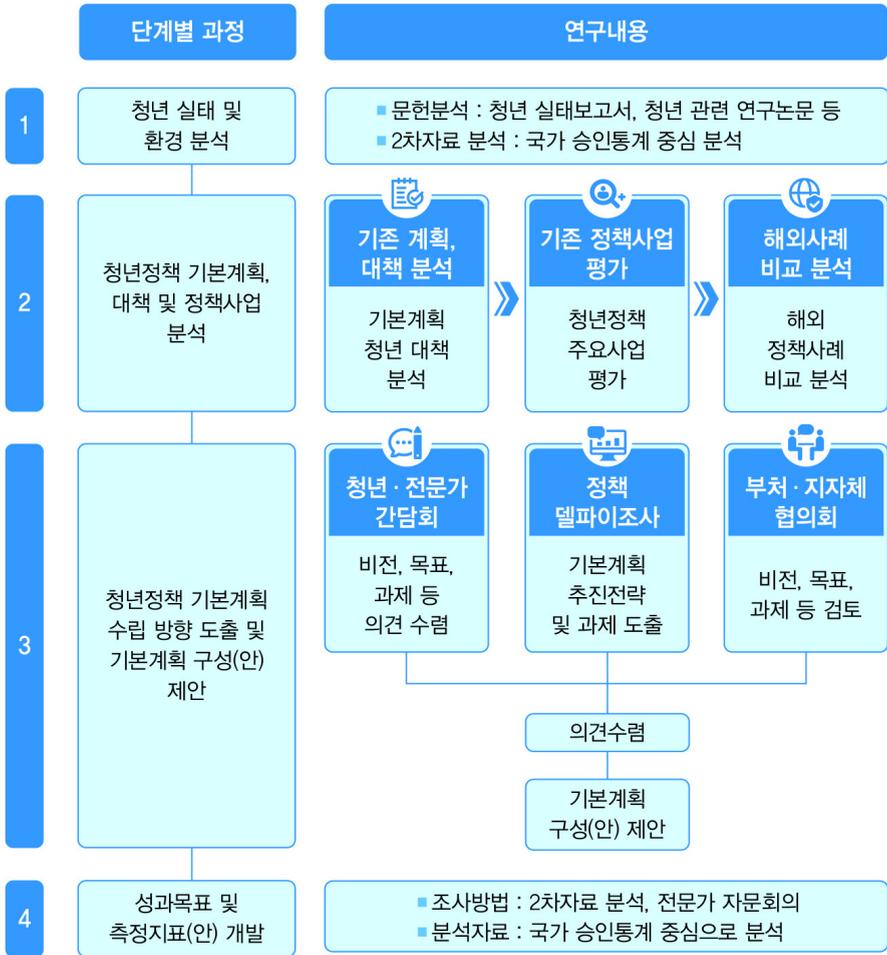


그림 1 -6. 단계별 연구추진 절차





## 제2장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 1. 정책 대상 및 환경 분석
- 2. 기존 청년정책 분석 및 평가
- 3. 청년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 수렴
- 4.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



## 1. 정책 대상 및 환경 분석

### 1) 대상자 특성 및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방향<sup>2)</sup>

여기에서는 대상자로서의 청년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청년 전체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 거주 지역, 출산율, 가치관, 사망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후, 주요 정책 대상 청년들을 분류하고, 대상자별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한 정책대상 청년은 일반 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으로 구분하여 <표 II-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특성 분석 시 ‘청년’의 연령범위는 만 19세 - 34세이다. 그런데 청년 연령을 정의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2020년 2월에 이루어졌고 통계청에서 이를 반영한 통계 결과를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통계청 승인통계는 대부분 과거의 청년 연령 기준인 만 15세 - 29세나 10세 단위로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당 연령범위 분석이 어려운 경우 확장된 청년연령범위 15세 - 39세 내에서 최대 유사 연령범위(예. 20세 - 34세, 15세 - 29세, 20세 - 29세, 30세 - 39세 등)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연령을 표기하였다.

2) 이 장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I-1. 주요 정책 대상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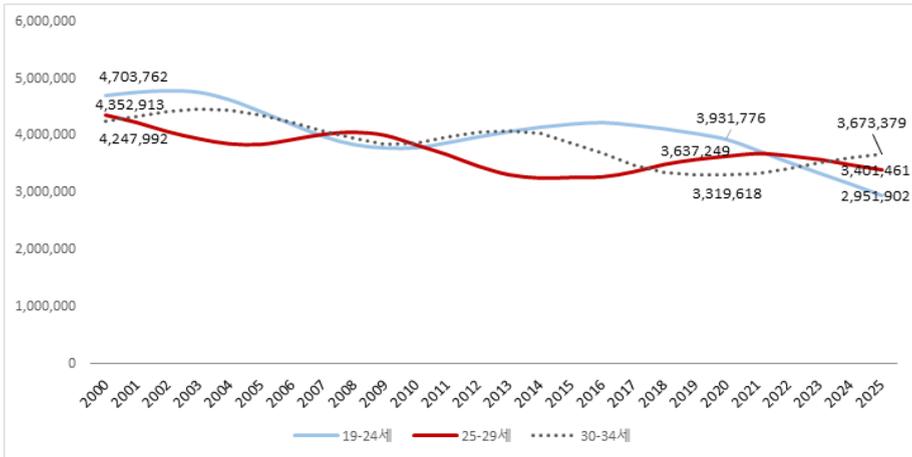
구분	주요 정책 대상 청년	
일반 청년	전체 청년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청년 취업자 대학생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 청년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단독가구 및 주거 취약 청년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청년 니트 및 고립청년 저소득 청년 미혼모 · 미혼부 · 한부모 청년

(1) 청년의 일반적 특성

만 19세 - 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현재 1,08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를 차지한다(통계청, 2020a). 이 중 남성은 577만 명, 여성은 511만 명으로 남성이 약 66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청년인구의 거주지는 주로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52%였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19%,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도·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27%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청년인구(20세 - 39세) 중 2018년 사망자 수는 7,593명이며,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2.5%에 해당한다(통계청, 2019a). 2018년 기준으로 가임 여성(15세 - 49세) 1명당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합계출산율은 계속하여 감소추세에 있다(통계청, 2018a).

청년인구의 주요 특성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인구는 현재 급격히 감소중이다. 특히 19 - 24세 인구는 2000년 470만 명에서 2025년 295만 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b). 청년 개인 한명이 매우 소중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역할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정책

과제로 청년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청년 평생학습 활성화,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1. 청년인구 추세 (2000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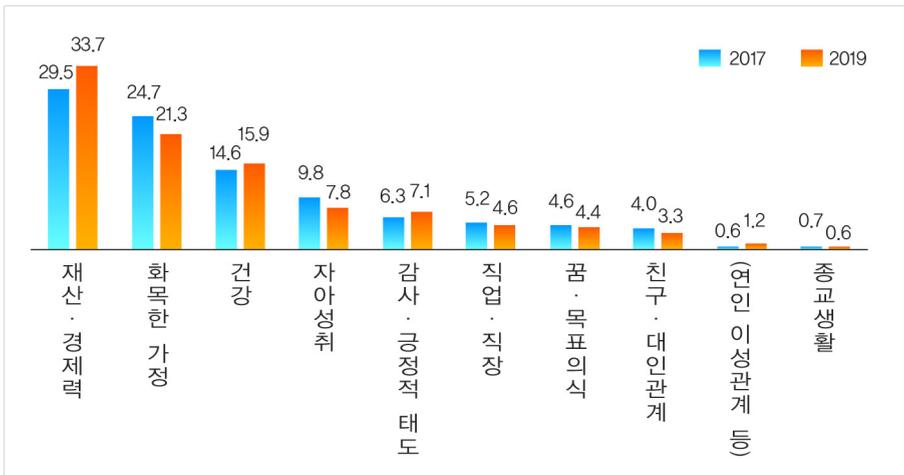
둘째,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의 청년이탈현상으로 인한 지역소멸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에 청년인구의 46.5%가 경기도 및 서울시에 거주하였으며, 2018년에는 0.6%p 증가한 47.1%가 경기도 및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이러한 통계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절반의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청년정책들은 주거 및 일자리 등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문제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나,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주요 문제 및 욕구와 지역 거주 청년들의 주요 문제 및 욕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은 지역균형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중앙 - 지자체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의 혼인율 및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합계출산

율은 2018년 0.98로 역대 최저이며, OECD 합계출산율 평균 1.68명보다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2018a). 30 - 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00년 84.1에서 2018년 91.4명으로 7명 증가하였으나, 20-24세 여성은 39.2명에서 8.2명으로 31명 감소, 25 - 29세 여성은 150.3명에서 41명으로 109명 감소하며 청년층 전반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는 이유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고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혼인을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불완전한 사회보장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유진성, 2018).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최소한 혼인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혼인과 출산을 선택한 청년들에게는 그 이후의 안정적 삶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과 같은 단기적 정부정책과 더불어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 완화와 주거 지원 정책이 근본적·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청년들의 일 - 삶 균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유일하게 비청년세대보다 청년세대의 여가시간이 짧은 국가로, 청년들의 일 - 삶 균형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박미석, 김경아, 김미영, 전지원, 2019). 최근 청년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일보다 여가에 더욱 가치를 두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2년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9). 동시에,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재산·경제력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재산·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보다 2019년에 4.2%p 증가하였다. 화목한 가정(21.3%), 건강(15.9%), 자아성취(7.8%)는 재산·경제력에 이은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9). 이러한 실증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은 청년들이 경제력의 확보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일·생활 균형과 개인의 건강한 삶에도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경제적 독립이라는 주요한 생애주기적 이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여가,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에 대한 높은 욕구 역시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데이터 분석

## 그림 II-2.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 조건

마지막으로, 청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망자 중 20 - 29세의 17.6명, 30 - 39세의 27.5명이 자살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인 11.5명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통계청, 2019a). 또한 자살까지 실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청년기는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생애주기적 이행을 겪는 시기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표 II-2. 청년의 일반적 특성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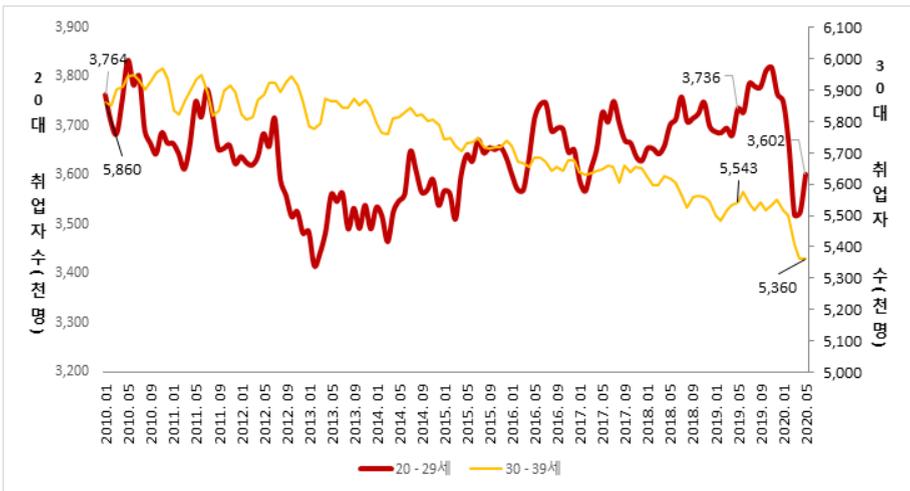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인구는 1,08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20)이며 청년인구 중 남성은 577만명, 여성은 511만 명(‘20)</li> <li>○ 청년인구의 거주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52%, 광역시·특별자치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도·특별자치도(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27%(‘18)</li> <li>○ 합계출산율은 0.977명(‘18)</li> <li>○ 청년인구(20세-39세) 중 사망자 수는 7,593명이며,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2.5%(‘18)</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청년인구는 급격히 감소 중, 특히 19세 인구는 '00년 84만 명에서 '25년 43만 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	- 청년 한 명이 매우 소중해 지는 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역할 증진 필요
②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의 지역소멸 가능성이 우려	-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청년의 경우 더 심격해 지역 균형적 관점 필요
③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이며, OECD국가(평균 1.68명) 중 가장 낮음	- 일·가정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필요
④ 여기중시, 개인중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을 중요한 행복 조건으로 생각함	- 경제적 독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④ 청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 - 29세의 17.6%, 30 - 39세의 27.5%가 자살로 사망(‘18)	-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강화 필요

지금까지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2) 청년 취업자의 특성

다음으로 청년 취업자의 현황을 살펴본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30대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대 취업자 수는 2013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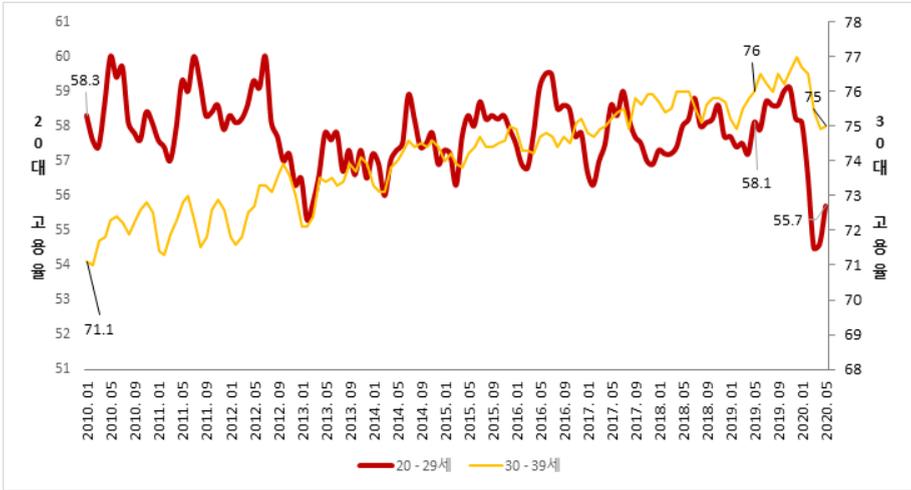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청년 취업자 현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20대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 29세 청년 중 2020년 5월 기준 취업자 수는 360만 2천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13만 4천명 감소하였다. 30세 - 39세의 2020년 5월 취업자 수는 536만 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18만 3천명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c).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3. 청년 취업자 수 추세 (2000 - 2020)

고용지표 역시 악화되었는데, 특히 20대의 고용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 - 29세 청년의 고용율은 2019년 5월 58.1%에서 2020년 5월 55.7%로 2.4%p 하락하였으며, 30 - 39세의 경우 고용율은 2019년 5월 76%에서 2020년 5월 75%로 1%p 하락하였다(통계청, 20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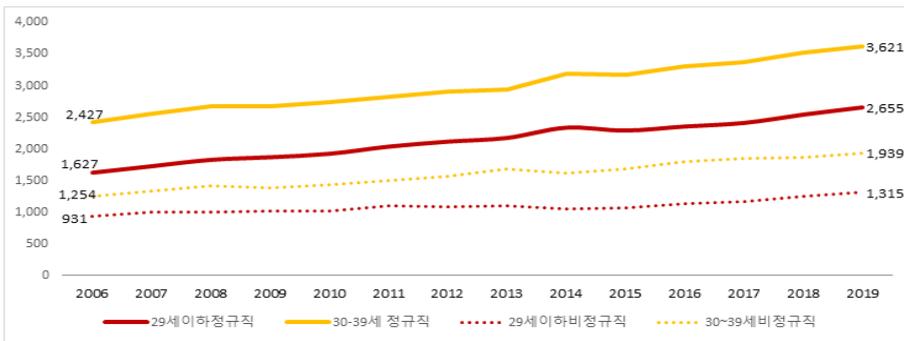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4. 청년 고용률 추세 (2000 - 2020)

청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기준 20대 청년 중 62%가 정규직, 38%가 비정규직이었고, 30대 중 76%가 정규직, 24%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b). 40대(27%), 50대(35%), 60대 이상(72%)의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5년간의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보다 6.6%p 감소하였으나,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보다 5.3%p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을 살펴볼 때, 20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청년층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파악된다. 2019년 월평균임금은 29세 이하의 경우 정규직 265만원, 비정규직 131만 원으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49%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 39세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362만원, 비정규직

193만 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53%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9). 이러한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특히 20대에서 더욱 뚜렷이 심화되고 있는데, 29세 이하에서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06년 57%에서 49%로 8%p 감소하였다. 청년(15세 - 29세) 첫 직장 근속기간은 17개월로 2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는 20대 청년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5. 청년 월평균 임금 추세 (2006 - 2019)

또한 최근 청년층에서는 일정한 기간 상시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전통적 형태의 정규근로가 아니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퀵서비스 및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간병인 등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으나 스스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을 의미한다.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는 2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8년 전보다 90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정홍준, 장희은, 2018). 특히 최근 IT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플랫폼 노동자는 47만 - 5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30대 이하는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김준영, 권혜자, 최기성, 연보라, 박비곤, 2018).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안정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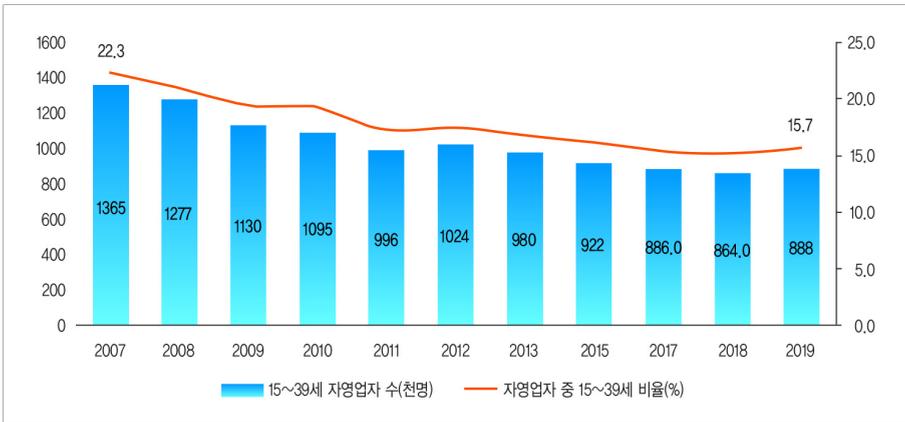
표 II-3. 청년 취업자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20 - 34세) 취업자수는 601만 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4만 명 감소하였으며, 청년 고용률은 20 - 29세 54.6%, 30 - 34세 76%(‘20.4)</li> <li>○ 20 - 29세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38%, 30 - 39세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24%(‘19.8)</li> <li>○ 청년(15 - 29세) 첫 직장 근속기간은 17개월(‘19.5)</li> <li>○ 30 - 39세 평균 월임금총액은 정규직 362만원, 비정규직 193만원이며, 29세 이하의 경우 정규직 265만원, 비정규직 131만원(‘19)</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청년 내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최근 3년간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②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추세	-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정망 확보 필요
③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상반기 일시휴직자 급증 추세이며, 청년 일자리 감소, 임금수준 하락, 비정규직 증가 추세	-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 필요 -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한편, 2020년 3월과 4월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일시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통계청, 2020d).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급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임금수준의 하락, 비정규직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최근 3년간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 2배 차이가 나타나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 (3)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특성

다음으로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특성을 살펴본다.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의 수는 2019년 기준 88만 8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b). 그러나 청년 자영업자 수는 2007년 13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7년 22.3%에서 6.6%p 감소하였다. 기업대표가 39세 이하인 조직의 경우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05만개가 활동 중에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기업의 16.8%에 해당하나, 이는 2016년 17.2%보다 0.4%p 감소한 수치이다(통계청, 2018b).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6. 자영업자 중 청년 비율 (2007 - 2019)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업대표 및 자영업자 중 청년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이는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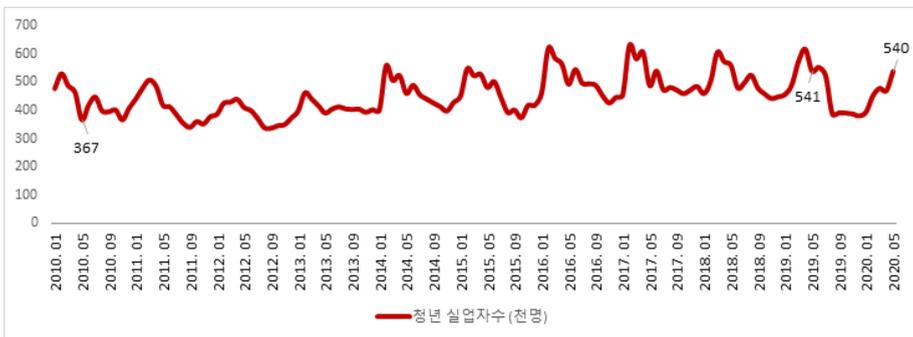
청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기에,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현황, 주요특성,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4. 청년 창업자 · 소상공인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9세 이하 자영업자 수는 88만 8천명이며, 전체 자영업자 중 15.7%('19)</li> <li>○ 39세 이하 대표가 있는 기업의 수는 105만개소이며, 전체 기업 중 16.8%('18)</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기업대표 및 자영업자 중 청년 비중은 감소 추세	- 청년 창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대표 청년 비중은 지속 감소 중으로 청년 창업 접근 재조정 필요
②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

#### (4) 미취업 청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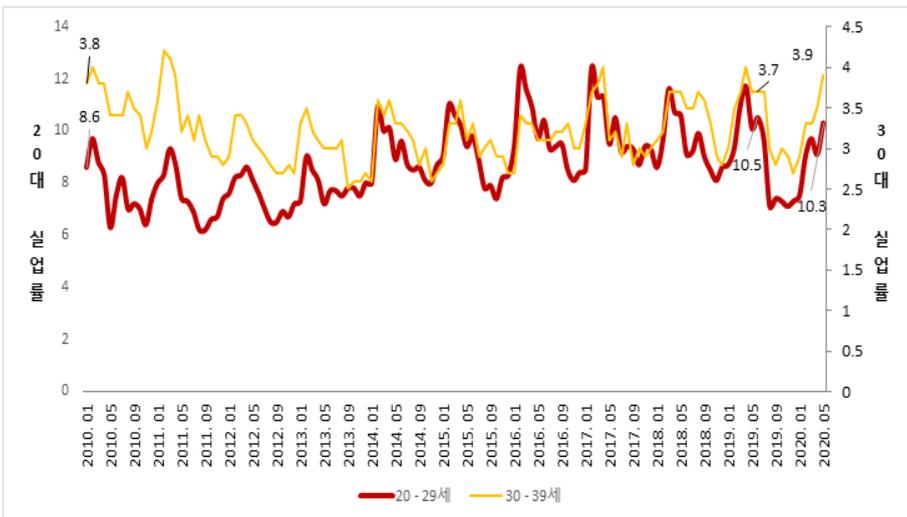
20 - 34세의 청년 실업자 수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54만 명이다. 작년 동월 대비 1천명 감소한 수치이나,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상승하였다(통계청, 2020c).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7일.

그림 II-7. 청년 실업자수 추세 (2010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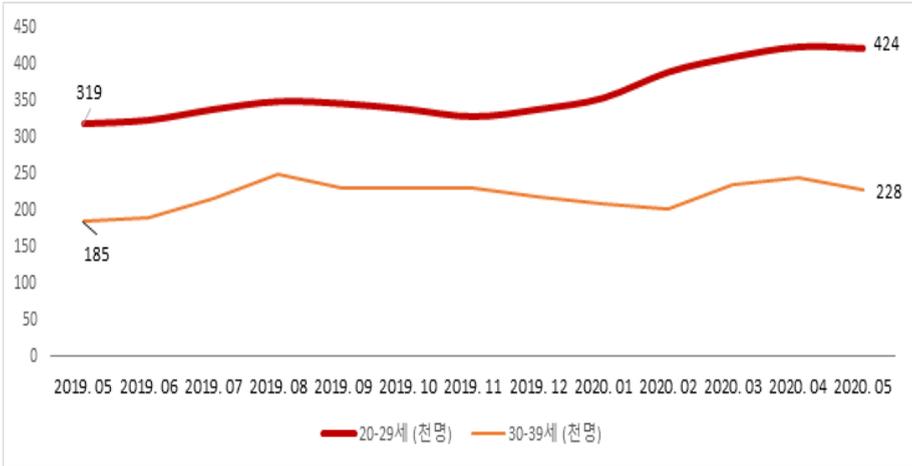
20 - 29세의 청년 실업률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10.3%, 30 - 34세의 실업률은 3.9%로, 작년 동월대비 20대는 0.2%p 감소하였고, 30대는 0.2%p 증가하였다 (통계청, 2020c). 그러나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할 경우, 실업률은 더욱 증가한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15 - 29세 청년의 확장실업률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26.3%로, 작년 동월대비 2.1%p 증가하였다 (통계청, 2020c).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8. 청년 실업률 추세 (2000 - 2020)

청년 미취업자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실업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2020년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수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20 - 29세 42만 명, 30 - 39세 23만 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각각 약 11만 명, 4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통계청, 2020c). 2020년 상반기만을 보았을 때, 특히 20대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9.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응답자 수 (2000 - 2020)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고용 지표는 전년도보다 개선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정책을 넘어서는 사회 정책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때이며,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2020년 학교 졸업자들의 졸업 후 경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확장실업률과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5. 미취업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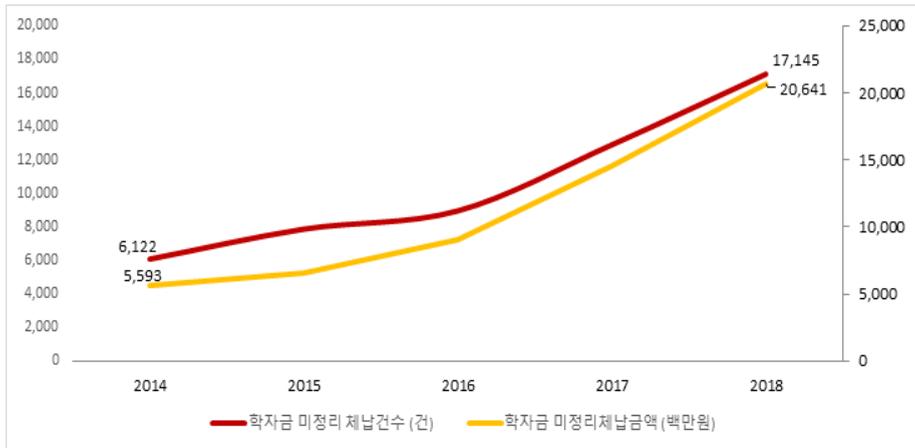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20 - 34세) 실업자수는 54만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1천명 감소하였으나, 이는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20.5)</li> <li>○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수는 20 - 29세 42만명, 30 - 39세 23만 명으로 각각 작년 동월대비 11만명, 4만명 증가('20.5)</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18년부터 '19년까지 청년 고용지표가 전년도 보다 개선되었으나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부터 경제지표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신규 학교 졸업자의 큰 피해 예상	- 고용 중심 청년정책에서 사회정책 차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2020년 이후 학교 졸업자 이행 점검 중요
② 확장실업률과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실업자만 아니라 단기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 등에 대한 지원 필요

(5) 대학생 특성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2018년 69.7% 였으며, 이는 2010년 75.4%보다 5.7%p 감소한 수치이다(교육부, 2019). 2019년을 기준으로 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64만 명,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200만 명,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 32만 명이며 (교육부, 2019), 이 중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문대 약 60만 명, 대학교에 약 198만 명, 대학원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대학생들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의 증가이다. 2019년에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 수는 총 66만 명이며, 금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다(교육부, 2020). 그러나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6억원, 체납 건수는 17,145건으로 나타났다(국세청, 2018).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1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 2019).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인상 규제로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금리 역시 2008년 7.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학기 기준 2.2%까지 하향되었으나,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정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장학금 제도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이율 완화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10. 학자금 미정리체납 건수 및 금액 (2014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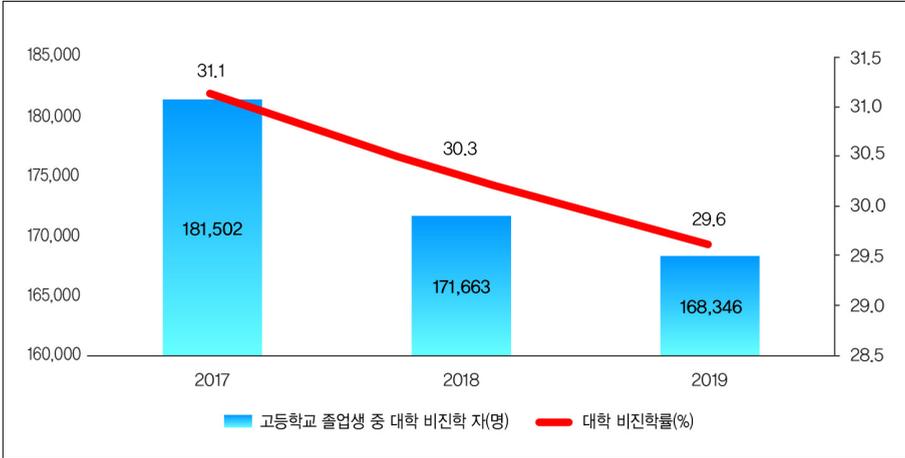
또한,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졸업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유예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전국 9.5%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 지역은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졸업자들의 신규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의 휴학 및 졸업유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0년 4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9만 5천명(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d). 따라서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 조성을 통해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표 II-6. 대학생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에 재학 중인 청년은 약 60만 명,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은 약 198만 명, 대학원에 재학중인 청년은 약 22만 명('19)</li> <li>○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는 17,145건('18)이며,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이자 수는 17,000명('19)</li> <li>○ 졸업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유예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전국 9.5%이며, 서울지역은 12.7%('19)</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인상 규제로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으나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신용유이자 증가	- 여전히 학비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
②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의 휴학 및 졸업유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졸업 예정자 및 졸업 유예자들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대응책 필요

### (6)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특성

2010년 대학진학률은 75.4%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3년간 대학진학률은 약 70% 내외로, 매년 약 30% 내외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57.5%, 특수목적고 졸업생의 42.5%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017 - 2019 일반고 졸업생들의 대학 비진학률은 22.7%에서 23%로 0.3%p 상승하였다(교육부, 2019). 이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17만 여명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진학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 비진학 청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경제적 부담, 누적된 학업결손과 낮은 학업성취, 부모의 방임 등을 겪었던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졸학력으로도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 후 빨리 취업을 하여 경제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경우,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김진경, 윤민중, 2018; 김지경, 정윤미, 201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11. 대학 비진학자 수 및 비진학률**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대학 비진학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계고 비진학자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따라서 일반계고의 대학 비진학자들에게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함과 동시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 취업 연계 및 실습 교육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진학 청년들이 향후 필요시 대학교에 입학하여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제, 국가 장학금 혜택 등 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7.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생 중 대학 비진학률은 29.6%이며, 약 17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음('19)</li> <li>○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57.5%, 특수목적고 졸업생의 42.5%는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등 다른 경로로 나아감('19)</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최근 일반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비진학률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계고의 대학 비진학자들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교육정책 필요</li> <li>-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취업 연계 강화 및 실습 내실화</li> </ul>
② 가정형편, 성적, 취업 욕구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학 비진학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취업 후학습제, 국가장학금 등 대학 비진학자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일자리 및 교육 정책 필요</li> </ul>

### (7) 니트(NEET) 및 고립청년 특성

청년 니트(NEET)란 교육도, 취업도, 훈련도 하지 않는 영문자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두문자어로, 의무교육을 마친 뒤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15 - 29세 청년의 니트비율은 19.2%로, 약 185만 명으로 추정된다(김형주 외, 2019).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는 무직 및 미상자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및 취업을 하지 않는 무직자 및 미상자 수는 약 12만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의 21%를 차지하였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2018년 무직자 및 미상자 비율은 약 25%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은 무직자 및 미상자 수는 2018년 약 16만 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대학 졸업자의 28.5%에 해당한다(교육부, 2019). 한편, 19 - 39세 중 3개월 이상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사회적 고립 청년 비율은 2.7%로, 약 29만 명으로 추정된다(김형주 외, 2019).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및 경기 악화로 인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및 진학을 하지 않고 무직 상태로 있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현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년의 니트 상태 및 사회적 고립 상태는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들의 니트상태 또는 사회적 고립 상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심리·사회·경제적 조기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 학교-일자리 연계 강화,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점검, 구직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니트 및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표 II-8. 니트(NEET) 및 고립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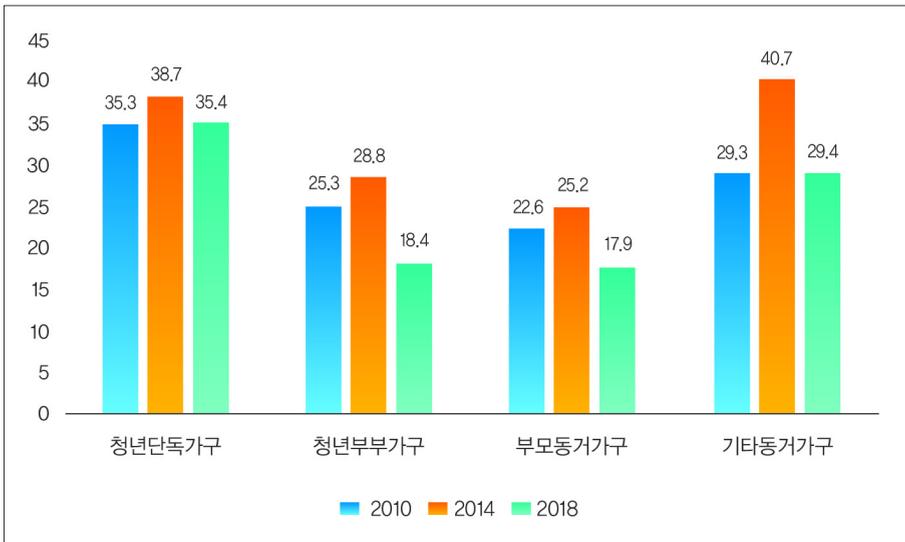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15 - 29세) 니트비율은 19.2%로, 약 185만명으로 추정('19)</li> <li>○ 사회적 고립 청년 비율은 2.7%로, 약 29만명으로 추정('19)</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을 하지 않는 무직 및 미상자 비율이 크게 증가,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가장 심각한 상태	- 학교-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이행 점검 필요
②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니트상태 및 사회적 고립은 장기화될 위험	-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청년들에 대한 조기 개입 중요성 강조

### (8) 단독가구 및 주거 취약 청년 특성

청년의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부모동거가구가 357만 가구로 53%를 차지한다. 단독가구는 153만 가구(23%), 청년부부가구는 143만 가구(21%), 기타동거가구는 27만 가구(4%)이다(국토교통부, 2018a). 수적으로는 부모 동거가구가 가장 많으나, 청년 단독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71.7%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년 단독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63.4%)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8a). 2018년 청년 단독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093만원, 평균 월세는 35.7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보증금은 약 267만원, 월세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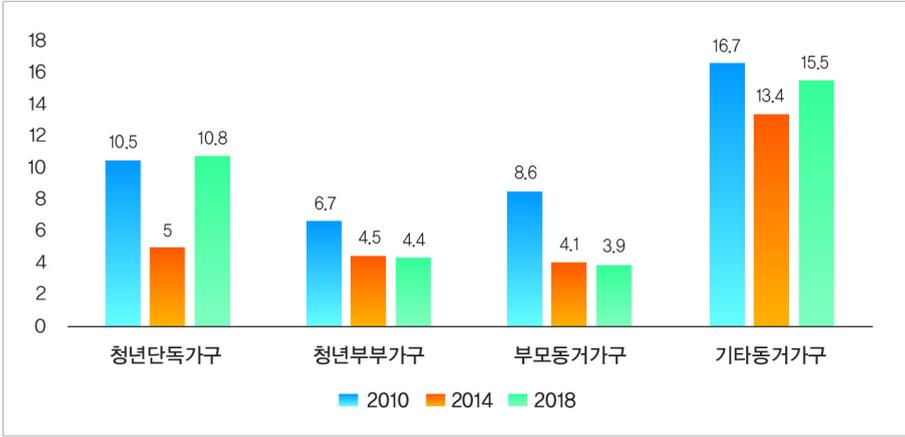
5만원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018a).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청년 단독가구의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은 35.4%로, 청년부부가구 (18.4%), 부모동거가구(17.9%), 기타 동거가구(29.4%)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8a).



\* 출처 : 국토교통부(2018a). 주거실태조사.

그림 II-12. 청년 가구 형태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청년단독가구 10.8%로, 청년 부부가구 (4.4%) 및 부모동거가구 (3.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8a). 많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문제는 이러한 도시빈곤 주거지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김성태, 권영상, 2020 ; 고정희, 2019).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a), 주거실태조사.

그림 II-13. 청년 가구 형태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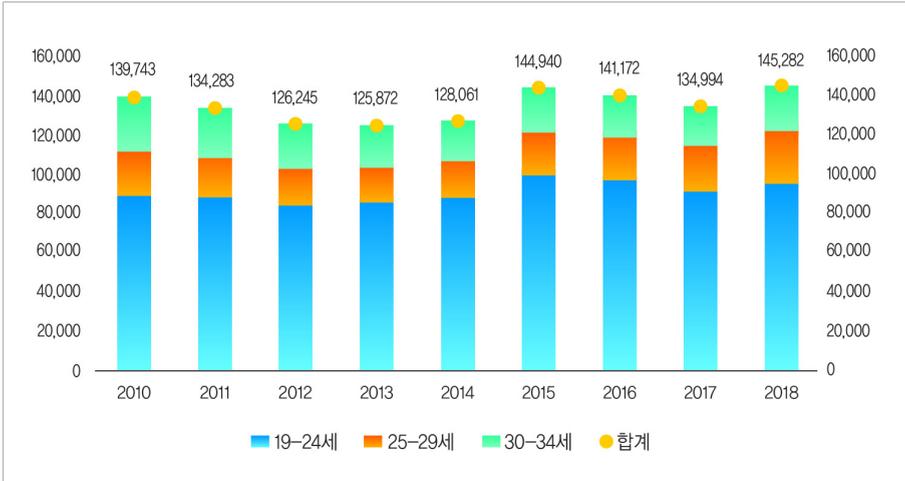
이러한 청년 주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증가하고 있는 청년 단독 가구들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주거 정책은 청년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 단독가구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II-9. 주거 빈곤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단독가구는 153만 가구(23%), 청년부부가구는 143만 가구(21%), 부모동거가구는 357만 가구(53%), 기타동거가구는 27만 가구(4%)(‘18)</li> <li>○ 청년단독가구의 월세비중은 71.7%,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은 35.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8%로,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모가구보다 높음(‘19)</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부모동거가구가 가장 많고 청년 단독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 추세	- 증가하는 청년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춘 청년 주거정책 확대 필요
② 단독가구의 월세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증가 추세	- 임대료 부담 및 주거 여건 개선에 초점

### (9) 저소득 청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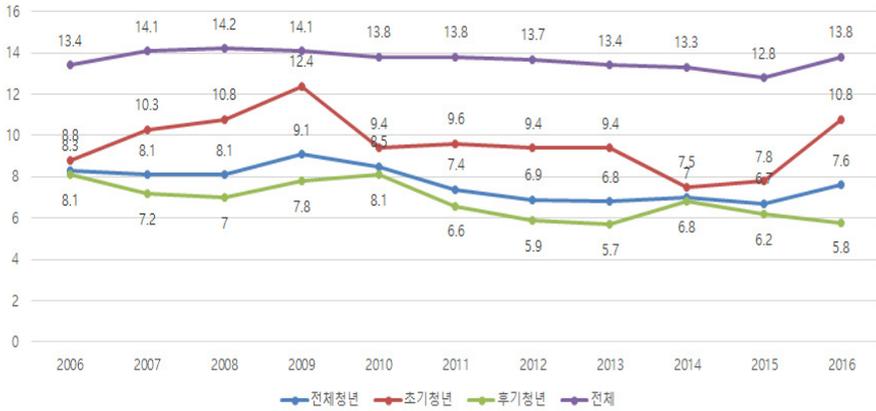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 중 청년의 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14만 5천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수급자 중 8.8%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8).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수 (2010 - 2018)

청년 빈곤율(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8%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빈곤율 약 14% 내외보다 낮은 수준이다(김문길, 2020). 그러나 청년층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경기 충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등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에서 24세까지 초기 청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6년 빈곤율 8.8%에서 2009년 빈곤율 12.4%로 3.6%p 증가하며 가장 큰 등락폭을 보였다(김문길, 2020).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초기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 김문길 (2020)  
 \*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II-15. 청년 빈곤율 (2006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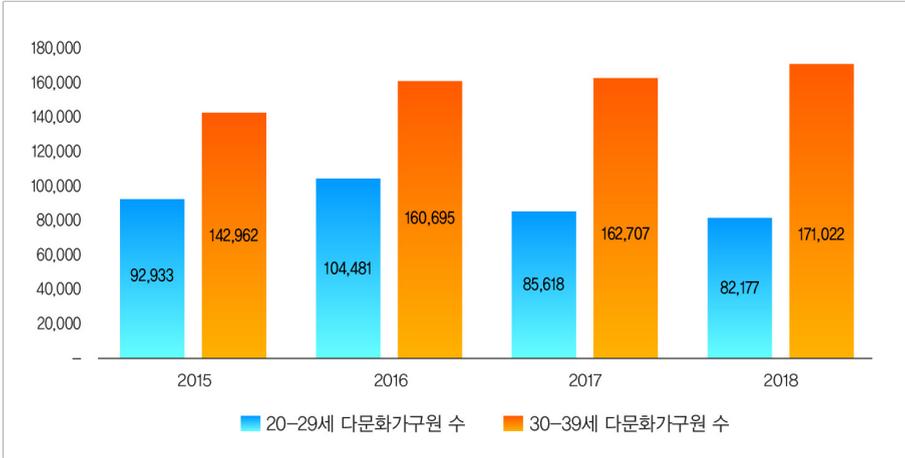
30세 미만이 가구주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은 2019년 평균 3,72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3%(187만 원)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3,197만원으로 2018년 대비 23%(606만 원) 증가하였다. 30 - 39세가 가구주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은 2019년 평균 5,982만원으로, 2018년 대비 3.9%(495만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8,915만원으로 2018년 대비 10%(827만 원)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c).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낮은 반면, 부채의 증가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더딘 소득 증가와 급격한 부채 증가 현상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층의 부채경감, 복지 및 생활안정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II-10. 저소득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수급자 중 청년의 수는 14만 5천명이며, 이는 전체 수급자 중 8.8%에 해당('18)</li> <li>○ 청년 빈곤율은 19 - 24세 10.8%, 25 - 34세 5.8%('16)</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초기청년(19 - 24세) 일수록 경기충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빈곤율 악화예상	- 청년빈곤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하며, 특히 초기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
② 청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며, 부채는 최근 3년 간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더딘 소득 증가와 급격한 부채 증가 경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필요

(10)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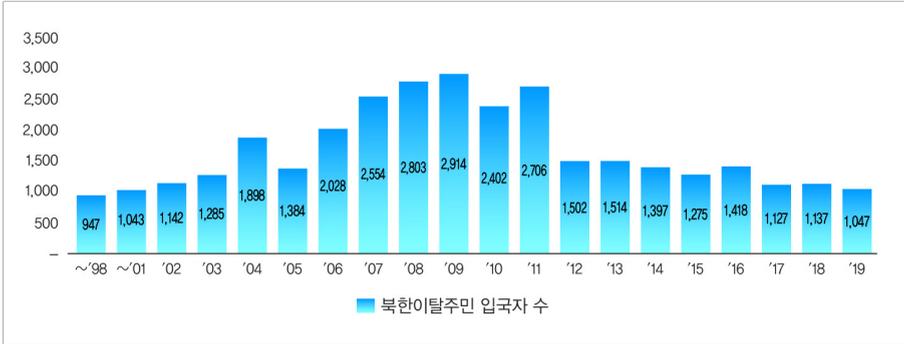
2018년을 기준으로 다문화가구원 중 20 - 29세의 인구수는 82,177명, 30 - 39세 인구수는 171,022명이다. 20 - 30대를 모두 합하면 약 25만 명의 다문화 청년들이 있으며, 이는 전체 20 - 30대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통계청, 2020a).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가구 중 혼인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가구 수는 85.7%이며, 혼인 외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기타 귀화자는 14.3%이다(여성가족부, 2018a).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2009년 15.6%에서 2018년 60.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가·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일자리 관련 도움을 받거나 의논을 할 사람,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등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 2세대 자녀들의 차별문제가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2일.

그림 II-16. 청년 다문화가구원 수 (2015 - 2018)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총 33,658명이다(통일부, 2020). 입국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20 - 29세는 28%, 30 - 39세는 29%를 차지하여, 입국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57%가 20 -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20).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상황은 해가 지날수록 개선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율은 2008년 54.8%였으나 2019년 23.8%로, 지난 11년간 약 20%p 감소하였고,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8년 49.6%에서 2019년 62.1%로 12.5%p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국민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 검색일 2020년 7월 10일.

그림 II-17. 북한이탈 주민 입국자 수

이주배경 청년과 북한이탈 청년 모두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정착과 적응력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따르면, ‘다양성 확대는 국가 경쟁력에 도움된다’,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이 국가에 유리하다’, ‘외국 이주민 증가로 우리 문화가 풍부해진다’에 동의하는 사람은 각각 34.7%, 38.3%, 33.7%로 2015년에 비해 5%p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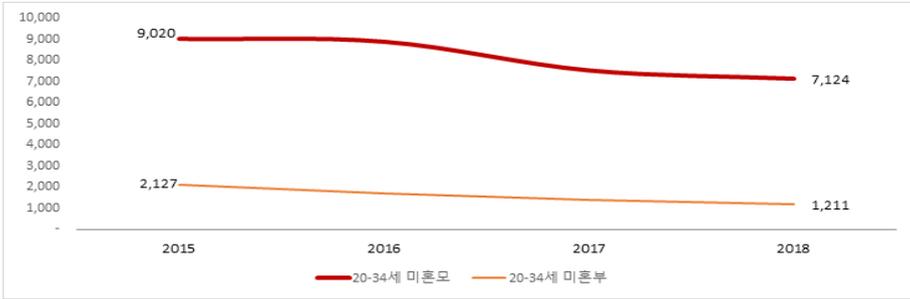
표 II-11.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원 중 20 - 29세의 인구수는 82,177명, 30 - 39세 인구수는 171,022명으로, 전체 20 - 30대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18)</li> <li>○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총 33,501명이며, 입국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20 - 29세는 28%, 30 - 39세는 29%를 차지('20)</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증가 하였으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2세대 자녀들의 차별문제가 증가	- 이주배경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 사회적 관계망 지원 확대 필요 -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국민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 필요
②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민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	- 일자리 확대, 재무 교육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위한 정책 필요

많은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주배경 청년과 북한이탈 청년들은 청년 내에서도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년 및 북한이탈 청년에 대한 일자리, 교육, 사회적 관계망 등의 지원과 함께 국민 전체의 사회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다차원적인 정부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11)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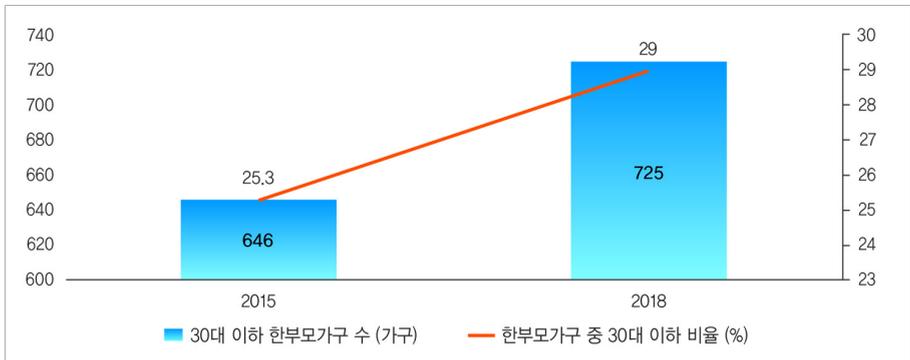
2018년 전체 미혼모 수는 21,254명, 미혼부 수는 7,768명이며 이 중 20 - 34세 미혼모의 수는 7,124명으로 전체 미혼모 수의 약 33%, 미혼부 수는 1,211명으로 전체 미혼부 수의 16%를 차지한다(통계청, 2020a).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층 미혼모, 미혼부 수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8일.

그림 II-18. 청년 미혼모, 미혼부

한편,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중 한부모의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는 2015년 646가구에서 2018년 725가구로 12% 증가했으며, 전체 한부모가구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2015년 25.3%에서 2018년 29%로 3.7%p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한부모가구의 혼인상태는 이혼 75%, 사별 11%, 기타 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하 한부모의 경우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c).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8일.

그림 II-19. 청년 한부모가구

30대 이하 한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및 중졸이하가 54%, 대학 이상은 46%였다(여성가족부, 2018c). 대학교육 이수율은 2018년 25 - 34세 청년층 인구의 대학교육 이수율 70%와 비교했을 때 24%p 낮은 수치이다(교육부, 2019). 많은 연구들이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실태, 주거 불안정성 대해 보고해 왔으며(김안나, 2014; 김학주, 2016; 이한나, 김승희, 2019), 미혼모 역시 여전히 사회적 차별 및 미비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많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선, 김민아, 2019; 이용우, 양호정, 2019). 한부모 청년, 미혼모, 미혼부 청년들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역량강화,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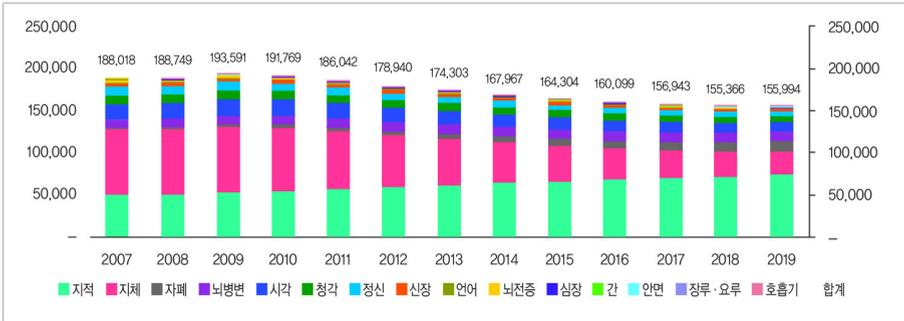
표 II-12.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 34세 미혼모 수는 7,124명, 20 - 34세 미혼부 수는 1,211명('18)</li> <li>○ 30대 이하 한부모가구는 2015년 646가구에서 2018년 725가구로 12% 증가('19)</li> </ul>	
주요 특성	정책방향
① 30대 이하 한부모의 학력은 고졸 및 중졸이하가 54%, 대학 이상이 46%으로, 청년층 인구의 대학교육 이수율 70%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	- 한부모 청년에 대한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필요
② 한부모가구의 90% 이상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일 - 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필요
③ 한부모와 미혼모, 미혼부는 사회적 차별 및 배제로 인해 빈곤, 주거 불안정성, 건강악화 등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부모 청년과 미혼모, 미혼부 청년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 (12) 장애를 가진 청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9 - 34세 청년인구 중 장애를 가진 청년은 155,994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4%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9).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48%, 지체 장애 17%, 자폐 8%, 뇌병변 7%, 시각 7%, 청각 5%, 정신 4%, 신장 2%, 언어 1%, 뇌전증 1%, 심장 0.4%, 간 0.2%, 안면 0.2%, 장루·요루 0.1%, 호흡기 0.1% 이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7월 8일.

그림 II-20. 장애를 가진 청년

15 - 29세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33.9%였으며, 이는 전체 청년인구(15 - 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47.7%보다 13.8%p 낮은 수치이다. 실업률은 12.3%로, 전체청년인구의 실업률 10.5%보다 1.8%p 높았다. 청년 장애인의 고용률은 29.7%로, 전체 청년인구의 고용률 42.7%보다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전체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액은 2017년 242.1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361.8만원보다 약 120만원 적었으며, 대학교육이수율도 15.1%로 전체인구평균 41.7%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이와 유사하게, 청년층 장애인의 고용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 역시 청년층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상황이 전체 청년들보다 취약하며 일자리의 질 또한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해 왔다(박자경, 김종진, 2017; 박주영, 2018). 장애 청년 맞춤형 학교 - 일자리 연계 강화와 함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청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및

민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수를 확대하고, 대학교육 이수 및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역량개발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II-13. 장애를 가진 청년 특성 및 정책방향**

<b>현 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를 가진 청년은 155,994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1.4%에 해당 (*19)</li> <li>○ 장애유형은 지적장애(48%)가 가장 많으며, 지체장애 (17%), 자폐(8%), 뇌병변 (7%), 시각 (7%), 청각(5%), 정신(4%), 신장(2%), 언어(1%), 뇌전증(1%), 심장(0.4%), 간(0.2%), 안면 (0.2%), 장루·요루(0.1%), 호흡기(0.1%) 순임 (*19)</li> </ul>	
<b>주요 특성</b>	<b>정책방향</b>
① 15 - 29세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33.9%였으며, 이는 전체 청년보다 13.8%p 낮음. 청년장애인의 실업률은 12.3%로 전체 청년보다 1.8%p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청년 맞춤형 학교 - 일자리 연계 강화 필요</li> <li>-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여 청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li> </ul>
② 청년층 장애인의 일자리 질은 전체 청년에 비해 열악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민간의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수 확대</li> <li>- 대학교육 이수 및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등을 통해 역량개발 지원</li> </ul>

## 2) 청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sup>3)</sup>

이 연구에서 청년을 둘러싼 환경 분석은 생태학적 모형(Bronfenbrenner, 1979)을 적용하였다. 생태학적 모형은 정책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을 생활공간인 미시체계와 생활공간을 넘어서는 거시체계로 구분하여 정책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접근이다.

우선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는 김기현, 김형주, 박성재, 민주홍, 김중성(2015)이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김기현 외(2015)는 미래 추계(2차 분석), 청년 실태조사(1,000명), 전문가 델파이조사(21명), 해외사례 결과를 종합하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전망 결과를 일기예보 방식으로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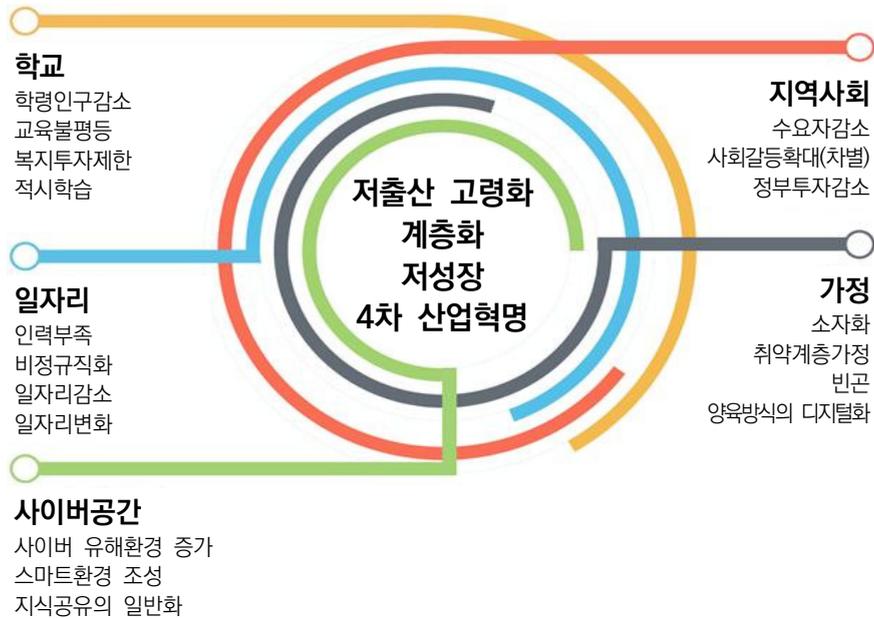
표 II-14. 미래 영향 요인별 청년 일과 삶에 대한 전망

미래영향 요인	청년 삶의 영역							
	청년 고용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청년 사회참여	
	단기 (‘15-’18)	중장기 (‘19-’25)	단기 (‘15-’18)	중장기 (‘19-’25)	단기 (‘15-’18)	중장기 (‘19-’25)	단기 (‘15-’18)	중장기 (‘19-’25)
인구·가족구조								
교육환경								
경제·노동시장								
과학기술								
글로벌화								

\* 출처: 김기현 외(2015: 114).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이 연구에서는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로 인구(저출산·고령화), 경제(포스트 코로나19), 사회(불평등), 국제(글로벌화), 기술(4차 산업혁명) 등을 설정하였다. 김기현 외(2015)에 제안한 교육환경은 이 연구에서는 거시체계보다는 미시체계로 다루었다.

3)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 출처 : 김기현, 장근영, 김지경, 하형석, 유성렬, 배진우 (2016 : 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그림 II-21.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와 미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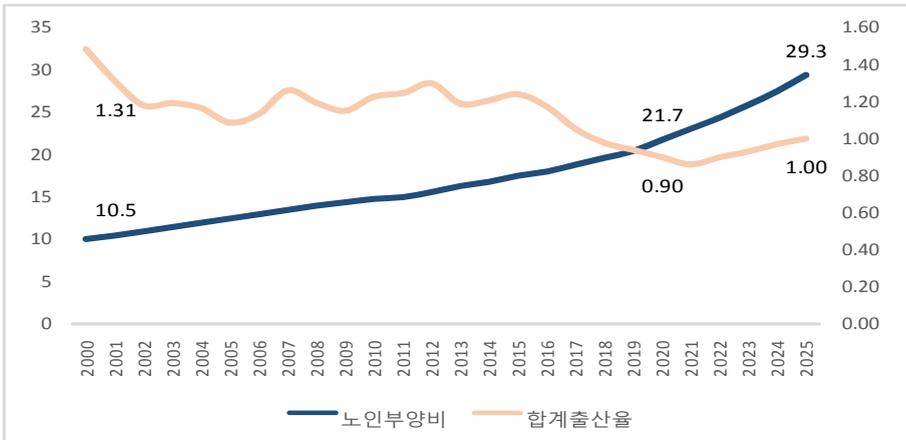
미시체계는 김기현 외 (2016)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한 청소년들의 미시체계를 준용하였다. 김기현 외(2016)는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체계를 가정, 학교, 일자리, 지역사회, 사이버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을 둘러싼 생활공간인 미시체계를 가족, 직장,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1) 거시체계 변화

가. 인구 (저출산·고령화)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영향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불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저출산 경향은 통계청에서 추계하고 있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을 통해 알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15 ~ 49세)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고령화 경향은 노인부양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를 의미한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22. 합계출산율과 노인부양비 추세 (2020 - 2025)

먼저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낮아졌고 2018년부터 1미만으로 낮아져 2020년 0.90명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이후의 결과는 중위가정에 따라 통계청에서 내놓은 추정치이다.

합계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것이므로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연령별 출산율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추정한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4세부터 0.01명 이상을 보여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0.01명 가량 증가해 33세에 0.09명 수준에 근접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에서 2025년 추정치를 보면 2021년에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모든 연령대에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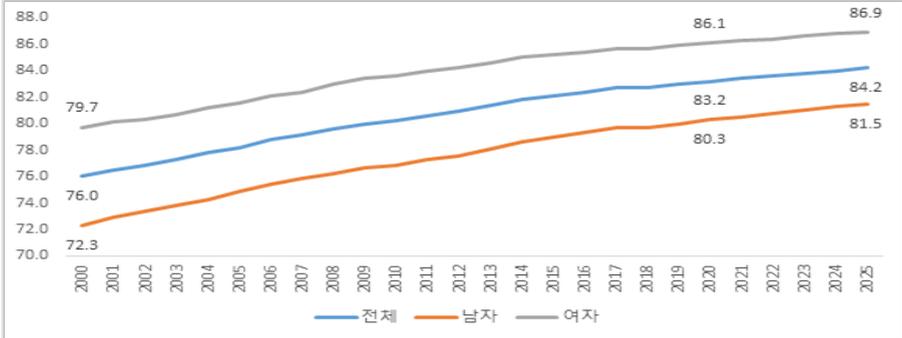
표 II-15. 청년 연령별 합계출산율 추계

연령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세	0.00056	0.00058	0.00067	0.00077	0.00087	0.00097
20세	0.00109	0.00111	0.00126	0.00140	0.00155	0.00170
21세	0.00206	0.00204	0.00226	0.00248	0.00270	0.00292
22세	0.00371	0.00362	0.00393	0.00425	0.00456	0.00487
23세	0.00638	0.00615	0.00658	0.00701	0.00744	0.00787
24세	0.01048	0.01000	0.01058	0.01115	0.01173	0.01230
25세	0.01641	0.01553	0.01629	0.01705	0.01780	0.01856
26세	0.02445	0.02301	0.02400	0.02499	0.02597	0.02696
27세	0.03463	0.03248	0.03374	0.03499	0.03625	0.03751
28세	0.04654	0.04360	0.04524	0.04689	0.04853	0.05018
29세	0.05928	0.05557	0.05772	0.05987	0.06202	0.06417
30세	0.07146	0.06713	0.06991	0.07269	0.07547	0.07824
31세	0.08138	0.07673	0.08003	0.08333	0.08663	0.08993
32세	0.08742	0.08283	0.08641	0.08998	0.09356	0.09714
33세	0.08844	0.08429	0.08776	0.09123	0.09470	0.09817
34세	0.08411	0.08069	0.08386	0.08703	0.09020	0.0933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합계출산율에 이어서 노인부양비를 살펴보면, 2000년에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100일 때 노인이 10.1이었는데 2005년 12.5로 늘어났다. 2010년 14.8로 증가한 후 2015년에 17.5에서 2020년 21.7로 2000년과 대비해 노인부양비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령화 추세는 장래 기대수명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해당연도의 출생자(0세) 기준으로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2000년 전체 장래기대수명은 76.0세였고 남자는 72.3세, 여자는 79.7세였다. 2009년 들어 처음으로 전체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어섰으며 2019년 남자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향후 5년 뒤인 2025년 전체 기대수명은 84.2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23. 성별 장래 기대수명 추세 (2010 - 2025)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청년들은 점차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청년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16. 인구(저출산·고령화)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저출산 확대에 따른 아동, 청소년, 청년인구 감소 경향	- 저출산 시대에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② 고령화 경향에 따라 노인부양비 증가 추세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들의 역량 강화 중요

#### 나. 경제 (포스트 코로나19)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큰 폭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후 다시 반등

했으나 2012년 이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3%를 유지해 저성장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09년에도 경험하지 못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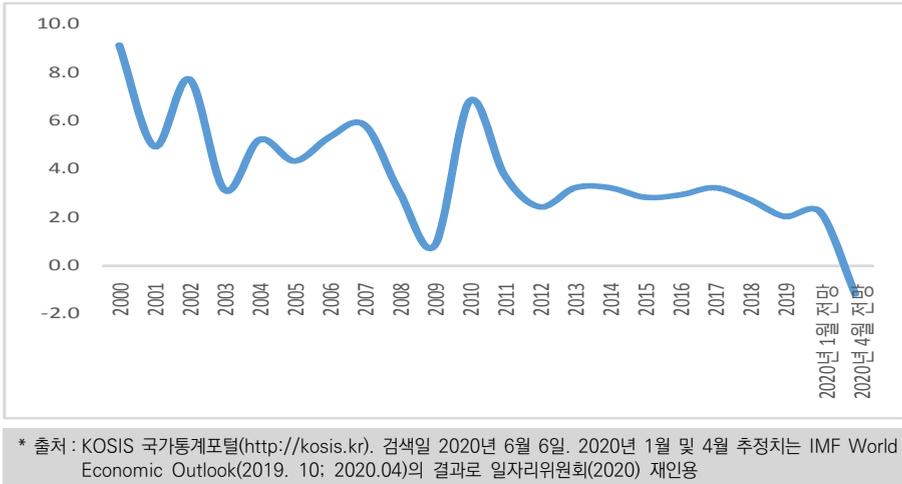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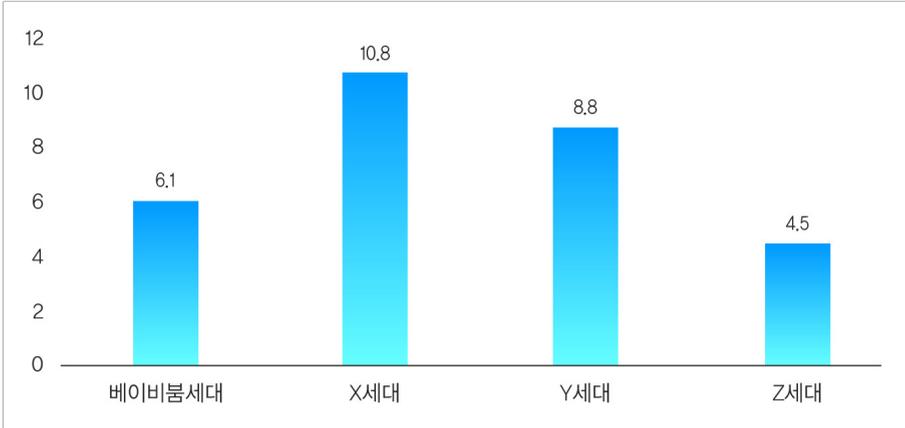


그림 II-24. 경제성장률 추세 (2010 - 2020)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한 바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은 이전에 발생했던 경제위기보다 장기적인 영향은 덜해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3.4%p 하향 조정되어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탈리아는 9.6%p, 프랑스는 8.5%p, 독일은 8.1%p, 미국과 영국이 7.9%p, 일본이 5.9%p, 중국이 4.8%p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출처 : 박해식(2020 : 13), 한국은행 자료 분석한 결과로 베이비붐 세대는 1954 - 1964년생, X세대는 1965 - 1979년생, Y세대는 1980 - 1994년생, Z세대는 1995 - 2019년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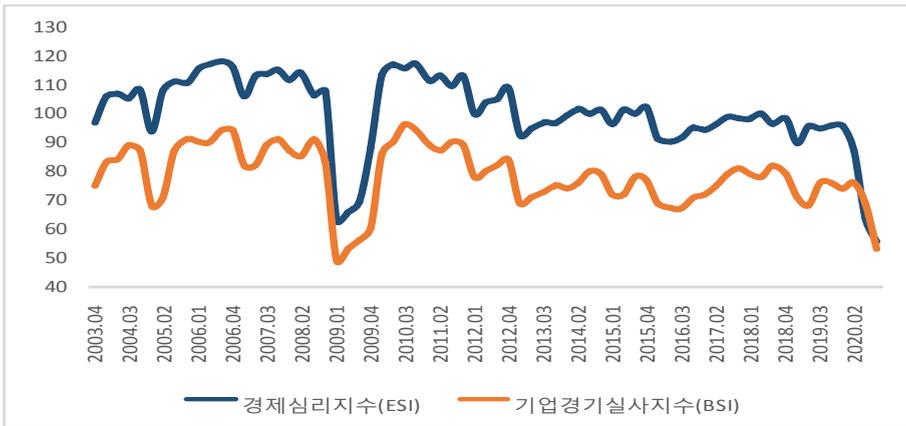
그림 II-25. 세대별 출생기간 중 국내 GDP 성장률 (연평균)

박해식(2020)은 연령집단을 세대로 구분하여 베이비붐 세대(1954 - 1964년생)에서부터 Z세대(1995 - 2019년생)를 구분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였다. 흔히 386세대가 걸쳐 있는 X세대(1965 - 1979년생)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현재 세대인 Z세대의 성장률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Z세대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직면해 다른 어떤 세대보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가 될 수 있다.

경제 예측지수들을 통해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와 경제심리지수 ESI를 발표하고 있다. BSI는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과 같은 주요 활동 결과와 전망에 대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수화해 산출한 통계이다. E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와 소비자동향지수 CSI를 합산해 산출한 종합 전망 지수이다. 이 지수들은 100이상이면 향후 경제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00미만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지수인 ESI를 살펴보면, 2004년 1월 기준으로 105.7로 긍정적인 전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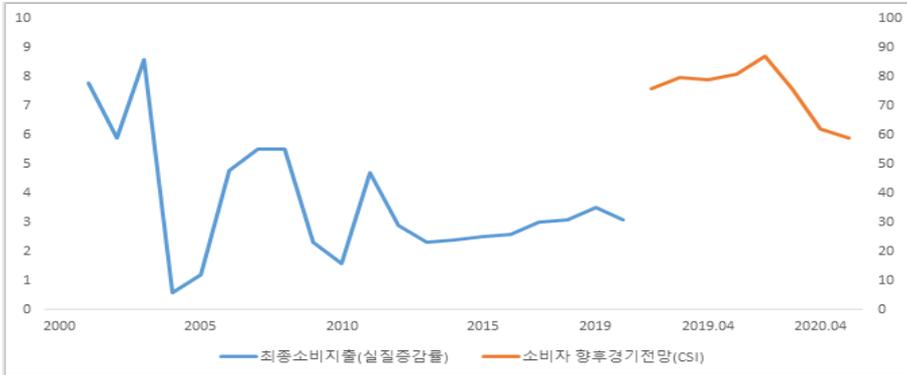
우세했으며 2006년 3월 11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준 뒤 글로벌 경제위기 시인 2009년 1월에 62.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ESI의 2020년 4월 결과 55.7로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BSI 역시 2020년 4월에 53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 경제위기 때 49 보다는 높지만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26. 경기심리지수(E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세(2003.04 - 2020.04)

소비 지표와 관련하여 최종소비지출 실질증감률과 소비자 경기전망지수 CSI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최근 보여주고 있으나 2000년부터 장기 추세로 볼 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소비 전망과 관련하여 CSI결과를 보면, 2020년 1월 87에서 2020년 4월 59로 급락하였다. 2019년 4월 CSI가 81이었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27. 최종소비지출 및 소비자 경기전망(CSI) 추세 (2000 - 2020.04)

코로나19 이후 저성장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와 동일한 수준의 경제 한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크고 다른 계층보다 청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고용이외에 소득 감소, 불평등 확대, 사회 갈등 심화 등 다른 요인에 미치는 파생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서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 삶 전반을 걸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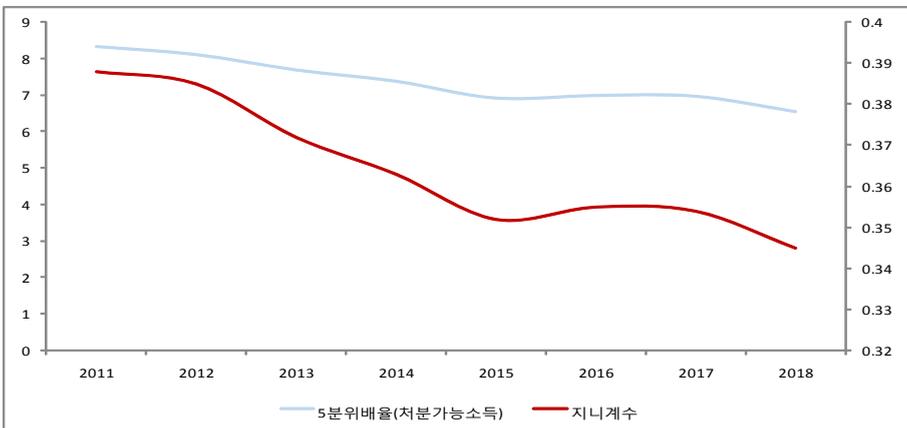
표 II-17. 경제(포스트코로나)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2010년 이후 저성장 기조(3% 이하)가 유지	- 청년에게 미치는 경기 악화와 재난 영향을 고려해 정책방향 설정
②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수준의 경기 악화 예상되며,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나 다른 파생효과(소득 감소, 불평등 확대, 계층 간 / 세대 간 갈등 심화, 차별 확대 등) 동시 고려, 사회통합 접근 중요
③ 경기 악화에 따라 고용 위기 촉발 우려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위기 최소화 필요

#### 다. 사회(불평등)

우리사회의 불평등 추이와 관련하여 우선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를 살펴 보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인 5분위계층의 평균소득과 최하위 20%인 1분위 평균소득을 나눈 값으로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값을 보여주면 완전 평등상태이며 1값을 보여주면 완전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니계수의 경우 기준이 되는 자료가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행정자료를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어 추정된 결과가 2011년부터 공개되어 2011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5분위배율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11년 최상위 소득집단과 최하위 소득집단 간에 8.32배나 소득 차이가 있었으나 2018년 6.54배로 줄어들었다. 지니계수 역시 2011년 0.388에서 2018년 0.345로 불평등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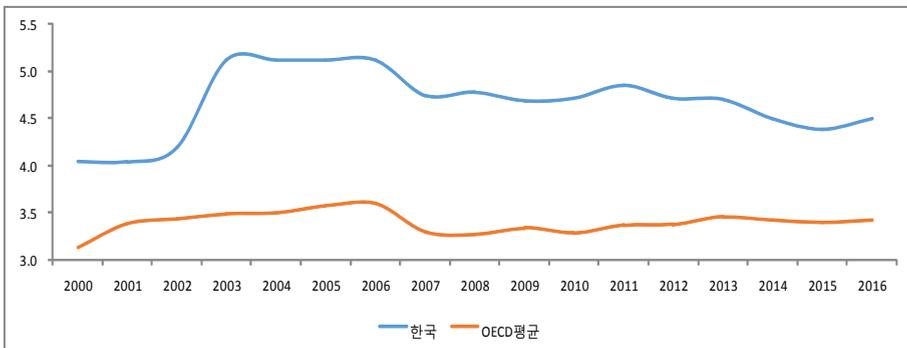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28.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 추이 (2011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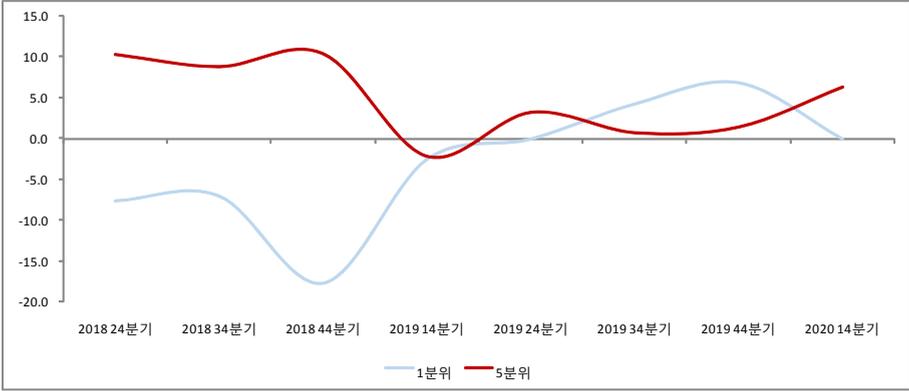
불평등 추세로 볼 때 우리사회가 점차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OECD가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9분위와 1분위의 격차를 비교해 제시해오고 있는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격차가 여전히 훨씬 크다. OECD 평균은 2016년 현재 3.42배지만 한국은 4.50배로 크며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미국정도에 불과하다.

우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코로나19 이후 좁혀졌던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1분위와 5분위별로 전년동분기대비로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4분기에서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증감률은 0.0%로 동일했으나 5분위의 소득 증감률은 6.3%로 최하위와 최상위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2019년 2/4분기부터 2019년 4/4분기까지 소득격차 완화추세가 이어졌으나 소득 격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Online(<https://read.oecd-ilibrary.org/>). 접속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29. 임금노동자 소득격차 (9분위/1분위) 추세 (2000 - 2016)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30.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2018년 2/4분기 - 2020년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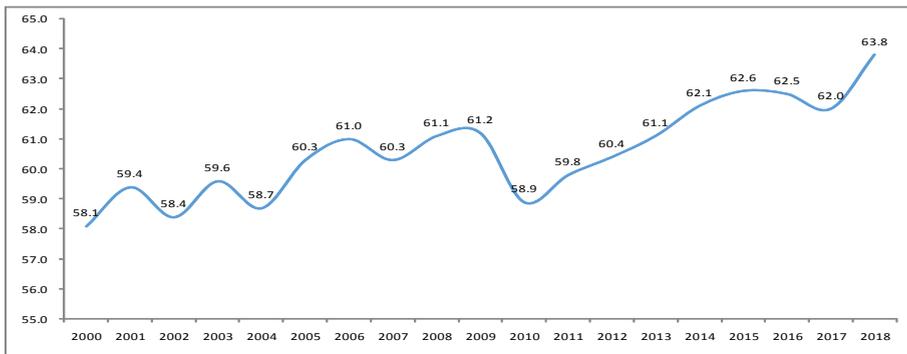
다른 한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최근 들어 좋지 않다.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을 사회조사에서 물어본 결과 2009년 절반 가까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나 2019년에는 28.9%만이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31.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2006 - 2019)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반대로 자본소득분배율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수록 노동자의 몫이 감소하고 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경제불평등과 관련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떨어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3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2000 - 2018)

다만,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노동소득분배율에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영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자본소득을 과대 추계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 중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위기 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로 노동소득분배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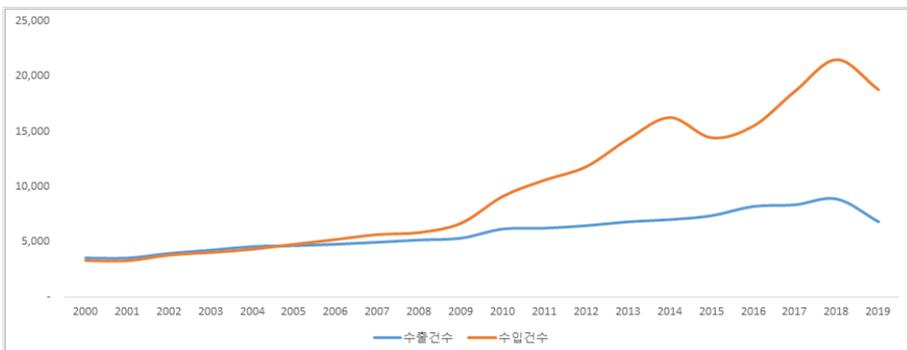
소득불평등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이동성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도 중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노동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대비하는 정책 방향도 필요하다.

표 II-18. 사회(불평등)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소득불평등 감소 추세, 코로나19 이후 소득 계층간 격차 확대	- 코로나19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필요
② 계층 이동 가능성의 감소	- 사회이동성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 중요
③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 추세이나 코로나19로 악화 예상	-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시에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노동소득 확대를 위한 대응 필요

라. 국제(글로벌화)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글로벌화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를 수출 및 수입 추세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수출건수는 2000년 3백 60만 건에서 2019년 6백 88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수입 건수는 이보다 가파르게 증가해 같은 기간 3백 30만 건에서 1천 8백 83만 건으로 늘었다. 수출금액은 1,723억불에서 4,061억불로 늘었고 수입금액은 1,605억불에서 3,774억불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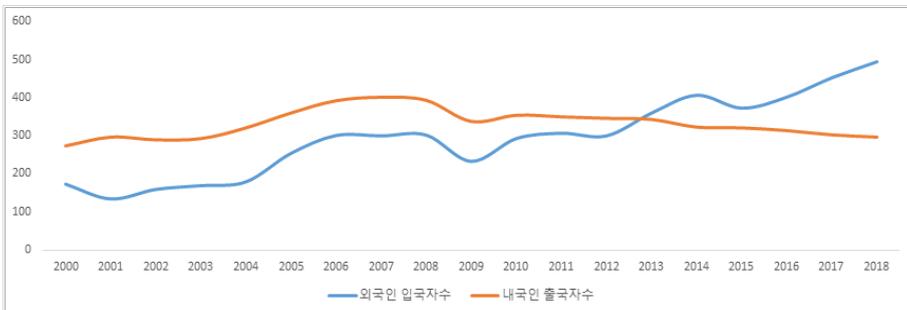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33.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 건수(천 건, 2000 - 2019)

국제적인 인적 교류는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00년 17만 3천 명에서 2018년 49만 5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같은 기간 27만 4천 명에서 29만 7천 명으로 2만 여명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58만 명에서 2018년 237만 명으로 늘었다. 유학생 수를 보면, 2010년 8만 7천 명에서 2018년 16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화는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모두 존재한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경쟁 심화와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현상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는 지구촌 전체가 공동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그만큼 도전과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그림 II-34.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및 내국인 출국자 수 (천 명, 2000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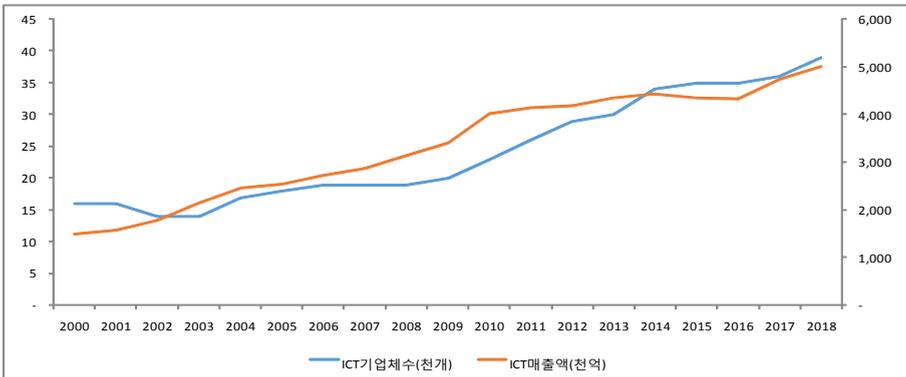
동시에 다문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통합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나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다문화 이해교육과 같은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II-19. 국제(글로벌화)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수출입 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화 가속	-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경쟁 심화와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현상, 고용 없는 성장 초래 대비 필요
② 체류외국인 및 유학생 급증했고 외국인 입국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감소 예상	- 다문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통합 이슈 부상 예상,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 등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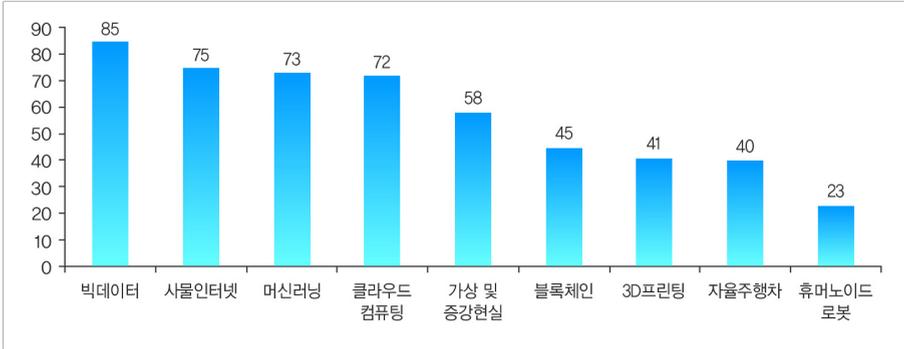
#### 마. 기술(4차 산업혁명)

스마트폰의 등장이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었듯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청년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빠르게 기술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ICT 기업체 수의 증가와 매출액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ICT 기업은 2000년에 불과 1만 6천개였으나 2018년 3만 9천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ICT기업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148조 3천억 원에서 501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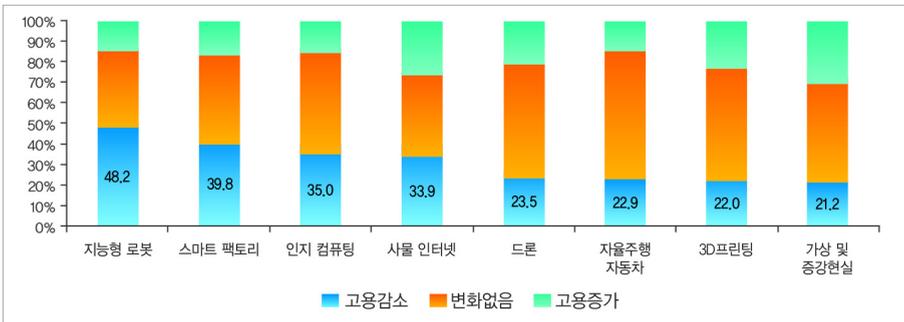
그림 II-35. 우리나라 ICT 기업체 수 및 매출액 추이 (2000 - 2018)



\* 출처 : Centre for the New Economy and Society(2018).

그림 II-36.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별 기업 도입 전망 (% , 2018 - 2022)

스마트폰이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들은 빅데이터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인공지능, 3D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로봇 등이다. 새로운 경제와 사회 센터(Centre for the New Economy and Society, 2018)에서 2022년까지 새로운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 기업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85%가 빅데이터(Big Data)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을 비전자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이나 학습에 인공지능 분야를 접목한 머신러닝 등도 높은 도입률을 보여주었다.



\* 출처 : 이시균, 정재현, 김수현, 홍현균, 정순기, 이진면(2017). [그림 10-2] 재인용.

그림 II-37.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별 고용변동 영향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는 기술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지 모른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이시균 외(2017)는 현장 전문가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기술 분야별로 고용 변화에 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능형 로봇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공장을 완전 자동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역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39.8%나 되었다. 반면,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은 고용감소에 대한 예측이 20% 수준이었다.

빠른 기술변화는 이러한 기술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분야에 관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 심화와 기술적 실업의 발생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기술 변화와 연동되어 나타난 것으로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고 노동자 인정 여부에 따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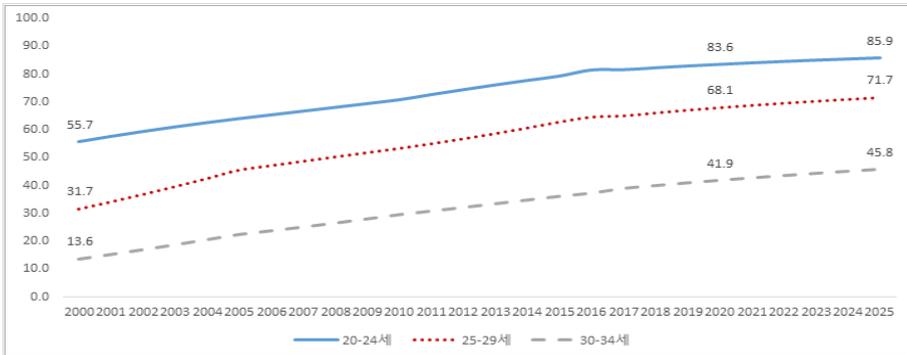
표 II-20. 기술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ICT를 비롯해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 확대	- 빠른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② 일과 삶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 심화와 기술적 실업 등 대비 필요

## (2) 미시체계 변화

### 가. 가족

청년층의 가족구조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주가 20대 초반인 경우 2000년에 1인 가구 비중은 55.7%에 불과했으나 2020년 83.6%까지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2025년 20대 초반은 85.9%, 후반은 71.7%, 30대 초반은 45.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혼이나 비혼, 만혼 등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젊은층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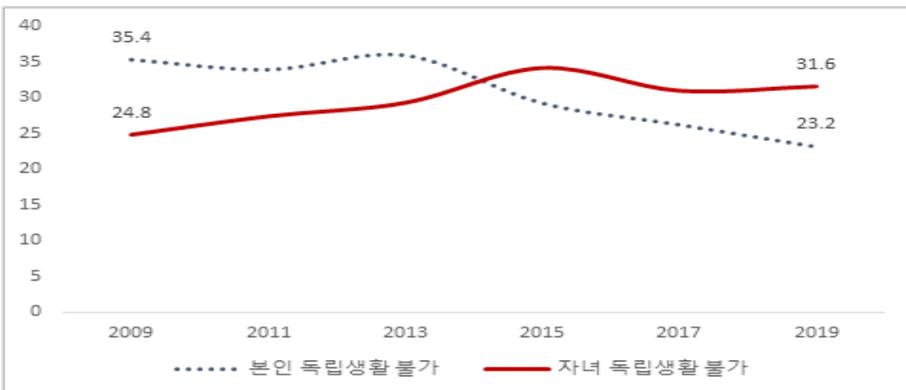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결과임.

그림 II-38. 청년층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추이 (% , 2000 - 2025)

이와 관련 주거실태에서 청년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단독가구의 주거 빈곤율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거주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 주거 정책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월세 대출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가

대부분이어서 청년단독가구 비중이 높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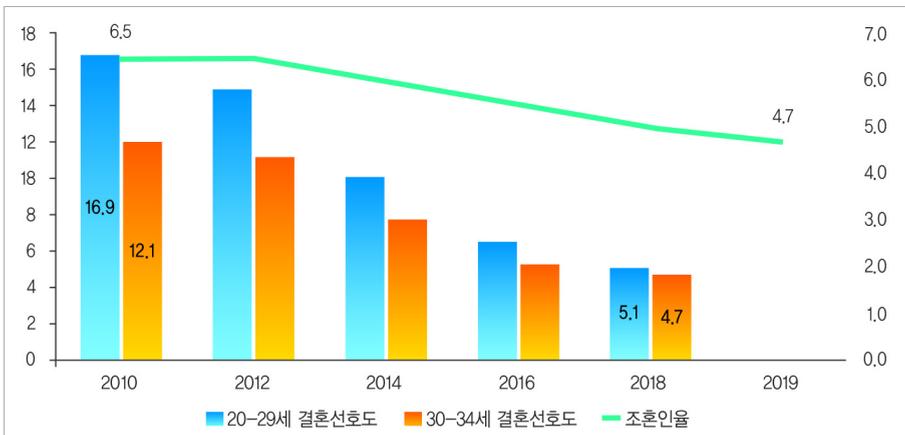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흔히 '캥거루족'으로 불리는 경제적 의존 상태가 많아 청년들의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최형아, 이화영(2013)이 캥거루족 규모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한 결과, 20대 후반은 18.2%에서 19.5%로 30대 초반은 4.2%에서 11.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캥거루족을 부모와 동거 하면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 경우와 취업자지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에 캥거루족으로 분류하였다. 오호영(2017)도 같은 자료를 활용해 20세 부터 34세까지의 캥거루족 규모를 추정한 바 있는데 전체 청년 중 56.8%가 캥거루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캥거루족을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유형 1과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유형 3,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응답했지만 월평균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유형 2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규모를 보면, 유형 1이 52.8%, 유형 2가 5.6%, 유형 3이 3.6%로 나타났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그림 II-39. 60세 이상 자녀 동거 사유 변화 추이 (% , 2009 - 2019)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조사에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사유를 물어본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60세 이상 응답자 본인이 독립생활이 불가해서 자녀와 같이 동거하는 비율은 2009년 35.4%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23.2%까지 떨어졌다. 반면, 자녀가 독립생활이 불가해서 같이 산다는 응답은 2009년 24.8%에서 2019년 31.6%로 증가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와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들의 자립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오호영(2017)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쉼겨루족일 경우 경제적인 활력 수준이 낮고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결혼선호도는 “반드시 한다”는 응답비율이며 조혼인율은 (혼인건수 / 총인구)\*1000임.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결과임.

그림 II-40. 청년 결혼 선호도 및 조혼인율 추이 (% , 1,000명당 건, 2010 - 2019)

이어서 청년들의 특성 중 하나는 최근 들어 미혼이나 비혼, 혹은 만혼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이제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의 경우 16.9%,

30대 초반의 경우 12.1%였으나 2018년 절반 이상 응답비율이 줄어들었다. 조혼 인율은 2010년 인구 1,000명 당 6.5건에서 2019년 4.7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결혼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21. 가족 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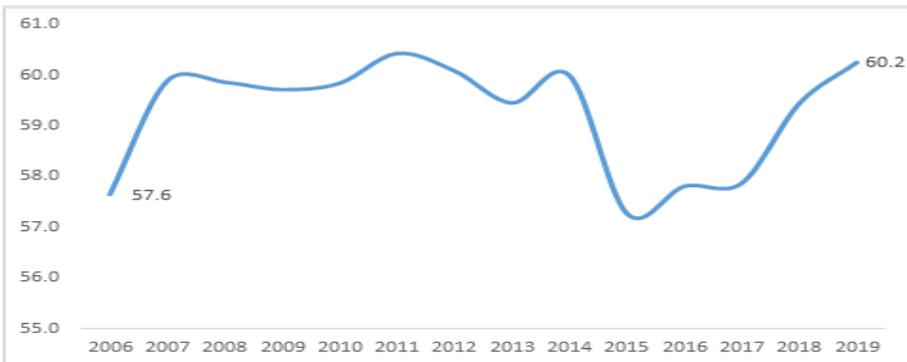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가족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청년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	-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대응 필요
②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살 경우 자녀 독립 불가 사유 증가	-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중요
③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는 최근 들어 크게 감소	- 결혼이나 출산 등은 명시적인 정책 방향으로 정하기 어렵고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가족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썬더족의 확대와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분가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있으며 미혼이나 비혼과 더불어 만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나. 직장

청년들의 직장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우선 보수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40대가 100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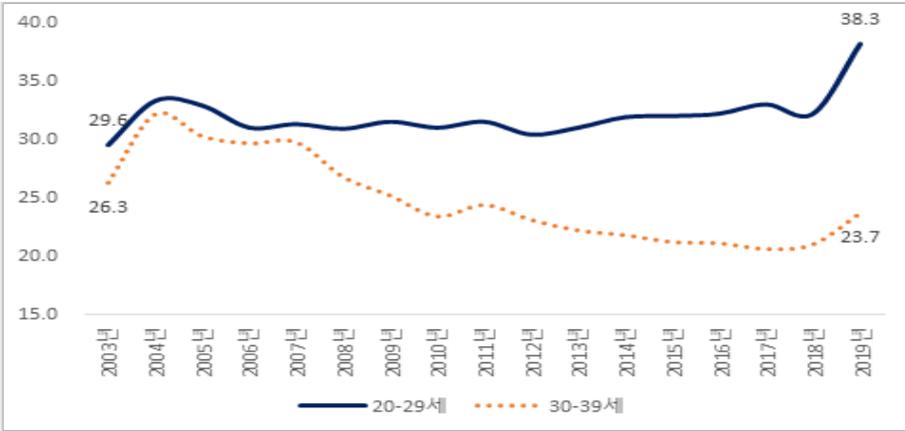
2006년 57.6이었다가 60 수준으로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해 2015년 57.3까지 낮아졌다. 이후 임금 수준이 다시 개선되어 2019년 60.2까지 상승하였다. 청년들의 상대적인 임금 수준은 최근 3년 간 개선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단기일자리 증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검색일 2020년 5월 13일. 청년 임금수준은 40대 임금이 100일 때 임금수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월임금총액은 월별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 특별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값임.

그림 II-41. 40대 대비 청년층 (15 - 29세) 월평균 임금수준 (% , 2006 - 2019)

청년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20대의 경우 29.6%, 30대의 경우 26.3%에서 2004년 최고치를 보여준 후 30대의 경우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2019년 들어 전년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정의 상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실질적인 증가로 보기 어렵다(김유선, 2019:34). 2019년도 결과가 시계열 유지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은 비대면, 디지털분야 정부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하는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임.

그림 II-42. 청년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 (% , 2003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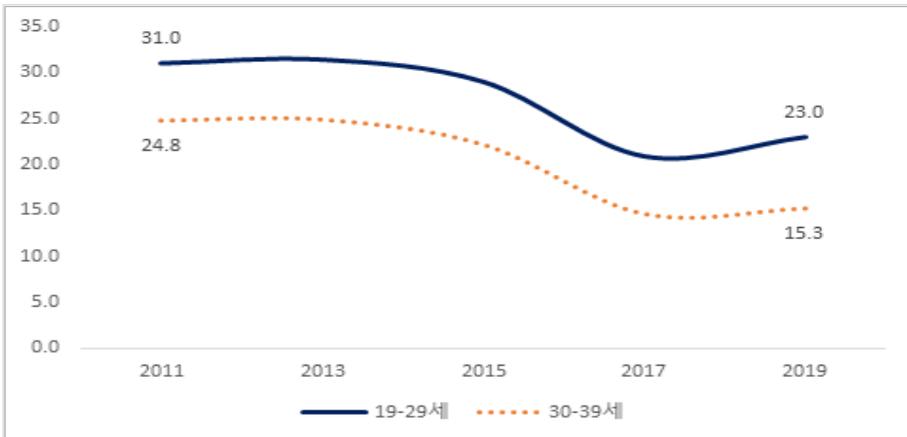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그림 II-43. 청년 고용안정성 ‘매우 많이 느낀다’ 응답 추이 (% , 2011 - 2019)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답변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좀 더 부정적이었다. 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이 안정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011년 19% 이상이었으나 2019년 17% 이하로 낮아졌다.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일 - 가정 양립 문제이다. 실제로 청년들이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2011년 '일을 우선 시 한다'는 응답비율은 20대 31.0%, 30대 24.8%였으나 2019년 각각 23.0%, 15.3%로 낮아졌다. 이러한 위라벨을 중시하는 태도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을 중시하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김기현, 2017). 한편, 청년 취업자들의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2009년부터 조사 중인 생활시간조사에서도 청년들의 일하는 시간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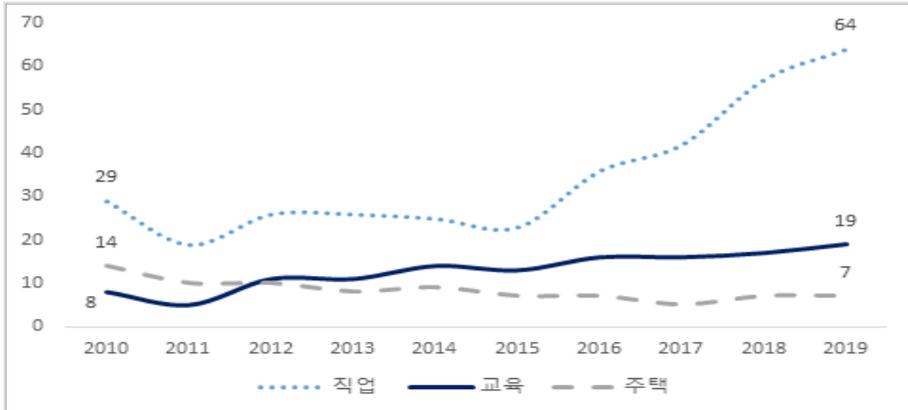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그림 II-44. 청년 일과 생활 균형 '일 우선시' 응답 추이 (% , 2011 - 2019)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발표(2020)에 따르면, 1인 기준으로 수도권에 순유입 사유 중 일자리 때문인 경우는 2010년 2만 9천 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 6만 4천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 확대되었다. 대학 진학과 같은 교육 때문인 경우도 같은 기간 8천 명에서 1만 9천명으로 늘어났다.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9).

그림 II-45. 수도권 순유입 (1인 기준) 사유별 추이 (천 명, 2010 - 2019)

미시지표를 통해 청년들의 직장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은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최근 3년 간 상승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직장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표 II-22. 직장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 증가 중 이나 코로나19로 감소 예상	- 청년들의 소득 수준 유지 노력 필요
② 일과 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하는 시간도 감소 추세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여건 조성 중요
③ 비정규직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도 증가	-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④ 취업을 위한 수도권 집중 심화	- 일자리 관련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필요

청년 비정규직이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안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므로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취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많아 일자리 관련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다.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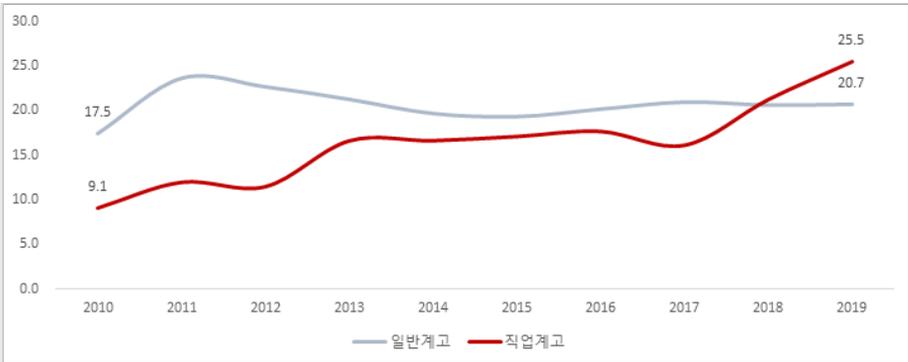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이 취업이나 졸업 후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20대의 경우에는 2008년과 비교해 2018년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의 경우에는 긍정응답(매우 + 그렇다)이 25.5%에서 29.0%로 상승하였다. 다만, 긍정응답 비중이 불과 30% 수준이어서 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긍정응답 역시 같은 기간 상승하였다. 20대는 59.8%에서 77.7%로 응답비율이 높아졌고 30대는 51.7%에서 73.9%로 20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응답비율이 상승하였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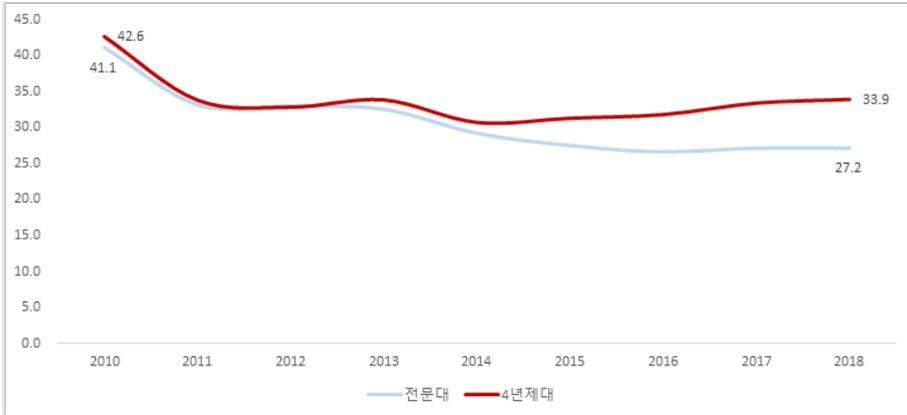
그림 II-46.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응답 추이 (% , 2008 - 2018)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우려할 만한 사실은 졸업 후에 진로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교 졸업자 중 취업이나 군 입대, 진학인 아닌 무직이나 미상인 비율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취업이라는 완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고의 미상자 비율이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계고보다 높아졌다.



\* 출처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배진우(2019). 그림 VII-7 인용(p. 310). 2019년 결과를 추가함.

그림 II-47. 고교 졸업자 계열별 졸업 후 미상자 비율 추이 (% , 2010 - 2019)



\* 출처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2019). 그림 VII-9 인용(p. 312). 2018년 결과를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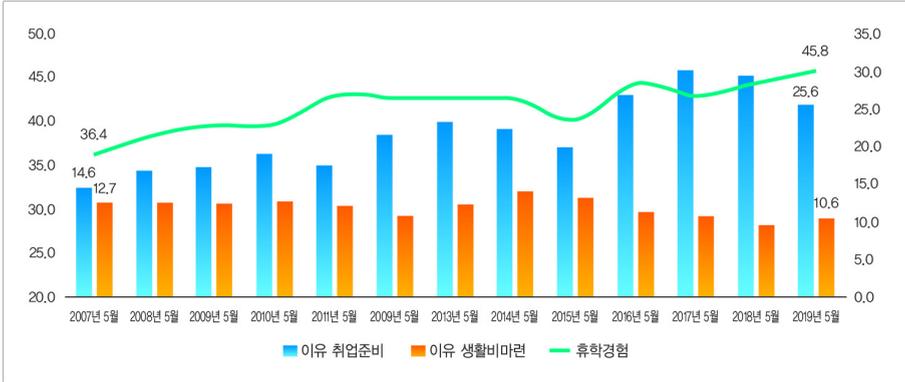
그림 II-48. 대학 졸업자 계열별 졸업 후 미상자 비율 추이 (% , 2010 - 2018)

대학의 경우 미상자 비율은 더 심각한데 특히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 중 미상자 비율은 2014년부터 전문대와 간격이 벌어져 2018년 현재 6.7%p나 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졸업 후 미상자 비율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로 코로나19에 따라 신규채용이 크게 줄면서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지 못한 청년 신규졸업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상반기 고졸자와 대졸자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진입을 못한 상태에서 하반기 대졸자가 합류하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이 하반기로 미루어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2020년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 15 - 29세 청년 중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미취업 비율은 2019년 5월 13.8%에서 2020년 5월 15.0%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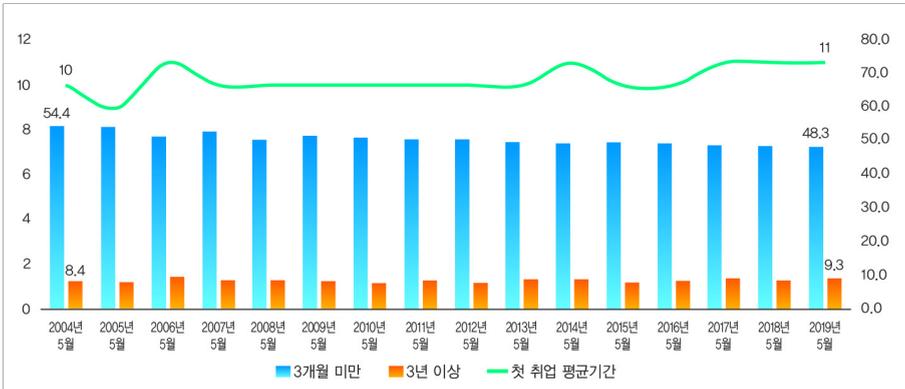
학교 생활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졸업 유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대학에 졸업유예제도가 도입되었고 대졸자 중 휴학을 경험한 경우는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휴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업준비였고 2019년 한 풀 꺾이기는 했으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응답비율이 상승하였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임.

그림 11-49. 대졸자 휴학 경험 여부 및 사유 추이 (% , 2007 - 201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임.

그림 11-50. 청년 (15 - 29세) 졸업 후 첫 취업 평균기간 추이 (% , 2004 - 2019)

이러한 유예 현상은 재수생활에서 졸업유예생활을 넘어 취업유예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졸업 후에 취업에 이르는 평균 기간은 11개월로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간은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3년 이상인 경우가 2004년 8.4%에서 2019년 9.3%로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까지 3개월 미만이 걸린 경우는 같은 기간 54.4%에서 48.3%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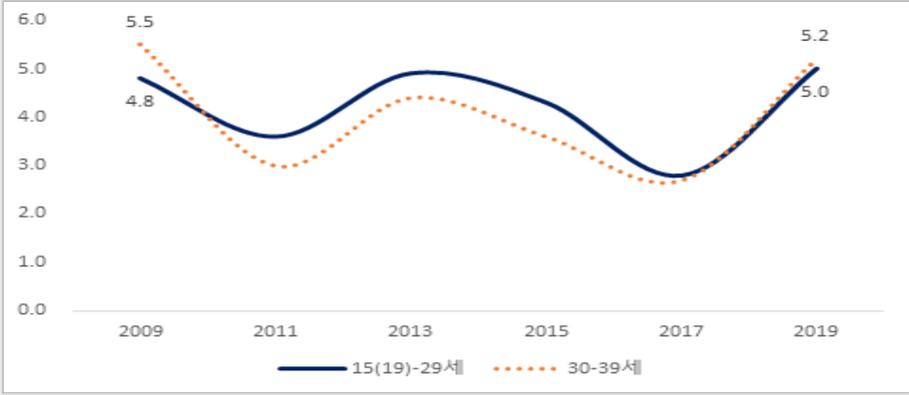
표 II-23. 학교 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교육 기회 여건에 대한 긍정응답은 크게 증가했으며 학교교육 효과 긍정 응답도 늘었으나 30% 수준으로 낮음	-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학교 교육의 효과는 낮은 수준으로 교육의 질 제고 필요
② 학교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아닌 미상자 증가	- 학교 - 직업 이행에 관한 여건 조성 중요
③ 졸업 유예를 통해 재학 기간을 연장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늘어나는 유예 현상 확대	- 졸업과 취업에 대한 유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학교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은 보다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졸업과 취업에 대한 유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아닌 미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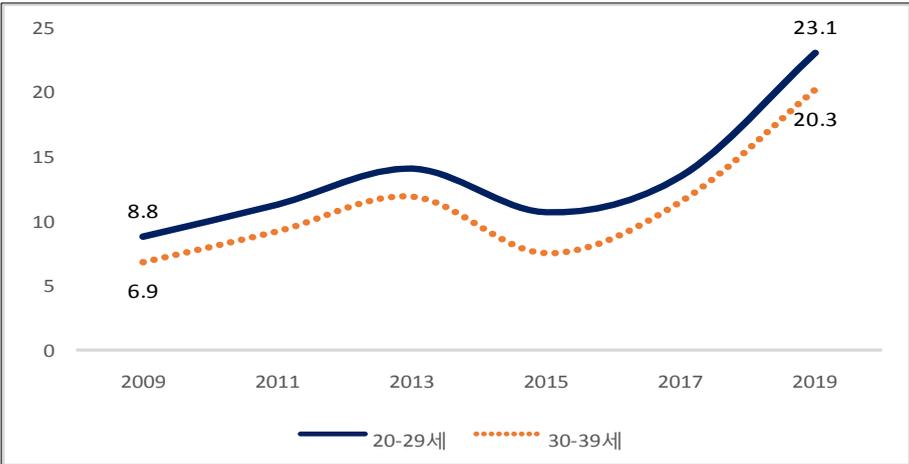
#### 라. 지역사회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청년들의 긍정응답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2009년 20대가 8.8%, 30대가 6.9%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2019년 각각 23.1%와 20.3%로 긍정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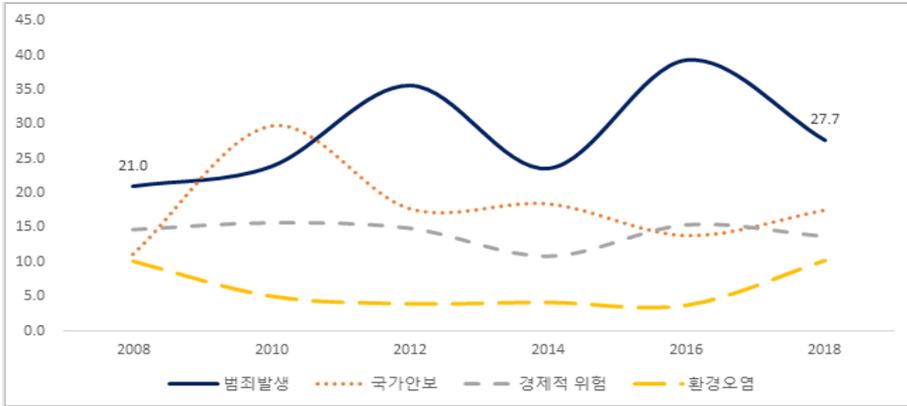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그림 II-51.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많이 좋아짐” 응답비율 (% , 2009 - 201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그림 II-52. 사회 안전수준이 “많이 + 비교적 개선” 응답비율 (% , 2009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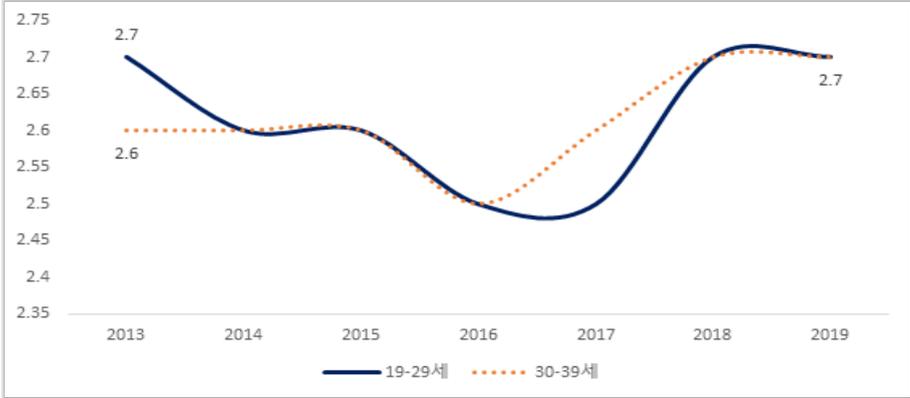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그림 II-53. 20대 청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응답 추이 (% , 2008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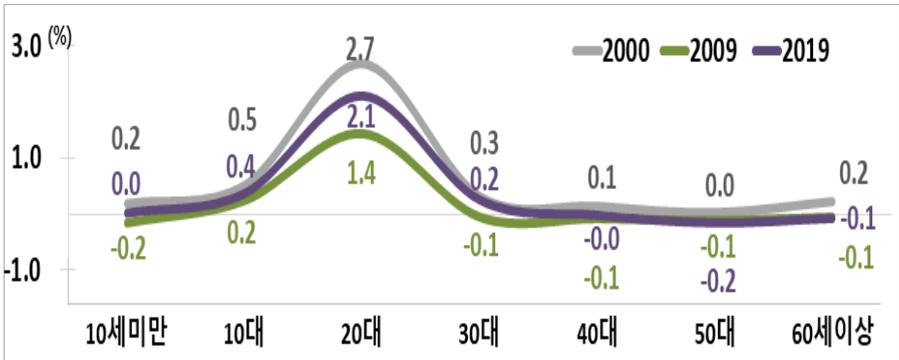
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청년들은 범죄 발생을 꼽았다. 20대를 기준으로 2018년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이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고 국가안보가 15.5%, 경제적 위험이 13.7%, 도덕성 부족이 10.4%, 환경오염이 10.3% 순이었다. 2008년 이후 응답 추세를 보면 범죄 발생이라는 응답비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안보는 낮아진데 비해 경제적 위험과 환경오염은 비슷한 응답 수준을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물어본 결과 2013년 대비 2016년까지 낮아지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최근 다소 증가했으나 지역사회에 정주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보도자료(2020.06.29)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률을 보면, 20대가 2000년에 1.4%에서 2019년 2.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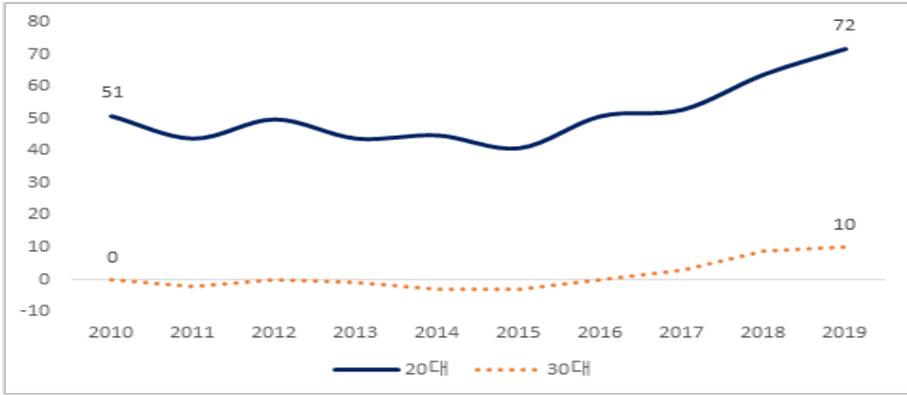
그림 II-54.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점, 2013 - 2019)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9). [그림 2] 재인용(p. 4).

그림 II-55.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 , 2000, 2009, 2019)

1인 기준으로 수도권에 순 유입된 청년들은 20대의 경우 2010년 5만 1천 명에서 2019년 7만 2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30대 역시 같은 기간 0명에서 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에 한 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들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20.06.29.).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인구 전망.

그림 II-56. 수도권 청년 순유입 (1인 기준) 추이 (천 명, 2010 - 2019)

표 II-24.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여건이나 전반적인 사회 안전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큰 불안요인은 범죄발생으로 나타남	-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 해소 필요
② 지역사회(시도)에 대한 소속감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지역사회 삶의 여건 개선 노력
③ 2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인한 비수도권 청년 인구 감소	-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필요

청년들은 사회적 안전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큰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범죄 발생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마.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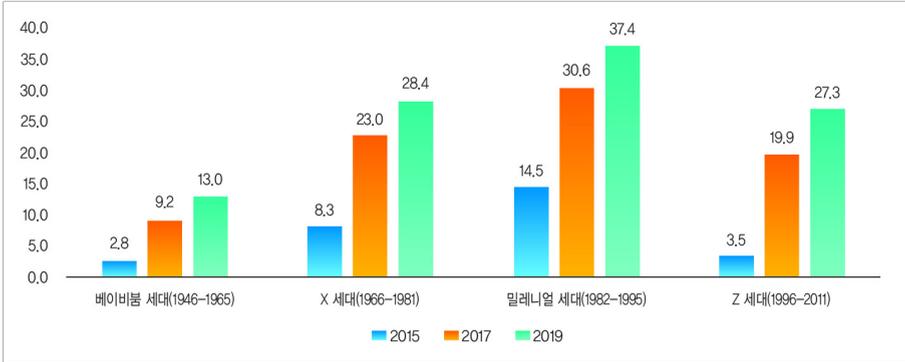
온라인 공간에서의 생활은 청년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면서 온라인 공간에 접속해 생활하는 청년들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조사를 통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온라인을 활용한 여가 생활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인터넷, PC, 게임을 활용한 여가 활용 비율은 2000년 20대의 경우 24.3%, 30대의 경우 8.8%에 불과했으나 2019년 각각 54.7%와 41.0%로 절반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20년 6월 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임.

그림 II-57. 인터넷, PC, 게임을 활용한 여가활용 비율 (% , 2000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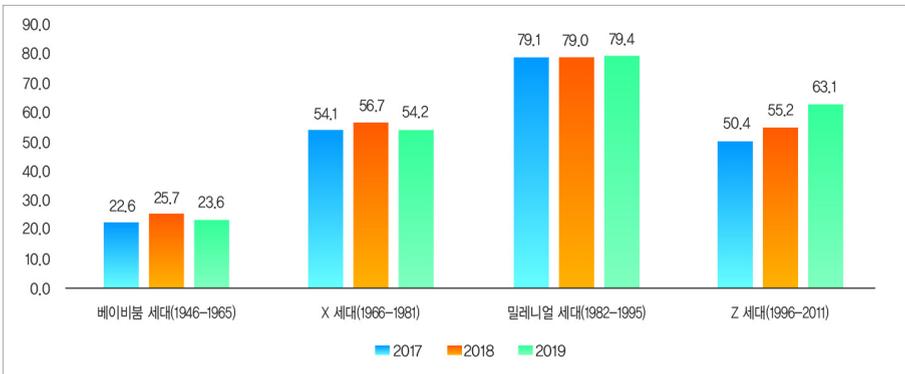
세대별로 온라인 생활을 비교해 보면, 디지털 콘텐츠 이용 비율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높고 증가추세도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만 가장 최근 세대인 Z세대보다 구매력을 갖춘 밀레니얼 세대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 중 유튜브 이용은 X세대와 Z세대 간에 40.6%, 44.7%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넷플릭스 이용은 각각 5.1%와 13.6%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이 제공하는 UCC 이용을 살펴보면, X세대는 20.4%에 불과했으나 Z세대는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3). 미디어 통계수첩. p. 10. 디지털 콘텐츠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영화 등을 모바일 매체나 인터넷 연결을 통한 TV VOD, OTT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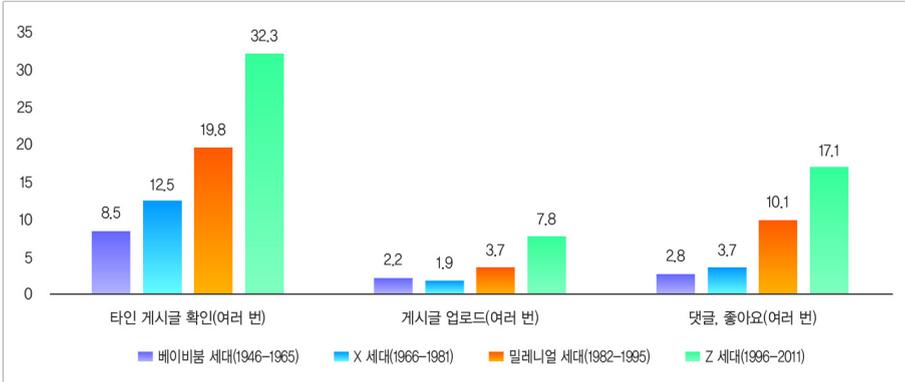
그림 II-58. 세대별 디지털 콘텐츠 이용비율 추이 (% , 2015 - 2019)

SNS의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비슷하게 밀레니얼 세대의 이용비율이 7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Z세대의 경우 SNS 이용비율이 다른 세대들과는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SNS 이용 빈도를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타인 게시글을 확인하고 본인의 게시글을 올리며 댓글이나 ‘좋아요’를 다는 비중이 Z세대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았다.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3). 미디어 통계수첩. p. 15.

그림 II-59. 세대별 SNS 이용비율 추이 (% , 2017 - 2019)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3). 미디어 통계수집. p. 15.

그림 II-60. 세대별 SNS 활동 유형별 “하루에도 여러 번” 빈도 (% , 2019)

온라인 생활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온라인 매체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표 II-25. 온라인 생활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방향

환경변화	정책방향
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	- 온라인을 활용한 정책 추진 활성화 필요
② 디지털 콘텐츠 이용이 많고 최근 세대 1인 미디어 중심으로 이용	- 청년들의 디지털 콘텐츠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진출 확대
③ SNS 활용(게시글 확인, 본인 게시물 업로드, 댓글이나 좋아요 등) 빈도가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	- SNS를 활용한 정책 추진 필요하고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필요

디지털 콘텐츠와 1인 미디어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이 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Z세대의 경우 SNS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SNS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상호비방이나 혐오표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청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3) 청년정책 추진 여건 분석<sup>4)</sup>

#### (1) 청년정책 법률 및 정책사업 여건 분석

##### 가. 법률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되고, 2020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1장 총칙(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임), 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청년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연구사업), 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4)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항원 교수(아주대학교), 최한수 교수(경북대학교)가 작성하였음.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5장 보칙(권한의 위임·위탁, 포상, 국회보고,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26. 청년정책 추진여건 분석 : 법률

추진현황	문제점	정책방향(안)
①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②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일몰 기한 연장	- 청년기본법 조항(청년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청년시설 규정 신설 등) 개정 필요 - 청년기본법을 모법으로 법률체계 정비 및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검토	- 청년기본법 개정 추진 및 모법으로 기능하도록 타법과의 관계 명료화 - 청년기본법이 신규로 제정되었으므로, 제도적 기반 구축 고려 필요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관련 청년의원 및 단체들의 여러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청년연령 18세 하향 및 청년 시설 규정 신설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청년기본법을 모법으로 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나. 정책사업

2019년 기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사업은 180여개이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청년 연령(19 - 34세)를 포괄하는 사업들의 수를 세어 정리한 것으로 매우 초보적인 관점에 의해 분류된 것이다. 청년정책의 발전이 개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상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정의하는 청년정책의 범위나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표 II-27. 청년정책 추진여건 분석 : 정책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정책방향(안)
<p>① 부처별로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생활안정·건강 등의 영역에 걸쳐 정책사업 추진이 확대됨.</p> <p>② 청년정책 사업 182개 중 일자리 사업은 94개(51.6%)로 전체 관리 과제 중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41개(22.5%), 주거 13개(7.1%), 참여·권리 17개(9.3%), 생활 17개(9.3%) 순이었음</p> <p>③ 청년정책 정의에 부합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산 연령이 청년기본법이 제시한 19-34세를 80% 이상 포괄하는 사업은 총 28개(15.4%)에 불과하며, 주요사업은 48개(26.4%), 기타사업은 106개(58.2%)였음. 182개 과제의 예산 중 핵심정책 예산은 전체 청년정책사업 예산의 67.0%임</p>	<p>- 각 부처에서 정의하는 청년정책 범위가 달라 제출 자료가 제각각</p> <p>- 정책 영역의 불균형: 정책 영역별로 정책사업은 일자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p> <p>- 정책 유형의 불균형: 청년 당사자 지원 외에 청년을 둘러싼 환경 개선(근로환경 등)을 위한 정책 사업 제약</p> <p>- 대상 선별기준의 제약: 대상자 선별을 가구단위로 하여 다수 청년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p>	<p>- 청년정책 정의에 따른 정책 범위 명확화</p> <p>- 청년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책 영역 포괄성 확보</p> <p>- 정책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상자 확대 및 선별기준 조정 방안 마련</p> <p>- 중앙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p>

청년정책을 대상자의 연령에 의해 취합하고 분류한 것에 의하면 180여개의 청년정책 중 19세부터 34세를 상당부분 포괄하는 사업은 15.4%에 불과하였다. 아직 청년연령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들이 미발달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연령 내 집단 및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보면, 한 정책에서 청년연령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청년정책 발전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 연령을 포괄하는 사회정책은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없는지, 청년만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청년정책의 출발선에서의 정책의 철학, 방향,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 (2) 청년정책 예산 여건 분석<sup>5)</sup>

법적으로 청년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법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힘든 과제이다.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란 집단을 하나로 묶어줄 공통의 징표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그것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전통적인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청년의 특징은 이행기에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즉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18세)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잡는 단계(34세 이전까지)에 있는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청년을 이행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청년정책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과제는 개개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청년 정책이 존재한다면 그 시작은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봐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로 시작한 국가장학금 정책은 2012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틀이 자리 잡혔다. 국가장학금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중 가장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반응이 좋은 사업이 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청년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국가장학금 정책과 청년고용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양대 축으로 작동해왔다. 이들 두 분야 외의 다른 영역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분야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이 없다. 대표적인 분야가 복지 분야이다.

---

5) 이 절은 최한수 교수(경북대학교)가 작성하였음.

청년기본법은 청년 복지증진과 주거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청년복지 및 주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 보편적 복지정책의 수혜자 그룹의 하나가 아니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 복지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복지분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있어 청년복지예산은 단 한 번도 독자적 분석 대상이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청년예산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이제 지속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청년과 관련된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단 청년기본법 때문이 아니라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년의 표를 의식하여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주거를 비롯한 몇몇 복지영역에서의 청년들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곧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로 인해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의 기혼 청년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20 - 30대의 청년계층이 정치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나감에 따라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교육과 일자리 분야를 넘어 주거 및 문화, 건강, 사회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려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청년예산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기준으로 정부부처가 진행하는 청년예산을 분석한 뒤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결정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총량 기준으로 2019년 청년예산의 총액을 살펴보고 각 세부 분야별 청년예산의 배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집행방법과 수혜대상에 따라 청년예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각 분야 별로 배정된 청년예산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 기준에 따라 청년예산을 고용, 교육, 주택, 기타 복지 사업으로 나누어 그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이번 청년 기본 계획에서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두 개의 사업에 대한 간략한 예산 추계, 예산의 관점에서 사업 수행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을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 5장에서는 효과적인 청년예산의 수립에 있어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할 것이다.

## 가. 2019년 청년예산의 주요 특징

### ① 청년예산 총액 기준

2019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청년예산은 21.8조이다. 그러나 실제 청년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조세지출 항목 중 청년이 혜택을 보는 실제 몇몇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장려금이다.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30대 미만의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그 금액이 무려 1조 2,262억 원에 이른다. 이들 예산은 사실상 청년예산으로 봐야 한다. 청년예산은 21.8조는 2019년 전체 정부 예산 469.6조원의 약 5% 수준에 해당한다.

과제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예산은 총 182개이다. 이중 재정사업이 148개 (전체의 81%), 비예산사업이 31개 (전체의 17%), 조세지출 사업 2개 (전체의 1%) 이다.<sup>6)</sup>

### ② 청년예산 분야별 배분

21.8조의 청년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16.6조)<sup>7)</sup>분야와 교육분야 예산(약

---

6) 2개의 조세지출사업은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이다. 여기에 소득세 세액공제 형식으로 등록금 납부액의 15%를 소득세에서 제외해주는 등록금 보조금도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0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 전체 복지 및 교육예산 (231.6조)의 약 9% 수준<sup>8)</sup>이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분야란 프로그램 예산 제도상의 복지지출의 범주인 사회복지(080)와 보건(090)을 말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상 사회복지(080)예산은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공적연금(083), 보육가족 및 여성(084), 노인 및 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9개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보건(090)분야는 보건의료(091), 건강보험(092), 식품의약 안전(093)의 3개 부문을 말한다.

청년사회복지와 청년교육예산의 크기를 중앙정부 복지예산(161조) 및 교육예산(70.6조)과 비교해보았다. 각각 전체 복지와 교육예산의 약 10%와 7% 수준이다.

**표 II-28. 182개 관리과제 청년정책분류체계 대분류별 과제수 및 예산**

(단위: 개, 억 원, %)

구분	청년정책 과제수 (%)	청년정책 예산 규모(억 원, 2019년 기준)
일자리	94(51.6)	46,950(21.5)
교육·훈련	41(22.5)	49,501(22.7)
주거	13(7.1)	119,537(54.8)
참여·문화·활동	17(9.3)	1,051(0.5)
복지·금융·건강	17(9.3)	1,139(0.5)
전체	182(100.0)	218,178(100.0)

\* 출처: 변금선 외(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가 수정

2019년 이전의 청년예산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총액차원이든 분야별이든 청년예산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다만 복지예산만의 경우는 가능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청년

7)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정의는 프로그램 예산상의 복지지출 중 (080과 090)을 의미. 참고로 고등교육 예산은 교육예산(050)으로 분류되어 복지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8) 정부 예산에 대한 출처는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2019 주요 재정지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예산의 총액이 958억 원 수준(전체 복지예산의 0.6%)이었다. (아래 <표 II-19> 참고) 9) 불과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복지분야 예산의 경우 총액이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복지분야 예산 중 주거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분야 정부지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예산은 지난 3 - 4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표 II-29. 복지예산의 생애주기별 분류

		노령	유족	장애/ 산재 <sup>1)</sup>	보건	가족	AL MP	실업	주거	기타	생애 주기별 합계
근 로 가 능 연 령	영유아	-	-	-	29	5,395	-	-	-	-	5,424 (3.4%)
	아동 청소년	-	-	132	44	646	-	-	-	34	857 (0.5%)
	청년	-	-	-	-	48	808	-	-	128	958 (0.6%)
	출산	-	-	-	73	884	78	-	-	-	1,035 (0.6%)
	합계			132	146	6973	886			162	8274 (5.1%)
	노령	42,057	281	-	4,810	-	23	57	-	659	47,888 (30.0%)
전체 대상	-	3,288	9,843	63,476	709	5,873	5,493	7,942	6,588	103,212 (64.8%)	
합계	42,057	3,569	9,975	68,433	7,682	6,782	5,550	7,942	7,409	159,400 (100.0%)	

\* 출처: 최성은 외 (2017, 보고서 비공개)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

주: 1) 장애 / 산재 / 근로무능력자는 장애 / 산재로, 가족 / 보육 / 아동 / 기초교육은 가족으로 요약하여 작성함.  
2) EITC는 포함되지 않음.

이제 세부 예산을 들여다보자. 청년예산은 복지나 교육 분야의 사업 전체에 고루 배정되어 있지 않다. 청년과 관련된 몇몇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

9) 이 연구에서 정의된 통합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 보건분야 지출을 합한 값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금이 포함되며, 융자사업도 이차보전분을 환산하지 않은 순융자금액으로 더해져 계산된 것이다. (최성은 외 (2017). 통합사회복지지출의 범위와 분류에 관한 연구 및 산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산에 대한 정확한 조망을 위해서는 예산이 집중 배정되어 있는 세부 사업들을 살펴봐야 한다.

#### a. 분야별 청년예산의 분석

먼저 전체 중앙정부의 일자리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수준이었다.<sup>10)</sup> 전체 중앙정부 주택예산<sup>11)</sup>에서 청년 주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 수준이었다.<sup>12)</sup> 전체 중앙정부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예산에서 청년 교육예산(약 5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수준<sup>13)</sup>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청년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은 일자리(72%)와 주택(28%)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 사회복지예산의 분포와는 다르다. 2019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sup>14)</sup>의 경우 1순위가 연금(33%), 다음이 빈곤 및 취약계층 보호(20%)<sup>15)</sup>, 주택(18%), 노동(18%) 순<sup>16)</sup>이었다.

청년예산을 대분류별 예산액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았다. 가장 큰 비중은 주거(약 12.0조; 55%)분야였고 다음으로 교육(약 5.0조; 23%) 과 일자리 순(약 4.7조; 22%) 이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이 전체 청년예산의 99%를 차지했다. 사실상 이 세 분야가 대부분의 청년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분류별 과제 수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 일자리(94개) ▲ 교육(41개) ▲ 주거(13개) 순이었다. 이 3가지 영역의 사업이 전체 사업수의 약 81%를 차지했다.

10) 2019년 일자리 예산의 총액은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분야』에서 인용하였다.

11) 2019년 기준 주택부분 지출은 24.5조 원이다.

12) 그러나 이 비중은 과장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토부의 청년 행복주택 사업과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전체 예산 중 실제로 청년층에 지급되는 비율이나 수혜율을 감안하여 계산할 경우 실제 청년주거 예산은 5.5조로 계산된다. 이 경우 비중은 22%까지 떨어진다.

13)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예산의 총합은 약 10.8조원이다.

14) 보건의 제외한 것이며 복지분야 프로그램 예산별 자료는 재정정보원의 [2020 주요재정통계]를 참고하였다.

15) 빈곤 및 취약계층 지원(10.8%)과 대부분이 노령연금을 차지하는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9.4%)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16) 흔히 노동과 일자리 예산이 혼용되지만 프로그램 예산에 따르면 이는 조금 범주가 다르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 기준에 따르면 노동과 고용 두 분야에 모두에 걸쳐 있다.

중분류별 예산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 주거비 (7.8조) ▲ 교육비 (4.1조) ▲ 취업 (4.1조) ▲ 주택공급 (4.1조) ▲ 교육·연수·실습 (0.8조) 순이었다. 위의 5가지 영역의 사업 예산 비중이 전체 청년 예산의 약 96% 수준이었다. 중분류별 과제 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 취업 (70개) ▲ 교육·연수·실습 (33개) ▲ 창업 (24개) ▲ 주택공급 (10개) ▲ 소득·자산 (9개) 및 권리 (9개) 순이었다. 이 5가지 영역의 사업이 전체 사업수의 약 85%를 차지한다.

표 II-30. 182개 관리과제 청년정책분류체계 중분류별 정책 과제수 및 예산

(단위: 개, 억 원, %)

구분		청년정책 과제수 (%)	청년정책 예산 규모 (억 원, 2019년 기준)
일자리	취업	70 (38.5)	41,124 (18.9)
	창업	24 (13.2)	5,826 (2.7)
교육·훈련	교육비	8 (4.4)	41,208 (18.9)
	교육·연수·실습	33 (18.1)	8,292 (3.8)
주거	주택공급	10 (5.5)	41,095 (18.8)
	주거비	3 (1.6)	78,442 (36.0)
참여·문화· 활동	참여·활동	8 (4.4)	1,010 (0.5)
	권리	9 (4.9)	41 (0.02)
복지·금융· 건강	금융	6 (3.3)	150 (0.07)
	소득·자산	9 (4.9)	545 (0.2)
	건강	2 (1.1)	444 (0.2)
전체		182 (100.0)	218,178 (100.0)

\* 출처: 변금선 외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의 <표>를 바탕으로 저자가 수정

## b. 예산 기준 분야별 상위 사업에 대한 분석

예산액 규모에 따라 각 사업분야별 상위사업들을 살펴보자. 먼저 청년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사업이 7조 8,422억원으로 청년주거 분야중 가장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이 3조 2,292억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이 2,850억원 이었다.

청년 일자리 분야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9,971억원<sup>17)</sup> 규모로,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 인건비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4,419억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3,484억원) 순이었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고용장려금 및 직업 훈련 서비스 순이었다.

청년 교육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3조 6,051억원<sup>18)</sup>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일학습 병행제(3,568억원),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신진연구, 생애첫연구; 1,974억원) 순이었다.

## c. 사업의 집행형태에 따른 분류

전체 청년예산의 96%는 선별적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사업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그 수혜의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조건부 혹은 선별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수혜 자격이 주어지는 이른바 보편적 형태의 청년정책예산은 전체청년예산의 약 4% 수준(8,192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사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 전체 사업건수의 약 80%(정확히는 79.1%)는 선별의 형식으로 나머지는 보편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청년예산의 약 76%(15조 9,818억원)는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정책의

17)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27억원)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1조 1998억원으로 늘어난다.

18) 여기서 말하는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수급 자격이 결정되고 나머지 약 24%는 중소기업 근무나 미취업과 같은 소득기준 외의 요인,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조건부 사업이었다. 사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전체 사업건수의 83%가 소득기준 외의 요인으로, 나머지는 소득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표 II-31. 중분류별 정책 대상 전체 지원 및 소득 제한 여부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구분	보편	선별	상태	소득제한 과제수(%)	가구기준	개인기준	가구+개인	전체	
					(%)	(%)	기준(%)		
일자리	취업	22 (31.4)	48 (68.6)	45 (93.8)	3 (6.3)	1 (33.3)	2 (66.7)	0 (0.0)	70 (100.0)
	창업	3 (12.5)	21 (87.5)	21 (100.0)	0 (0.0)	0 (0.0)	0 (0.0)	0 (0.0)	24 (100.0)
교육· 훈련	교육비	0 (0.0)	8 (100.0)	5 (62.5)	3 (37.5)	1 (33.3)	2 (66.7)	0 (0.0)	8 (100.0)
	교육· 연수·실습	0 (0.0)	33 (100.0)	31 (93.9)	2 (6.1)	0 (0.0)	1 (50.0)	1 (50.0)	33 (100.0)
주거	주택공급	1 (10.0)	9 (90.0)	2 (22.2)	7 (77.8)	4 (57.1)	0 (0.0)	3 (42.9)	10 (100.0)
	주거비	0 (0.0)	3 (100.0)	0 (0.0)	3 (100.0)	1 (33.3)	2 (66.7)	0 (0.0)	3 (100.0)
참여· 문화· 활동	참여·활동	2 (25.0)	6 (75.0)	6 (100.0)	0 (0.0)	0 (0.0)	0 (0.0)	0 (0.0)	8 (100.0)
	권리	5 (55.6)	4 (44.4)	4 (10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복지 금융 건강	금융	2 (33.3)	4 (66.7)	2 (50.0)	2 (50.0)	0 (0.0)	2 (100.0)	0 (0.0)	6 (100.0)
	소득·자산	1 (11.1)	8 (88.9)	3 (37.5)	5 (62.5)	2 (40.0)	1 (20.0)	2 (40.0)	9 (100.0)
	건강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전체	38 (20.9)	144 (79.1)	119 (82.6)	25 (17.4)	9 (36.0)	10 (40.0)	6 (24.0)	182 (100.0)	

\* 출처: 변금선 외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의 <표>를 바탕으로 저자가 수정

표 II-32. 중분류별 정책 대상 전체 지원 및 소득 제한 여부 (예산액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보편	선별	상태	소득 제한				전체	
				과제수(%)	가구기준 (%)	개인기준 (%)	가구+개인 기준 (%)		
일자리	취업	6,663 (16.2)	34,461 (83.8)	31,702 (92.0)	2,760 (8.0)	2,711 (98.2)	49 (1.8)	0 (0.0)	41,124 (100.0)
	창업	80 (1.4)	5,746 (98.6)	5,746 (100.0)	0 (0.0)	0 (0.0)	0 (0.0)	0 (0.0)	5,826 (100.0)
교육· 훈련	교육비	0 (0.0)	41,208 (100.0)	2,921 (7.1)	38,288 (92.9)	507 (1.3)	37,781 (98.7)	0 (0.0)	41,208 (100.0)
	교육· 연수·실습	0 (0.0)	8,292 (100.0)	8,141 (98.2)	151 (1.8)	0 (0.0)	139 (91.7)	13 (8.3)	8,292 (100.0)
주거	주택공급	0 (0.0)	41,095 (100.0)	1,553 (3.8)	39,542 (96.2)	27,754 (70.2)	0 (0.0)	11,788 (29.8)	41,095 (100.0)
	주거비	0 (0.0)	78,442 (100.0)	0 (0.0)	78,442 (100.0)	0 (0.0)	78,442 (100.0)	0 (0.0)	78,442 (100.0)
참여 문화 활동	참여·활동	996 (98.6)	14 (1.4)	14 (100.0)	0 (0.0)	0 (0.0)	0 (0.0)	0 (0.0)	1,010 (100.0)
	권리	9 (22.6)	32 (77.4)	32 (100.0)	0 (0.0)	0 (0.0)	0 (0.0)	0 (0.0)	41 (100.0)
복지 금융 건강	금융	0 (0.0)	150 (100.0)	0 (0.0)	150 (100.0)	0 (0.0)	150 (100.0)	0 (0.0)	150 (100.0)
	소득·자산	0 (0.0)	545 (100.0)	60 (11.0)	485 (89.0)	173 (35.7)	0 (0.0)	312 (64.3)	545 (100.0)
	건강	44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44 (100.0)
전체	8,192 (3.8)	209,986 (96.2)	50,168 (23.9)	159,818 (76.1)	31,145 (19.5)	116,561 (72.9)	12,113 (7.6)	218,178 (100.0)	

\* 출처: 변금선 외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의 <표>를 바탕으로 저자가 수정

전체 청년예산의 77%는 정책대상을 직접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대상 지원 과제 예산이 16조8,180억 원(77%)이고 나머지는 환경개선이 20%, 대상 지원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3% 수준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대상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이 10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참여·권리 분야가 95%로 높은 비중이었다. 환경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주거 (약 30%)였고 다음이 일자리 (약 12%)였다.

현금 및 현물 기준에 따라 청년예산을 나누어 보았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현물 급여(서비스 지원)가 전체의 56%, 현금 지원이 전체의 약 29%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금전과 서비스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었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현금지원이 70%였고 현물지원이 24% 수준이었다.<sup>19)</sup> 비록 복지분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에 비해 현물 급여의 수준이 낮다. OECD 기준 평균이 대략 6:4(현금:현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대략 반대이다. 그런데 청년의 경우 이것이 역전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와 그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추가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 나. 청년예산에 대한 평가

### ① 전체 청년예산에 대한 평가

예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 단계 정부의 청년정책은 ▲ 교육 ▲ 노동 ▲ 주거라는 세 영역에 전적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현 단계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신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축적하고 졸업 후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인 좋은 직업(decent job)을 잡는 것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대부분은 청년의 인적자본 축적(교육예산), 노동시장의 조기 정착을 돕는데 필요한 사업분야(일자리 및 복지 중 주거복지 예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예산배분의 기본인식은 타당하다. 청년세대의 여러 과제 중 노동시장의 성공적 진입과 안착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장년과 노년이라는 이들의 생애주기상의 다음 단계의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국내외의 여러 연구를 통해 정당화된다.<sup>20)</sup>

19) 이 수치의 근거는 변금선 외(2019)의 분류에 근거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류된 현물과 현금사업의 기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법과 차이가 있고 연구자 역시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이 기준에 따른 분류결과를 따를 것이다.

표 II-33. 중분류별 정책 대상 및 환경 여부 (사업수 기준)

(단위: 개, %)

구분		금전 지원	서비스 지원	금전+서비스 지원	전체
일자리	취업	18(25.7)	47(67.1)	5(7.1)	70(100.0)
	창업	7(29.2)	14(58.3)	3(12.5)	24(100.0)
교육·훈련	교육비	7(87.5)	0(0.0)	1(12.5)	8(100.0)
	교육·연수·실습	4(12.1)	11(33.3)	18(54.5)	33(100.0)
주거	주택공급	0(0.0)	10(100.0)	0(0.0)	10(100.0)
	주거비	3(100.0)	0(0.0)	0(0.0)	3(100.0)
참여·문화·활동	참여·활동	0(0.0)	7(87.5)	1(12.5)	8(100.0)
	권리	0(0.0)	9(100.0)	0(0.0)	9(100.0)
복지·금융·건강	금융	4(66.7)	2(33.3)	0(0.0)	6(100.0)
	소득·자산	9(100.0)	0(0.0)	0(0.0)	9(100.0)
	건강	0(0.0)	2(100.0)	0(0.0)	2(100.0)
전체		52(28.6)	102(56.0)	28(15.4)	182(100.0)

\* 출처: 변금선 외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의 <표>를 바탕으로 저자가 수정

표 II-34. 중분류별 정책 대상 및 환경 여부 (예산액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금전 지원	서비스 지원	금전+서비스 지원	전체
일자리	취업	30,785(74.9)	5,674(13.8)	4,665(11.3)	41,124(100.0)
	창업	1,222(21.0)	4,354(74.7)	250(4.3)	5,826(100.0)
교육·훈련	교육비	41,148(99.9)	0(0.0)	60(0.1)	41,208(100.0)
	교육·연수·실습	544(6.6)	183(2.2)	7,566(91.2)	8,292(100.0)
주거	주택공급	0(0.0)	41,095(100.0)	0(0.0)	41,095(100.0)
	주거비	78,442(100.0)	0(0.0)	0(0.0)	78,442(100.0)
참여·문화·활동	참여·활동	0(0.0)	1,010(100.0)	0(0.0)	1,010(100.0)
	권리	0(0.0)	41(100.0)	0(0.0)	41(100.0)
복지·금융·건강	금융	150(100.0)	0(0.0)	0(0.0)	150(100.0)
	소득·자산	545(100.0)	0(0.0)	0(0.0)	545(100.0)
	건강	0(0.0)	444(100.0)	0(0.0)	444(100.0)
전체		152,836(70.1)	52,801(24.2)	12,541(5.7)	218,178(100.0)

\* 출처: 변금선 외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의 <표>를 바탕으로 저자가 수정

20) 한요셉(2017)은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의 장기화는 대졸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첫 일자리의 임금은 학력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청년 그룹에서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임을 보였다. 한요셉 (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즉 청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연이나 고용 사정의 악화는 이후 이들의 주거 불안과 결혼·출산·양육의 회피로 이어지게 되며 이후 단계에서의 개인의 삶의 질의 하락은 물론 사회 전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전과 달리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부터 정부의 청년정책의 중심은 청년들의 노동시장의 빠른 진입과 조기 정착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에 맞추어져 왔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은 수요측면에서는 청년들의 채용을 늘리기 위한 기업 보조금 정책을,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의 진입 및 이행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고용정책에 있어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통적 접근방법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일자리 중심’적 접근은 청년에 대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에서 정부로 하여금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의 향상 외에 주거와 복지 개선, 더 나아가 문화와 국제협력까지 청년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러한 일자리 정책만으로 청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게 되었다.

## ② 청년 고용예산에 대한 평가

### a.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에 대한 평가

청년 고용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장려금 정책으로서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이다. 이 정책은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장기간 근속의 유인을 제공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자산형성기회를 제공하는 이질적인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원래 이 정책의 초기목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었다.<sup>21)</sup>

21) 방형준 (2019), 월간노동리뷰 2019년 2월호

따라서 이 제도의 선별기준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년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혹은 자산) 기준이 아니라 청년이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일종의 임금보조정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한국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 현물이 아닌 현금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이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이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경로에 의존하는 정책인데 반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노동시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직접지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다.

특히 최소 3년에서 5년 근로를 수급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진입 지연과 잦은 이직 억제를 통해 직업경험에서 습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에 의한 자산형성 지원의 효과가 수급자의 이후의 노동시장의 성과와 삶의 궤적 전반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와 같은 지원의 중장기 효과에 대한 판단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b. 고용장려금 예산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청년일자리정책은 중견기업 청년 정규직의 취업자수를 늘리기 위한 고용장려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순이다. 흔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은 크게 ▲ 직접 일자리 창출 ▲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 고용 서비스 ▲ 고용장려금 ▲ 창업지원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용장려금 정책은 앞서 언급한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형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주지하다시피 직접 일자리 정책으로써의 고용장려금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고용장려금이 정작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 고용장려금이 없었어도 어차피 고용할 노동자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해주는 역할에 그쳐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그것이다.<sup>22)</sup> 직업능력개발정책 혹은 직업훈련 정책으로써의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사업은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되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보육·정신건강 등 삶의 전반적인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 있다.

### ③ 청년 교육예산에 대한 평가

청년을 위한 대표적 교육정책으로써 대학학자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다. 이 정책의 명암은 매우 뚜렷하다. 저소득 계층이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이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대학등록금의 가격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초과 수요를 낳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는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또한 대학학자금 지원정책은 청년 예산을 특정한 청년 계층, 보다 정확히는 대학 재학중인 이공계 학생들에게로 쏠리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23)</sup> 청년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이 대학학자금 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결과적

22)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분야 p.89

23) 대표적 일자리 정책인 내일채움공제의 학력분포의 경우 고졸 이하는 전체의 23% 수준. 전문대 졸업 17%, 나머지 60%는 대졸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음 (출처 : 2019 ~ 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p. 96)

으로 청년 교육분야 예산의 89%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만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등 예산이 전체 청년 교육예산의 73%를 차지하는 반면 고졸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고용 분야에서 일반고 특화과정(798억원)과 고교취업 연계장려금(780억원)이 전부이다. 결론적으로 청년 교육예산은(4년제) 대학생들의 학비경감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교육예산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장학금 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청년 교육예산이 이공계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38개 사업 중 국가장학금 등 사업을 제외한 37개 사업중 수급자격을 명시적으로 이공계 대학생에게만 한정된 사업은 총 16개 사업이었다. 이는 사업수 기준으로 전체의 약 43% 수준, 예산기준으로도 약 40% 수준이다.<sup>24)</sup> 반면 수급자격을 인문사회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 ④ 청년 복지예산에 대한 평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예산의 약 76%는 사회복지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청년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까지 올라갔다. 2016년의 전체 복지예산의 1% 미만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청년 복지예산의 불과 3 -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빠르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예산이 2018년 이후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복지 예산을 분석함에 있어 청년 주거복지분야 예산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4) 이 숫자는 실제보다 과소계산된 것임. 명시적으로 이공계 대학생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1,264억원)의 경우 사실상 이공계 대학생이 주된 정책의 수혜자임

### a. 청년 주거복지 예산

일반 주거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이유는 이 분야의 재정지원의 형태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전체를 용자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이는 청년주거분야의 복지지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청년복지예산, 그것도 청년주거분야 복지지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만 실제 이것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출형식의 주거분야 지원을 보자. 대출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학생과 정규직의 사회초년생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취업준비생이나 단기 근로 청년들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자금대출 관행상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즉 저소득이나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이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27)</sup>

청년 주거복지분야의 지출의 또 다른 문제는 정책의 체감도 혹은 만족도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주거복지분야 지출의 경우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로부터 혜택을 보는 청년수혜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청년주거복지사업들은 비용대비 체감도가 낮다. 정부는 14년간 185조원의 예산을 배정하고서도 출산을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한 저출산 정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처럼 직접 공급 위주의 사업방식을 계속 고수해나갈 것인지 꼼꼼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의 대부분이 수도권 거주 청년의 관점에서 짜여져

25) 만약 복지예산의 규모를 전체 주거를 위한 용자사업이 아니라 이차비로 계산할 경우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6) 박미선(2017),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국토정책브리프

27) 정세정 외 (2019),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7쪽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분야 예산지출이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정책 수혜자는 청년 밀집도가 높고 주거문제가 심각한 지자체 거주 청년이 될 것인데 이는 대부분 수도권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sup>28)</sup> <sup>29)</sup> 반면 장기실업 청년의 경우 약 65%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NEET 역시 비수도권 거주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거주 청년들은 주거 정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b. 청년에 대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예산

일자리정책과 교육정책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년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청년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청년배제’ 현상이 빈번히 관찰된다는 것이다.<sup>30)</sup> 예컨대 실업보험의 경우 수급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해고의 위험에 직면한 청년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실업보험에 가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는 작년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빈곤 청년의 소득 및 자산보장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28) 정세정 외 (2019),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 이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경우도 유사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의 지역적 분포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에 전체 가입자의 반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방형준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월간노동브리프

30) 사회안전망 중에서 청년세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근로장려세제 (EITC)였다.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단독가구주에게 적용되던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20대 단독가구 또한 EITC 수급자격이 주어졌다. 여기서 단독가구의 개념은 단순히 주소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는 ‘생계를 함께하는’ 지에 가깝다. 따라서 이 경우 주소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현상 중 하나는 고소득·고자산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저자산 청년의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이라는 EITC의 정책 목표가 청년세대에 있어서는 매우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미흡한 편이다. 실제 빈곤 청년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은 청년 개개인이 아닌 이들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가구 지원책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단독가구)에 대한 소득보전 목적의 현금성 지원정책이나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검토할 청년저축계좌의 확대운영과 이어진다.

한편 청년사망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자살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의 자살율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의 안정과 건강 분야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자살율을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31)</sup>

#### ⑤ 청년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청년 예산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했을 때, 청년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과 주거 분야 사업은 모든 정책이 선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선별기준과 관련하여 수급자 개인이나 가구 소득수준을 자격요건으로 한 과제는 25개로 선별과제의 17%였다. 그 중에서도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과제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예산제약 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이러한 소득에 따른 선별원칙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선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수당(예컨대 월 10만 수준의 청년수당)의 도입 요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적 예산 부담의 압박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

31) 정세정 외(2019),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5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청년세대가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성을 넓혀야 한다.

예컨대 무조건적인 월 10만원 수준의 청년수당보다는 중위소득가구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20만원의 구직지원 수당이 낫고, 다시 이보다는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노동이력이 짧은 저소득 가구 청년들이 보다 충분한 수준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즉 정책당국은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특정 조건의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더 잘 설계된 청년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수립에 있어 개인의 소득수준외에 지역 균형적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청년 정책이던 간에 그 주된 수혜자층의 지역적 분포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에 따라 효과 역시 달라진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소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3) 기존 청년 정책추진체계(청년정책 전달체계) 분석

#### 가. 청년 정책추진체계 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중요도 인식은 “청년정책 비전·전략 및 주요 청년정책”(「청년기본법」 이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사회통합’,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능력 배양구현’의 세 가지 비전을 정책의 방향성으로 하여, 전략 및 주요 정책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정권들이 ‘일자리 및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에 접근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가장 넓은 포괄성과 외연의 청년정책을 지향하였던 것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청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이 2019년 1월 9일 제정되었다. 동법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분절되어 있는 개별 청년정책 간의 연계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청년의 범주를 만 19 - 34세로 정하는 등의 접근을 보였다. 이에 더하여 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무와 사무를 규정하는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와 행위자 역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35.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비전·전략 및 주요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		청년 정책
사회 통합	기회권한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장학금</li> <li>• 학자금 대출</li> </ul>
	소득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알선, 창업(대학일자리센터, 창업사관학교, 청년취업아카데미)</li> <li>• 구직활동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세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동행카드)</li> <li>•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li> </ul>
지역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 거버넌스(소통, 의견수렴기구, 정책, 수립심의기구)</li> </ul>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저출산 고령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정책(공공임대주택,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월세자금 지원, 공공기숙사)</li> <li>•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청년햇살론, 대출금 상환유예)</li> </ul>
	사회서비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활동 공간, 서비스 지원</li> </ul>
	안전보장 생명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건강검진(청년대상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온라인 자가 검진)</li> </ul>
혁신 능력 배양 구현	창의성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활동 지원(문체부 지역사회 활동지원, 행자부 지역기반 일자리 지원)</li> </ul>
	사람중심 일터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갑질 규제, 비숙련 청년 산업안전 보장</li> </ul>
	고용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영세사업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완화</li> <li>•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li> </ul>

\* 출처 : 김지경, 변금선(2019 : 73 : 75 - 8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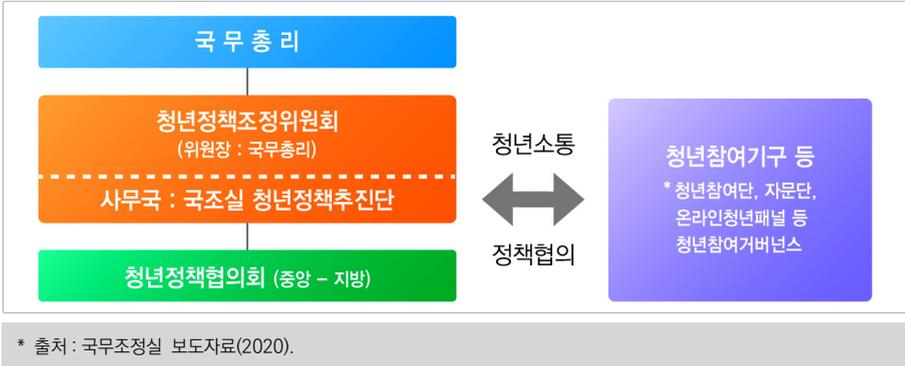


그림 II-61.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체계

이렇게 정책 추진체계 내의 역할 간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하여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중복 및 과잉투자의 문제’ 및 ‘일관된 정책추진체계의 부재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한다(정익중, 2007 ; 2009). 더하여 ‘거시적인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과 중앙, 지방 간의 연계성 및 역할구조’ 등 청년정책의 비체계성과 비연계성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정은진, 김기현, 2018 : 118 - 119).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이 발족하였다. 이는 이후 법제를 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동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정책당사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공동생산(co-production)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처들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2명,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및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자체장, 그리고 40인 이내의 민간위원은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부가하여, 결정사항에 대한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연계 및 공조를 위한 ‘청년정책협의회’, 그리고 변동하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단이자 소통채널로서 ‘청년참여기구’ 등 소통·협의체를 추가로 두었다.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은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기능으로 재정의되었다. 동 사무국은 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간사’ 역할 뿐 아니라, 청년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청년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청년정책 개선과제 발굴 등 부가적인 역할과 기능을 맡게 되었다.



그림 II-62. ‘청년정책추진단’ 조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추진단’의 마련을 통해 기존의 부처별, 지역별로 산개 및 분절되어 있었던 ‘청년정책 추진체계’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한다.

#### 나. 청년 정책추진체계의 특성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추진체계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에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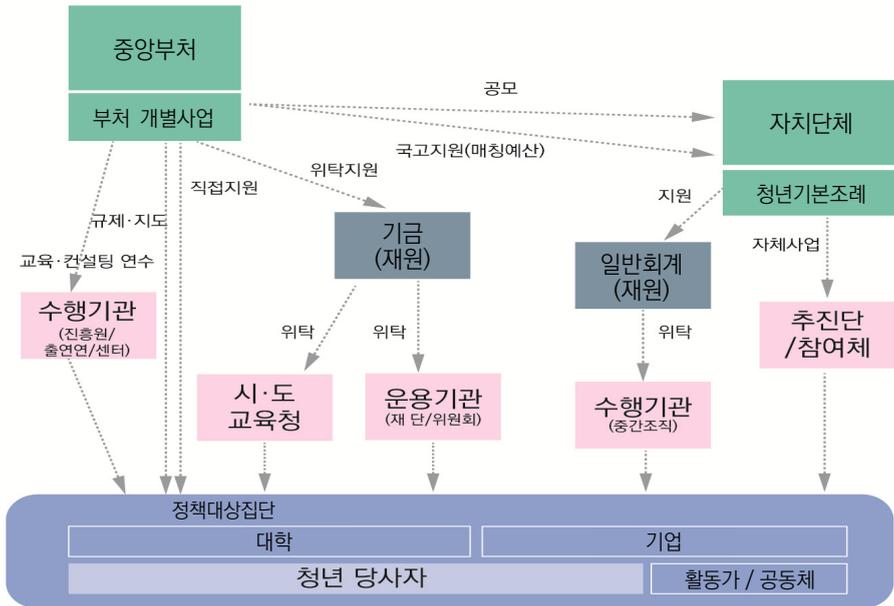
첫째, 오늘날의 청년 문제들은 일자리(경제), 교육, 복지, 문화, 국제 등 다양한 영역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이에 컨트롤 타워 기구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599). 가령, 일자리는 직무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와 연계될 수 있으며, 복지는 문화차원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조직 체계’는 주로 개별 부처가 특정 영역을 주무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가령, 산업과 통상을 주요영역으로 하는 산업부, 환경을 주요영역으로 하는 환경부, 통일을 주요영역으로 하는 통일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정부조직은 정책 영역과 기능을 바탕으로 편제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요컨대 ‘기능중심의 편제’를 정책체계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중심의 편제’는 청년정책과 같은 ‘명확한 정책대상을 가진 분야’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각 부처와 기관이 자신이 고유하게 담당하고 있는 기능만을 좁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청년의 생애주기”나 “기능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과 같은 접근방식이 잘 고려되지 못하였다.

둘째, 자치단체가 고유한 조례제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역밀착형 청년정책의 마련이 가능해진 장점을 가지게 된 반면, 중앙의 청년정책들과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구분과 분업구조 등에 대한 적절한 구획화가 어려워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부처들과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대응하는 기구들을 내부에 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가령,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 직속으로 ‘청년청’을 두고 있으며, ‘청년뉴딜일자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사회보험료 매칭지원, 예술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각각 중앙부처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책들과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지방 간 사업의 역할배분이나 공조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양자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중복과 분절의 문제를 정부

조직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추진체계를 두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응의 근거로 들 수 있겠다.

## (2) 청년 정책추진체계 분석 및 평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법」 이전에는 하나의 일관된 청년정책 추진체계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정책체계는 부재하였다. 다만 개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을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아래 <그림 II-6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진 방식으로 정책이 수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출처: 김기현 외 (2020: 292).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그림 II-63. 청년정책추진체계 현황 (기본계획 시행 이전의 현황)

첫째, 중앙부처들은 서로 다른 소관법에 바탕을 두고 독자적인 시책을 분절적으로 수행하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연계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가령,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는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정책을 접근하고 있고, 교육부나 과기부는 교육 및 연구지원 측면에서 청년정책을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교육·연구는 양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들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접근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부처들은 소관법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자신의 산하에 두고 있는 주요 위탁기관(공공부문)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소위 “재정투입의 사일로(silo)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II-64. 재정투입의 사일로(silo) 방식 개념도

이러한 “재정투입의 사일로(silo) 방식”의 문제점은 각 부처가 서로 칸막이를 갖게 됨으로써 정책 간 유기적 연계 및 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청년 당사자 중심의 연계된 정책구현을 어렵게 한다.

표 II-36. 부처별 청년정책의 주요 위탁기관 (공공부문) 및 위탁형태

부처	위탁기관 (공공부문)	위탁형태				
		현금	대출	교육	취업 연계	인프라 컨설팅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장학재단	○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		○		
외교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KOICA	○		○		
법무부	청소년창업비전센터				○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 시군구)	○		○		
	한국정보화진흥원	○		○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7개 교육기관	○		○		
	지방권역별 주관단체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중기부산하 한국벤처투자	○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체육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복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방자치단체 (시, 도, 시군구)				○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		○
	지방고용노동청	○		○		
	한국고용정보원				○	
여가부	고용복지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국토부	LH공사					○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	
	직업전문학교(항공, 과학기술)	○		○		
해수부	한국도로공사					○
	국립대학교	○		○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창업진흥원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금융위	중소기업중앙회				○	
	신용보증기금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
보훈처	금융협회					
	제대군인지원센터	○		○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농진청	시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		

\* 출처: 김기현 외 (2020 : 294).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주) 음영표시는 타 부처 위탁기관 활용의 사례임.

둘째, 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대한 별도의 ‘기본조례’를 마련하고, 고유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업의 중복과 분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청년정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우선 시행된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스케일업(scale-up)되어 전국화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인 경우도 있고, 중앙의 정책을 지방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문제인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과 분절의 문제는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과 사용이라는 재원의 문제 뿐 아니라, 정책당사자인 청년에게 혼란과 행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아래 <표 II-37>에 예시한 ‘청년인턴채용 기업’ 사업의 경우, 중앙과 지방이 서로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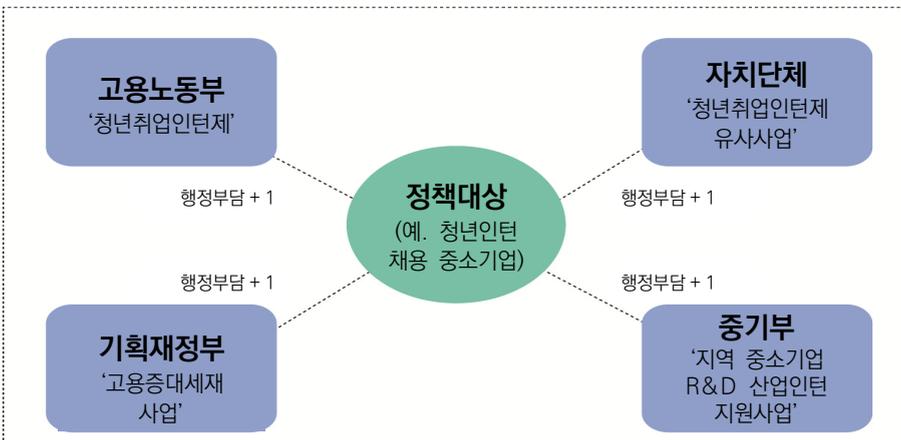
표 II-37. ‘청년인턴채용 기업’ 사업의 수행주체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시

	수행주체	사업명	사업내용
중앙	고용 노동부	청년취업 인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인턴 채용기업 매월 60만원 기업 인건비 보조 (3개월 간 180만원)</li> <li>• 강소, 중견기업은 매월 50만원 기업 인건비 보조 (3개월 간 150만원)</li> <li>• 인턴 정규직 채용시 6개월 고용유지 시 전환 6개월 후 195만원, 전환 12개월 후 195만원</li> </ul>
	기획 재정부	고용증대 세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정규직 채용시 세제 공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내용) 적용요건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li> <li>- 공제기간 :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li> <li>- 공제금액 : 고용 증가인원 1인당 400 ~ 1,200만원</li> </ul> </li> </ul>
	중소 벤처 기업부	지역중소 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권역별 공과대학 보유 대학(4년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정부 R&amp;D사업 참여중인 중소·벤처기업 공대생의 산업계 현장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R&amp;D 인력 미스매치 해결 및 취업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 1인당 매월 150만원 x 4개월 = 600만원 지원</li> <li>- 인턴수료시 전공학점 12학점 제공 (대학별 내부규정에 따라 상이)</li> <li>- 인턴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기업), 코디네이터와 상담 (대학) 등 R&amp;D실무역량 파악 및 취업연계 지원</li> </ul> </li> </ul>
지방	대전 광역시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청년 인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는 ‘굿잡 청년인턴십지원사업’ (대전광역시)</li> <li>• 인턴 3개월 간 월 80만원 기업 인건비 보조</li> <li>• 인턴 정규직 채용시 3개월 간 월 80만원 기업 추가 지원</li> <li>• 인턴 3~5개월 간 총 300만원 기업 인건비 보조</li> <li>※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li> </ul>

수행주체	사업명	사업내용
대구광역시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 3개월 간 월 90만원 기업 인건비 보조</li> <li>• 인턴 정규직 채용시 2개월 간 월 100만원 기업 추가 지원 이후에 변동 '사회적 경제 영역' (대구광역시)</li> <li>• 대구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23개소 대상</li> <li>• 월 200만원 직접지원 + 4대 보험, 퇴직금</li> <li>※ 처음에는 '기업인턴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중앙사업과 중복으로 이후 정책대상의 변동</li> </ul>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 6개월 간 월 한도 80만원 기업 인건비 보조</li> <li>• 인턴 정규직 채용시 6개월 간 65만원 추가 지원</li> <li>• 인턴 대상 취업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업무 직접적 관련 직종 1인당 220만원</li> <li>- 전기, 전자, 통신업 관련직 1인당 180만원</li> </ul> </li> <li>※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점이 차이</li> </ul>

\* 출처: 김기현 외 (2020: 3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이러한 중복성과 분절성의 문제는 사업을 산발적으로 흩어지게 하여, 정책대상으로 하여금 주무기관과 지원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위에서 예시한 사업들은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서비스를 위해서 정보탐색의 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이는 수익자에게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출처: 김기현 외 (2020: 321).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그림 II-65. 청년인턴채용 사업 사례로 보는 사업분절성과 정책대상의 행정부담

셋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두에서 근거법령(조례)이 통일되지 않은 ‘청년정책’ 관련 개념들이 존재하여 ‘청년정책’ 간 연계가 저해되는 문제이다. 가령, 광역자치단체들은 조례는 서로 다른 ‘청년연령’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가령, 서울, 울산, 세종, 경기 등은 만 15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충북과 경북은 만 15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하여 부산, 강원, 충남은 만 18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 각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청년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도형, 박승규, 2017: 12). 이러한 기준 간의 차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책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표 II-38. 지역청년센터 현황

지역	조직명	인원	운영주체	관련법령	주관부서	운영형태
서울시	청년허브	22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청년정책과	민간위탁
	청년활동 지원센터	33	사단법인 마을·일촌 공동체			
서울지역	무중력지대 (8곳)	4 (평균)	위탁			
광주시	청년센터 더숲	13	사단법인 광주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민간위탁
대구시	청년센터	7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교육국 청년정책과	민간위탁
경기 시흥	청년	6	시 직영 사무국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시흥시 청년정책과	직영운영
경기 수원	바람지대	6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수원시 청년기본조례	수원시 청년정책과	공공위탁

\* 출처: 김종진 (2018: 7). 지역 청년센터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시사점.

넷째, 지역의 정책추진체계의 전문성 및 전담인력 부족의 문제이다. 가령, 자치단체들은 지역에 일자리 및 창업의 플랫폼으로서 청년센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김종진(2018: 17 - 19)에 따르면, 이들 청년센터는 센터장 및 전담인력의 역량 차이로 인하여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무자들이 계약직으로 편제되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며, 단체장의 의지 및 관심의 변동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에 전담되어 있는 지역청년센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빠른 호흡에 맞추어 임시적, 비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성의 축적 및 전담인력의 정규화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위의 <표 II-3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청년센터는 서로 다른 주관부서(운영주체) 편제 및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각의 고유한 문제와 이슈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표 II-39.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참여거버넌스 운영현황

지역	거버넌스 조직 (심의·의결 / 청년 참여)	인원 (최대)	청년 (최소)	권한	개최횟수 (연)
서울	청년정책위원회	20	5	심의	2회
	청년정책네트워크	300	300	참여	
경기	정책정책위원회	20	5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80	-	참여	
대전	청년정책위원회	20	1/4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50	50	참여	
광주	청년정책위원회	25	-	심의·의결	2회
	청년위원회	50	50	참여	
전북	청년정책위원회	20	7	심의	1회
	청년정책포럼단	50	50	참여	
대구	청년정책심의위원회	20	7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100	100	참여	

지역	거버넌스 조직 (심의·의결/청년 참여)	인원 (최대)	청년 (최소)	권한	개최횟수 (연)
부산	청년위원회	70	1/3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100	100	참여	
울산	청년정책위원회	20	5	심의	1회
	청년네트워크	50	50	참여	
제주	청년위원회	30	1/2	심의	2회
	청년원탁회의	50	50	참여	
고양	청년정책위원회	20	8	심의	2회
	청년정책협의체	-	-	참여	
수원	청년정책위원회	20	5	심의·의결	2회
	청년정책네트워크	-	-	참여	
시흥	청년정책위원회	20	6/10	심의·의결	2회
	청년정책협의체	50	50	참여	
전주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	20	5	심의	2회
	청년희망단	60	60	참여	
완주	청년정책위원회	15	-	심의·자문	1회
	청년정책협의체	30	30	의견수렴	
나주	청년정책위원회	20	7	심의	2회
	청년정책협의체	40	40	의견수렴	

\* 출처: 김현수 (2019: 12).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다섯째, 청년은 노조나 이익집단과 같은 기성의 세력들과는 달리 '목소리를 정책에 투과시킬 수 있는 제도적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참여 이슈가 대두된다. 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제도화 된 참여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으로 판단한다. 다만,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이미 개별 청년정책 참여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이들 '산별 참여거버넌스'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 2. 기존 청년정책 분석 및 평가<sup>32)</sup>

### 1) 개요

여기서는 기존 청년 관련 정부계획과 대책, 그리고 사업들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 청년정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현 외, 2020). 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청년정책이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변금선 외, 2019).

여기서는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청년 관련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33개 기본계획, 58개 대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청년기본법」상 연령인 19 -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건강 관련 정책이다. 이 정책들은 연령과 정책 영역으로 명쾌하게 분류되기도 하였지만,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존재하여 분류하기 난감한 과제들도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탐색적인 과정으로서 분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정부 기본계획과 대책들을 생애주기, 기능, 대상별로 구분하였고, 기본계획과 대책들 내의 세부과제들의 수를 파악하였다.

---

32)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변금선 부연구위원 (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박미선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하였음.

표 II-40. 청년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 청년정책 프레임별 분석 결과

구분	기본계획 (33개 계획, 147개 과제)		대책 (58개 계획 375개 과제)		
	계획 수	과제 수	대책 수	과제 수	
	생애주기	2	13	-	-
기능	일자리	12	117	23	297
	교육·훈련	14	54	12	141
	주거	4	11	7	48
	참여·활동	6	19	1	2
	복지·건강	5	32	3	31
대상	장애	2	8	2	4
	여성	2	3	1	7
	군인	3	18	-	41
	농어업인	1	2	-	-
	북한이탈 및 다문화	2	6	2	4
	신혼부부	-	-	2	15
	한부모	-	-	2	4
	고졸자	-	-	3	104

이 절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에 기초하여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건강 영역 등 5개 청년 정책 영역별로 기본계획 및 대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기본계획의 설정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 2) 일자리 분야

### (1) 기존 기본계획 및 대책 분석

김기현 외 (2020)에서 제시된 일자리 정책 중분류인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환경개선으로 나누어 정리한 청년 일자리 관련 주요 기존 기본 계획과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청년 일자리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도 부분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존 계획을 통해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 정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임금 보조금 사업과 민간 일자리, 해외취업,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같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사업과 구직활동지원금이나 근로소득 장려세제 같은 사회보장 성격의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대학 창업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며, 일자리 환경개선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지원, 체불 구제,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근로감독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41. 청년 일자리 관련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계획	과제	주요 과제 내용	정책 분류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3-4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재산형성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li> <li>○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li> <li>○ 경력단절 여성 지원확대</li> </ul>	취업 지원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2-4-1 글로벌화와 인력이동에 대응	<input type="checkbox"/> 청년 맞춤형 해외취업지원 체계화	취업 지원
	3-4-5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가칭)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 검토	
	5-1-1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청년구직촉진지원제도 개편 및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시(추가 3년) 세제 지원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한시 상향조정 (3 → 5%, '18 ~ 20년)		

계획	과제	주요 과제 내용	정책 분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1 청년 고용 활성화	1-1-나.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1-1-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 일자리 영토 확대 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취업 지원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4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취업 지원
	2-2 구직활동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3-5 청소년(청년) 취업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경제활동지원	창업 지원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4-4-1 일·가정 양립 실천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복귀 강화	일자리 환경 개선
	4-1-1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4-2-1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input type="checkbox"/>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V-1-13 근로권익	청년 체불노동자 신속한 구제	일자리 환경 개선
	V-4-11 청년과학기술인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상 청년연구자가 ① '발명자로서 특허 등을 받을 권리'와 그 권리를 ②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VI-1-8 모·부성권 강화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부성권 보장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1 청년 고용 활성화	1-1-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일자리 환경 개선
		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1-1-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4-1~3 일·가정 양립 관련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일가정양립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지원 등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등	

\* 출처 : 국무조정실 (2020) 내부자료. 기본계획 및 대책방안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표 II-42. 청년 일자리 관련 종합대책 주요 내용

대책	목표	주요내용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2016. 4. 27.)	일자리 발굴 및 채용연계	구인구직 매칭 행사 상시 개최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청년취업내일공제 신설 1만 명 지원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정책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보 제공 기반 구축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우수 훈련과정 엄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2018. 3. 15.)	취업청년 소득 주거 자산 형성 및 고용중대기업 지원 강화	신규 고용지원 세금 면제
		주거 교통비 경감 목돈 마련(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 관련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	창업 자금, 사업 서비스 지원 및 창업 기업 세금 면제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해외 취업 지원 유망 서비스 분야 신서비스 육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군장병 취업 선취업-후학습, 일학습 병행제 미래 핵심인재 육성 등	

또한, 2018년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일자리 대책은 청년의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중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4월 발표된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의 대폭 확대를 포함해 창업 활성화,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추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과거 정부들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은 발표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점차 미취업 청년을 위한 협소한 지원 대책에서 취업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이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전반을 깊이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2018년의 대책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청년 기본법에서 표방된 ‘청년 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에 잘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 일자리를 대상으로 한 위의 종합대책 외에도 청년 희망사다리 방안(2019.7.7.),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2018.3),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2019.1.25.),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방안(2019.11.8),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2020.5.22.)을 통해 청년 하위 집단을 목표로 하는 세부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사관 같은 군인력 확충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청년 희망사다리 방안은 청년의 약화되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 프로그램을 다른 연령대와 차별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졸자와 달리 꾸준히 약화되고 있는 고졸자 대상 취업 정책으로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공공부문 공정채용확립 및 민간 확산방안에는 이 정부들어 강화되어 온 공정 채용을 위한 관행을 다잡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이들 대책들은 2018년 3월의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 이후 각 시기별로 좀 더 문제가 되는 집단을 위한 추가 대책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43. 청년 일자리 관련 종합대책을 제외한 주요 대책 내용

계획, 대책, 방안 명칭	과제	과제내용 (정책사업)	정책 중분류
청년 희망사다리방안	4-1 자립을 위한 사회안정전망 강화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취업 지원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추진계획	1-1~3 취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 대상 장병 선별 <input type="checkbox"/> 전문상담관 파견 및 상담 실시 <input type="checkbox"/> 교육 : ①취업 역량 강화, ②창업역량 강화, ③현장체험 <input type="checkbox"/> 우수 중소기업 POOL 구축 및 구인수요 파악 등	취업 지원
	2 진로 경력관리 취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진로 · 취업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input type="checkbox"/> 병사 → 부서관 총원 활성화, 부서관 군무원 증원 등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3 (취업 시)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취업 지원
	2-4 (취업 시)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고졸 취업지원 체계 강화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취업지원관 채용 등	
	3-1 (취업 후)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input type="checkbox"/> 자산형성 지원 확대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1-3)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1-3-2) 명문소공인 · 청년에 청년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취업 지원
국민취업제도 추진 방안		■ I 유형 - 선발형 (재량지출) 청년특례 : 중위소득 50~120% 이하 중 선발, ■ II 유형 - 청년 : 기존과 동일 (소득기준 없음)	취업 지원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2020)	맞춤형 지원	87-1. 청년 3대 핵심사업의 내실화 도모 87-2. 청년 취업지원 및 구직 서비스 강화 · 확대 87-3. 콘텐츠 산업 청년 취창업 지원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청년의 해외진출 촉진 청년진출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관련인프라 구축 등	취업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2-2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	취업박람회 시기 조정, 온 오프라인 취업지원, 취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취업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방안	1-2 창업 활성화	① 청년 초기 창업자의 재정 · 경영 부담 완화 ②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등	창업 지원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계획	1-2 (2단계)전문역량 향상 교육	② 창업 역량 강화(중기부, '18, 500명	창업 지원

계획, 대책, 방안 명칭	과제	과제내용 (정책사업)	정책 중분류
청년 희망사다리방안	1-1 新직업 창출·확산	① 新직업 Making Lab 설립 ② 新직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등록제 신설 등	일자리 환경개선
청년 희망사다리방안	1-3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확산	②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확산 프로그램 확대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일자리 환경개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5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근무여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탐방단 (학생·학부모·교원) 운영을 통해 우수중소기업 발굴·홍보	일자리 환경개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1.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일자리 환경개선
문재인정부 포용 국가 비전과 전략	저출산 대책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문화 조성 등 2040 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	일자리 환경개선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블라인드 채용		일자리 환경개선

\* 출처 : 국무조정실 (2020) 내부자료. 기본계획 및 대책방안

## (2) 청년정책 사업 분석

김기현 외(2020)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182개의 청년정책 중 일자리 관련 정책이 95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청년 실업 증가라는 정책환경에서 그만큼 청년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집행 중인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은 <표 II-44>에 망라되어 있는데, 세부 업종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사업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처럼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임금지원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한다. 고용부가 청년 전체 또는 청년 중 고졸자 같은 일부 인구집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나머지 부처는 개별 업종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처간 역할분담은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각 부처들이 특화된 역할이 있는 만큼 당연한 역할분담이라 하겠다.

표 II-44. 청년 일자리 주요 부처별 정책 과제

소관부처	과제명
고용부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강화, 해외취업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대학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 청년취업 아카데미,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청년고용지원,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공, 기업의 현장 훈련과 학교·공공훈련센터의 교육을 병행하여 신규 입직자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 특화과정(일반고 고졸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도입),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청년센터), 신직업 Making Lab, 미래유망 산업맞춤형훈련,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과기부	연구개발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조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고교취업연계장려금
국방부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국토부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항공정비인력 양성채용,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해외건설청년일자리 창출(해외 건설현장 훈련지원 및 해외인프라 청년인턴 파견),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활성화
금융위	대규모 청년창업공간 조성,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대보증(청년희망드림보증) 제공,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디캡트)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은행권 일자리 펀드 운용 지원,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기재부	고용증대세제(청년 고용시 공제액 우대),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농식품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문화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청년두레(관광두레 청년주민사업체) 지원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병무청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포함) 추진,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보훈처	청년 증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복지부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청년사회서비스지원사업)
산림청	해외산림 인턴
산업부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식약처	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

소관부처	과제명
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내일이룸학교), 사회적 경제분야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청년 여성 내일역량 개발 지원
외교부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인사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7·9급)
조달청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중기부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배우처 지원,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창업가(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대상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 취업 지원,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운영,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통일부	탈북 청년 취업·교육지원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 청년개척단,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미취업 청년해기인력 취업지원 강화),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 출처 : 국무조정실(2020) 내부자료. 청년정책사업분류

청년의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중소기업 격차처럼 일자리 간 격차가 커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구인-구직 시장에서 우위에 서 있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일수록 학교 이름이나 성별, 더 많은 스펙 같은 드러나는 차이에 근거한 채용 관행으로도 필요한 신규채용을 하기에 손쉬운 여건에 있었던 것도 현실이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특성화고에 비해 직업계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일반고 졸업자의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상황에 있었으며, 심화된 청년 실업으로 인해 실업기간의 생활지원과 구직활동 지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일정기간 보조해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시행하였으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새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채용 문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자 하였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기업들이 학교명

같은 드러나는 차이에 근거한 채용관행을 줄이고 능력이나 준비정도에 따라 구직자를 선별하도록 유도하였다. 일반고 고졸 청년을 위한 지원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일자리는 각 업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처들은 담당 업종에서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하며, 교육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임금 보조를 과감하게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와 중소기업 일자리 기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구직활동지원금의 전면적 지급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과도한 스펙을 보지 못하게 하여 취업준비를 줄여주려고 했던 이전 정부의 스펙제로 사업에서 좀 더 나아가 학교명이나 지역명 등을 보지 않고 현재의 준비정도에 기반해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했다는 점이 차별적인 특성이라 할 것이다.

### (3) 청년정책 사업 평가

청년의 일자리 정책 사업은 청년 개인과 고용주에 대해 직접 지원 방식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보조하는 사업, 산업 활성화나 해외취업 확대,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도 그 과정에서 창출되도록 하는 사업,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사업, 근로 문화 변화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청년 실업자 소득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부처 자체 평가에 따르면 일자리 보조하는 사업들은 미흡이거나 보통, 산업 활성화나 해외취업확대, 창업 지원은 보통 이상, 교육훈련 지원 관련 사업은 보통 이상, 근로 문화 관련 사업도 보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45.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부처	사업과제명	자체평가 결과	성과지표
기재부	19.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미흡	① 청년공제 가입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 (%)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지원자 수 (누적) ③ 온라인청년센터 고객만족도조사 (%)
	26.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 청년 등 협동조합창업지원	다소우수	① 협동조합 설립개수 ② 협동조합 평균자본
교육부	34.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희망시대 실현	우수	① 관계부처·지자체 및 산업계 관련 분야별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지원 사업 수혜자 만족도 ② 현장실습 선도기업 수
	35.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보통	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수혜자 만족도 ②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지원대학졸업생취업률
산자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 단지 혁신	다소우수	① 산단환경개선펀드 민간투입 유도 (%) (0.35) ② 산학융합프로그램 참여기업 취업자 수 (R&D) (명) (0.35) ③ 청년근로자만족도 (0.3)
환경부	V-1-1. 전 과정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다소 우수	① 일자리박람회 면접자 중 취업자 비율 (%) ② 중소환경기업매출성과 (억원) ③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 건 수 ④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유치 수 (개소, 누적) ⑤ 환경산업연구단지고용증가수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	보통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의 전년대비 청년 고용 증가율 (%)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참여자수
	청년의 해외취업기회 확대	보통	① 청년 해외취업자 수 (명) (공통) ② 해외일자리발굴구인 인원수 (명) (공통)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	보통	①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인원 (명) ②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명)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다소 우수	① 남성 육아휴직자 수 (명)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 (개소) (공통)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우수	① 건설업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명) ② 사내하청업체점검 ③ 적격수급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우수	①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 수 (개소)

부처	사업과제명	자체평가 결과	성과지표
국토부	미래항공분야 청년일자리 (조종·정비 인력) 추진	보통	① 조종사 우선발 後교육 선발인원 (30%) ② 정부 - 항공사 - 훈련기관협의체운영 (10%) ③ 국제협력회의실시 (10%) ④ 항공장학재단설립 (30%) ⑤ 특성화고 - 항공사 - 정부간협약체결 (20%)
	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공간정보 청년일자리 창출	보통	① 공간정보분야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20%) ② 공간정보 특성화학교 취업률 (20%) ③ 공간정보아카데미 취업자과정 취업률 (20%) ④ 창업지원 대상 기업 확대 (20%) ⑤ 예비창업자 대상 멘토링 및 투자 설명회 등 컨설팅 실시 (10%) ⑥ 공간정보창의인재양성기본계획(안)마련 (10%)
중기부	청년창업가가 쉽게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2등급 (우수)	(비공개)
	청년상인 집중육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을 회복한다.	3등급 (다소우수)	(비공개)
	예비창업자의 기술 창업 및 글로벌 성장촉진 도모	(비공개)	도전-K스타트업 경진대회 신청자 (팀)
	인력유입 여건 조성	(비공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가입자수 (명)

\* 출처 : 국무조정실(2020) 내부자료, 청년정책 부처 자체평가 결과 및 성과지표

이번 정부에서 예산 규모로 보나 이전 정부와의 정책 차별성으로 보나 정책 체감도로 보나 특별히 거론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노동수요의 상대적 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서 미래를 의탁할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데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준비에 충실할 필요도 있는데 그 과정을 지탱할만한 소득의 부족은 취업 준비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노동수요 부족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충실한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정부에서

크게 확대된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평가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효과분석 보고서(최강식, 박철성, 2019. 9)에 따르면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 상쇄효과를 감안한 순고용효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약 30 - 50% 정도로 나타나 기존 고용보조금의 순고용효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우수한 고용효과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규모,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김유빈(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용실태 분석, 노동리뷰 2020년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 목표 물량이 연중 조기 소진되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김유빈, 이성희, 방형준, 노용진, 2018)에서도 평가 사업 효과를 평가한 바 있는데, 수급 청년의 근속기간을 증가시키며, 사업체의 신규 청년 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나 청년의 이직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사업체의 청년 고용도 늘리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고재성 등, 2019)에서 평가되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아르바이트 같은 생활비 충당을 위한 단기 직업 활동 수행 비중을 낮춰 생활 지원을 통해 충실한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자존감, 자신감이 상승하고, 6개월의 여유가 6개월의 구직 지연이 아닌 빠른 사회진입에 대한 의지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비참여자와 비교할 때 참여자가 좀 더 명확한 구직목표를 설정해 구직 준비도가 높았고, 사회적 지지도도 높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지원금은 주로 식비, 소매유통, 학원비 등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학계의 연구결과는 이들 세 사업에 대한 위에 제시된 자체평가 결과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연구결과는 노동수요에 집중한 정책의 경우 실제 고용이 늘었는지, 개인의 눈높이에 관련된 정책은 실제 더 오래 다니도록 유도했는지, 개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제 구직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고, 이들 효과가 기존 다른 제도나 비교집단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체평가와 뉘앙스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들어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은 학교명이나 출신 지역, 성별, 연령 등 드러나는 특징이 반영되는 채용 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을 줄여 공정한 채용을 활성화하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이상민, 유규창, 신유형, 강민철, 오재원, 이아영 (2018,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의 다양성 성과로 지역인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사 대상 공공기관에서 2015년 - 2017년 상반기 18.5%에서 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2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대졸자 중 여성 비중도 39.8%에서 4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서울대·고대·연대 비중도 15.3%에서 1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 비율도 38.5%에서 4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에 응한 공공기관 팀장급들은 블라인드 채용 신입사원들의 직무 역량, 조직 적응도도 약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이 비록 일부 전문직종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뽑힌 인재들이 그렇지 않은 과거에 비해 효율적인 인재로 적응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 이전까지 청년 고용률은 특히 25 - 29세에 중점을 둘 경우 꾸준히 증가해 이상의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출범하면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개편을 앞두고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일몰 사업인 한계로 인해 물량 축소를 포함해 사업 내역 변경 등 제도 변경이 이미 나타나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다. 청년의 졸업 후 노동시장 경력 형성까지를 시야에 두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향후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내실화가 필요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자 규모, 지원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노동시장 경력 형성은 이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원활한 이직 지원까지 시야에 두는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 일몰 논의가 있긴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의 근원에는 대중소기업 격차 같은 일자리 격차가 있고, 이는 아직까지 구조적 개선이 요원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원 연장이 불가피하다. 청년 추가채용장려금은 코로나 시기의 성격에 맞게 단기적으로 제도 조정이 요청된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채용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부문 확산을 좀 더 고민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과도한 스펙쌓기 같은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지, 좀 더 효과적인 채용방식은 무엇일지 같은 좋은 채용관행의 발굴을 통해 대안적인 채용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교육 · 훈련 분야

#### (1) 기존 기본계획 및 대책 분석

##### 가. 청년 교육 · 훈련 분야 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청년의 교육 · 훈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1번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번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3번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등 다수의 과제가 청년의 교육·훈련 정책과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의 범위가 넓어 교육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청년의 교육·훈련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가운데 청년의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총 26개의 기본계획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부의 계획이 10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여성가족부 3개 등 여러 부처에서 교육·훈련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중앙부처의 청년 교육·훈련 관련 주요 기본계획

부처	기본계획	교육·훈련 관련 주요 정책 과제	정책 대상
교육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한부모 / 미혼모 / 다문화가족)</li> <li>혁신인재 양성</li> <li>성인 역량 개발 기회 제공</li> </ul>	모든 청년 (취약계층)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자금 대출 지원</li> </ul>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장학금 유형 I, II</li> <li>- 다자녀 국가장학금</li> <li>-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li> <li>-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li> <li>-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li> </ul> </li> </ul>	대학생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근로장학금</li> <li>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li> </ul>	대학생
	진로교육5개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학교진로교육 역량 강화</li> <li>진로교육 대상 확대</li> <li>진로체험 활성화</li> <li>진로교육 인프라 확충</li> </ul>	학생
	대학혁신사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기본역량 제고 지원</li> <li>지역 강소대학 육성</li> </ul>	대학생

부처	기본계획	교육·훈련 관련 주요 정책 과제	정책 대상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li> <li>• 신산업 분야 융합 인재 양성</li> </ul>	대학생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li> <li>•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li> <li>• 학생창업 도전 지원</li> <li>• 지방대학의 창업역량 강화</li> </ul>	대학생
	인문학진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li> <li>•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li> </ul>	모든 청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등 성인 평생학습 지원</li> <li>•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li> <li>• 온라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지원</li> <li>• 산업맞춤형 평생교육 지원</li> <li>•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li> <li>• 지역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li> </ul>	대학생 성인청년 (취약계층)
고용부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li> <li>•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능력개발</li> <li>•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li> </ul>	대학생 성인청년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지원</li> <li>• 융합형 숙련기술 전문인력 양성</li> <li>• 초·중학생의 숙련기술 체험 지원</li> <li>•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교육 지원</li> <li>• 일반계고 비진학생 직업교육 지원</li> <li>• 군인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반 확대</li> </ul>	학생 성인청년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의 기술사 자격 혁신</li> <li>• 기능장을 통한 고숙련 기능인 위상 제고</li> </ul>	성인청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인재유입 확대</li> <li>•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원</li> <li>•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li> </ul>	대학생 성인청년
과기부	과학기술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인재의 창의적 역량 제고</li> <li>• 이공계 대학 교육 혁신 지원</li> <li>• 신진연구자 발굴 및 성장 지원</li> <li>• 과학기술인재 경력개발 지원</li> </ul>	학생 대학생 성인청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학위 2년 과정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운영</li> <li>• 국내 석박사급 인재 해외 파견 지원</li> <li>•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 프로젝트 지원</li> <li>• 인공지능 학과 신설 및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li> <li>• 8대 혁신성장 부문 실무인재 양성</li> </ul>	대학생 성인청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여학생 SW교육 지원</li> <li>• 여성 전문기술인 과정 확대 운영</li> <li>• 여성 연구인력 지원</li> <li>• 이공계 여대학원생 창업교육 지원</li> </ul>	여학생 여대생 성인청년 (여성)

부처	기본계획	교육·훈련 관련 주요 정책 과제	정책 대상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기술사 육성 관리</li> <li>• 기술사 통합 경력관리</li> <li>• 기술사 직무 개발</li> </ul>	성인청년
여가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지원</li> <li>•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li> <li>•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li> </ul>	청소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취업·후진학' 재직자 평생학습 지원</li> <li>•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li> </ul>	대학생 성인청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li> </ul>	학생
복지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지원</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li> </ul>	학생 성인청년
	사회보장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자립지원 확대</li> <li>•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li> </ul>	대학생 성인청년
건설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건설인력 성장경로 구축 지원</li> <li>•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숙련인력 양성</li> </ul>	성인청년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li> <li>-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li> <li>- ICT, 통학여건 개선</li> </ul> </li> <li>• 교육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지원</li> <li>- 농어촌 진로교육</li> </ul> </li> </ul>	학생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li> <li>•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li> </ul>	성인청년 (여성)

## 나. 청년 교육·훈련 분야 관련 계획 및 대책의 특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 청년 기본계획에서 교육·훈련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3)</sup>.

33)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분야의 기본계획과 정책과제들을 크게 "교육", "훈련", "여건개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은 취업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소양 및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타 직업교육을 의미하고, "훈련"은 취업 및 창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건개선"은 청년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간접적 교육 지원을 의미한다.

인재 양성, 역량 강화, 전문성 강화 등 교육 지원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21개(전체 26개 가운데 80.7%)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18개(전체 26개 가운데 6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 영역에 비해 훈련 지원 정책 과제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은 3개(전체 26개 가운데 11.5%)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34)</sup>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생애주기별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17개(전체 26개의 65.3%)로 나타났고, 성인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16개(전체 26개의 61.5%)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 청년(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9개(전체 26개의 34.6%)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대학생 지원은 주로 교육부와 고용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타 부처는 주로 대학생과 후기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적자원의 양성-이행-활용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 양성 관련 기본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21개(전체 26개의 80.7%)로 가장 많고, 이어서 취업자를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15개(전체 26개의 57.6%)로 나타났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9개(전체 26개의 34.6%)로 나타났다.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 등 주요 인력양성 부처의 정책 대상에서 재학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적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볼 때, 재직자를 지원하는 기본계획들이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기본계획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년 실업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취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교육-노동시장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school-to-work transition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흐름을 고려할

---

34) 참고로 1개의 기본계획 안에 교육, 훈련, 여건개선 정책과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때, 초기교육과 재직자 교육·훈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책 지원 영역 측면에서 볼 때, 교육·훈련 영역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들은 정책 대상인 청년을 직접지원하거나, 대상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책 지원 내용 측면에서 볼 때, 교육·훈련 영역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은 주로 교육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에 금전 지원이 부가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가운데 청년의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하는 기본 계획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청년 기본계획에서도 중앙부처와 같이 교육지원 사업이 중시되고 있다. 인재 양성, 지역특화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 지원을 포함 하는 기본 계획이 10개(전체 11개의 90.9%)로 나타났고, 이어서 여건개선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이 9개(전체 11개의 81.8%)로 나타났다. 훈련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은 6개(전체 11개의 54.5%)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기본계획에서도 훈련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애주기별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11개(전체 11개의 100%)로 모든 기본계획에서 대학생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9개(전체 11개의 81.8%)로 나타났다. 초기 청년(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2개(전체 11개의 18.1%)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적자원의 양성 - 이행 - 활용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 양성 관련 기본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재학생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11개(전체 11개의 100%)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볼 때,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10개(전체 11개의 90.9%)로서 취업자를 지원하는 기본계획 7개(전체 11개의 63.6%)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의 양성 - 이행 - 활용 관점에서 볼 때, 지자체의 기본계획들은 중앙부처의 기본계획들보다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의 기본계획에는 지역별로 차별화 된 특성과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형 과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 전문가 양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 청년정책 사업 분석 및 평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사업 182개 중 교육·훈련 분야 사업은 41개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2019). 교육부(8개), 과기부(16개), 산업부(4개), 고용부(2개), 국토부(3개), 농식품부(2개) 등 다수의 부처에서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주요 정책사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47>과 같다.

표 II-47.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사업

정부 부처	청년 정책사업 과제	주요 사업 내용	정책 대상
교육부	국가장학금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대학입학금 부담 완화	•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생
	직업계고 현장학습 참여학생 지원	•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고등학생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학생 대학생 구직청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 학생 진로탐색학점제 운영비지원	대학생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기회 확대	•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	대학생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 근로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 • 학생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 법·제도 정비	고등학생

정부 부처	청년 정책사업 과제	주요 사업 내용	정책 대상
과기부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	• 신진연구 지원 • 생애 첫 연구 지원	연구자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생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석박사생 해외 연구 지원	대학생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 Grand ICT연구센터 지원 • ICT명품인재양성	대학생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 ICT 대학생 국내외 기업 인턴십 지원	대학생
	K-Shield 주니어	• 정보보호 분야 인력 양성	미취업청년
	SW 마에스트로 과정	• SW 전문가 멘토링 지원	고등학생 대학생 구직청년
	SW 중심대학	• SW 전공학생 지원	대학생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 융합보안 대학원 지원	대학생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SW인재 양성	모든 청년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	•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대학생
	정보보호특성화대학	• 정보보호 관련 학과 지원	대학생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 • 특화과제 지원	연구자
	차세대보안리더(BoB)	• 정보보호 전문가 멘토식 도제교육	모든 청년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 연구환경 개선	대학생
산업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 ICT 폴리텍대학 지원	대학생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 및 산학공동 프로젝트 •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고용연계 및 성과확산 •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대학생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 에너지기술 인재 양성 지원 - 현금, 인프라, 서비스 지원	대학생 구직청년

정부 부처	청년 정책사업 과제	주요 사업 내용	정책 대상
	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 무역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학생
	혁신성장 글로벌인재 양성	• 연구자의 해외파견 지원	대학생 취업청년
고용부	기업의 현장훈련과 학교·공동훈련센터의 교육을 병행 하여 신규 입직자의 역량 강화	• 일학습병행제 -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 - 교육·훈련비 지원	구직청년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능인력 양성	• 학위과정(2년제학위, 학위전공심화) • 비학위과정(전문기술, 하이테크)	대학생 미취업자
국도부	물류전문인력(고교, 대학) 양성지원	• 고급인력 양성 • 현장인력 양성	고등학생 대학생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 혁신인재육성 대학 지원	대학생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지원	대학생
여가부	후기 청소년(19~24세) 자립 지원	• 시설 퇴소 청년 지원	취약청년
통일부	탈북 청년 취업·교육 지원	• 탈북 청년 취업 교육비 지원	탈북청년
환경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 물산업 분야 고급기술자 육성 교육비 지원	대학생
농식품부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 농업계 대학생 지원	대학생
	청년귀농 장기교육	• 청년 영농실습 교육비 지원	모든 청년
농진청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지원	모든 청년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 용자지원 •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 기술개발 해외적용 지원 사업	모든 청년
방사청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 분야 전문교육 제공	• 방위산업 전문교육 지원	대졸자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서비스 지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비 지원 사업도 중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보면 교육부 사업과 과기부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사업은 주로 장학금, 교육지원금 등 금전 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과기부 사업은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정부 부처의 사업 역시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과기부를 제외하고는 지원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정책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사업이 22개로(전체 41개의 53.6%)로 나타났고, 훈련 지원 사업은 5개(전체 41개의 12.1%)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인력 양성, 전문 인력 육성 분야에 청년 정책 사업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은 21개(전체 41개의 51.2%)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32개(전체 41개의 7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년(청소년,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12개(전체 41개의 29.2%), 성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은 15개(전체 41개의 36.5%)로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의 대상을 살펴보면, 재학생 대상 사업이 29개(전체 41개의 70.7%)로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원 규모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 사업이 초기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취업자 대상 사업은 5개(전체 41개의 12.1%),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개(전체 41개의 4.8%)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미취업자의 교육·훈련, 취업자의 재교육 등의 정책 지원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년정책 사업 평가

청년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우수한 사업이 다수 있는 반면, 미흡한 사업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부처	사업과제명	자체평가 결과	성과지표
기재부	교육비 부담 경감	다소 우수	① 대학재학생수 대비 반값등록금 이상 지원 받는 학생수 비율(%) ② 희망사다리장학금 지급건수 ③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 중 국고지원 비율(%)
기재부	포용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우수	①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 ② 기회균형선발 입학생 비중(%)
교육부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 추진	다소 우수	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과목 수 대비 실제 과목 개설률 ②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선택 가능 과목 수
교육부	고등교육의 균형적인 경쟁력 강화	매우 우수	① 2020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명단 조회 건수 ②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협력 사업 만족도 ③ 시행령 개정 및 대학 강사 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교육부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통	①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② 국립대학법인 운영 성과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혁신	다소 우수	①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전공일치율 ②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비율 ③ 대학학사제도 개선 방안 시행 대학 수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	보통	① 기회균형 선발(고른기회)전형 모집비율 ② 특기자 / 논술전형 모집비율 ③ 대입정보포털 이용자 활용도 ④ 블라인드 면접 도입 비율(%)
교육부	평생 진로 개발을 위한 진로설계 코칭 강화	다소 우수	① 진로목표 성취도조사 증감율 ② 창업체험교육 온라인 플랫폼 개설 동아리 수 ③ 학생 1인당 진로체험 참여 횟수 ④ 국가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만족도
교육부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평생교육 지원 강화	미흡	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학생 1인당 참여횟수 ② 장애학생 인턴십 일자리 참여 학생 수 ③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과기부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조정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비공개)	① 과학기술 혁신 정책 추진 ② 과학기술정책 만족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지원	우수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공통) ②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공통)
문체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다소 미흡	① 재학생 교육만족도 (공통) 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

부처	사업과제명	자체평가 결과	성과지표
문체부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보통	① 학교교육활동 평가 만족도(점) (공통) ②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공통)
문체부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다소 미흡	① 학교교육활동 평가 만족도(점) (공통) ②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공통)
문체부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다소 우수	① 스포츠강사 수혜자 (학생) 만족도(점) (공통) ②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 (공통)
농식품부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소	보통	(비공개)
고용부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부진	①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만족도(점) ② 온라인 청년센터 이용실적(건)
고용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	우수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수(명) ② 직무능력중심채용 인식개선률(%)
고용부	일학습병행제 내실화	우수	①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중 중도탈락률(%) ② P-TECH 훈련을 실시한 학습근로자(명)
고용부	신중년·여성·고졸청년 등 취약계층 훈련참여 촉진	미흡	① 신중년 특화과정 수료 후 취업률(%) ② 베이비부머 과정 수료 후 취업률(%) ③ 여성재취업과정 수료 후 취업률(%) ④ 일반고 학생의 훈련 참여자 수(명)

‘포용성장을 위한 양극화 해소’(기재부), ‘문화예술교육지원’(문체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고용부), ‘일학습병행제 내실화’(고용부) 등의 사업이 우수하게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의 체계적 직업·진로지도 활성화’(고용부),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평생교육 지원 강화’(교육부), ‘신중년·여성·고졸 청년 등 취약계층 훈련참여 촉진’(고용부) 등의 사업이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 사업들은 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각 부처별로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도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청년정책 사업이 청년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서 대학생 청년을 주로 지원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 하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재학 청년, 학교밖 청년, 소외계층 청년, 직업훈련기 청년, 대학비진학 청년, 구직 청년, 재직 청년 대상 사업 등)가 구상되고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분야 청년사업에서 인적자원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동시에 인적자원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 능력개발도 중요하다. 청년 정책사업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미취업자(구직자)를 지원하는 정책, 청년 재직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 사업이 보다 많이 발굴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분야 청년 정책 사업들이 주로 간접지원(기관이나 프로그램 지원) 방식을 따르고 있어 청년들에게 체감하는 정책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면이 있다.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4) 주거 분야

##### (1) 기존 기본계획 및 대책 분석

###### 가. 청년 주거분야 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청년의 주거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중요도 인식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정과제 47번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으로 명시되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의 주거지원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다. 그러나 연령대의 중복으로 인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이 동시에 유사한 정책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장기주거종합계획

<b>4 정책 추진방향</b>	
<b>1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가구, 우선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을 지역·계층·유형별로 파악, 총량적 접근에서 맞춤형 접근으로 전환</li> <li>○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li> </ul> </li> </ul> <p>⇒ 공공주택·기금 대출 등 주거지원 규모 및 내용은 주거수요 및 택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개선</p>	
지원대상	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 지원
청년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임대형 청약통장 도입 ·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 강화 ·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신혼부부	·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특별공급 2배 확대 ·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방안 마련
고령층	·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급
저소득·취약계층	·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긴급차량주택 도입 · 원주대 거주자·보호대상아동·그룹홈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공공임대 우선공급 · 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 아동빈곤가구 긴급주거비 대출 · 그룹형 거주자 주거급여 지급 검토

### 2020년 주거종합계획

<b>2 추진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혁신) 신규부지 활용 등을 통해 지속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 재고율 10%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도록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li> </ul> </li> <li>◇ (생애주기 지원)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트렌드에 대응하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완</li> <li>◇ (주거권 보장)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을 찾아가서 주거상황을 집중지원 하고, 기존 주거지는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추진</li> </ul> </li> <li>◇ (지역상생) 디자인 혁신, 생활 SOC 복합단지 등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 품절을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데려오는 허브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 재정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li> </ul> </li> </ul>			
<b>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정방안 완성</b>			
과제(1) 공급혁신	과제(2)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보장	과제(3) 비주거주거가구 등 주거권 보장	과제(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중장기 공급계획 마련</li> <li>· 부지 등 공급기반 구축</li> <li>· 공공임대 유형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고령화 대응 강화 - 청년특인가구 - 고령가구 등</li> <li>· 저출산 대응 강화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상황 지원 강화</li> <li>· 낙후주거지 재창조 - 폭범 재 정비 - 역세권 불합주거지 리모델링 - 노후영구임대 재정비·리모델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품질제고</li> <li>· 생활SOC사업 연계</li> <li>· 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li> </ul>

\* 출처 : 국토교통부(2018).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교통부(2020b). 2020년 주거종합계획.

그림 II-66. 장기주거종합계획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청년 주거지원

주거부문의 종합계획은 장기주거종합계획(2차, 2013 - 2022)을 들 수 있다.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는 잔여적 복지에서 포용적 복지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적 주거지원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고려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표방하며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성

하였고, 생애단계 진전(청년 → 신혼 → 중장년 → 고령)에 맞춘 패키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주거종합계획은 주거분야 정책방향 설정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므로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추가적인 지원 대책 등의 근간이 된다.

청년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청년 주거지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총 21만호이고, 18년과 19년 8.5만호의 실적을 보이며 2020년 4.3만호 이후 4.5만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만호(건설형 1.4만호, 매입·전세임대 1.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4만호, 기숙사형 1천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의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사전신청). 대부분의 주거비 지원은 보증금 대출을 통한 간접적 금융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을 21만호 예정하고 있다.

표 II-49. 2020년 주거종합계획 상 공공주택 공급계획

(단위: 만 호)

공급유형	공급계획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	'21년	'22년
공공임대·공공지원	90.2	17.2(19.4)	17.6(18.5)	18.1	18.6	18.7
청년	21.0	3.6(3.7)	4.1(4.8)	4.3	4.5	4.5
신혼부부	25.0	3.3(3.0)	4.6(4.4)	5.2	5.8	6.1
고령자	5.0	0.9(1.4)	0.9(0.9)	1.0	1.1	1.1
일반 저소득	39.2	9.4(11.3)	8.0(8.4)	7.6	7.2	7.0
공공분양(착공)	15.0	1.8(1.9)	2.9(3.1)	2.9	3.5	3.9
합계	105.2	19.0(21.3)	20.5(21.6)	21.0	22.1	22.6

\* 출처: 국토교통부 (2020. 05. 20.).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

청년 주거지원을 구체화한 대책은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시작으로, 2018년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되고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이번 정부의 청년주거지원을 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II -50. 청년 주거지원 관련 종합대책 주요 내용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17.11.29)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주택 30만실 (주택 25만 + 기숙사 5만) 공급</li> <li>○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7만호), 매입·전세임대(6만호)</li> <li>○ 공공지원주택 : 12만실 공급</li> <li>○ 대학 기숙사 : 5만명 입주인원 확대</li> </ul>
		청약통장 도입, 자금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li> <li>○ 만 29세 이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li> <li>□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li> <li>○ 만 19~25세 청년 전세대출 지원 강화 (단독세대주 가능)</li> <li>○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확대 (30 → 40만원)</li> </ul>
		정보·교육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li> <li>○ 주거정보 제공 강화: 마이홈 포털 - 대학 홈페이지 연계</li> <li>○ 주거관련 교육 강화: 주거복지센터 등이 대학교, 청년단체와 연계</li> </ul>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li> <li>○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 15 → 30% 확대</li> <li>○ 매입·전세형 신혼부부 임대 신규 도입</li> <li>○ 지원대상 확대 : 혼인 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확대</li> <li>□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li> <li>○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li> <li>○ 신혼부부 육아 맞춤형 주택단지 조성</li> </ul>	
		신혼자금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도입, 이사부담 경감</li> <li>□ 저소득 신혼부부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li> </ul>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18.7.5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구체화	공공주택 및 창업·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주택 25만실 본격 공급 (2만호 추가)</li> <li>○ 매입·전세임대 입주자격 확대 (1만호 추가)</li> <li>○ 집주인 임대사업 청년 우선공급 (1만호 추가)</li> <li>□ 대학생 기숙사 입주 6만명 (1만명 추가)</li> <li>○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li> <li>○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지원</li> <li>□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 상가 공급</li> </ul>
		금융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li> <li>○ 우대조건 : 최고 3.3%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li> <li>○ 대상 확대 : 비 근로소득자 포함</li> <li>□ 기금대출 40만가구 지원 (13.5만가구 추가)</li> <li>○ 보증부 월세대출 신설, 버팀목대출 청년 0.5%p 우대</li> <li>○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li> <li>□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강화</li> <li>○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li> </ul>
주거복지 로드맵 2.0 (2020)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적 평가 및 보완 방안	저출산 대응강화, 1인가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주거지원</li> <li>○ 신혼희망타운 (2025까지 분양주택 10만호 모집)</li> <li>○ 맞춤형 40만호 특화 건설임대단지 확대 (만6세이하 유아녀가구까지 신혼대상 포함)</li> <li>○ 금융지원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지속</li> </ul>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고령화 대응강화	<input type="checkbox"/>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주거지원 <input type="checkbox"/> 공공임대 3만호 아동 주거권 보장위해 공급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원: 다자녀 가구 임대지원 강화, 대출한도 인상, 자녀수연동 금리 인하, 전세자금 대출 기간 연장(자녀수 연동)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증가·고령화 대응강화: 청년·고령자 맞춤형 지원 <input type="checkbox"/> 청년독신가구 주거지원: 특화주택 35만호 공급;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 <input type="checkbox"/> 공유주택 활성화, (금융지원) 청년버팀목 지원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수급가구 미혼 20대 청년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 분리지급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관계부처합동 (2018A).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2020).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 - 주거복지로드맵 2.0-

#### 나. 청년 주거분야 관련 계획 및 대책의 특성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대책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47번 → 장기주거종합계획 → 주거복지로드맵 → 연간 주거종합계획으로 이어지는 정합성이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주거지원 방안은 앞선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명시한 방향과 내용의 연차별 실행방안이다. 이번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정책대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지원의 대상과 폭을 점차 넓혀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 측면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보다는 새로이 가구를 형성하는 신혼부부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주거지원의 유형은 직접적 물리적 주택공급과 간접적인 주거비 지원, 그리고 노후한 주거유형의 개선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은 행복주택과 같은 특정대상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주거비 지원의 경우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대상 가구의 청년이 분리하는 경우에 지급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고, 대다수 주거비 지원은 보증금 대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청년에게 보증금이라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금 저리대출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지원 사업이었고,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에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전용 상품이 개발되었는데, 상품별로 대상자의 연령과 연소득 기준, 대출 한도와 우대 금리 등이 상이하고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이율이 가장 낮고 대부분의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2) 청년정책 사업 분석 및 평가

### 가. 중앙부처 청년 주거분야 사업 특성 및 이슈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사업 182개 중 주거분야 사업은 13개가 해당한다(변금선 외, 2019). 주로 주택공급과 보증금 대출이 중심이 된 주거비 간접 지원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고, 대학기숙사는 교육부와 연계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의 청년주택공급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은 금융위도 참여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은 주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지만, 일부는 비예산사업이다(사회주택공급 활성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표 II-51.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중 주거분야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주택공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교육부
주택공급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농식품부
주택공급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국토부
주택공급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국토부
주택공급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주택)	국토부
주택공급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주택공급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국토부
주택공급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국토부
주거복지원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국토부
주택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국토부
주택공급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국토부
주거복지원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금융위
주택공급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행복청

\* 출처: 김기현 외 (2020 : 16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재인용.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청년을 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구분하고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이 된다. 대학기숙사 확충사업(교육부, 국토부)은 학생으로 대상자가 명확히 정의되지만, 사업별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기준이 상이하다. 그 중에서도 취업준비생이 주된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국토부)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회초년생과 같이 근로하는 청년을 포함하여 일정한 연령과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상품 중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는 지원실적이 3천 가구(561억 원),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사업은 약 11만 가구(8조 원), 보증부월세 사업은 60가구(5억 원)로 대부분의 사업이 중소기업청년 보증금 지원에 치우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a).

표 II-52.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전용상품 지원 실적

구분	지원내용	지원실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룸 보증금 지원 등을 위해 만 25세 미만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li> <li>최대 3.5천만원, 금리 연 1.8~2.7%</li> </ul>	약 3천가구 (561억원)
중기청년전월세 보증금 (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기재직 도는 창업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li> <li>전세자금 최대 1억원(금리 1.2%)</li> </ul>	약 11만가구 (8조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실적
보증부월세 (*1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 지원</li> <li>보증금(최대 3.5천만원, 1.8%)과 월세(2년간 월 40만원, 1.5%) 동시 지원</li> </ul>	약 60가구 (5억원)

\* 출처: 국토교통부 (2020).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 주거복지로드맵 2.0 -.

청년을 위한 주된 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 건립은 이전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번 정부에서 유지·확대되고 있다.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용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입주 기회 자체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고 입주 후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경감에서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높은 수요와는 달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우선 수요가 낮은 곳에서는 과다 공급으로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가 나타난다. 서울 지역에서는 대기수요가 높고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에서는 미달사태가 발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 민원분석 결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행복주택 건립 반대가 높다.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소형으로 공급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과밀 우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낯비현상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전용으로 건설되므로 육아특화 단지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차별화된 공급이 예상되나,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 공급에 따른 시세차익 우려가 남아있다.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은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연령 기준이 상이하고 (24세, 34세, 35세 미만), 소득기준도 달리 운영중이며 용자한도와 대출 이율도 다르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하여 일부 대출사업에 대한 연령 기준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년 대상 주거비 보증금 대출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 나. 중앙부처 청년 주거정책 사업 평가

청년 주거지원 사업별 부처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지 않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재부)과 관련해서는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이고,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교육부)은 다소 미흡,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임대 공급 본격화(국토부)는 보통, 주택금융 지원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국토부)는 우수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성과 지표에 따라 평가 결과가 유동적이므로, 절대적 평가로 볼 수는 없으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평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없고,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부지확보 관련 지침 개정이 성과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분야는 기금 대출을 통한 주거비지원(30% 가중치)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20% 가중치)으로, 대출을 통한 주거비 경감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등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표 II-53. 청년 주거정책 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부처	사업과제명	자체평가결과	성과지표
기재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능력 강화	미흡	공보육(국공립 등) 이용률 인구정책 TF 정책관련 전문가 평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교육부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다소 미흡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5만명(투자기준, 명)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3만명(실입기준, 명)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임대 공급 본격화	보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부지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및 업무 처리지침 개정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	우수	주택도시보증기금 주거비지원 가구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특별공급 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적발수

\* 출처: 국무조정실(2020). 내부자료. 청년정책 부처 자체평가 결과 및 성과지표.

청년 주거정책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실효성을 진단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의 평가가 도출되고 있다. 전월세 지원 확대사업, 행복주택 공급사업, 대학 기숙사 확충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집행과정, 성과달성의 단계로 실효성을 진단하였다(김기현 외, 2020).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사업은 대상자 부합성에서만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대상자 포괄성, 자원 충분성, 자원 환류 충실성, 정책 효과성, 정책 인지도, 정책 효율성 등에서는 중간에 미치지 못하였다. 행복주택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는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나, 집행과정(자원 충분성, 정책 환류 충분성)과 성과 달성(정책 효과성, 인지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세가지 대표 사업 중 가장 높은 진단을 받았다.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사업은 대상자 적합성과 정책 효율성은 중간 이상의 높은 평가가 도출되었으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진단 결과가 중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거부문 청년 지원 사업은 예산의 규모는 크지만, 직접적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업예산이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예산 규모에 비하면, 수혜 대상자가 크지 않고,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적다.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청년 대상자에 신혼부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출산 이슈 대응으로 인해 신혼부부가 더 집중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어 청년 수혜자가 적고 정책 만족도 역시 낮은 편이다.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다음 생을 기획하기 위한 이행기(transition period) 시기이므로, 이행기 지원전략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독립한 청년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처의 마련과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부담가능한 주거비 지출과 안정된 주거 점유형태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행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청년의 종착점이 반드시 결혼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정책 구성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면서 취업의 여부나 결혼의 여부와 무관하게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5) 참여·활동 분야

### (1) 기존 기본계획 및 대책 분석

청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기능 중심 정책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참여와 활동에 관한 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은 고용정책 중심으로 그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년 참여나 활동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대책 등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와 활동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대책 등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참여와 활동을 다루는 경우는 존재한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참여와 활동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등 3개에 이른다(김기현 외, 2020: 202). 첫 번째 과제는 청년들의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동이 포함된다. 두 번째 과제는 청년들의 정칙 및 정책 참여와 관련되는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청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세 번째 과제는 대상 중심 과제로 청소년의 역량 강화 등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이고 청년기본법 상 19세에서 24세가 청년에 해당되어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20대 초반까지의 청년 대상 참여 및 활동에 관한 국정 방향이 담겨져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및 대책 중에서 청년 참여 및 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5개의 기본계획과 1개의 대책이 있다. 먼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은 민주시민교육 기획 확대를 다루고 있으며 새내기 유권자 연수나 대학생 대상 청년리더스쿨 등의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서 청년을 포괄하는 정책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며 법률상 연령이 중복(19세에서 24세)되어 청소년사업과 청년사업 간의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건강가정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16)에서는 다문화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청년기에 요구되는 시민사회활동인 사회통합 교육의 한 영역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다루어 볼 수 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역시 청년정책 중에서 사회통합 교육의 한 영역으로 성평등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다루어 볼 수 있다.

청년 활동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중 자원봉사활동에 청년봉사단과 같은 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역 인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되는 문화 지원 정책사업들은 예술인들의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문화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시에 정부에서 진행중인 해외 교류와 관련하여 청년들은 국제교류 활동이라는 측면보다 해외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연관성이 제한적이다.

표 II-54. 청년 참여·활동 관련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계획 및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 - 202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input type="checkbox"/> 민주시민교육 기획 확대 <input type="checkbox"/> 토론능력 및 선거정치 참여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활성화(*새내기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선거교실, 대학생 청년리더스쿨 등)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 - 2020)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다문화사회 수용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이해교육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 개통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대국민 대상 상시학습이 가능한 교육, 지원시스템(danurischool.kr) 인지도 제고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이해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콘텐츠 추가개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2018 - 2022)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	공공성 기반 자원봉사 모델 지원	<input type="checkbox"/> 청년봉사단 사업 추진 <input type="checkbox"/> 지역 사회공헌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청년층의 사회참여 역량 제고 및 사회문제해결 기여,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리더 양성 목적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	<input type="checkbox"/> 특수 사회계층 자원봉사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를 통한 통일대비 탈북민 청년리더 양성, 지역사회 자원봉사, 남한주민과 함께하는 연합봉사를 통한 사회정착 및 문화교류 지원, 탈북 청년 리더십 교육을 통한 탈북민 국내정착 교육 지원 봉사자 양성

계획 및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2018 - 2022)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개선	성별 고정관념 없는 성평등 교육	<input type="checkbox"/> 사회 전반에 직업적 고정관념과 편견 해소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 내용이 반영된 새 교육과정('15.9월 고시)이 수업에 바로 활용되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인권 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지원 <input type="checkbox"/>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 대학생과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
		대학인권교육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대학인권교육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대학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활성화
		군 장병 인권교육	<input type="checkbox"/> 군 장병 인권교육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군대 인권교육 제도적 운영 추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18 - 2022)	여가참여 확대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input type="checkbox"/>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input type="checkbox"/> (지역 산업단지) 여가공간이 부족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대상으로 근로자 생활권 여가시설 건립 지원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2019년 4월)	한국적인 인문사회 연구성과 창출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input type="checkbox"/> 지역 인문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서 신진 인문전문가 교육·강연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문 생태계 구축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18b),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8c),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8d),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교육부·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2019),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 (2) 청년정책 사업 분석 및 평가

### 가. 중앙부처 청년 참여·활동 분야 사업 특성 및 이슈

중앙행정기관에서 2019년에 추진한 청년정책 사업 182개 중에서 청년 참여·활동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8개였다(국무조정실, 2019). 182개 중 참여·활동 사업의 비중은 4.4%로 매우 낮고 예산 비중은 0.5%에 불과하였다.

행정부처로는 행안부, 국토부, 여가부, 통일부, 해수부 등이 있는데 행안부와 여가부 사업을 제외하고 참여 대상자의 규모나 예산 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며 권익위나 보훈처 추진 사업들도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표 II-55.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중 참여·활동분야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활동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일부
참여·활동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안부
참여·활동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현 청년 성평등 문화 플랫폼)	여가부
참여·활동	도시재생사업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유도	국토부
참여·활동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해수부
참여·활동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개선 프로젝트	권익위
참여·활동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권익위
참여·활동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보훈처

\* 출처: 김기현 외 (2020: 206).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재인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이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각종 활동과 성과목표를 제시한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팀당 500만원 상당의 과업 수행비와 멘토 및 전문가 자문, 간담회 활동 등을 지원한다. 팀 구성은 39세 이하의 청년들로 5인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일반계획으로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은 당초 고향희망심기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신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정책사업 중 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활동 지원 사업과 유사하나 지원 대상이나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 향후 확대,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청년참여 플랫폼 사업은 2019년에 새롭게 추진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 중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구형태로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2018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직접 정책 수요자 참여과제로 추진했던 ‘성평등 드리머’를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2020년 들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 플랫폼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명칭을 청년 성평등 문화 플랫폼으로 변경하였다. 정책

사업의 목표는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좁혀졌으며 기존 청년 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청년정책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청년고용 정책 참여단이 대표적인 중앙부처의 청년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청년고용정책 참여단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청년센터를 제안해 신설하는데 역할을 했으며 2018년 문재인정부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참여 및 활동 관련한 중앙부처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식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이를 체계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중앙부처 청년 참여·활동정책 사업 평가

중앙부처의 자체 평가에서 청년 참여와 활동분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나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평가 대상이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청년참여 플랫폼이 포함된 사업과제로 성평등 정책 과제가 있으나 명시적으로 평가 대상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II-56. 청년 참여·활동정책 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부처	사업과제명	자체평가결과	성과지표
행안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다소 우수	신규마을기업 발굴(개소)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협업율(%) 청년공동체 컨설팅 이수율(%)
여가부	성평등 정책 총괄·협력체계 구축 및 성평등문화 확산	매우 우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 목표 달성률(%)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추진단체 사업성과 평가 결과(점) 양성평등 인식 변화 수준(점)

\* 출처: 국무조정실 (2020). 내부자료. 청년정책 부처 자체평가 결과 및 성과지표.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주요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범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운영한 점, 민관협력을 통해 마을기업의 판로를 지원한 점, 지역혁신포럼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다. 평가지표 중 합법성이나 합목적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계획 수립의 적절성이나 정책만족도는 보통을 받았으나 의견수렴이나 협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다. 청년 공동체사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로 청년공동체 컨설팅 이수율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사업 참여 청년들의 8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다.

여성가족부의 청년참여 플랫폼에 관한 평가 결과는 해당 과제의 일부분으로 우수 평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이유로 청년 참여 플랫폼을 통해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김기현 외 (2020)가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 진단을 실시했을 때 진단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자체평가에서 두 사업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현 외 (2020)는 청년층 사업에 대한 수혜율이 낮다는 점에서 중하를, 사업예산이나 수혜자 수를 고려할 때 자원투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하를, 설문조사를 통한 도움 정도나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으로 정책 대상인 청년들의 인지도가 낮았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소수이며 실제 정책반영 정도도 크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청년 참여 관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보편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6) 복지·금융·건강

### (1) 기존 기본계획 및 대책 분석

#### 가.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복지·금융·건강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이 법이 정하는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며, 국가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고려해 ‘평생사회안전망’, 즉,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동법 제3조).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 - 2023)’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보장정책의 목표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과제는 근로연령대를 위한 실업 대응, 생애주기 관점에서 교육, 고용 관련 과제가 대부분이다. 실업, 교육, 고용 이외에(소득보장 관련) 복지정책 과제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유일하다.

‘사회보장기본계획’ 이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금융·건강 관련 기본계획은 거의 없으며, 청년을 특정 대상으로 간주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 관련 기본계획으로는 빈곤층 대상 소득보장,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가 있으며, 건강 관련 기본계획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 그리고 균인

대상 건강증진 정책 등이 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과 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대학생,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재학 중 별도 자립가구 인정 기간 연장,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수급가구 청년의 자립 가능성(탈수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 관련 기본계획은 주로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만19~24세 후기 청소년을 포함해 자살 예방 지원을 하고, ‘정신건강종합대책’은 초발 정신증 발견 및 조기중재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정신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정신건강 이외에 의료서비스 이용과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은 군인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3차 국민인권정책기본계획’과 ‘제3차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서는 격오지 근무 군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군 장병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화해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표 II-57.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계획	목표	중점과제	주요 내용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019-2023)	상대빈곤율 완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유도 ○ 소득,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청년층 자립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공제 확대 ○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조정 <input type="checkbox"/>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일하는 청년층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청년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취업 ○ 고교·대학 졸업 후 취업 시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고교 7년, 대학 5년으로 연장 <input type="checkbox"/> 부양부담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부양비 면제

계획	목표	중점과제	주요 내용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2018 - 2020)	자산형성 지원 확대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자산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하고 추가된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기반 마련 지원</li> </ul> </li> </ul>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 - 202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정신건강 검사방식 내실화</li> <li>○ 청소년·청년 등 자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DB구축</li> <li>○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협조체계 강화</li> </ul> </li> </ul>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 - 2020)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초발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및 치료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초발 정신증 발견 및 조기중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정신질환의 약 50%가 10대 중후반에 시작되고, 75% 정도의 질환이 20세 중반까지 발병)</li> </ul> </li> </ul>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중장년층 대상 자살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대학 평가인증시 자살예방체계 관련 내용 포함 [‘16년]</li> <li>○ (직장)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자살예방 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주용 자살예방 관리 가이드 마련보급 [‘16년]</li> <li>○ (군인) 일선부대 지휘관, 간부 및 병영생활 저문 상담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교육 강화 [‘16년]</li> </ul> </li> </ul>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 - 2022)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시범운영 등 장병 의료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병원내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을 통한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li> <li>○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확보</li> </ul> </li> </ul>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6 - 2020)	전 장병의 건강수준 향상	군인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건강증진 담당인력 역량강화</li> <li>□ 군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 확립</li> <li>□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ul>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금융·건강 대책은 ‘청년 희망사다리 방안’,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대책’과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대책이 있다.

‘청년 희망사다리방안’은 취약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특수고용 근로자와 저소득 청년, 보호종료 청소년의 사회적 보호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수고용 근로자의 산재보호율을 높이고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대상자와 급여 수준, 자격 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 수당, 주거를 확충해 가족 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는 국군장병이 전역시에 목돈을 수령 할 수 있는 국군장병 희망적금을 확대 운영하여, 전역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군장병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거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 경감을 위해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을 해주고,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교통비(1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58.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대책 주요 내용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청년 희망사다리 방안 (2019)	(취약청년) 대출부담 완화자 산형성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 등 정책사 각지대 완화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산재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예: 1년) 지원 등 법령 개정 추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고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특고지침 적용대상 확대* (場6개 → 9개) 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명시</li> <li>○ (실태조사)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설계 기반 마련 '19년 시형조사 후 공식통계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전환 여부 검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취약청년의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저축계좌 신설) 일하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탈빈곤 및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3년 후 1,440만원 수령)</li> </ul> </li> <li>○ (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합리화)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 (6개월 → 2년)하여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li> <li>○ (디딤씨앗통장 지원확대) 요보호아동 저축시 정부가 1:1 매칭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매칭 한도를 현행 월 4만원 → 5만원으로 확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원) 대상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 확대 (240호 → 360호)를 통해 보호 종료 후 자립기반 지원 강화</li> </ul> </li> </ul>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추진계획	청년장병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兵 봉급인상과 연계한 목돈 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국군장병 희망적금 확대개편 (전역시 목돈 450만원 → 9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은행 및 납입한도 확대 : 「국군장병 희망적금」 운영 은행을 현행 2개 (KB,IBK) → 다수 은행으로 확대 - 적립금 납입한도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40만원 이내로 확대</li> </ul> </li> </ul>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인센티브: 대상은행과의 협약 적금금리(현 5.3~5.8%)외에 재정 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가입률 제고</li> <li>◦ 비과세 혜택: 희망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법」 개정)</li> </ul>
청년 일자리 대책	18~22만명 추가 고용 창출 ⇒ '21년까지 청년 실업률 8%대 이하로 안정화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중대 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및 교통비 경감</li> <li>◦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li> <li>◦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li> </ul>
금융위 청년대학생 부채 향후 정책 방향	-	신용정보 관리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강화, 청년·대학생 대출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총공급한도('12~'17년중 2,500억원) 확대</li> <li>◦ '18년중 약 6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신용카드 사회공재단 출연 등) 확보 추진</li> <li>◦ 주거자금·취업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대출요건 등 제도개선 병행</li> <li>□ 청년·대학생(정학재단 대출 보유 다중채무자 등)의 재기지원에 위한 연체관리, 채무조정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li> <li>◦ 채무조정 상환방식 다양화(체증·체감식 상환 허용) 등 검토</li> </ul>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주책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대출 부담 완화</li> <li>◦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20년 출시</li> <li>◦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li> <li>□ 주담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li> <li>◦ 신북위 주담대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채무조정 참여에 대한 채권자 불이익 완화</li> <li>◦ (법원)개인회생 이용자가 담보채권 채무조정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과 '신북위 주담대 채무조정'간 연계(법원 협의중)</li> <li>◦ 재기의지가 있는 청년층이 채무조정 정보 등의 과도한 활용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li> <li>◦ 관련부처(고용부 등) 협의 등을 통해 채용단계에서 불필요한 신용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상담기관 육성 중장기 계획</li> <li>◦ 시범운용을 위하여 상담 인프라를 갖춘 기관 '민간 신용상담기관'으로 지정</li> <li>◦ 신북위는 그간의 상담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초기 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li> <li>◦ 취약계층에게는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여 상담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담기관간 품질 경쟁을 유도</li> <li>◦ 서민금융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상담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충</li> </ul>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대부업자의 금융기능(대출 중개 추심)별로 감독체계를 개편	심사단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 폐지) '상환능력 없는 곳에 대출도 할 수 없도록', 소득 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현행 300만원)</li> <li>◦ 피해 우려가 큰 청년층(예: 29세 ↓)과 고령층(65세 ↑)에 대해 소득 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li> <li>◦ 그 외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전문화 추이, 청년 고령층 대출에 대한 규제 효과 등을 보아가며 폐지 범위 확대</li> </ul>

대책	목표	중점과제	주요내용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소비자중심 금융혁신 촉진, 경제, 금융시장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신용정보 산업 경쟁 촉진  핀테크시장 확대	<input type="checkbox"/>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정보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도 평가의 세분화 등을 위한 추가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li> </ul> <input type="checkbox"/>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li> <li>◦ 비금융정보 특화 CB 도입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li> </ul>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input type="checkbox"/>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장년층)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만기 (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부여</li> <li>◦ 연금계좌 불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ISA 만기 계좌금액 추가 불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li> </ul>

청년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정책은 청년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저금리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금융위 햇살론)하고, 금융이용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평가 방식 개선, 과중채무 방지를 위한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장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가입 촉진방안도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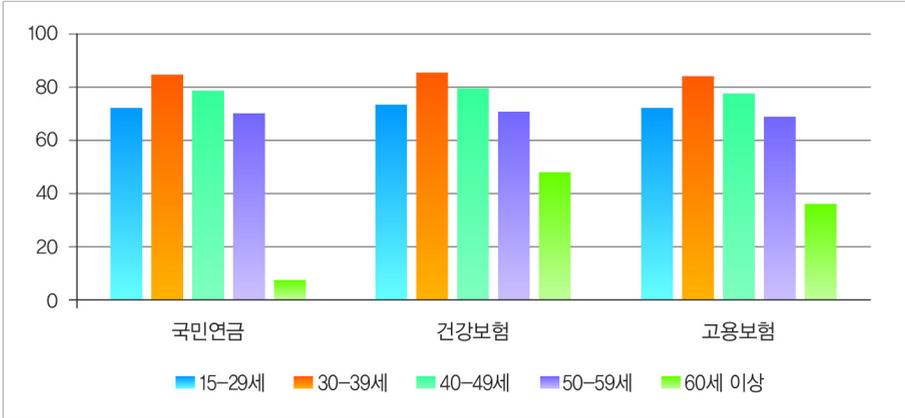
#### 나.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계획 및 대책의 특성

복지·금융·건강정책이 대응해야 하는 복지 욕구의 영역과 수준은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이 일자리를 넘어 삶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행기 청년에게 필요한 욕구가 분화되었으며, 복지·금융·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러나 복지·금융·건강 계획 및 대책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사안별로 대응하고, 청년을 단일한 정책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이 때문에 청년 복지·금융·건강 계획 및 대책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영역보다 잔여적이고, 대상자 포괄성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복지·금융·건강정책에서 청년은 주된 정책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청년 복지·금융·건강정책은 잔여적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즉, 청년정책에서 복지·금융·건강정책은 필수정책이 아니라 부수적인 정책으로 여겨졌다. 전통적으로 복지·금융·건강정책의 주된 대상은 실업, 신체적 질환, 장기빈곤 상태에 놓일 위험이 큰 고령자, 아동, 근로역량이 낮은 장기실업자 등으로, 신체건강한 청년은 정책 후순위였다. 복지·금융·건강정책이 전체 청년정책 중 과제수, 예산규모가 가장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금융·건강정책은 대상자 포괄성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청년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대책에서 정책대상은 ‘모든’ 청년이 아니라 빈곤가구, 보호시설 거주, 정신질환 위험 집단 등 특정 욕구가 있는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특정 욕구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금융·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정책이 가장 필요한 집단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대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효율성은 청년의 복지·금융·건강 욕구가 충족된 뒤에 확보될 수 있다. 다수의 청년이 복지·금융·건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소수만 지원할 경우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청년 수급률을 보면 복지·금융·건강정책에서 청년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이며,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낮으며, 19세 - 34세 청년 빈곤율이 5.4%, 기초보장 수급률이 1.2%인 것을 고려할 때, 빈곤청년 다수가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복지·금융·건강정책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청년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한 가구의 가구원, 자녀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자립하는 시기의 청년에게 필요한 다차원적, 다층적 복지·금융·건강 욕구를 기반으로 정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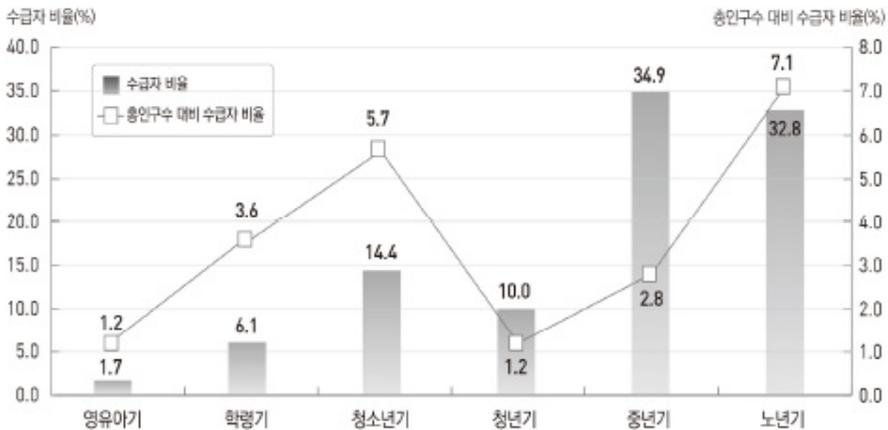


출처 : 사회보험가입률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연도., <http://kosis.kr/>에서 2019. 11. 29. 인출)

- 주 : 1) 임금근로자 대상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연금 포함  
 3)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그림 II-67.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주 : 영유아기 (0 ~ 5세), 학령기 (6 ~ 11세), 청소년기 (12 ~ 19세), 청년기 (20 ~ 39세), 중년기 (40 ~ 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자료 : 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p.12 그림 발췌.

그림 II-6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령별 수급률 (2018년)

## (2) 청년정책 사업분석 및 평가

### 가. 중앙부처 청년 복지·금융·건강 사업 특성 및 이슈

중앙부처의 복지·금융·건강 관련 사업은 소득·자산, 금융, 건강, 복지·생활 안정 여건 조성으로 구분된다. 소득·자산 사업에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인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근로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다. 금융 관련 정책은 청년의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거나(햇살론), 부채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사업(청년 신용회복 지원),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해 금융이력이 없는 청년이 신용평가 점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이 있다. 건강 정책으로는 사회복지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며, 20~30대에게 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정신질환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중재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이 있다. 복지·생활안정 여건 조성 관련 사업으로는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형 ISA, 군인연금 미수혜 전역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저소득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이 있다.

표 II-59. 청년 복지·금융·건강 관련 중앙부처 사업 현황

분류	과제명	특성	부처
소득·자산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선별, 저축형	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신설)	선별, 저축형	복지부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특정 대상, 저축형	국방부 외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기초생활보장)	선별, 현금급여	복지부
	근로장려세제 (EITC) 30세 미만 단독가구로 확대	선별, 장려금	국세청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선별, 수당, 서비스	여가부
금융	청년 신용회복 지원 (상환유예)	선별, 제도개선	금융위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보편, 제도개선	금융위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선별, 이자 지원	금융위
건강	병역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특정 대상	병무청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실시	보편, 서비스	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보편, 서비스	복지부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창출 (청년사회서비스지원사업)	보편, 서비스	복지부
복지·생활안정 여건 조성	청년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영	보편, 저축형	금융위
	군인연금 미수혜 전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허용	특정 대상, 제도개선	국방부

\* 출처: 김기현 외 (2020: 235).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수정, 보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금융·건강 관련 사업은 선별적이고 정책 충분성이 낮으며, 사후적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선별적이다. 특히 소득·자산 관련 정책은 저소득,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하지 못하는 미취업 구직자, 학생인 청년은 관련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 청년은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 예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미취업 구직자, 재학 중이거나 가사 등으로 비경제활동상태 청년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하다.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매우 엄격한 소득, 자산, 근로조건,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이 그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더해, 소득·자산 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는 당장의 소득지원이 아니라 이후 발생할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는 방식의 제도라는 점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상태로 소득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 근로 청년의 생활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이행기 소득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금융·건강사업은 그 대상자 규모가 매우 적고, 급여 수준도 적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충분성이 낮다.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의 현황을 보면, 참여자 수가 2만 명을 넘지 않는다. 적립형 유사사업인 아동발달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각각 8만1천명, 20만 명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적립금인 1,440만원~2,100만원은 원룸 월세로 사용해도 1년을 버티기 힘든 금액이다<sup>35)</sup>.

---

35)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미혼 청년가구의 평균 월세는 28만1천원이었다 (조선일보, 2019.05.01. 저소득층 미혼 청년 41만 가구, 평균 월세 32만원·7평 집에 산다).

표 II-60.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

과제명	대상	적립금	참여자 수	'20예산	부처
근로빈곤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초보장 생계급여수급 근로 청년	최대 2,100만원	'18 ~ 현재 10,000명	225억 74백만 원	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최대 1,440만원	'20 목표 5,000명	73억 21백만 원	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시설보호 아동, 생계·의료급여 아동 (12세 - 17세), 만18세 이후 학자금, 훈련. 주거 등으로 사용	연간 최대 540만원	'18까지 81,412명	운영비 위주 예산지원	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취업 한 15세 - 34세 청년	최대 3,000만원	'16.7월 ~ '19.4월말 현재 청년 200,079명	1조 2,820억 원	고용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 취업중인 15세 - 34세 청년	최대 3,000만원	'20년 3.8만명 ('18 ~ '20, 11만1천명)	2,912억 58백만 원	중소벤처 기업부

\* 자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카드,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s://www.adongcda.or.kr/?goPage=107>)

마지막으로, 소득·자산, 금융, 복지·생활안정 여건조성 정책은 사후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채 관련 정책에는 저금리 대출, 상환유예 등이 포함된다. 청년이 과중채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대출을 받지 않도록 생활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나아가 교육과 훈련 등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나. 중앙부처 청년 복지·금융·건강 사업평가

복지·금융·건강 사업 중 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사회서비스지원단, 청년건강검진 확대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 결과는 모두 '보통'

이었다. 성과지표 평가결과를 비공개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관련 정책은 법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며, 법개정이 청년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는지 등 그 효과성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 청년으로 대상자 포괄성을 확보해야 한다. 청년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업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심리,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내용과 불일치한다. 청년사회서비스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청년에게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참여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건강검진은 수검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청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36)</sup>.

표 II-61. 청년 복지·금융·건강사업 과제별 주요 부처 자체평가 결과

부처	사업과제 명	자체평가결과	성과지표
기재부 (2019)	<input type="checkbox"/> 소득재분배 개선 위한 소득세제 보완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세제 지원강화) 경력단절여성·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조건 완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조정 등	보통	①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개최여부 ② 세법개정안국회제출 ③ 세법개정안국회통과
복지부 (2019)	<input type="checkbox"/>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input type="checkbox"/>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자립 지원 강화 * 중위기준소득 30% 이하 청년 대상, 3년간 약 1,500만원 목돈 마련토록 지원	보통	① 자활성공률 (탈수급) ②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율
복지부 (2019)	<input type="checkbox"/>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운영 등 지역사회 서비스개발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통	① 이용자 만족도 ② 이용자증가율

36) 2019년 9월 기준으로 청년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648만3261명 중 수검자는 162만906명으로 수검률이 25.0%였고, 20세, 30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사 결과, 4명 중 1명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소하의원실, 2019.10.04.).

부처	사업과제 명	자체평가결과	성과지표
복지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는 20 ~ 30대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li> </ul> </li> </ul>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건강검진 사후관리율</li> <li>② 건강검진수검률</li> </ul>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내부자료. 청년정책 부처 자체평가 결과 및 성과지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복지·금융·건강정책은 사회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기본욕구와 청년기 이행 과정(경제활동 상태 변화, 가구내 지위 변화, 원가구로부터의 주거 독립 등)에서 비롯되는 특정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정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금융·건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기본적 욕구와 특정 사회위험이 무엇인지 특정화하고,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중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대상은 어떤 집단이 되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청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태(교육, 훈련, 돌봄, 가사, 취업, 구직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에 경험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심리적, 신체적 불건강을 초래할 수 있다. 심리·정서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기 불건강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이용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해외 청년정책 사례분석

지금까지 국내 청년정책의 여건을 분석하고, 기존 계획과 대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해외의 청년 정책(youth policy)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참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의 정책들을 위주로 영역별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우선 여기서는 청년 유럽연합의 ‘청년 전략’과 스웨덴의 ‘청년중심’ 등 종합계획이나 대책을 살펴보고, 청년 정책 영역인 일자리 분야, 교육·훈련 분야, 주거 분야, 참여·문화·활동 분야, 복지·금융·건강 분야 별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 (1) 청년 종합계획 및 대책

유럽연합(European Union, 2018)은 청년 전략 2010 - 2018 (youth strategy 2010 - 2018)에 이어 청년 전략 2019-2017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년 전략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로 총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1가지 목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청년들의 연계와 모든 젠더간의 평등, 사회통합, 정책 정보 제공과 청년들에 의한 정책 추진을 위한 대화, 정신건강과 웰빙, 지역 청년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질 좋은 학습, 모두를 위한 공간과 참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청년 조직과 유럽 정책사업 추진 등이다.

이 전략에서 세 가지의 핵심 정책 방향은 참여(engage), 연결(connect), 권한 강화(empower)이다. 참여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사를 개진하며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결은 유럽의 청년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회원국 간의 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국가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과 청년단체가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한강화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하고 청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이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핵심 목표와 전략에서 이전과 변화된 지점은 당사자인 청년을 넘어서 청년과 다른 사회집단(세대 문제, 인종 문제, 젠더 문제 등)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과 사회 환경을 넘어 자연환경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 중심 중앙부처를 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가족, 노인, 여성, 청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에서 연방정부의 청년전략 (Die 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을 수립해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전략은 9가지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9가지의 정책 영역은 미래와 세대 간 대화 그리고 청년의 상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 권한 강화와 민주주의, 도시와 지역에서의 삶과 문화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 교육과 노동, 그리고 자유의 보장, 자유로운 이동과 디지털 문해력 강화, 환경, 건강, 유럽과 세계와의 관계 등이다.

일본은 내각부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에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며 아동·청년 비전 (子ども・若者ビジョン)을 수립해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内閣府 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이 비전에서는 5가지의 기본 이념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 아동과 청년을 최우선으로 이익을 존중하며, 성인과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로 바라 보며, 자립과 능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고,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가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성인의 올바른 관점 수립을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세 가지 중점과제로는 활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과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역 차원의 육성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994년부터 스웨덴은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방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모든 자치단체가 국가 수준의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 차원의 공공영역에서 청년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2013년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청년정책인 ‘청년중심’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목표는 “모든 청년들이 양호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구성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청년과 관련한 스웨덴 정부 정책은 ‘청년의 관점

(youth perspective)', 즉 청년의 인권을 바탕으로 청년은 배경이나 조건을 달리 하는 다양한 개인들로 상정해야 하며, 나아가 청년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모든 청년이 사회에서 영향력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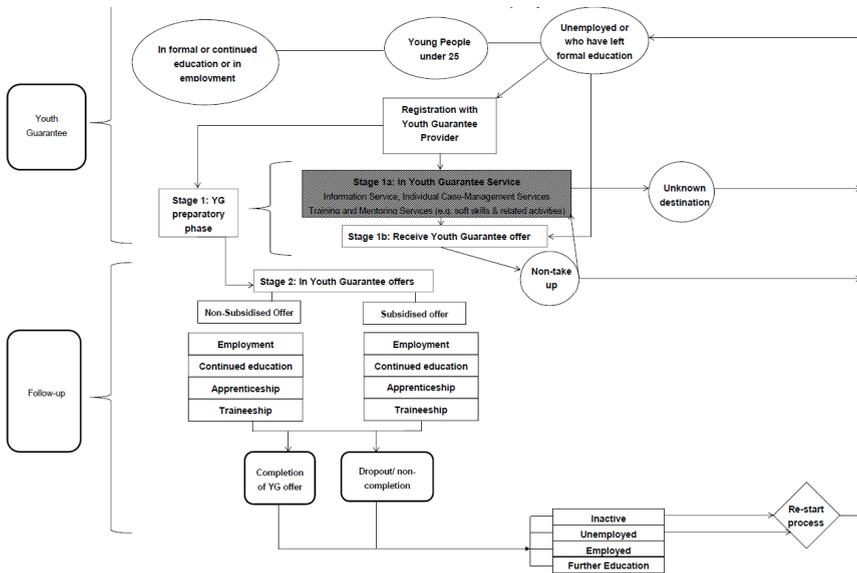
청년정책에 있어 이러한 목표 및 방향 설정에 따라 스웨덴 청년정책은 교육, 고용, 민간 경제, 주택, 건강, 권력, 문화 및 여가 등 청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한다. 2014년 도입된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은 현재 13세 - 25세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 관련 정부 결정과 행위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2014 - 2017년 실행 프로그램 40여 가지에 대해 시행하고, 청년정책의 실현 및 평가를 진행하고,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과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청년정책의 제안에 따른 제반 영향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2015년에는 청년 니트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 (2) 일자리 분야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는 2009년 글로벌 외환 위기로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청년보장제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을 넘어선 니트 집중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김기현 외, 2020).

청년보장제는 교육제도를 벗어나거나 실업상태인 청년들에게 고용(employment), 평생교육(continued education), 도제교육(apprenticeship), 훈련(traineeship)을 제공한다. 청년보장제도의 대상 연령 및 서비스체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해당 국가의 청년 연령에 따라 연령범위가 정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25세 미만으로 범위를 한정짓고 있지만, 덴마크와 스페인은 30세 미만으로 더 폭넓은 연령 범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sup>37)</sup> 이렇듯 연령범위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거주하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양질의 교육, 훈련,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정책대상 범위의 일종의 최저선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의 서비스제공 진행경로는 다음의 <그림 II-69>를 참고할 수 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17). Indicator Framework for Monitoring the Youth Guarantee.

그림 II-69.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의 서비스제공 진행경로

37) 각 국가의 자세한 청년보장제의 내용은 유럽의회 청년보장제(The Youth Guarantee) 페이지 참조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

청년보장제의 주요 내용은 각 회원국별 청년보장제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유형의 계획들은 정보, 상담 및 지도, 아웃리치 프로그램, 학교 - 취업 전환기 지원, 훈련 및 취업 알선, 전문교육과정 및 도제 제도, 청년기업가 등의 6가지로 제시 가능하다.

표 II-62. 유럽연합 청년보장제의 프로그램 예시

정보, 상담 및 지도	회원국들은 개인별 지원 제공 및 구직자의 욕구와 정부 개입의 최적화된 매칭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지도 활동을 강화
아웃리치 프로그램	많은 회원국들이 온라인 도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으나 가장 열악한 상황의 청년들을 위한 계획은 부족
학교 - 취업 전환기 지원	조기 학업 중단 학생들(ESL)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재편입을 위한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촉진하고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 노력
훈련 및 취업 알선	여러 국가에서 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을 위한 제도를 시행.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전문교육과정 (VET) 및 도제 제도	많은 국가에서 이중 학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도제 제도를 재정비
청년 기업가	일부 국가들은 청소년 보장시행계획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청년 기업가 양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출처 : Mascherini, Massimiliano (2017). "NEETs Europe : characteristics, costs, policies." 2017 국제심포지엄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이 추가되어 청년보장제와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졸업 후 5개월 이내에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청년 미취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유럽의 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제 사례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들이 권리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취업, 교육, 훈련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20대 초중반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여 예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접근은 청년들의 사회권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 및 대학진학률의 차이가 있어 유럽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로의 발전이 적합할 수 있다.

### (3) 교육·훈련 분야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기회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정규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노동력 혁신기회법에 따른 청년 프로그램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Youth Program)은 14세부터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입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노동부 산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교육관련 서비스로는 튜터링, 고등학교 대안 교육, 대학 입시 준비 활동이다. 둘째, 고용 상담 서비스에서는 직업 탐색 지원, 노동시장 정보제공, 개인별 취업계획 개발, 진로 상담 등이다. 셋째, 직업훈련 서비스로는 인턴십 또는 현장훈련을 통해 유급 또는 무급의 직무경험이 있다. 네 번째, 기타 지원 서비스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교통수단 지원, 육아지원, 거주지 지원, 포괄적인 상담, 재정교육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업무기반의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되며, 이 기관들은 최소 75%의 참여자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별로 지역별 실업자 수와 취약계층 청년의 수를 고려하여 비용을 지원한다 (배정희, 2019: 김기현 외, 202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내일이룸학교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이 200여명에 불과해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규교육 기회 이외에도 대안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인생경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4) 주거 분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옥고로 대표되는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주거에 노출되어 있었다. 최근 학교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이행기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불안정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affordable housing)에 대해 미국과 영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포용적지역지구제를 활용한 주택공급(Inclusionary Zoning, Inclusionary Housing)의 사례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이 공급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Schwartz, 2016).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형태가 이와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김기현 외, 2020).

영국의 공유 주택(House in Multiple Occupation : HMO)은 한 주거 형태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으로, 비혈연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의미한다. 공유주택에는 부엌, 거실, 식당과 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되,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한다. 공유주택은 대개 단독가구 주택에 비해 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 학생, 이민자, 취약계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형태로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영국의 HMO는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최소 공용면적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방, 부엌, 세면시설 등의 기준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박미선, 201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공유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부엌, 거실, 식당과 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며, 단독가구 주택에 비해 저렴한 월 임대료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행복주택이나 민간 공유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유주택의 법적 지위, 비싼 임대료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주택의 가격 적절성을 맞추는 방안, 주거형태를 다양화하되 최소기준을 맞추어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

#### (5) 참여·문화·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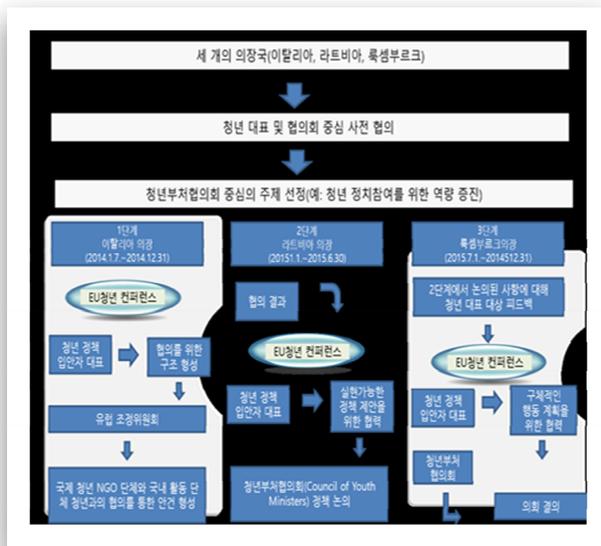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미진한 편이다.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비단 청년 연령의 선출직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언권을 갖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대화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는 유럽 청년들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3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매년 다른 국가로 의장국을 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청년정책 안건을 만드는 과정이며 2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사업 형태로 제안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으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구조화된 대화는 유럽청년포털(European Youth Portal)이라는 온라인 청년참여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38)</sup> 이 플랫폼은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모두 지원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거나 주요 안건에

---

38) 이 포털은 “유럽 전역의 청년을 위한 정보와 기회들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across Europe)”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유럽청년포털(European Youth Portal)의 자세한 내용은 [https://europa.eu/youth/EU\\_en](https://europa.eu/youth/EU_en) 참조하라.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김기현 외, 2020).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와 기회는 자원봉사(volunteering), 일(working), 학습(learning), 참여기회(have your say), 문화와 창의성(culture & creativity), 스포츠와 운동(sports & fitness),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국제적 시각으로 생각하기(think global), 여행(travelling) 등 다양하다.



\* 출처 : 김기현, 이윤주, 최정원, 유설희 (2018).

그림 II-70. 유럽연합 구조화된 대화 운영 추진체계

유럽의 구조화된 대화는 모든 단계에서 서울시의 청년시민회의가 비슷한 형태로 유럽연합 청년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 청년참여 플랫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단 등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해외 사례처럼 지역 단위의 논의구조를 가지고 이를 취합해 국가 단위에서 총화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가 청년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 (6) 복지·금융·건강 분야

우리나라 청년들은 가구의 배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금수저’, ‘흙수저’는 부모의 도움을 디딤돌 삼아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주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서 미국의 사례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의 자격요건은 다양하지만 주된 참여자는 저소득층인 근로빈곤층이다. 최대 3년간 1:1 혹은 1:3 매칭을 통해 주택구입, 직업훈련, 교육, 창업, 은퇴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자산만 형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 기간 동안 재무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금융지식 및 역량을 증진시켜주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김기현 외, 2020).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와 유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적립금액이 자립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가 있다.

## 8) 소결

지금까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영역의 기본계획 및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영역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턴과 같은 단기일자리, 창업 관련 과제들이 혼재해 있었다. 입직 이후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하였고,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채용에 관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사업은 청년들 내에서의 인지도도 높고 이직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정책들 중에는 일자리의 문화와 환경을 개선해주는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알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의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일-생활 균형 및 일-가족 양립에 대한 요구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특히 노동자로서의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할만하다.

둘째, 교육·훈련 영역은 교육, 연수,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과 비용에 대한 지원 혹은 대출 사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훈련 분야 핵심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희망사다리 장학금, 일·학습 병행제 등이 있다. 교육·훈련 영역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은 높은 편이지만, 재학생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 기술 등을 습득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증진 관련 사업 미흡하다는 것, 셋째, 교육훈련 영역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은 주로 재학생(중고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취업자와 미취업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나,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분야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의 지속적 확대, 청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서비스를 통한 역량증진 사업 확충,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 하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재학 청년, 학교 밖 청년, 소외계층 청년, 직업훈련기 청년, 대학비진학 청년, 재직 청년 대상 사업 등)를 구상하여 지원,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 증가 등이다.

셋째, 주거 영역의 특징은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여건 개선 사업 중 주택공급 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 주택공급 중 대부분 예산은 주택건설, 대출금에 집중되는 것 등이 있었다. 주거 영역의 핵심 사업으로는 청년 전·월세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대학기숙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 주거 영역의 주요한 예산은 주택공급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었다. 높은 예산 비중에도 정책의 실효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무엇보다 공급 주택의 수가 적고 입주자격의 선별기제가 강하여 작용하여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낮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청년 주거 정책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청년 일인가구 등에게는 제한된 기회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의 방식들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참여·문화·활동영역은 과제의 수와 예산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핵심 사업으로 청년 참여 플랫폼,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등이 있었다. 참여·문화·활동 영역은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정책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별 의견수렴 기구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청년정책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중심의 관점(youth-centered approach)이 필요하고, 민주적 과정으로서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활동,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복지·금융·건강 영역은 금융, 소득·자산, 건강 관련 사업 등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 영역의 경우 금융 소득·자산 정책의 경우 가구단위 저소득층, 부채부담이 큰 특정집단 대상 사업 추진으로 수혜자 수가 매우 적고, 정책 실효성도 낮은 편이며, 건강 영역의 경우 건강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심리정서 관련 건강서비스 등 미흡한 편이다. 시민으로서의 청년이 사회권(social rights)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발달되어 있고, 건강서비스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

표 II-63. 영역별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정책 영역	추진현황	문제점	정책방향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업, 창업, 일자리 환경개선 중 취업 중심 추진</li> <li>② 청년연령에 부합하고 청년을 위해 추진한 핵심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일자리 환경 관련 정책 미흡</li> <li>-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취업, 일자리 환경개선보다 낮은 편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창업과 더불어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경영 관련 사업(갑질근절,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사업 확대</li> <li>- 청년창업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li> <li>-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정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조정 검토</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육·연수·실습, 교육비 지원 중 교육비 지원에 집중(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li> <li>② 교육·훈련 분야 핵심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희망사다리 장학금, 일·학습병행제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은 높은 편이지만, 재학생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li> <li>-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 기술 등을 습득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증진 관련 사업 미흡</li> <li>- 교육훈련 영역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은 주로 재학생(중고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취업자와 미취업자도 상당수 포함되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의 지속적 확대 필요</li> <li>- 청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서비스를 통한 역량증진 사업 확충 필요</li> <li>-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 하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재학 청년, 학교 밖 청년, 소외계층 청년, 직업훈련기 청년, 대학비진학 청년, 재직 청년 대상 사업 등)가 구상되는 것이 필요</li> </ul>

정책 영역	추진현황	문제점	정책방향
		있으나, 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사업들이 주로 간접지원(기관이나 프로그램 지원) 방식을 따르고 있어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함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여건 개선 사업 중 주택공급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li> <li>② 주택공급 중 대부분 예산은 주택건설, 대출금에 집중됨</li> <li>③ 핵심 사업으로는 청년 전·월세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대학기숙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예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실효성은 다른 영역보다 낮은 수준임</li> <li>- 신혼부부 등에 집중되어, 청년 수혜자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만족도도 낮은 편임</li> <li>-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은 비체계적임. 주된 지원이 대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연령기준과 소득기준도 달리 운영 중이며, 융자한도와 대출 이율도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 가능한 주거비 지출과 안정된 주거 점유형태 제공이 필요</li> <li>- 청년 주거안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 확대 필요</li> <li>- 신혼부부 이외에 1인 청년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청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li> <li>- 지하,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청년지원 확대 필요</li> </ul>
참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참여·활동 관련 청년정책 사업 과제 수, 예산 매우 미미한 수준임</li> <li>② 핵심 사업으로 청년 참여 플랫폼,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정책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별 의견수렴 기구 역시 미흡함. 실효성도 낮은 편임</li> <li>-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서비스 지원 체계가 미흡한 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단위 의사수렴기구 재정립 필요</li> <li>- 다양한 활동,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복지·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 소득·자산, 건강 관련 사업 등이 추진됨</li> <li>② 핵심 사업으로는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청년 국가건강검진, 건강상담지원 서비스 등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소득·자산 정책의 경우 가구단위 저소득층, 부채 부담이 큰 특정집단 대상 사업 추진으로 수혜자 수가 매우 적고, 정책 실효성도 낮은 편임</li> <li>- 건강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심리정서 관련 건강서비스 등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보편적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li> <li>- 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하고, 청년기 위험이 높아진 특정 질병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li> </ul>

### 3. 청년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 수렴<sup>39)</sup>

#### 1) 개요

이 절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연구진은 이를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 청년 당사자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0)</sup>

첫째,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델파이는 연구진이 도출한 기본계획의 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타당성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청년 당사자 간담회는 청년 단체 관계자 및 일반 청년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연구진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와 청년 간담회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설계하였다. 연구진이 설계한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세부과제, 핵심과제에 대한 의견과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청취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간담회의 형식과 규모는 간소화되어 진행되었다.

---

39) 이 절은 유민상 부연구위원과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40) 이 연구가 진행된 2020년 4월 - 7월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대유행시기였다. 2020년 7월 12일 현재 한국의 누적확진환자는 13,417명이며, 하루 확진자가 40 - 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 페이지, <http://ncov.mohw.go.kr/> 에서 2020년 7월 13일 인출).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관련 협조 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14796, 2020.6.12.)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간담회를 공공행사 형태로 열지 않고, 10인 이하의 참석자가 모인 소규모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명부작성 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진행하였고, 좌석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 (1) 델파이조사 개요

본 델파이조사의 목적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기본계획안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델파이조사는 2020년 6월 - 7월 4명의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 2회 실시되었으며,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영역의 학계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표 II-64. 델파이 조사 진행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조사시기	- 1차 : 2020년 6월 16일(화) - 6월 23일(화) - 2차 : 2020년 6월 30일(화) - 7월 6일(월)	3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차 조사에서 합의도 및 수렴도가 도출되어 델파이 조사 종료
조사대상	청년정책 관련, 학계·현장 전문가 및 청년활동가 총 24명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영역)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설문지는 부록 참조
모집방법	연구진의 영역별 추천	
분석방법	합의도, 수렴도 등	

### (2) 델파이조사 주요 문항

델파이조사의 문항 개발은 연구진이 담당하였으며, 주요 문항 내용은 기본방향, 추진전략, 비전, 목표, 목표별 추진과제의 타당성 평가였다. 전문가들은 각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1(전혀 타당하지 않음)에서부터 5(매우 타당함)까지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1, 2, 3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 또는 개선 의견을 서술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이 수정되었으며, 전문가들은 2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기본계획안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표 II-65. 델파이 주요 문항

문항	1차 조사 기본계획(안)	2차 조사 기본계획(안)	계획안 수정여부
기본방향 타당성 평가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유지
추진전략 타당성 평가	1.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 추진	1. 청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	수정
	2.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2.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유지
	3.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3.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유지
비전 타당성 평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유지
목표 타당성 평가	1. 역량증진과 권한 부여	1. 역량증진과 권한 강화	수정
	2.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2.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유지
	3.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3.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유지
목표별 추진과제 타당성 평가	1. 일자리 (6개과제)	1. 일자리 (6개과제)	유지
	2. 교육·훈련 (5개과제)	2. 교육·훈련 (5개과제)	유지
	3. 주거 (4개과제)	3. 주거 (4개과제)	유지
	4. 참여·활동 (4개과제)	4. 참여·문화·활동 (4개과제)	수정
	5. 복지·건강 (4개과제)	5. 복지·금융·건강 (4개과제)	수정

### (3)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는 ①일자리, ②교육·훈련, ③주거, ④참여·문화·활동, ⑤복지·금융·건강 등 5개 영역의 학계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등 총 24명이었다.

전문가들의 선정은 협동연구진 내부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추천 우선순위는 ①청년정책 전문가, ②영역별 전문가 등이었다. 각 영역별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66. 델파이 참여 전문가

영역	이름	소속	1차	2차
일자리	김**	한국00연구원	○	○
	김**	한국00연구원	○	○
	김**	0000연구소	○	○
	김**	00대학교	○	○
	고**	한국00연구원	○	○
	이**	0000대학교	○	○
교육·훈련	박**	한국00개발원	○	○
	김**	0000기술원	○	○
	채**	한국0000개발원	○	○
	이**	한국0000개발원	○	○
	오**	한국0000개발원	○	○
주거	임**	한국0000연구원	○	○
	이**	00대학교	○	○
	강**	00연구원	○	○
참여·문화·활동	강**	0000대학교	○	○
	김**	0000공동체 00	○	○
	전**	부천시 00000재단	○	○
	이**	00대학교	○	○
	최**	00대학교	○	○
복지·금융·건강	정**	한국0000연구원	○	○
	한**	000 0000연구소	○	○
	김**	한국0000연구원	○	○
	전**	한국0000연구원	○	○
	김**	00대학교	○	○

(4) 델파이조사 주요 결과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에서 기본방향의 타당성은 평균 4.22(표준편차 0.72), 추진전략 2의 타당성은 평균 4.43(표준편차 0.88), 추진전략 3의 타당성은 평균 4.52(표준편차 0.58)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합의도와 수렴도 역시 적절한 수준이었다. 추진전략 1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평균 3.87(표준편차 0.90)로 타당성, 합의도, 수렴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수정된 계획안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 평균 4.25(표준편차 0.78), 합의도 0.75, 수렴도 0.5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표 II-67.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타당성 검토

	기본방향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응답자 수	24	24	24	24	24	24	24	24
평균 <sup>1)</sup>	4.22	4.33	3.87	4.25	4.43	4.67	4.52	4.63
표준편차	0.72	0.69	0.90	0.78	0.88	0.47	0.58	0.56
백분위수	25	4.00	4.00	3.00	4.00	4.00	4.00	4.00
	50	4.00	4.00	4.00	4.00	5.00	5.00	5.00
	75	5.00	5.00	4.50	5.00	5.00	5.00	5.00
CVR <sup>2)</sup>	0.83	0.92	0.39	0.75	0.91	1.00	0.91	0.92
합의도 <sup>3)</sup>	0.75	0.75	0.63	0.75	0.80	0.80	0.80	0.80
수렴도 <sup>4)</sup>	0.50	0.50	0.75	0.50	0.50	0.50	0.50	0.50

- 주 : 1) 타당도 문항은 5점 척도이며 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부터 5점(매우 타당함)까지임.  
 2) CVR (Content Validity Ratio) = (Ne-N/2) / (N/2). ※ N: 관측치, Ne: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  
 3) 합의도 = 1 - (IQR / Median). 합의도의 값이 0.7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 합의를 가진 것으로 봄.  
 4) 수렴도 = IQR / 2. ※ IQR: 사분범위 (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 수렴도가 0-0.5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 합의를 가진 것으로 봄.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전의 경우, 1차와 2차 조사에서 모두 평균 4점 이하로 합의도와 수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문구의 불명확성 및 방향설정의 부재가 주로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하에서 설명될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당사자들의 경우 '원하는 삶'이라는 문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목표 1은 1차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되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타당도 평균(4.33), 합의도(0.75), 수렴도(0.50)가 1차 조사보다 모두 개선되었다. 목표 2와 목표 3의 경우 1차와 2차 조사에서 모두 3.96점 이상의 높은 평균과 수용 가능한 합의도, 수렴도를 나타냈다.

표 II-68.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타당성 검토

	비전		목표 1		목표 2		목표 3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응답자 수	24	24	24	24	24	24	24	24	
평균 <sup>1)</sup>	3.70	3.96	3.91	4.33	3.96	4.08	4.30	4.29	
표준편차	0.75	0.84	0.83	0.62	0.75	0.64	0.55	0.54	
백분위수	25	3.00	3.00	4.00	4.00	3.00	4.00	4.00	4.00
	50	3.7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75	4.00	5.00	4.00	5.00	4.00	4.00	5.00	5.00
CVR <sup>2)</sup>	0.04	0.42	0.57	0.83	0.39	0.67	0.91	0.92	
합의도 <sup>3)</sup>	0.73	0.50	1.00	0.75	0.75	1.00	0.75	0.75	
수렴도 <sup>4)</sup>	0.50	1.00	0.00	0.50	0.50	0.00	0.50	0.50	

주 : 1) 타당도 문항은 5점 척도이며 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부터 5점(매우 타당함)까지임.  
 2) CVR(Content Validity Ratio) =  $(N_e - N/2) / (N/2)$ . ※ N : 관측치,  $N_e$  :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  
 3) 합의도 =  $1 - (IQR / Median)$ . 합의도의 값이 0.7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 합의를 가진 것으로 봄.  
 4) 수렴도 =  $IQR / 2$ . ※ IQR : 사분범위 (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 수렴도가 0 - 0.5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 합의를 가진 것으로 봄.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의 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 영역의 6개 과제는 1차 평균 3.91, 2차 평균 3.95으로 다섯 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타당도를 보였으며, 합의도와 수렴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교육·훈련 영역의

5개 과제는 1차 평균 3.7, 2차 평균 3.88 이었으며, 합의도와 수렴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주거영역 4개 과제는 1차 평균 3.78, 2차 평균 3.88이었으며, 합의도와 수렴도도 적절하였다. 참여·문화·활동 4개 사업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참여·활동'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2차 조사에서 '참여·문화·활동' 으로 영역의 범위를 확장한 이후 타당도가 3.92로 상승하였으며, 합의도와 수렴도도 개선되었다. 복지·금융·건강 의 4개 사업 역시 1차 조사에서 '복지·건강'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2차 조사에서 '복지·금융·건강' 으로 영역 범위를 확장한 이후 타당도가 3.88로 상승하였으며, 합의도와 수렴도가 증진되었다.

표 II-69. 청년정책 추진과제 타당성 검토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응답자 수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평균 <sup>1)</sup>	3.91	3.96	3.70	3.88	3.78	3.88	3.78	3.92	3.83	3.88	
표준편차	0.65	0.54	0.75	0.67	0.72	0.67	0.72	0.49	0.82	0.83	
백분위수	25	3.50	4.00	3.00	4.00	3.00	4.00	3.00	4.00	3.00	4.00
	5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75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CVR <sup>2)</sup>	0.48	0.67	0.22	0.58	0.22	0.58	0.39	0.67	0.30	0.58	
합의도 <sup>3)</sup>	0.88	1.00	0.75	1.00	0.75	1.00	0.75	1.00	0.75	1.00	
수렴도 <sup>4)</sup>	0.25	0.00	0.50	0.00	0.50	0.00	0.50	0.00	0.50	0.00	

주 : 1) 타당도 문항은 5점 척도이며 범주는 1점(전혀 타당하지 않음)부터 5점(매우 타당함)까지임.

2) CVR (Content Validity Ratio) = (Ne-N/2) / (N/2). ※ N : 관측치, Ne :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

3) 합의도 = 1 - (IQR / Median). 합의도의 값이 0.7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 합의를 가진 것으로 봄.

4) 수렴도 = IQR / 2. ※ IQR 사분범위 (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 수렴도가 0 - 0.5의 값을 가질 때 긍정적 합의를 가진 것으로 봄.

### 3) 청년 간담회

#### (1) 개요

이 연구는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청년 중심의 접근(youth - centered approach)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년 중심의 접근을 연구에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단계를 마련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청년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일반청년 간담회 등 두 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단체 관계자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단체 대표 혹은 실무자들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9명의 청년 단체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8명은 3시간 동안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1명은 당일 발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간담회를 대체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8명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둘째, 일반청년 간담회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2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 인식, 희망 방향에 대해 청취하였다. 22명은 2시간 동안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및 정책욕구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2명은 당일 발열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선 인터뷰로 간담회를 대체하였다. 일반청년은 연령을 중심으로 19세 - 24세, 25세 - 29세, 30세 - 34세의 3개 연령 집단으로 나누었으나, 청년층의 젠더 관련 의견이 많이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25세 - 29세의 집단은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으로 구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참여하지 못한 2명에 대한 유선인터뷰는 각각 30분씩 정책욕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표 II-70. 청년단체 관계자 간담회 참여자 정보

그룹	ID	주요 정보			
		활동영역	직위	성별	비고
청년 단체 A그룹	N1	청년정책분야	사무국장	여	
	N2	시도 청년정책분야	센터장	여	
	N3	청년창업분야	회장	남	
	N4	청년정책분야	대표	여	
	N5	청년활동분야	대표	여	서면의견 청취
청년 단체 B그룹	N6	청년활동분야	센터장	여	
	N7	청년정책분야	사무국장	남	
	N8	청년활동분야	실장	여	
	N9	청년주거분야	대표	여	

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청년 단체 간담회를 10명 내외의 소규모 간담회로 2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표 II-71. 일반청년 간담회 참여자 정보

그룹	ID	주요 정보				
		연령	성별	학력	현재상태	비고
20대 초	G1	22	여	대학 재학	학생	
	G2	24	남	대학 재학	학생	
	G3	19	남	대학 재학	학생	
	G4	24	여	대학 재학	학생	
	G5	19	여	대학 재학	학생	
	G6	20	여	대학 재학	학생	
	G7	21	여	대학 휴학	학생	
	G8	22	여	대학 재학	학생	전화면담
20대 중후반	G9	24	여	대학 재학	학생	전화면담

그룹	ID	주요 정보				
		연령	성별	학력	현재상태	비고
여성	G10	26	여	대학 졸업	비정규직 노동자	
	G11	25	여	대학 졸업	비정규직 노동자	
	G12	26	여	대학원 재학	대학원석사	
	G13	28	여	대학 졸업	취업준비	
	G14	27	여	대학 재학	학생	
20대 후반 남성	G15	28	남	대학 졸업	취업준비	
	G16	25	남	대학 휴학	학생	
	G17	27	남	대학 졸업	취업준비	
	G18	26	남	고교 졸업	플랫폼노동자	
	G19	27	남	대학 휴학	학생	
30대 초	G20	25	남	대학 휴학	학생	
	G21	31	남	대학원 재학	대학원석사	
	G22	33	남	대학 졸업	임금노동자	
	G23	33	여	대학 졸업	임금노동자	
	G24	30	여	대학원 졸업	프리랜서	

주 : 1)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일반 청년 간담회를 10명 내외의 소규모 간담회로 진행하였음. 그룹의 구분은 연령을 기본으로 하고, 20대 중후반 그룹만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2) 연령은 만 나이 기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청년 간담회는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다. 간담회는 2020년 6월 24일, 25일, 7월 3일에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10명 이내로 소규모로 진행된 간담회는 집단면담의 특성을 띠었다. 연구자들은 기본계획의 초안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20 - 30분 간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체계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좌장을 맡은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설문지 형태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sup>41)</sup> 연구진은

41) 청년 간담회에서 사용된 기본계획(안)은 이 보고서의 중간보고 단계에서의 계획을 ppt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이 당시의 계획은 전문가 델파이, 청년 간담회, 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여기서는 최종안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이 당시에 사용된 계획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녹음 후 전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간담회 참여자에 대하여 모두 익명 처리하였다.

표 11-72. 청년 간담회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청년단체 관계자 간담회	일반청년 간담회
목적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 및 과제 수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검토 및 정책 욕구에 대한 의견 청취
참여자 수	○ 9명 (4명씩 2그룹, 1명은 발열 등의 문제로 서면으로 의견 청취)	○ 24명 내외 (19 - 24세, 25 - 29세, 30 - 34세 청년 그룹) ○ 일반 청년 눈덩이 표집
참여자 특성	○ 국내 주요 청년단체 관련자	○ 19세 ~ 34세 사이의 청년
진행방식	○ 연구진의 연구 내용에 대한 20 - 30분 내외의 프리젠테이션 ○ 비전 / 목표 /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및 자유의견 청취	○ 연구진의 연구 내용에 대한 20 - 30분 내외의 프리젠테이션 ○ 비전 / 목표 /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및 자유의견 청취 ○ 간담회 당일 발열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2명은 유선으로 의견청취
논의의 초점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에 대한 타당성 2. 청년정책의 영역과 과제에 대한 의견 및 신규과제 제안 3. 기본계획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종합의견	
시간 및 횟수	○ 150분 내외, 1회	○ 120분 - 150분 내외, 1회
기록 및 녹취 여부	○ 참여자 동의를 득한 후 녹음하여 전사	
발표 및 진행	○ 연구진	
비고	○ 코로나19로 인하여 10명 이내의 소규모 면담으로 진행하였음	

## (2) 청년 간담회 주요 결과

청년간담회는 연구진이 설정한 비전, 목표, 과제에 대한 청년단체 관계자와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진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기본계획의 방향과 세부 내용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의의 순서에 맞추어 청년단체 관계자와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 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에 대한 타당성

연구진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하고 청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 ■ 비전 :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에 대한 의견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원하는 삶’이라는 표현이라는 표현이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설계하거나 꿈을 실현한다는 표현보다는 청년에게 적합한 표현이라는 의견이었다. 다만 청년을 주체적 존재로 보지 않고 국가가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시혜적인 시각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 당사자들은 ‘원하는 삶’이라는 표현이 매우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부는 청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는 국가의 책무를 나타내므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과거의 시각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청년 당사자 간담회에서 더 많은 의견이 나왔다, 이 표현이 기회의 평등만 보장한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소극적이라는 의견, 기본적인 표현에는 만족하지만 우리 사회가 실제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비전에 대해서는 이상적이라는 의견, 모호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비전에서 담고 있는 표현에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비전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년들이 원하는 ‘적극적 보장’과 ‘기회 보장의 실현’을 기본계획에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 목표: ‘역량증진과 권한부여’,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에 대한 의견

연구진이 제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는 추상적이기는 하나, 개별 목표가 담고 있는 내용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역량증진이라는 말이 진부하다거나 권한부여라는 말이 직관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권한부여라는 표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권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부여가 아닌 권한강화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전문가 델파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적이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권한강화’의 표현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나. 청년정책의 영역과 과제에 대한 의견 및 신규과제 제안

### ■ 정책 영역의 구분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 영역 구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금융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나 현재는 누락되어 있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젠더에 대한 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구진은 정책 영역이 아닌 세부 과제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일자리 영역

청년단체 관계자와 청년 당사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노동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노동권익과 관련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서 노동권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감독이나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0대 여성 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했을 때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20대 후반에서부터 일·생활 양립,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청년창업 활성화는 코로나19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의 새출발을 돕는 보장 프로그램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청년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내에서 청년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도울 수 있는 과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창업 활성화가 아닌 창업 내실화와 보장으로 방향을 변경하였다.

## ■ 교육·훈련 영역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교육·훈련 영역에서도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이에 학습자로서의 청년들의 권한 강화 과제를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 ■ 주거 영역

청년들은 자신들의 최우선 욕구 중 하나로 주거를 이야기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보였다. 한 참여자는 본인이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앞으로 주거비 부담에 의해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가 막막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공공주택(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었고 희망하고 있었지만, 혜택이 신혼부부 등에 국한되어 있어 단독 가구 청년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형태가 최소한의 주거 공간 정도 밖에는 되지 않고 획일적인 특성이 있어 아쉽다고 하였다.

공공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스, 안전, 고립 등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단독가구의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 본인이 가족 없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 ■ 참여·활동 영역

참여활동 영역에 대한 의견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 물질적 지원에 대한 욕구 등을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 ■ 복지 · 건강 영역

복지와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청년단체 관계자들은 마음건강 서비스 등 기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청년의 욕구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일반 청년들도 병원이나 사설기관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금전적 부담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과제를 보강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 영역에서는 금융과 관련하여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영역으로 설정하고 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복지, 금융, 건강을 한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 ■ 범 영역 의견

모든 영역에 걸친 의견으로는 젠더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의 긴급지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젠더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 청년들이 제기를 하였고 주로 노동환경 및 주거에서의 안전에 대한 의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과 경력단절에 대한 의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은 청년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으로, 현재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불안 혹은 공포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 핵심과제 및 신규과제에 대한 의견

연구진은 일자리(한국형 청년보장제), 교육·훈련(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이용 하향), 주거(주거수당 및 환경개선), 참여·활동(유스카드와 유스박스, 청년센터), 복지·건강(사회 첫출발 계좌) 영역 등에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일반 청년 당사자들은 청년들에게 신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소득 역진성이 발생하여 공평성 혹은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일반 청년들은 청년센터를 실제로 이용할지는 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 응답하였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센터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심을 표하기도 하였다.

### 다. 기본계획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종합의견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계획의 완결성이나 완성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청년단체들에서 간절히 바라던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청년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였던 일반 청년들에게도 사회가 어떠한 보장을 하겠다고 선언한 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불평등에 대한 해소, 공평과 공정에 대한 보장 등에 대해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연구진은 이 정책을 통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 4.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도출<sup>42)</sup>

###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① 청년당사자 접근, ② 균형적 접근, ③ 실효적 접근, ④ 협력적 접근 등 4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당사자 접근은 대상 중심 정책인 청년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 정책들은 수요자인 청년들을 고려해 사업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사업이 수립되고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2019년 중앙부처의 182개 청년정책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 수나 예산 규모가 수요자 조사에 따른 요구수준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청년들에게 정책 사업들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인지도는 물론 수혜율에 있어서도 낮은 체감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정책 추진이 수요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사업들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욕구에 기반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균형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중인 청년정책은 일부 정책 영역에 매우 치우쳐 있어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청년정책은 청년고용정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며 주거나 교육 영역의 예산 규모가 크지만 그 예산은 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학자금, 장학금 지원이나 주택공급 등에 국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으나 체감도는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청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기능 중심 정책과는 달리 대상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영역이지만 중앙 단위에서 제대로 된 참여 정책이

---

42)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교육, 주거를 제외한 생활 및 복지 정책 영역은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사업 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균형적 접근은 대상별로도 필요하다. 학생이나 취업자 등 특정 대상만을 지원하는 정책 비중이 너무 높고 매우 느슨한 형태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정작 가장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선별적 접근 중에서도 가장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정책은 성과 중심이 아닌 투입 중심이며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개별 부처에서 기능 중심의 정책 중 일부로 청년 대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정책의 목표는 청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을 통하여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청년을 이름에 걸고 추진되는 정책 사업의 목표에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청년정책 사업은 단순히 투입이나 과정, 결과가 아닌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상 중심 정책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정책 역시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사무국(현행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국에서는 청년들을 돕는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는 물론 민간 영역까지 포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기존 청년 관련 기본계획, 대책과의 관계 정립 및 연계 방안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정하고 비전, 목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기존 청년 관련 기본계획, 대책,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 청년 관련 기본계획, 대책, 방안을 생애주기, 기능 중심, 대상 중심으로 나누어 기존 정책들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간의 관계 정립과 연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생애주기 관련 기본계획,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 정립과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상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어지는 대상자의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하되 단계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기는 보호, 성장, 청소년기는 참여, 활동, 자립준비, 청년기는 일자리, 주거, 자립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상을 둘러싼 환경 분석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거시체계만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살아가는 주요한 공간(가족, 직장, 학교 등)의 특성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도출과 관련하여 청년기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기로 이어주는 이행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반면, 아동기는 환경조성, 청소년기는 당사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전, 목표, 과제 수립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의 비전은 당사자의 변화와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목표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중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연결선 상에서 청년 역시 행복이나 삶의 질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아동은 보호에 청소년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청년은 자립과 같은 이행기의 과업에 초점을 맞추되

청소년 시기의 교육, 훈련, 참여, 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년과 과년된 기존의 기능중심 기본계획, 대책, 방안들과의 관계 설정과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분야의 경우 취업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로의 취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필요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공정채용, 일·가정 양립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 분야의 경우 대학이나 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보다 산학협력과 훈련과정을 통해 학교-일자리 이행기에 불일치 (mismatch)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 평생학습 관련 과제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으며 영리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같은 비영리영역 일자리를 위한 훈련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주택시장에서의 청년들은 열악한 주거로 내몰리는 상황에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 밖 청년(집이 없는 청년, 시설 퇴소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 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서 참여·문화·활동 분야의 경우 청년들에 대한 정책참여와 권한부여 과제 신설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정책참여 영역을 정책 및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로 확대하고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에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금융·건강의 경우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들의 재구조화를 통해 시너지효과의 발휘가 필요하고 기본계획에 디딤씨앗통장, 근로장려세제 (EITC)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건강관리 체계, 자살예방 등 부처에서 제출하지 않은 과제를 반영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대책, 방안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상태에 따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최저학력기준 미달 청년, 대학진학 청년, 직업훈련기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을 필요가 있다. 성별 특성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성별격차 발생에 대한 지원, 군입대 청년 지원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저소득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보호대상 아동의 청년기 전환기, 대학비진학 고졸청년, 다문화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

### 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당사자에 대한 실태와 욕구 분석, 청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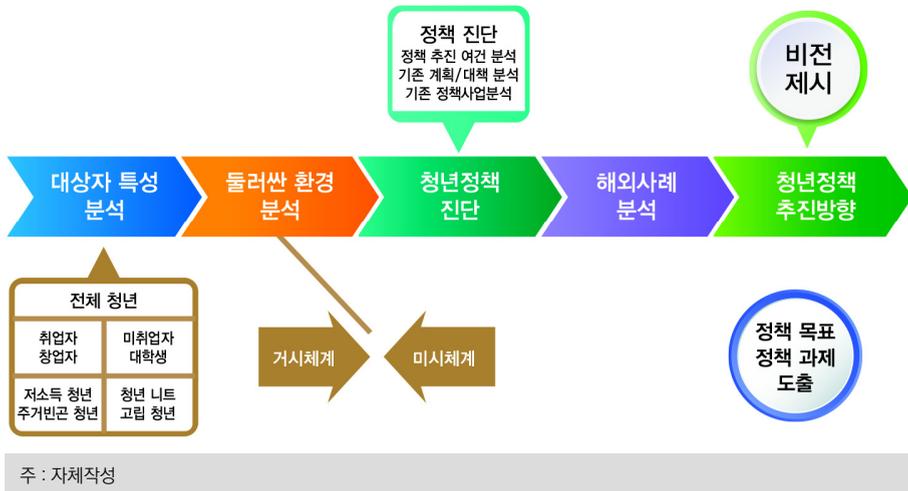


그림 II-7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본방향(안) 도출과정

정책추진 기본 방향은 기본계획의 비전이나 목표,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본계획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 삶 개선이다. 5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지만 이 기간 이내에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온전히 개선하기는 어렵다. 1차 기본계획 추진의 방향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어떤 방향에서 추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차 기본계획의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설정은 2020년에 처음으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각 부처별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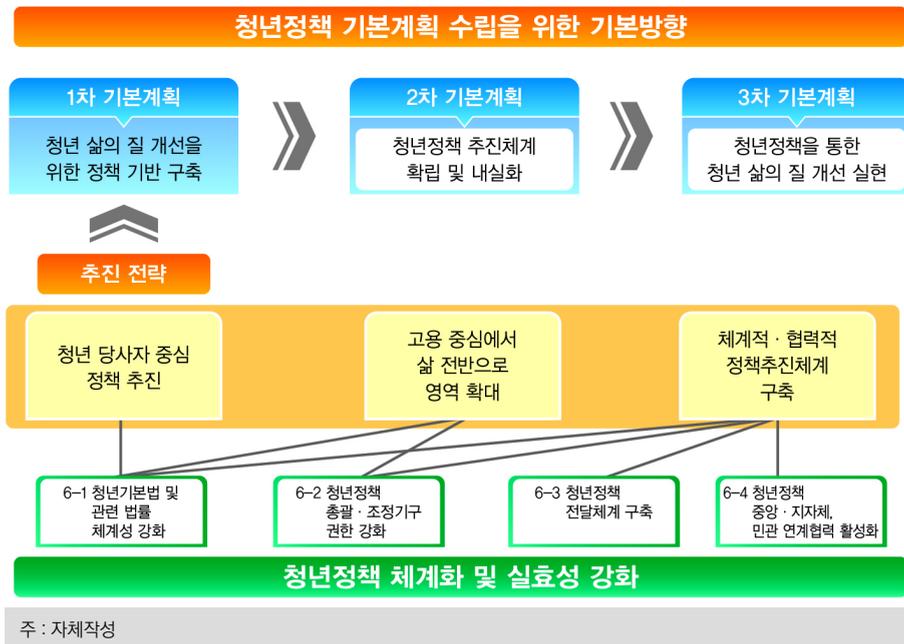


그림 II-7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본방향(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청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 ②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③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같은 세 가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뒷받침해줄 정책 과제(안)으로는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청년정책 추진 체계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년정책 중앙·지자체,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 ○ — 제3장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 1. 정책 비전 및 목표(안)
- 2. 정책과제(안)
- 3. 정책 추진 기반(안)



## 1. 정책 비전 및 목표(안)<sup>43)</sup>

### 1)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안)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기본방향(안)을 당사자 및 환경분석, 정책분석 등을 통해 설정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과제(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대상자 실태 분석에서 청년의 다양한 권리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 분석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한 이행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은 “행복한 삶을 사는 청년, 함께 성장하는 사회”이다. 전자는 청년정책에서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과 관련되며 후자는 정책 대상을 둘러싼 환경개선과 관련된다.

43)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b>비전</b>	<b>행복한 삶을 사는 청년, 함께 성장하는 사회</b>			
<b>목표</b>	<b>청년의 다양한 권리 실현</b>		<b>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한 이행 여건 조성</b>	
<b>추진과제</b>	<b>일자리</b>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1-3 청년 공정 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	1-4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b>교육·훈련</b>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b>주거</b>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b>참여·문화·활동</b>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부여 강화 4-1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4-3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4-4 청년 문화 및 교류활동 확대	4-5 청년 참여 및 문화, 활동 추진 여건 조성	
	<b>복지·금융·건강</b>	5-1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5-2 청년 금융역량 강화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 출발 보장 5-4 청년 부채 경감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b>추진기반</b>	<b>청년정책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b>			
	6-1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6-2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권한 강화	6-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6-4 청년정책 중앙-지자체,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주 : 자체작성

그림 Ⅲ-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1안)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안)는 “행복한 삶을 사는 청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청년의 다양한 권리 실현”을 설정하였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한 이행 여건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정의에서 대상 지원과 환경조성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b>비전</b>	<b>행복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b>			
<b>목표</b>	청년의 다양한 권리 실현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한 이행 여건 조성	
<b>추진전략</b>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와 원활한 이행 지원	주거 및 금융 부담 완화와 생활 여건 조성	참여·문화 활성화와 정책 실효성 강화
<b>추진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li> <li>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li> <li>1-3 청년 공적 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li> <li>1-4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li> <li>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li> <li>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li> <li>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li> <li>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li> <li>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li> <li>2-5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li> <li>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li> <li>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li> <li>3-4 청년 주거여건 개선</li> <li>3-5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li> <li>3-6 청년 금융역량 강화</li> <li>3-7 청년의 원활한 사회 출발 보장</li> <li>3-8 청년 부채 경감</li> <li>3-9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부여 강화</li> <li>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li> <li>4-3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li> <li>4-4 청년 문화 및 교류활동 확대</li> <li>4-5 청년 참여 및 문화, 활동 추진 여건 조성</li> <li>4-6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li> <li>4-7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 권한 강화</li> <li>4-8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li> <li>4-9 청년정책 중앙-지자체,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li> </ul>

그림 Ⅲ-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과제(2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과제(안)에 대해서 목표와 과제를 연계하는 방식(matrix)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과제를 연계하는 2안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안의 비전은 대상자 지원과 환경 개선을 연계해 ‘행복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제시하였다. 목표는 1안과 동일하며 정책 영역에 기반해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일자리영역과 관련하여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환경 개선’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교육 및 훈련 영역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와 원활한 이행 지원’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주거와 복지, 금융, 건강 영역으로 ‘주거 및 금융 부담 완화와 생활 여건 조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참여·문화·활동 영역과 추진기반 영역으로 ‘참여·문화 활성화와 정책 실효성 강화’로 제시하였다.

## 2. 정책과제(안) 44)

### 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 과제(안) 도출

이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에 따라 5가지 영역(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과 추진체계로 영역을 나누어 정책과제(안)를 도출하였다.

정책과제(안) 포함된 정책사업들은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한 182개 사업에서 출발하였으며 2020년 7월까지 추가로 취합해 정리한 179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활용하였다. 이 사업들은 정책과제(안) 중에서 비고란에 '부처 제출과제'로 표기된 부분에 해당한다. 2019년도에 취합한 부처 제출사업들은 전체 사업 수가 182개에서 179개로 3개가 줄어들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청년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나 중복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부처 제출 사업 수를 각 개별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정책영역별로 보면, 일자리 분야의 사업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주거 분야도 줄어들었으나 참여와 권리분야가 크게 증가하였고 교육, 생활 분야도 사업 수가 늘어났다. 예산을 보면 2월 현재 2019년 수집 자료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들의 2020년 청년정책 사업 예산은 22조 3천억원이었으나 7월까지 조정한 예산 규모는 16조 8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44)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부연구위원, 변금선 부연구위원, 배정희 부연구위원, 최한수 교수(경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표 III-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처 제출사업 현황 (2020년 2월, 7월)

영역	2020년 2월		2020년 7월	
	사업(개)	예산(조원)	사업(개)	예산(조원)
일자리	100	4.9	88	5.1
주거	13	12.8	9	6.9
교육	37	4.4	41	4.5
생활	18	0.15	20	0.2
참여·권리	4	0.03	21	0.03
계	182	22.3	179	16.8

주 : 국무조정실 (2020) 내부자료

표 III-2. 국무조정실 부처 제출사업 연구진 재분류(2020년 7월기준)

영역	사업		예산	
	개수	비중(%)	조원	비중(%)
일자리	74	41.3	4.2	25.0
교육·훈련	60	33.5	5.5	32.7
주거	9	5.0	6.9	41.1
참여·문화·활동	19	10.6	0.03	0.2
복지·금융·건강	17	9.5	0.2	1.2
계	179	100.0	16.8	100.0

주 : 자체 작성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한 182개 사업과 2020년 추가로 취합 중인 203개 사업을 합친 후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안)을 연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기존 제출 사업 연계를 한 후 기존 청년 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방안에 제시된 정책 사업들 중 포함 시킬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들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의 경우 교육부 등에서 관련 사업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 취합과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이지 않거나 추진 중이지만 청년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과제로 포함하였다.

2020년 7월 기준 부처 제출 사업을 이 연구의 분류틀로 재분류해 보면, 일자리 영역 중 일부가 교육·훈련분야로 조정되었고 참여 및 권리분야 중 일자리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사업들은 일자리 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부처 제출사업과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안)을 연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기존 제출 사업 연계를 한 후 기존 청년 관련 기본계획 및 대책, 방안에 제시된 정책 사업들 중 포함 시킬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들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의 경우 교육부 등에서 관련 사업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 취합과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이지 않거나 추진 중이지만 청년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규과제로 포함하였다.

먼저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제(안)은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1-3. 청년 공정 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 1-4.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및 고용안정 등 6과제로 구성되었다.

교육·훈련 분야의 정책과제(안)은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2-5.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 조성 등 5가지 과제로 구성되었다.

주거 분야의 정책과제(안)은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등 4가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어서 청년 참여·문화·활동 분야의 정책과제(안)은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 강화, 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4-4. 청년 참여 및 문화, 활동 추진 여건 조성 등 4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복지·금융·건강 분야의 정책과제(안)은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5-4. 청년 부채 경감,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등 5가지로 구성되었다.

표 III-3.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과제(안)

영역	유지과제	개선과제	신규과제	계
일자리	29	11	4	44
교육·훈련	19	7	2	28
주거	5	6	-	11
참여·문화·활동	11	1	6	18
복지·금융·건강	13	3	1	17
기반 구축	-	-	12	12
계	76	29	25	130

표 III-4.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핵심과제(안)

영역	개선과제	신규과제	핵심과제 합계
일자리	7	3	10
교육·훈련	3	2	5
주거	4	-	4
참여·문화·활동	1	3	4
복지·금융·건강	2	1	3
추진기반	-	3	3
계	17	12	29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안)에 포함된 과제는 총 128개로 전체 과제 중 개선과제는 29개, 신규과제는 23개이다. 영역별로는 일자리 영역 정책과제 42개(32.8%), 교육·훈련 28개(21.9%), 주거 11개(8.6%), 참여·문화·활동 18개(14.1%), 복지·금융·건강 17개(13.3%), 추진기반이 12개(9.4%)였다.

개선과제와 신규과제 중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안)를 선정하였다. 핵심과제는 27개였고 전체과제 중 21.1%를 차지하였다. 핵심과제 중 신규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의 경우 청년 친화기업 인증 및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가 포함되었다. 교육·훈련 분야는 고교 및 대학과 일자리 연계(가칭 청년 브릿지 사업) 체계 구축과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법률 개정이 포함되었다. 주거 분야는 신규사업이 없었고 참여·문화·활동 분야는 유스박스·유스카드 운영과 청년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 일정비율 청년 위촉,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가 포함되었다. 복지·금융·건강 분야는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가 포함되었다. 추진기반 분야는 청년센터 구축 및 확대와 청년정책 추진체계 실효성 제고, 청년정책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안) 중 코로나 19 과제와 취약계층 대상 정책과제(안)은 <표 III-5>과 같다.

표 III-5. 청년정책 기본계획 코로나 19 과제 및 취약계층 대상 정책과제(안)

구분	영역	과제명	소관부처	비고
코로나 19 과제	일자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 별도 유지	고용부	개선과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행안부	유지과제
		분야별 청년일자리 및 인턴 취업 지원	고용부, 행안부 등	유지과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개편	고용부	개선과제
		직업계고 졸업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교육부	유지과제
		청년 고용유지 확대 및 일시휴직자 지원	고용부	유지과제
	교육·훈련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 과기부 등	개선과제
		입학금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교육부	개선과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교육부	유지과제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	교육부	유지과제
	주거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및 개선	국토부, 금융위	개선과제
	참여·문화 ·활동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부	유지과제
	복지·금융 ·건강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	복지부	신규과제
		청년·대학생 햇살론	금융위	유지과제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유지과제	
취약계층 과제	일자리	위기청소년 및 청년 사회복귀 지원	여가부, 법무부	유지과제
		청년 장애인 취업 지원	고용부	유지과제
		탈북 청년 취업 지원	통일부	유지과제
		청년 장애인 및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국방부, 보훈처 등	유지과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체계화	중기부	유지과제
		청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고용부	유지과제
		청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고용부	유지과제
	교육·훈련	비진학 일반고 맞춤형 교육훈련 개선 및 확대	고용부	개선과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교육부	유지과제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사업 확대	교육부	개선과제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개선과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연계 강화	교육부	개선과제
	주거	취약청년 주거지원 확대	복지부, 여가부 등	유지과제
		지옥고 등 청년 비주택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	유지과제
	참여·문화 ·활동	-	-	-
	복지·금융 ·건강	청년기 자살예방 사업 생애주기 연계 내실화	복지부, 여가부 등	유지과제
		취약청년 자립지원	복지부, 여가부	유지과제
		기초보장수급가구 청년 자립지원	복지부	유지과제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유지과제	
청년 저소득근로자 근로장려금 확대(EITC)		국세청	유지과제	

코로나 19과제의 일자리 과제(안)에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다. 교육·훈련 과제로는 국가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다. 주거 과제에는 청년 전·월세지원이, 참여·문화·활동 과제로는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이 포함되었다. 복지·금융·건강 영역 과제로는 자산형성 지원제도개선 및 대상 확대,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이 포함되었다.

청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정책과제(안)에는 위기청소년 및 청년 사회복귀 지원, 청년 장애인, 탈북 청년,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과제가 포함되었다. 교육·훈련 영역 과제에는 비진학 일반고 맞춤형 교육훈련 개선 및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직업계고 지원 관련 사업이 포함되었다. 주거영역 과제에는 취약청년 주거 지원, 지옥고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복지·금융·건강 영역 과제에는 청년기 자살예방 사업 생애주기 연계 내실화,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초보장수급가구 청년 자립지원,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청년 저소득근로자 근로장려금 확대(EITC)가 포함되었다.

### (1)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관한 정책 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 제출한 과제와 기존에 청년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대책에 포함된 과제, 그리고 기존에 과제를 개선하거나 신규로 제안한 과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분은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고란에 신규과제, 개선과제, 부처 제출과제, 기존 계획 및 대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청년 일자리 과제는 중분류를 1-1. 존중받고 일 할 수 있는 권리보장, 1-2. 청년 일·생활 보장 및 직장환경 개선, 1-3. 청년 공정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 1-4.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은 1-1-1.청년 직장 갑질 및 성폭력 근절, 1-1-2.청년 산업안전 보장, 1-1-3. 청년 노동권의 보장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6.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존중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1-1. 존중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1-1. 청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근절	청년 대상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처벌 강화	고용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대상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감독 강화	고용부 여가부	기존 계획 및 대책
	1-1-2. 청년 산업안전 보장	청년 산업안전 사고 근절 및 처벌 강화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연구실 안전 보장 강화	과기부	기존 계획 및 대책
	1-1-3. 청년 노동권익 보호	청년 및 청소년 노동조건 보호 강화	고용부 여가부	부처 제출과제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1-1에 포함된 과제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청년정책사업으로 제출한 사례가 많지 않아 주로 청년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대책에서 해당 내용을 가져와 정책 사업을 구성하였다. 이 분야에서 기존에 부처가 청년사업으로 제출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부분에 그치고 있다.

이어서 1-2는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 환경 개선이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정책사업들은 관련 부처에서 청년 관련 사업으로 제출하지 않아 기존 계획 및 대책에서 해당 내용을 가져와 구성하였다.

청년 직장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사업들은 기존 계획이나 대책에도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신규과제와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청년 친화기업 인증 및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정보 제공 사업을 법률 개정을 기반으로 법적인 인증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에 대한 채용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에 보다 분명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개선과제로 제시한 청년 친화 기업 정보 통합 DB 구축 및 제공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과제로 제시되었다. 현재 대표적인 우수 중소기업 정보는 교육부의 선도기업(고졸 취업 우수기업), 산업자원부(우수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역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청년 친화강소기업, 도제학교 참여기업, 워라벨 실천기업) 등 다양하다.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청년 친화 기업 정보에 대한 통합 DB 구축과 함께 청년이나 기업,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친화 기업 정보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I-7.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1-2-1. 청년 일·생활 균형 보장	근로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청년 일·생활 균형 직장 문화 확산	고용부 여가부	기존 계획 및 대책
		가사, 출산, 육아 참여 권리 보장	고용부 여가부	기존 계획 및 대책
	1-2-2. 청년 직장환경 개선	청년 친화기업 인증 및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	고용부	<b>신규과제</b>
			청년 친화기업 정보통합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중기부 고용부 교육부 산자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중기부	부처 제출과제

이어서 1-3. 청년 공정 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은 1-3-1. 청년 공정채용 보장, 1-3-2. 청년 구직활동지원, 1-3-3. 취약계층 구직활동지원 등으로 세부과제를 구분하였다. 이 분야 중 청년 공정채용 보장과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은 부처 제출과제가 많지 않아 기존 계획 및 대책에서 해당 내용을 가져왔으며 청년 구직활동지원은 부처 제출 과제가 많았으나 신규나 개선과제를 제외하고 직장 체험, 박람회 개최, 취업연계 훈련프로그램 등으로 하나의 과제로 통합해 제시하였다.

표 III-8.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공정 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1-3. 청년 공정채용 및 구직활동 지원	1-3-1. 청년 공정채용 보장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고용부	부처 제출과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권익위	부처 제출과제
	1-3-2. 청년 구직활동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 별도 유지	고용부	<b>개선과제</b>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요건 개선 및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고용부	<b>개선과제</b>
	1-3-3. 취약계층 구직활동지원	청년 직장 체험 및 박람회, 청년 취업아카데미 활성화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금융위 병무청	부처 제출과제
		청년여성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 완화	여가부 과기부	부처 제출과제
		위기청소년 및 청년 사회복귀 지원	여가부 법무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장애인 취업 지원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탈북 청년 취업 지원	통일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장병 및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부처 제출과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 대상 인원을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 추진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특례 부분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납입 중지 요건을 개선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III-9.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1-4.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1-4-1.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 사업화 지원	중기부	부처 제출과제
		분야별 청년 창업 지원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체계화	중기부	기존 계획 및 대책
	1-4-2. 청년 창업 인프라 체계화	청년 창업 지원체계 연계강화 및 통합 플랫폼 마련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금융위	개선과제
		청년창업 활동공간 확대 및 청년창업 청년 상가 공급	중기부 국토부 금융위	
		소셜 벤처 육성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체계화	고용부	부처 제출과제
	1-4-3. 청년 창업 펀드 조성	대학창업펀드 조성 및 확대	교육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전용창업자금 조성 및 창업펀드 추가 조성	중기부	부처 제출과제
		분야별 청년 창업 펀드 조성 청년 콘텐츠기업 펀드 조성 및 확대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 및 수산 모태펀드 조성 및 확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금융위	부처 제출과제

1-4.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는 1-4-1. 창업 내실화 및 소상공인 지원, 1-4-2. 창업 인프라 체계화, 1-4-3. 창업 펀드 조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과제들은 주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청년 관련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관련한 과제들을 통합해 청년 창업 지원체계 연계강화 및 단계적 통합운영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는 1-5-1. 일자리 확대, 1-5-2. 일자리 질 제고로 구성된다. 일자리 확대는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비대면

및 IT 분야 등에 단기 일자리나 일경험을 확대하는 내용과 더불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질 제고는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거나 기존 청년일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10.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5-1.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행안부	부처 제출과제
		분야별 청년 일자리 및 인턴 취업 지원	고용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중기부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부처 제출과제
		일자리 창출 기업 정책자금 지원	금융위	부처 제출과제
		청년 해외취업 지원	고용부 국토부 외교부 농식품부 산림청	부처 제출과제
	1-5-2. 청년 일자리 질 제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개편	고용부	<b>개선과제</b>
		청년 고용의무제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고용부	<b>개선과제</b>
		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실화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직업계고 졸업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교육부	기존 계획 및 대책

1-6. 청년 취업자 고용 유지 지원 및 고용, 산재보험 확대는 1-6-1. 재직자의 고용 유지 지원과 1-6-2. 고용, 산재보험 단계별 지원 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재직자의 고용유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여 취업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업에 주는 것으로 코로나 19 치료제나 백신 등이 개발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여기에는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포함되며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적용 적용을 제안하였다.

표 III-11.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청년 취업자 고용 유지 및 고용안정’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1-6. 청년 취업자 고용 유지 지원 및 고용안정	1-6-1. 재직자의 고용 유지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중기부	개선과제
		청년 고용유지 확대 및 일시휴직자 지원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1-6-2. 고용, 산재보험 단계별 지원 대상 확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 고용보험 가입 추진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고용, 산재보험 단계별 지원 대상 확대는 문화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까지 현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 (2) 교육 · 훈련

청년 교육 · 훈련 과제는 중분류를 2-1. 청년 맞춤형 교육 · 훈련 확대, 2-2 .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2-3. 청년 교육 · 훈련비 부담 완화, 2-4.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2-5. 청년 맞춤형 교육 · 훈련 환경 조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2-1. 청년 맞춤형 교육 · 훈련 확대는 2-1-1. 청년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2-1-2. 청년 맞춤형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 2-1-3. 분야별 청년 전문 인력 양성 훈련 등으로 구분하였다. 2-1에 포함된 과제는 대부분 부처 제출과제로 구성되었으나, 일부 개선과제의 경우 기존 부처 제출과제를 통합 및 개선하여 제시하였다. 청년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및 군입대 청년의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였다. 청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에 대해 기존 부처 제출과제를 수정 및 보완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훈련 확대는

과기부, 고용부, 국토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수의 유사 과제들을 통합하여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확대로 제시하였다.

표 III-12.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2-1-1. 청년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대학생 진로탐색 기회 및 해외연수 확대	교육부	부처 제출과제
		군 입대 청년 자기계발 지원	국방부 병무청	부처 제출과제
	2-1-2. 청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비진학 일반고 맞춤형 교육훈련 개선 및 확대	고용부	개선과제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확대	고용부	부처 제출과제
	2-1-3.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훈련 확대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	과기부 고용부 국토부 농진청 해수부 산업부 문체부 특허청 농식품부 문화부 식약처 방통위	부처 제출과제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은 2-2-1. 학생 권한 강화 및 2-2-2. 학생 인권보장으로 구분하였다.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은 관련부처에서 청년 관련 사업으로 제출하지 않아 기존 계획 및 대책에서 관련 내용을 가져와 구성하였다. 학생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교 의사결정기구 학생 참여 보장 및 학내 민주주의 강화,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법률 개정이 과제로 포함되었다. 학생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대학 인권교육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III-13.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2-2-1. 학생 권한 강화	학교 의사결정기구 학생 참여 보장 및 학내 민주주의 강화	교육부	기존 대책 및 사업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법률 개정	교육부	<b>신규과제</b>
	2-2-2. 학생 인권보장	대학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인권위	기존 대책 및 사업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인권위	기존 대책 및 사업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는 2-3-1.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2-3-2. 청년 훈련비 부담 완화로 구분하였다. 2-3에 포함된 과제는 모두 부처 제출과제로 구성되었다. 국가장학금은 하위 소득구간 학자금 외 생활비 추가지원을 내용으로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사업의 경우 2020년 2.0%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추는 것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청년 훈련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 훈련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III-14.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2-3-1.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 과기부 농식품부	<b>개선과제</b>
		입학금 및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교육부	<b>개선과제</b>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교육부	부처 제출과제
	2-3-2. 청년 훈련비 부담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	고용부	부처 제출과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과기부	부처 제출과제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은 2-4-1. 학교 취업지원 역량 강화, 2-4-2. 현장실습제도 질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2-4에 포함된 과제는 대부분 부처 제출과제로 구성되었으나,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 사업은 기존 계획 및 대책에서 추가되었다. 학교 취업지원 역량 강화에는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 사업(개선 과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연계 강화, 기업대학 확대, 일학습병행제 강화가 포함되었다. 현장실습제도 개선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개선과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이 포함되었다.

표 III-15.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2-4-1. 학교 취업지원 역량 강화	고교 및 대학과 일자리 연계 체계 구축	교육부 고용부	신규과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연계 강화	교육부	개선과제
		기업대학 확대	고용부	부처 제출과제
		일학습병행제 강화	고용부	부처 제출과제
	2-4-2. 현장실습제도 질 개선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개선과제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부처 제출과제

2-5.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 조성은 2-5-1. 청년 교육 및 평생학습 플랫폼 확대, 2-5-2. 청년 존중 교육문화 확립으로 구분하였다. 2-5에 포함된 과제는 부처 제출과제와 기존 계획 및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 교육 및 평생학습 플랫폼 확대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 청년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내실화를 포함한다. 청년 존중 교육문화 확립에는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유급학습 휴가제 확산이 포함되었다.

표 III-16. 청년정책 교육·훈련 분야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2-5-1. 청년 교육 및 평생학습 플랫폼 확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교육부	부처 제출과제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	교육부	기존 계획 및 대책
		청년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내실화	교육부	기존 계획 및 대책
	2-5-2. 청년 존중 교육문화 확립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과기부	부처 제출과제
		유급학습휴가제 확산	고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 (3) 주거 분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주거 분야 추진과제(안)의 중분류는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3-2. 청년 주거부담 완화,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등으로 구분하였다.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는 3-1-1. 청년 주거권 보장, 3-1-2. 청년 주거교육 확대로 구분하였다.

청년 주거권 보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을 포함해 구성하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상향하는 것으로 개선 내용을 포함하였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7월 10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청년 주거교육 확대는 주거관련 정보에 관한 교육과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토부의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을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해 확대하는 개선과제로 제안하였다.

표 III-17.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3-1-1. 청년 주거권 보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부	개선과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국토부 국세청	기존 대책 및 계획
	3-1-2. 청년 주거교육 확대	주거 관련 정보·교육 및 컨설팅 제공	국토부	개선과제

3-2. 청년 주거부담 완화는 3-2-1. 청년 주거부담 완화와 3-2-2.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로 구분하였다.

청년 주거부담 완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청년가구를 분리지급하는 방안과 취약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포함해 구성하였다. 주거급여 분리는 주거급여를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분리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11월 사전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취약 청년 주거지원은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후기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자립지원관 확대, 신혼부부 청약 자격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는 국토부와 금융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 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및 보증부 대출은 2019년 기준 청년 버팀목 전세 전체 예산이 410억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은 7조 3천억 원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및 보증부월세 대출 예산을 증액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이외 청년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표 III-18.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부담 완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 용	소관 부처	비고
3-2. 청년 주거부담 완화	3-2-1. 청년 주거부담 완화	주거급여 청년가구 분리 지급	국토부	기존 계획 및 대책
		취약 청년 주거 지원 확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기존 계획 및 대책
	3-2-2.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및 개선	국토부 금융위	<b>개선과제</b>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는 3-3-1. 저렴한 주거 공급 확대와 3-3-2. 청년 주거공급 체계화로 구분하였다.

저렴한 주거공급 확대에는 공공임대주택 진입 기회 확대,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수요자맞춤형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는 1인가구, 취업준비생, 문화 예술인 등 다양한 주거욕구를 가진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은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대학교 기숙사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7월 10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과제에 포함하였다. 청년 주거공급 체계화는 청년 주거포털을 통해 정부의 주거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제공해주는 것이다.

표 III-19.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 용	소관 부처	비고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3-3-1. 저렴한 주거공급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농림부	기존 계획 및 대책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교육부 국토부	부처 제출과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토부	기존 계획 및 대책
	3-3-2. 청년 주거공급 체계화	청년 주거포털 운영	국토부	기존 계획 및 대책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하였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고시원을 리모델링하고, 비주택거주 청년의 주거이전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호수를 2021년 2,000호에서 2,500호로 확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III-20. 청년정책 주거 분야 ‘청년 주거여건 개선’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3-4-1.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옥고 등 청년 비주택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	개선과제

(4) 참여·문화·활동 분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참여·문화·활동 분야 추진 과제(안)의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강화'에 대한 과제(안)는 다음의 <표 III-19>과 같다. 이 추진과제는 4-1-1. 청년정책 참여 제도적 기반 강화와 4-1-2. 청년정책 추진 당사자 참여 활성화로 구분된다. 전자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 기반해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청년정책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하고 청년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 중 일정비율을 당사자인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청년정책관과 청년 관련 위원회 청년 위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표 III-21.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부여 강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4-1. 청년정책참여 및 권한강화	4-1-1. 청년정책 참여 제도적 기반 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관 지정 및 운영	국조실	신규과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 일정비율 청년 위촉	국조실	신규과제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	국조실	개선과제
	4-1-2. 청년정책 추진 당사자 참여 활성화	청년참여 기반 청년정책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국조실	신규과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 청년 참여 및 모니터링 실시	고용부 여가부 통일부 권익위	부처 제출과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청년 정책 추진 시에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청년정책사업 추진 시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정책사업별 모니터링단이나 점검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에 대한 과제(안)는 4-2-1. 청년 인권 및 시민

의식 함양과 4-2-2.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로 구분된다. 청년 인권 및 시민의식 함양은 청년들의 선거 및 정치 참여에 관한 체험형 교육을 비롯하여 청년 중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특히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된다.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는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에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성별, 세대간, 다른 민족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표 III-22.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4-2. 청년 사회통합 역량 증진	4-2-1. 청년 인권 및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선관위	기존 계획 및 대책
		청년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위	기존 계획 및 대책
	4-2-2.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세대 간 상호이해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여가부	기존 계획 및 대책
		성 평등 문화확산 및 의식 제고	여가부	기존 계획 및 대책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에 대한 과제(안)는 4-3-1. 청년 문화 및 교류활동 활성화와 4-3-2.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로 구분된다. 청년 문화 및 교류 지원 활성화는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이나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는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청년들이 지역 내 청년공동체인 청년 동아리나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돕는 사업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표 III-23.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4-3-1. 청년 문화 및 교류활동 활성화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문화 및 교류 사업 지원	문화부 해수부 보훈처 문화재청	부처 제출과제
	4-3-2.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행안부 문화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행안부 교육부	기존 계획 및 대책

‘4-4. 청년 참여 및 문화, 활동 추진여건 조성’에 대한 과제(안)는 4-4-1. 청년 참여 여건 조성과 4-4-2. 청년 활동 여건 조성으로 구분된다. 청년 참여 여건 조성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청년의 날 운영과 청년 연구 및 국제심포지움 형태를 취하는 청년정책포럼 운영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활동여건 조성은 유스카드와 유스박스를 신설하는 방안(김기현 외, 2020)과 생활문화센터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공간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표 III-24. 청년정책 참여·문화·활동분야 ‘청년 참여 및 문화, 활동 추진여건 조성’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명	소관 부처	비고
4-4. 청년 참여 및 문화, 활동 추진여건 조성	4-4-1. 청년 참여 여건 조성	청년의 날 운영	국조실	신규과제
		청년정책포럼 운영	국조실 지자체	기존 계획 및 대책
	4-4-2. 청년 활동 여건 조성	생활 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문화부	유스박스·유스 카드 운영 국조실 신규과제 기존 계획 및 대책
		청년 공간 조성 사업 추진	국조실 지자체	기존 계획 및 대책

(5) 복지·금융·건강 분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복지·금융·건강 분야 추진 과제(안)의 중분류는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5-4. 청년 부채경감,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는 5-1-1. 청년 재무역량 강화 및 금융교육 확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을 청년저축계좌(청년 사회첫출발 계좌)와 연계해 지원하고, 청년활력센터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III-25.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금융역량 강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5-1-1. 청년 재무역량 강화 및 금융교육 확대	재무 관련 컨설팅 및 금융교육 확대	금융위	개선과제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과제는 5-2-1. 청년을 위한 예방적 건강서비스 확대와 5-2-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로 구성하였다. 청년을 위한 예방적 건강서비스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우울증 검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군복무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은 사회복지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접근권이 미흡한 지역에서 군복무중인 청년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확대 과제로는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와 청년기 자살예방 사업의 생애주기 연계 내실화를 제안하였다.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은 고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링크사업과 더불어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심리·정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청년기 자살예방 사업 생애주기 연계 내실화는 각 부처에서 대학생, 청소년, 군인 등 대상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연계해 자살 위험이 높은 청년층의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I-26.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5-2-1. 청년 예방적 건강서비스 확대	청년 국가건강검진 확대 실시	복지부	부처 제출과제
		군복무 청년 건강증진 지원 강화	병무청 국방부 복지부	부처 제출과제, 기존 계획 및 대책
	5-2-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지원 확대	복지부	<b>개선과제</b>
		청년기 자살예방 사업 생애주기 연계 내실화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기존 계획 및 대책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은 5-3-1. 청년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와 5-3-2. 청년기 자산형성을 통한 사회출발 보장으로 구분하였다.

청년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는 시설보호 종료아동, 시설퇴소 청소년, 한부모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보장수급가구 청년의 자립지원은 청년기 자녀의 일시적 별도가구 인정을 통해 빈곤청년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청년이 가구 전체의 수급탈락을 우려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자녀가 취업하더라도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청년기 자산형성을 통한 사회출발 보장은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

(청년 사회첫출발계좌)와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산형성지원 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해 제안하였다.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은 청년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학자금·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표 III-27.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5-3-1. 청년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자립 지원	복지부 여가부	부처 제출과제, 기존 계획 및 대책
		기초보장수급가구 청년 자립지원	복지부	기존 계획 및 대책
	5-3-2. 청년기 자산형성을 통한 사회출발 보장	청년저축계좌 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 (청년 사회 첫출발계좌)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복지부 국방부	<b>신규과제</b> 부처 제출과제

신규과제인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점과 관련 쟁점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제안하였다. 올해부터 정부는 7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그 수혜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청년저축계좌의 수혜자를 보다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방안으로 3가지 대안을 마련해 각 대안의 장·단점과 소요예산을 추정하였다(표 III-27). 매칭형 선별지원(1안)과 비매칭형 보편적 청년적금 신규도입(2안, 3안)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1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표 III-28.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도입방안 대안 검토

구분	매칭형 선별지원	비매칭형 보편적 청년적금 신규도입	
	1안	2안	3안
개요	기존 청년저축계좌 확대 개편	보편적 청년적금 신규도입 +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	2안 + 자산형성지원제도 통합조정
목표 (방향)	사회 첫 출발선의 형평성 제고 및 이행기에 필요한 기초자산 보장	청년계좌 보편적 지원을 통한 정책체감도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격차 완화	청년계좌 보편적 지원을 통한 정책체감도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격차 완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15~34세, 일하는 중위 100% 청년(단계적 확대)</li> <li>- 방식 : 슬라이드 매칭</li> <li>① 소득인정액 50% : 1:3 (10+30)*36개월=1,440 (10+30)*60개월=2,400</li> <li>② 소득인정액 50~70 : 2:2 (20+20)*36개월=1,440</li> <li>③ 소득인정액 70~100 : 3:1 (30+10)*36개월=1,4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형 신설</li> <li>① 취약계층형 : 복지부 사업 대상자 확대</li> <li>② 일반형</li> <li>- 대상 : 15~34세, 중위 100%에서 모든 청년(단계적 확대)</li> <li>- 방식 : 첫 가입 축하금</li> <li>- 적립금액에 따른 우대이자 지원</li> <li>적립상한액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 신설 + 첫출발계좌로 명칭 통일</li> <li>① 취약계층형 : 복지부 저소득 청년대상 저축계좌 대상 확대</li> <li>② 일반형 : 좌동</li> <li>③ 중소기업 재직자형 :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li> </ul>
서비스	- 가입자 대상 금융교육, 주거·노동·진로·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참여자 관리(사례관리)		
추진 계획	2021년 : 중위 50% 가입기간 3년형 대상자 확대 및 5년형 신설 2023년 : 중위70% 3년형 도입 2025년 : 중위100% 3년형 도입 *'20~'25 총계 75,000명 50% : 60,000명 70% : 10,000명 100% : 5,000명	① 취약계층형 2021년 : 5,000→ 10,000명 2023년 : 10,000명 2025년 : 15,000명 *'20~'25 총계 : 60,000명 (청년빈곤층*의 약 5.75%) ② 일반형 2021년 : 중위 100% 2023년 : 중위 150% 2025년 : 중위 150% 초과	① 취약계층형 2021년 : 5,000→ 10,000명 2023년 : 10,000명 2025년 : 15,000명 *'20~'25 총계 : 60,000명 (청년빈곤층*의 약 5.75%) ② 통합조정 2021년 : 기제도 명칭 통일 2023년 : 일반형 신규도입 2025년 : 통합조정
소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형</li> <li>360억원 (2021년)</li> <li>720억원 (2022년)</li> <li>1,080억원 (2023년)</li> <li>1,188억원 (2024년)</li> <li>1,296억원 (2025년 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형</li> <li>360억원 (2021년)</li> <li>720억원 (2022년)</li> <li>1,080억원 (2023년)</li> <li>1,188억원 (2024년)</li> <li>1,296억원 (2025년 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형</li> <li>360억원 (2021년)</li> <li>720억원 (2022년)</li> <li>1,080억원 (2023년)</li> <li>1,188억원 (2024년)</li> <li>1,296억원 (2025년 이후)</li> </ul>

구분	매칭형 선별지원	비매칭형 보편적 청년적금 신규도입	
	1안	2안	3안
	※ 2020년 신설된 청년저축계좌 예산은 73.2억임. 위 예산에는 해당 예산 미포함 (기존 예산 절감)	※ 2020년 신설된 청년저축계좌 예산은 73.2억임위 예산에는 해당 예산 미포함 (기존 예산 절감) ※ 일반형은 은행과 연계 재정 투입 유동적임	※ 2020년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 예산은 73.2억임위 예산에는 해당 예산 미포함 (기존 예산 절감) ※ 일반형은 은행과 연계 재정 투입 유동적임
특성	단점 ○ 대상자 포괄성 낮음 ○ 높은 예산 부담 ○ 자격기준별 운영 비효율 *복지부 사업 2개로 통합예정 ○ 기존 사업과 형평성 고려	○ 소득 역진적 : 격차확대 ○ 미흡한 지원 : 보장 아님 ○ 금융회사 수익 창출	○ 소득 역진적 : 격차확대 ○ 미흡한 지원 : 보장 아님 ○ 금융회사 수익 창출 ○ 기존 제도 조정 필요 : 통합 수준, 방식 검토 필요
	장점 ○ 대상효율성 증진 : 욕구비례 ○ 출발선 격차 완화 효과	○ 낮은 예산 부담 ○ 기존 제도 조정 불필요 ○ 체감도 증진	○ 낮은 예산 부담 ○ 체감도 증진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방안으로 2021년부터 현행 청년저축계좌의 수혜자 수를 1만 명으로 늘리고 2025년에는 1만 5천명으로 늘려 2020년에서 2025년 동안 총 6만 명의 취약계층가구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2안의 취약계층형).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360억원(2021년), 720억 원(2022년), 1,080억 원(2023년), 1,188억 원(2024년), 1,296억 원(2025년 이후)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청년예산의 0.1 ~ 0.6% 수준이다. 정책의 효과만 인정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의 예산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정책을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까지 확장시키려고 할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기존 제도를 통해 수급 받고 있던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기존 제도는 수급자격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로 한정된 뒤 정부가 이들 집단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를 더 늘리고 싶다면 (예컨대 소득기준 중위 100%의 청년이나 노동시장 밖의 청년까지 포괄하려 한다면) 정부의 지원액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에 대한 보편적 자산지원형성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 가구의 소득수준을 불문한 공통적인 청년의 문제(예컨대 청년만의 욕구)가 존재하며 ②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방기할 경우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청년 시기 이후의 지원은 현재의 계획된 금액보다 더 증가하며 ③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해야 하며 ④ 현물이 아닌 현금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연구들은 가구주의 실업으로 인해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이후 본인의 학업 성취도나 고용의 질, 생애 소득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는 결과들을 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 청년 혹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보완해주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의 효과가 확인된다면 재정지원의 시기를 청년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정세정 외, 2019).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근로조건 부여(미취업자 가입 자격 부여) 여부이다. 기존 청년 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근로빈곤 청년의 탈빈곤을 정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인 청년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본인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기 청년의 역동성과 다양한 근로형태를 고려할 때 기존제도의 근로조건(지난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 증빙)은 다소 경직적이다.

표 III-29. 매칭형 선별지원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부여 관련 검토

구분	1-1안) 근로조건 미부여	1-2안) 근로조건 부여 유연화
개요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사회첫출발계좌' 근로조건 미부여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사회첫출발계좌' 최소근로조건 부여

구분	1-1안) 근로조건 미부여	1-2안) 근로조건 부여 유연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가구 청년의 이행기 자산형성이 목적이라면 자산형성계좌에 가입해 (근로 등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도록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것이 적절함</li> <li>특정 소득 이하로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근로 조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정책 우선순위에 둘 필요성이 있음.</li> <li>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이행기 노동의 변동성을 고려해 '3년간 근로유지'라는 경직된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포괄성 증대 (미취업청년)</li> <li>제도운영 효율성 (근로조사 미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인센티브 유지</li> <li>일하는 청년 우선권 부여</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 인센티브 저하</li> <li>일하는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하지 '못하는' 청년 배제</li> <li>근로강제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li> <li>제도운영 비효율적 (근로조사 실시 필요)</li> </ul>

따라서 현재의 제한적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처럼 저소득층 청년을 상대로 지원하되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환경을 고려하여 노동요건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기나 초단기 노동자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확장한 뒤 제도의 여러 효과들이 입증된다면 차상위가구의 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 각각 존재하는 유사한 형태의 청년통장사업들을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고려사항을 반영해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표 III-29>과 같다.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목적을 출발선 격차 완화로 상정하고, 목표를 저소득 청년의 이행기 필수지출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기반 마련으로 변경해 '자산형성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보다 명료히 하였다. 대상을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에서 100%로 상향해 보다 많은 취약청년이 자산형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구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가구 기준(생계, 주거, 세대, 연령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에서 부모와 본인의 소득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

하고, 한 가구에 속한 형제, 자매인 청년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요건을 완화하여 이행기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근로를 유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태의 청년이 자산형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조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근로조건을 유연화 하였다. 현행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가입시점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입기간인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최근 6개월 중 2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표 III-30.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방안

구분	기존 (청년저축계좌, 청년 희망키움 통장 등)	개선 방안
목적	근로빈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	출발선 격차 완화
목표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저소득 청년의 이행기 필수지출(교육, 훈련, 주거, 가족형성 등)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기반 마련
대상	가구소득 중위 50%이하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일하는 청년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
가구 범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가구 기준, 한 가구당 1인 가입	부모소득과 본인소득 반영한 가구의 형제, 자매 가입 가능
근로 조건	가입기간 동안 근로유지(가입시점 지난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 증빙) 근로장학생,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가입 제한	근로조건 미부여 혹은 유연화 (미취업자, 근로장학생, 육아휴직자, 일시 휴직자, 군복무자 가입 가능)

5-4. 청년 부채경감은 5-4-1. 청년 부채부담 완화와 5-4-2. 사회초년생 신용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청년 부채부담 완화 과제에는 저소득·저신용 청년 및 대학생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포함되었다. 사회초년생 신용

지원 과제에는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는 개인신용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 등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 재단간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신용회복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간의 채무 조정 연계를 강화하고, 학자금 채무 보유자에게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II-31.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부채경감’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5-4. 청년 부채경감	5-4-1. 청년 부채부담 완화	청년·대학생 햇살론	금융위	부처 제출과제
	5-4-2. 사회초년생 신용지원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부처 제출과제

5-5.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과제는 5-5-1.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확대와 5-5-2. 청년 생활지원으로 구성하였다.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확대 과제에는 기초보장 수급자격 판정시 빈곤 청년(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을 공제해주는 근로인센티브 확대, 청년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다.

표 III-32. 청년정책 복지·금융·건강 분야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5-5-1.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확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저소득근로자 근로장려금 확대(EITC)	국세청	기존 계획 및 대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인하	국세청	기존 계획 및 대책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 부처	비고
5-5-2. 청년 생활지원		청년형 ISA (개인연금) · 신규 가입시한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금융위	개선과제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국방부	기존 계획 및 대책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국토부	부처 제출과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발급제도 폐지	외교부	부처 제출과제

청년 생활지원 과제에는 청년형 ISA의 신규가입시한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발급제도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과 단수여권 발급제도 폐지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포함된 과제이다.

개선과제로는 청년 종합자산관리계좌의 ISA의 신규가입 시한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가 포함되었다. 현행 청년 ISA는 만15세-29세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입대상 연령을 만 34세로 확대하고,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SA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 3. 정책 추진 기반(안) 45)

이 절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정책과제(안)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법률 정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개정을 비롯하여 생애전반기 법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45)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과 변금선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청년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된 바 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19세로 청년 연령을 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 대한 연령 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나 청년정책 예산 확보와 관련된 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김기현, 2020).

표 III-33.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부처	비고
6-1.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6-1-1. 청년기본법 개정	청년기본법 법률 개정안 마련	국조실	신규과제
	6-1-2. 청년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관련 법률 제, 개정안 마련	국조실 고용부	신규과제
		아동, 청소년, 청년 생애 전반기 법률 연계	국조실 복지부 여가부	신규과제

현재 청년기본법 외에 청년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 법 체계상 기본법은 모법의 위상을 갖는데 하위법으로 볼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일반법이 아닌 한시법으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법률 전체는 2022년까지 기한을 연장한 상태이다. 15년 가까이 법률이 유지되고 법률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법 형태의 일반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기본법처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하위법 체계로 갖출지, 아니면 청년기본법 안에 하위 법령에 담을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같지에 대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연령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연령은 9세에서 24세로 19세에서 24세는 법률 상 청소년이자 청년인 상황이다. 기존에 아동 및 청소년 연령 역시

9세에서 18세 미만 중복 문제가 존재했다. 생애전반기인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정의에 관한 재정의의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체계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첫 번째 과제는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정비 및 실효성 제고이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 기능만을 갖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총괄조정기구들은 의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의결 기능도 갖는 것이 필요한지를 비롯하여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현행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I-34.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추진 체계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부처	비고
6-2. 청년정책 추진 체계화	6-1-1.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청년정책 추진체계 실효성 제고	국조실	신규과제
	6-2-2. 청년 지원 방식 체계화	청년 지원 개별 가구 인정 방식 검토	국조실	신규과제

청년정책을 체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은 청년 지원 단위가 가구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선별적 청년정책의 소득산정 단위는 ‘가구’이다. 청년을 독립된 개인으로 상정하지 않아서 일부 청년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 III-34〉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의 가구소득 판정 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각 사업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가구의 범위가 상이하여 소득에 변화가 없어도 참여자격이 제각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범주 기준을 조정하거나, 청년을 개별독립 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모든 청년을 개별 독립가구로 인정할 경우, 고소득가구 자녀의 정책수혜로 인한 소득역진성과 저소득가구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III-35. 소득기준이 있는 청년 정책사업의 가구소득 판별기준

구분	연령	혼인 상태	주민등록 세대	거주	부모	생계
교육	국가장학금	0			0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0				
일자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0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확정)		0			
주거	청년행복주택	0	0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0			
	청년 전월세 지원		0			
복지 금융 건강	청년희망키움통장	0	0	0	0	0
	청년저축계좌	0	0	0	0	0
	근로장려금			0	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0	0	0	0	0

주) 정책별 자세한 가구소득 판정기준은 〈부록〉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사업 선정기준 참고.

가구단위 소득산정으로 인해 부모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이 정책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 개선 우선순위라는 점에서 개별가구 인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주요 청년정책의 가구소득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청년 자산형성지원의 경우, 소득산정 기준을 상당히 경직된 수준으로 가구 소득을 판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가구 판정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부모와

본인의 소득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저소득 동일세대 청년가구원의 근로장려금 수령을 허용해 부모와 동일세대로 거주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근로 청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III-36. 주요 청년정책의 가구소득 판정 기준 개선(안)

구분	기 준	개 선(안)
자산형성지원	- 가입시점 가구소득 산정기준 청년저축계좌는 기초보장 개별가구 기준 적용 : 부모 + 본인 소득인정액 50% - 가구당 1인 가입원칙	- 가입시점 가구소득 산정 기준 변경 50% : 부모 혹은 본인(배우자)소득 중위 70% 이하 70% : 부모 혹은 본인(배우자)소득 중위 70% 이하 100% ; 부모 혹은 본인(배우자)소득 중위 100% 이하 - 가구당 1인 원칙 폐지: 형제, 자매 가입 허용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 부모소득 무관, 본인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수령, 거주지 부모소유시 불가 세대미분리 : 부모근로장려금 수령시 수령 불가 (1가구 1수급자)	세대미분리 저소득 일하는 청년의 근로장려금 보장 : 세대원인 청년은 부모소득 중위 70% 이하인 경우 청년자녀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수령 (소득 상한, 장려금 상한액 설정)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관련된 세 번째 과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전달체계는 물적인 기반과 인적 기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센터 구축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이다.

표 III-37.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부처	비고
6-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6-3-1. 청년센터 구축	청년센터 구축 및 확대	국조실 행안부	신규과제
	6-3-2. 청년정책 추진 전문 인력 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 전문인력 현황 점검 및 개선	국조실	신규과제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 검토	국조실	신규과제

청년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자산형성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사항에 관한 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치 방안에 관한 3가지 대안의 주요 특성과 장점, 단점, 소요예산에 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중앙부처 센터와 지자체 센터를 모두 활용하는 안을 정책과제로 도출하였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센터 모두를 기반으로 활용하되, 마치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처럼 지자체의 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처럼 대면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고, 중앙부처의 센터는 이들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및 데이터 허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센터들의 인프라를 재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재조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표 III-38. 청년센터 설치 관련 주요 검토내용

구분	주요 내용	쟁점
필요성	현재 전달체계 (고용노동부 등)는 청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청년친화성 떨어짐 청년 분화되고 다양한 욕구, 접근성을 고려한 청년센터 구축 필요	'청년'만을 위한 전달체계 비효율성 (노인, 신중년 모두 따로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목적	청년정책 당사자 접근성, 서비스 연속성 및 포괄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기능	핵심컨텐츠 (서비스, 급여 등) + 원스톱서비스 청년 활동공간 제공 '오프라인' 청년센터에 청년이 올 수 있는 콘텐츠 필요 급여와 서비스 신청 기능 (행정) : 프랑스 주거수당, 유스카드 발급 등 행정신청 처리 권한 있음	급여신청 온라인 활용 가능, 오프라인 접근성 제약 큼 (시간적, 물리적)
구축 방안	온라인 청년센터 + 오프라인 청년센터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기존 전달체계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센터 등)의 연계, 활용을 통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존센터에 '청년센터' 예산 + 사업 주는 방식	청년 관련 기존 전달체계의 조정, 통합 방안 검토 필요
조직·인력·예산	조직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등) 인력 : 인력 고용안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행정기능 담당할 권한있는 인력 파견 사례관리 인력 확보 및 역할 명확화 예산 : 중앙 - 지자체 매칭, 인건비 지원 검토	민간위탁 자격 조건 문제 인력 정규직 채용시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 고려 예산만 주고, 지자체에 맡길 경우, 비효율 발생 (직영 청년센터 사례)

2020년 신규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청년활력센터를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센터로 전환 구축, 전문인력 확보 지원 포함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39. 청년센터 설치(안) 비교

구분	기존 지자체 센터 활용	신규 지자체 센터 구축	중앙부처 센터 활용
	1안	2안	3안
개요	지자체 청년센터 및 공간 활용 전달체계 역할 수행	지자체에 신규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기존 청년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등 개편
목표	청년당사자 접근성 및 정책체감도 제고 서비스 연속성 및 포괄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사업내용	정보제공, 연계, 활동 공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토달 서비스이며 일자리, 교육, 훈련, 주거, 참여, 활동,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토달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온라인 정보제공 및 사업참여 시스템 연계		
추진방식	이미 구축된 지자체 청년센터나 청년 공간에 중앙정부 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인건비 제공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고용부 시범사업 오프라인 청년센터 1.5억 원 제공)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센터를 신규로 구축, 전문인력 확보 지원 포함(행안부 시범사업 청년활력센터 5억 원 제공)	교육부의 청년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기능 확대 개편
추진 계획	2021년 : 청년센터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중심) 2022년 :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공모 및 1단계 추진 2023년 :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공모 및 2단계 추진 2024년 :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공모 및 3단계 추진		
소요 예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설치 25.5억원 (1.5억×17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설치 85억원 (5억×17개)	별도 예산 필요 없음
특 성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센터 중복 비효율성</li> <li>○ 높은 예산 투입</li> <li>○ 오랜 기간 구축 부담</li> <li>○ 신규설치 과정에서 행정 공백, 이진비용(transfer cost) 추가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기능과 맞지 않는 개편에 따른 부작용</li> <li>○ 부처간 칸막이 해소 제약</li> <li>○ 단일센터 복수참여자로 인한 권한 부여 제약</li> </ul>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예산 부담</li> <li>○ 지자체 연계 시너지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방향 높은 적용가능성</li> <li>○ 지자체 연계 시너지 효과</li> </ul>

마지막으로 추진 기반 과제로는 부처 간에, 부처와 지자체 간에, 정부와 민간 간에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제안하였다. 세부 과제는 정부 간의 협력을 다루는 부분과 민간 연계협력을 다루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40.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중앙·지자체, 민간 연계협력 활성화’ 과제(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안)	세부과제(안)	내용	소관부처	비고
6-4. 청년정책 중앙· 지자체, 민간 연계협력 활성화	6-4-1. 청년정책 중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	총괄조정기구 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로 중앙행정 기관 및 지자체 연계협력	국조실	신규과제
	6-4-2. 민간 연계협력 활성화	청년정책 추진 청년단체 연계협력 활성화	국조실	신규과제



# ○ — 제4장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지표(안)

-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 측정의  
개발 방향과 방법론
- 2.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분석
- 3. 청년정책지수의 개발
- 4. 기존 정책의 성과지표 검토 및  
수정
- 5. 기존 정책의 목표치 검토 및 수정
- 6. 청년정책 개발지수의 한계점



##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 측정의 개발 방향과 방법론<sup>46)</sup>

### 1) 성과지표 및 분석 틀 개발의 전제조건

성과지표 개발의 목적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의 핵심과제 달성을 실질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총리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작성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체계 상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성과지표 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를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기존에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 과제들에 대한 연속성과 도출된 기본계획상의 핵심 과제들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및 전체 성과지표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연속성의 경우, 핵심과제 중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관련 정책 사업들 중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의 정책효과에 관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시행적인 정책들에 대해 국가 예산 등이 배정되어 있고,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 대비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효성은 기존 정책을 포함해 도출된 기본계획 상의 핵심과제들이 정책의

46) 이 절은 이철선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그 실익이 즉각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약 182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유는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통합 및 관리 정책을 효율화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책과제의 명목상 수행여부와 같은 지표보다는 정책 효과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선정이 중요하다.

셋째, 연계성은 기본계획상의 핵심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이고 기본방향을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두고 있는 만큼 일자리 등 5대 대분류로 구성된 핵심과제들의 연계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비전과 제1차 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들에 대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5대 대분류 핵심과제들이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연계되고, 또한 5대 대분류 과제와 21개 핵심과제들이 연계되며, 21개 핵심과제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된 182개 개별과제들의 성과지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연속성은 이번 기본계획이 제1차로 추진된다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제2차, 제3차 기본계획 도입 시 정책의 효과를 동일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툴(tool)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제1차 기본계획도 5년에 걸쳐 추진되기 때문에 매년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툴은 기존정책과의 연속성, 정책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정책과제간의 연계성, 지속적인 측정이 가능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본고에서는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고려한 정책성과 지표를 ‘청년정책지수’라 표명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 2) 성과지표 및 분석 툴 개발을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

본장에서는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 분석 툴 개발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전제 조건을 고려한 청년정책지수 개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4단계로 설정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범부처가 추진해온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 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지수의 개발조건 중 기존 정책들과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확보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청년정책지수 개발단계로 대상자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과 과제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3단계는 각 부처의 기존 성과지표들이 청년정책지수에 포함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부적합 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에서는 청년정책지수에 포함된 핵심과제들의 단계적 완수를 위한 정책입안자들의 목표치 설정검토가 포함되었다.



\* 출처 : 저자작성.

그림 IV-1.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을 위한 Framework

## 2.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분석

### 1) 기존 정책의 분류

기존 청년정책들에 대한 성과지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후, 일자리 등 5대 대분류 영역 하에 21개의 중분류 핵심과제와 더불어 정책추진체계로써 법률, 총괄기구, 전달체계, 거버넌스 4개 차원에 대한 중분류 과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부처가 추진해온 182개 정책들을 기본계획 체계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분류 체계를 부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범부처 정책 182개 외에 '2-2. 학생 권한강화 및 인권보장'과 같이 새롭게 개발하는 중분류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범부처 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중분류 정책이 소수 존재함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 2)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현황<sup>47)</sup>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정부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182개 청년정책을 현황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일자리 등 5대 분류를 포함해 6대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182개 청년정책 중 고용부(22개)와 과기부(21개), 국토부(18개), 금융위(15개), 중기부(15개)등 5개 부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6대 대분류별 정책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이 60개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자리

---

47)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안) 도출 과정에서는 최대한 부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한 가장 최근 부처 추진과제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장에서는 과제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는 최근 자료 대신 명확하게 정리가 된 2019년 기준 182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정책과제(안)와 이 장에서제시한 과제(안)에 차이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할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제를 기반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

(50개, 27.5%), 주거(21개, 11.5%), 생활(13개, 7.1%), 참여(9개, 4.9%), 추진체계(7개, 3.8%)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IV-1.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현황

구분	전체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추진체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고용부	22	12.1	7	3.8			12	6.6			2	1.1	1	0.5
공정위	2	1.1			1	0.5	1	0.5						
과기부	21	11.5	4	2.2	3	1.6	8	4.4	3	1.6	2	1.1	1	0.5
교육부	12	6.6			2	1.1	6	3.3	3	1.6	1	0.5		
보훈처	3	1.6					3	1.6						
권익위	6	3.3	4	2.2			1	0.5			1	0.5		
국방부	4	2.2	2	1.1			1	0.5	1	0.5				
국토부	18	9.9	8	4.4	2	1.1	7	3.8			1	0.5		
금융위	15	8.2	14	7.7					1	0.5				
기재부	2	1.1					2	1.1						
농림부	11	6.0	1	0.5	2	1.1	7	3.8	1	0.5				
농진청	3	1.6	1	0.5			2	1.1						
문체부	7	3.8	2	1.1	2	1.1	2	1.1	1	0.5				
방사청	1	0.5					1	0.5						
법무부	1	0.5					1	0.5						
병무청	4	2.2	1	0.5			3	1.6						
보복부	5	2.7	1	0.5			1	0.5	1	0.5			2	1.1
산림청	1	0.5					1	0.5						
산업부	8	4.4	2	1.1	2	1.1	4	2.2						
식약처	1	0.5			1	0.5								
여가부	6	3.3	1	0.5	1	0.5	3	1.6					1	0.5
외교부	1	0.5			1	0.5								
인사처	1	0.5					1	0.5						
조달청	1	0.5									1	0.5		
중기부	15	8.2	1	0.5	3	1.6	8	4.4	1	0.5	1	0.5	1	0.5
통일부	2	1.1	1	0.5			1	0.5						
해수부	4	2.2					3	1.6	1	0.5				
행안부	3	1.6			1	0.5	1	0.5					1	0.5
행복청	1	0.5					1	0.5						
환경부	1	0.5					1	0.5						
계	182	100.0	50	27.5	21	11.5	82	45.1	13	7.1	9	4.9	7	3.8

\* 출처 : 저자작성.

두 번째로 예산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2개 청년정책 중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143개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과제수가 많은 5대 부처의 예산 존재여부는 금융위가 15개 사업에 15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기부(15개중 12개, 80.0%), 국토부(18개중 14개, 77.8%), 과기부(21개중 15개, 71.4%) 고용부(22개중 15개, 68.2%)의 순으로 나타나 과제수가 가장 많은 고용부의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2020년 기준 총 25조 8,855억 원으로 파악되었는데 6대 대분류 정책 영역 중 주거 부분이 15조 2,3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5조 7,882억 원), 일자리(3조 4,480억 원), 생활(1조 4,820억 원), 참여(15억 원)의 순이었다. 예산 규모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2단계에서 언급할 청년정책 지수의 개발조건이 대상자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대상자의 욕구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주거가 아닌 일자리나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면 현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의 예산유무와 규모 (부처별)

부처명	정책수		정책분류별 예산액(141개 기준, 억원)						
	전체	예산有	전체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추진체계
고용부	22	15	9,440	4,752		4,687		2	
공정위	2	1	102			102			
과기부	21	15	26,500	1,345	20	782	24,258	10	86
교육부	12	6	17,758			420	17,338		
보훈처	3	3	1,036			1,036			
권익위	6	5	5,327	236		5,088		3	
국방부	4	3	41,933	35,503		21	6,409		
국토부	18	14	18,160	4,338	12,820	1,003			
금융위	15	15	5,998	3,148			2,850		
기재부	2	0							
농림부	11	9	3,547	12	940	1,170	1,425		
농진청	3	2	685	676		9			
문체부	7	6	1,594	894	149	551			
방사청	1	1	10			10			
법무부	1	1	9,919			9,919			
병무청	4	4	1,831	31		1,800			
보복부	5	4	98,321	1,864			96,442		15
산림청	1	1	20			20			
산업부	8	6	8,442	4,330		4,112			
식약처	1	0							
여가부	6	5	685	390		240			55
외교부	1	0							
인사처	1	1	2			2			
조달청	1	1							
중기부	15	12	5,756	120	872	2,251	2,500		13
통일부	2	2	161	146		15			
해수부	4	4	1,029			901	128		
행안부	3	3	509		39	250			220
행복청	1	1	70			70			
환경부	1	1	20			20			
계	182	141	258,855	57,782	14,840	34,480	151,350	15	389

표 IV-3. 청년기본법 재정 전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의 예산유무와 규모 (중분류별)

부처명	정책수		정책분류별 예산액(141개 기준, 억원)						
	전체	예산 有	전체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추진 체계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	1	9			9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2	2	25			25			
1-3 청년 공정채용 및 구직활동지원	32	26	5,231			5,231			
1-4 청년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25	18	6,967			6,967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20	14	17,573			17,573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및 고용안정	2	2	4,675			4,675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38	37	13,675	13,675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0	0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6	5	38,856	38,856					
2-4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5	5	5,251	5,251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1	0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1	0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2	1	96,442				96,442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9	8	52,058				52,058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1	1	2,850				2,850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강화	6	2	2						2
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0	0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3	3	13						13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0	0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3	2	483		483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6	4	13,174		13,174				
5-4 청년 부채 경감	4	1	150		150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8	3	1,033		1,033				
6-1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체계성 강화	1	0							
6-2 청년정책 추진체계화	0	0							
6-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6	6	389						389
6-4 청년정책 중앙-지방체 민간 연계협력 활성화	0	0							
계	182	141	258,855	57,782	14,840	34,480	151,330	15	389

이와 같은 우려는 기존 정책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중분류별로 예산 유무와 규모 현황을 살펴본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육 부분인 '2-1. 청년

맞춤형 교육 훈련 확대'의 경우, 과제수가 38개로 가장 많은 반면, 예산규모에서는 1조 3,675억 원으로 적다, 그러나 '2-3. 청년 교육비 부담완화'는 과제수는 6개로 적으나 예산규모가 3조 8856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일자리 영역 중 '청년 공정채용 및 구직활동지원'의 경우, 관련 과제 수는 32개로 많지만 예산규모는 5,231억 원에 불과한 반면, '3-2. 청년주거 부담완화'는 과제 수가 2개이지만 예산은 9조 6,442억 원으로 전체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청년평가지수 설정 시, 각 정책의 예산규모와 과제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영향력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성과지표 현황

우선, 기존 범부처 182개 청년과제 중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경우는 162개 (89.0%)이었으며, 성과지표에 따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158개로 파악되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중분류별 성과지표 유무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과제수가 20개로 네 번째로 많은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의 경우 성과지표가 약 5개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5-3 청년부채 경감'과 '5-4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역시 전체과제 중 약 25% 정도에서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4. 청년기본법 상 중분류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존재여부

청년정책 중분류	전체 정책수	성과지표 유		목표치 유	
		수	%	수	%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		0.0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2		0.0		
1-3 청년 공정채용 및 구직활동지원	32	32	100.0	31	96.9
1-4 청년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25	22	88.0	22	88.0

청년정책 중분류	전체 정책수	성과지표 유		목표치 유	
		수	%	수	%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20	15	75.0	14	70.0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및 고용안정	2	2	100.0	2	100.0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38	36	94.7	35	92.1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0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6	6	100.0	6	100.0
2-4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5	5	100.0	5	100.0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1	1	100.0	1	100.0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1	1	100.0	1	100.0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2	2	100.0	2	100.0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9	8	88.9	8	88.9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1		0.0		0.0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강화	6	6	100.0	6	100.0
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0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3	3	100.0	3	100.0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0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3	3	100.0	3	100.0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6	5	83.3	4	66.7
5-4 청년 부채 경감	4	3	75.0	3	75.0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8	6	75.0	6	75.0
6-1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체계성 강화	1	1	100.0	1	100.0
6-2 청년정책 추진체계화	0				
6-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6	5	83.3	5	83.3
6-4 청년정책 중앙 - 지자체,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0				
계	182	162	89.0	158	86.8

두 번째로 기존의 성과지표 유형을 살펴보면 인원 등 참여수가 총 56개로 전체의 34.6%였고, 그 다음으로 수행여부 (건수)가 27개, 참여율 20개, 만족도 19개의 순이었다. 이중 향후 지표수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만족도와 예산액이 총 26개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만족도는 수혜자가 정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가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렵다. 또한 예산액은 국회와 예산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예상치 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일관성이 낮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유형을 포함한 모든 지표의 타당성 여부를 3단계 지표 수정단계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IV-5. 청년기본법 상 중분류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존재여부

청년정책 중분류	전체	만족도	수행여부	예산액	증감율	참여수	참여율	창업률	취업률	취업자수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1-3 청년 공정책용 및 구직활동지원	32	4	2			15	3		3	4
1-4 청년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22	1	2	3	1	7	3	2	2	1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5		2	1	1	5	1		1	4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및 고용안정	2					2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36	7	4		1	14	3		7	
2-2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6	2		1	2		1			
2-4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5	3				1	1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1		1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1		1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2		1	1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8		5			3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강화	6		2				4			
4-2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4-3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3				1	1	1			
5-1 청년 금융역량 강화	3		1			2				
5-2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5-3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5		1			1	3			
5-4 청년 부채 경감	3		1	1		1				
5-5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6	1	3			2				
6-1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체계성 강화	1									1
6-2 청년정책 추진체계화										
6-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5	1	1			2				1
6-4 청년정책 중앙 - 지자체,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계	162	19	27	7	6	56	20	2	13	11

### 3. 청년정책지수의 개발

#### 1) 청년정책지수의 프레임워크

본고에서는 앞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과치 측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 정책과제들의 연속성, 정책효과의 실질성, 성과지표들의 연계성, 그리고 측정의 단계별 연속성들을 고려하여 청년정책지수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의 기본계획들의 성과측정의 경우,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만으로는 각 지표간의 연계성 확보와 제2차, 제3차 기본계획상의 성과지표들간의 단계적인 성과측정에 관한 연속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측정에 있어서 정책 수혜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요하는 실질성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과측정에서 고려해야 점은 이번 제1차 계획의 추진전략이라 할 수 있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측정도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핵심 5대 정책분야 하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성과측정의 대상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182개 개별과제들의 성과측정이며, 두 번째는 개별과제들의 성과측정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일자리 등 5대 정책 분류상의 성과지표이다. 세 번째는 5대 대분류에 설정된 과제들을 기반으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들의 성과측정이다. 즉, ‘역량증진과 권한부여’, ‘공정한 기회와 도전 보장’, ‘독립적이고 안정화된 삶의 여건 조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성과측정을 모두 고려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전체 성과측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4가지 성과측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과제의 중요도 대비 달성도를 기반으로 각 범주화된 과제와 5대 정책분류, 제1차 정책 목표, 그리고 전체정책의 측정을 연결·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지수화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성과측정에 대한 주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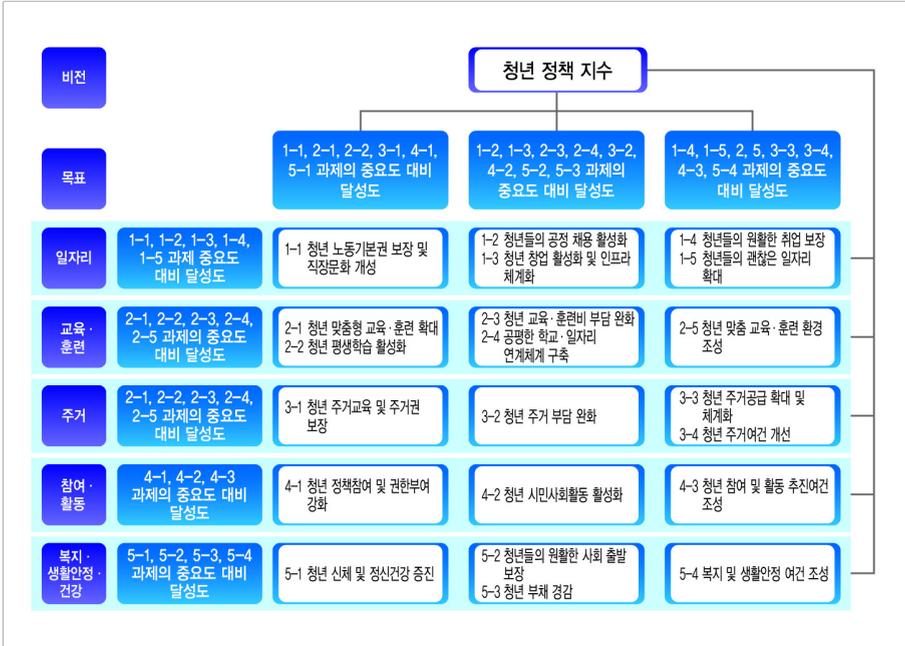


그림 IV-2. 청년정책의 성과측정 프레임워크

우선, 본고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의 정책과제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를 청년정책기본계획상의 일자리 등 5대 정책분야에 노동기본권 보장 등 21개 중분류 과제들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표 IV-6>과 같이 각 요인과 차원간의 관계를 중요도로 연결한 후 개별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치 달성비율을 점수로 환산한 후, 중요도를 반영해 통합 점수화 하는 청년정책지수의 세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제1차 청년정책의 성과를 매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결과를 점수화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가시성을 높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표 IV-6. 청년정책지수 (가안)

차원	중분류	과제명	중요도	평가 (달성도)	
청년정책지수(5대 차원중요도*차원달성도의 합, 100점 만점)				83.5	
차원 중요도			33.37	80.0	
일 자 리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요인 중요도		5.00	85.0
		개별과제78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5.00	100.0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요인 중요도		15.00	75.0
		개별과제 8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10.00	80.0
		개별과제 141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지원	5.00	70.0
	.	.	.	.	.
.	.	.	.	.	
교육	차원 중요도		36.80	83.0	
주거	차원 중요도		10.92	85.0	
참여	차원 중요도		0.47	80.0	
생활	차원 중요도		18.43	90.0	

\* 출처 : 저자작성.

표 IV-7. 청년정책지수 산정의 구성요인과 내용

구성요인	개념 및 산정
청년정책 지수	- 차원(대분류 정책) 중요도에 차원 달성도를 곱해 산출된 점수들의 합 - 청년정책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변환해 산정
차원 중요도	- 기본계획상에 포함된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 등 정책 분야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 - 5가지 정책 차원에 대해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우선 비율을 5대 차원 중요도로 적용 - 5대 차원 중요도의 합은 100%로 가정
요인 중요도	- 일자리 분야 에 속한 '1-1 청년 노동기본권 보장' 등 중분류 과제명에 대한 중요도 - 5대 차원중요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중분류과제들의 중요도 예) 주거차원의 중요도가 10%로 가정 시 '3-1 청년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확대(2%), '3-2 청년주거 부담 완화(4%),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4%),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2%)로 구성

구성요인	개념 및 산정
개별과제 중요도	- 청년기본계획 상에 포함된 각 부처의 개별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 각 요인 과제에 포함된 개별과제들의 예산 합 대비 개별과제들의 예산액 비율을 구해 산정
개별과제 달성도	- 각 차원의 소속 과제들을 성과지표로 측정 후 목표치와 비교한 달성율을 절대 점수로 환산 예) 100% 또는 100% 초과 달성 시 100점, 100% 미만은 해당 달 성율을 점수화 (달성률 80% → 80점)
요인 달성도	- 개별과제 달성도에 개별과제 중요도를 곱한 점수들의 합
차원 달성도	- 요인 달성도에 요인 중요도를 곱한 점수들의 합

## 2) 청년정책지수의 중요도 산정

청년정책지수 개발의 경우, 기존 성과측정과 가장 차별적인 점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산정이다. 기존 타 기본계획의 경우, 성과측정을 위해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만을 고려했지만 정책들을 지수화 할 경우, 각 개별과제들의 성과지표 이외에 정책수혜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중요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과측정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정책효과의 실질성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정책지수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어떤 청년정책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에 관한 기존 정부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자료가 있다하더라도 182개에 달하는 개별 개별과제의 중요도 산출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 차원 중요도 산정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5대 청년정책 차원에 대한 청년층의 차원 중요도 산출을 시도하였다. 우선 본고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내용 중 ‘정부가 청년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응답결과를 주시하였다. 그런 다음 응답결과 중 금번 청년정책기본계획 상의 5대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여가 / 문화지원 응답비율 (0.41%)과 기타 응답률 (0.11%)을 제외 하였다. 그리고 산정된 응답비율 99.48%를 100%로 가정하고 각 응답율을 재산

정한 다음, 금번 청년정책기본계획 과제체계에 해당하는 차원(대분류) 및 요인(중분류 과제)의 차원 중요도로 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제외한 기타차원들은 응답내용이 차원 중요도에 전반적으로 부합했지만 생활 차원의 경우, 각각의 중분류에 분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차원과 달리 차원 중요도를 속성중요도에 배정한 다음 합산하는 과정을 통해 산정하였다.

표 IV-8.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년정책지수의 중요도 산정

청년정책 중 우선 강화해야 할 영역			중요도 배정	
응답 내용	응답율	재산정 비율	차원 (대분류)	요인 (중분류)
자기탐색지원사업 (예: 진로, 취업, 교육, 훈련지원)	29.88	30.0	교육	2.1,2.4,2.5
고용 (취업·창업) 지원	32.89	33.1	일자리	1.2~1.6
소득지원 (생활비, 교통비 등)	12.04	12.1	생활	5.4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4.53	4.6	생활	5.2
주거지원 (임대주택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10.87	10.9	주거	전체
건강관리 (신체, 정신지원)	1.49	1.5	생활	5.1
학자금 지원	6.74	6.8	교육	2.3
신용회복지원	0.28	0.3	생활	5.3
여가 / 문화지원				
법률지원	0.31	0.3	일자리	1.1
참여보장 및 권리강화	0.47	0.5	참여	전체
기타				
전체	99.5%	100.0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재 활용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182개 정책과제의 개별 중요도를 각 과제의 정부예산액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정부 예산규모는 정책의 시급성과 수혜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책정된다는 가정을 고려해 볼 때 개별 중요도 산정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기존 정책의 현황분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과제수가 적은데 반해 예산규모가 큰 경우에는 특정 개별 중요도의 비중이

타 개별과제의 중요도에 비해 크게 과대계상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서 산정된 차원 중요도의 비율을 100%로 가정하고 그에 기준한 총예산 규모에서의 개발과제의 예산 규모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개별과제의 중요도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규모를 0으로 가정하고 산출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 정책과제 중 일부과제는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주거차원의 청년 전·월세지원 프로그램처럼 정부예산이 직접 투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경우 추후 정책예산이 배정되거나, 향후 청년정책지수 개발의 3단계에서 계획되어 있는 기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과정에서 성과지표를 예산액이 아닌 수혜 규모 금액으로 수정한다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산정된 중요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주거차원의 산정결과를 예로써 살펴보면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의 경우, 예산이 9조 6,442억 원이 소요되지만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주거정책 차원에 대한 중요도가 10.92%에 불과해 개별 중요도는 6.961%로 산정되어 예산 규모로 인한 과대계상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개별 정책과제의 예산 규모를 활용한 개별과제의 중요도 산정**

분류		중요도 (%)	예산 ('20, 억 원)
차원 중요도		10.92	151,350.0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0.000	0.0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6.961	96,442.0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0.000	0.0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0.134	1,852.0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0.009	128.0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1.155	15,997.0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매입·전세임대)	1.251	17,338.0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주택)	0.463	6,409.0

분류		중요도 (%)	예산 ('20, 억 원)
	대학생 기숙사 확충	0.103	1,425.0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0.463	6,409.0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0.180	2,500.0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0.000	0.0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0.206	2,850.0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재활용

따라서 기존 182개 범부처 청년정책과제를 청년정책 기본 프레임에 맞춘 청년 정책지수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5대 차원 중요도와 22개요인 중요도, 182개 개별 과제 중요도 산정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또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중요도, 즉 ‘역량증진과 권한 부여’,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각각 구성하는 22개요인 과제들의 중요도를 합산하여 산출해 보면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정책 목표별 중요도 산정(안)

분류		중요도(%)	
청년정책지수		100.00	
목표	역량증진과 권한강화	정책목표 1 중요도	23.53
		1-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0.30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21.68
		2-2 *청년평생학습 활성화	-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0.00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부여 강화	0.05
		5-1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1.50
	공평한 기회와 도전보장	정책목표 2 중요도	31.94
		1-2 청년들의 공정채용 활성화	0.02

분류		중요도(%)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1-3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인프라 체계화	5.02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6.77
	2-4 공평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8.32
	3-2 청년주거부담 완화	6.96
	4-2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0.00
	5-2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4.55
	5-3 청년 부채 경감	0.28
	정책목표 3 중요도	44.53
	1-4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보장	6.69
	1-5 청년들의 관심은 일자리 확대	16.87
	1-6 청년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4.49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0.00
	3-3 청년 주거 공급확대 및 체계화	3.76
	3-4 청년주거 여건 개선	0.21
	4-3 청년 참여 및 활동 추진여건 조성	0.42
5-4 복지 및 생활안정여건 조성	12.10	

주 : 1) 기존 182개 정책 중 해당 정책이 없는 경우

2) 182개 기존정책 중 1개 정책만이 포함되어 거의 미미한 중요도를 가진 경우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가 44.5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이 31.94, 그리고 ‘역량증진과 권한 부여’가 23.53으로 나타났다. 물론 청년정책의 목표별 성과측정을 위한 중요도 산정에 ‘2-2. 청년평생학습 활성화’와 ‘4-2. 청년시민활동활성화’에 대한 기존 범부처 정책이 부재하여 이번에는 0으로 중요도가 산정되었지만, 요인별 정책과제를 구성하는 개별정책과제들이 개발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배정된다면 중요도 요인 중요도와 차원 중요도의 재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5대 정책분야인 차원중요도와 이를 구성하는 요인과제 및 개별과제들이 변화되어도 지속적으로 전체정년정책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4. 기존 정책의 성과지표 검토 및 수정

본고에서는 앞서 분석한 기존 범부처의 청년정책 성과지표 현황을 기반으로 총 182개 기존 청년정책 중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20개 과제와 만족도를 지표로 삼는 19개 과제, 그리고 예산액 7개와 수혜인원 전체를 성과지표로 삼은 기타 1개 등 총 47개를 우선 성과지표의 수정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47개를 제외한 135개 과제 중 청년정책지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8개 지표를 새로운 성과지표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 지표들이 법률제정, 사업 추진일정 준수, 계획 안 수립, 정보 확대 등 단발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5년간 추진되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연속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분류의 경우, 일자리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용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창업을 위한 정책의 경우, 실제로 예산을 투자해 창업이 발생했는지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총 182개 과제 지표 중 신설된 지표는 20개, 변경된 지표는 35개, 기존 지표를 유지한 경우는 127개였으며 182개 개별과제의 성과지표에 관한 검토 내용 및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IV-11.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의 검토 결과 및 변경 상황

분류	성과지표 유형	과제 수	변경내용
	전체 과제	182	
	성과지표 유지	127	
	성과지표 신설	20	기존 성과지표 無
성과지표 변경	소계	35	지표 신설
	만족도	19	감정으로 인한 목표관리의 어려움으로 변경
	예산액	7	국회 등 협의 시 가변성이 높아 변경
	수행여부 / 건수	6	연속적 평가를 위해 1회성 성과지표는 제외
	참여인원 수	1	실질적인 정책효과 측정을 위해 인턴사업 등을 취업자 수 등으로 변경
	증감율	1	조사 대상의 변경 등으로 가변적인 인지도 등은 참여자수로 변경
	기타	1	수요 인원 전체는 성과지표 보다는 목표치에 가까워 변경

\* 출처: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 분석 후 저자 작성

## 5. 기존 정책의 목표치 검토 및 수정

총 182개 기존 범부처 청년 정책 중 새롭게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54개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는 성과지표는 존재하나 목표치 설정이 안 된 경우가 3개, 성과지표와 목표치 모두 부재해 성과지표를 신설해야 하는 경우가 20개, 그리고 성과지표를 변경해 목표치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31개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목표치 설정하기 전에 설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기존 정책 과제의 수요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유지·감소하고 있느냐에 따라 설정방향에 차등을 두었다. 기존 실적치를 고려할 때 수요자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20년 목표치 대비 5% 상향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예산 등 정책동력 확보가 가능해 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실적치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수요자가 감소·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을 목표치로 삼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치가 부재한 경우에는 담당 사업부서가 새로운 자료에 기반 하여 실적치를 수집 후 수요 증가여부에 따라 새롭게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목표치 설정방향에 따라 각 과제의 21년도 목표치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IV-12.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의 검토 결과 및 변경 방식

분류	과제 수	성과치 자료 유무	목표치 설정 방식
전체	182	-	-
목표치 유	소계	132	-
	성과지표 유지	124	유
	성과지표 변경	4	유
		4	무
목표치 무	소계	50	무
	성과지표 유지	3	무
	성과지표 신설	20	무
	성과지표 변경	27	무

\* 출처:

목표치 설정 결과, 성과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 후 담당부서에서 목표치를 수요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기본 범부처 54개 청년 과제를 제외한 128개 과제 중 실적치가 최근 유지되거나 감소되어 3개년 평균 실적치를 '21년도 목표치로 설정하기로 한 경우는 74개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실적치가 지난 3년 동안 점차 증가 추세이어서 '21년도 목표치를 '20년 목표치 보다 5% 상향조정한 경우는 모두 51개로 파악되었다.

표 IV-13.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결과

		분류	과제 수
		전체	182
목표치 유	성과지표 유지	- 목표치 5% 상승	51
		- 3개년 평균 실적치	73
	성과지표 변경	- 목표치 5% 상승	3
		- 3개년 평균 실적치	1
목표치 무	성과지표 유지	- 자료수집 후 담당부서에서 결정	4
	성과지표 신설		3
	성과지표 변경		20
	성과지표 변경		27

\* 출처:

## 6. 청년정책 개발지수의 한계점

본고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연구진이 설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프레임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이던 총 182개의 범부처 청년정책 과제들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3대 전략목표 및 일자리 등 5대 정책 분야, 22개 핵심 과제(요인 과제)를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지수를 개발하였다. 청년정책 지수는 전체 범부처 청년관련 과제들의 종합적인 성과를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욕구와 연동해 매년 100점 만 점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실질성, 그리고

지표들 간의 연계성과 측정가능성을 포함하는 측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범 부처에서 수행되어온 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수혜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정책의 중요도를 반영하였으며, 전체 정책성과를 개별과제들과 연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과제가 예산 등의 이유로 탈락하고 첨가되어 목표 및 정책 분야, 핵심 과제에 반영된 중요도가 변동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청년정책지수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단계적으로 추정되는 성과측정상의 기준에 관한 변동은 없어 연속성을 가지고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성과측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3대 전략목표 및 5대 정책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에 청년정책 지수 점수 외에 대외적으로 인정된 인증 거시지표를 별도로 책정하여 연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다. 보통 기본계획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표 IV-14>와 같이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공신력 있는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 선정된 성과지표가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하다는 통계적인 검증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선택하여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대외적인 성과지표와 부처들의 개별지표간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간주되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성과측정이 불가하다. 본 과제의 5대 정책 분야 중 대표적인 일자리의 경우, 보통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청년취업자 수 증감 등을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범부처가 청년관련 개별 정책을 목표치 대비 초과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국제 및 민간 경제 시장의 위축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실업률 상승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3대 목표 역시 5대 정책 분야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대변할 수 있는 거시적이며 공신력 있는 성과지표 선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IV-14. 거시지표 대안

성과지표		공인 성과 지표	출처
목표	역량증진과 권한강화	- 청년 성인역량 수준 - 글로벌 창의성 지수	- OECD(2019) PIAAC - 캐나다 토론토 대학 마틴 경제발전 연구소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 NEET 비율	-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 청년 자살률 - OECD 청년행복지수	- 사망원인 통계 - OECD
핵심성과	일자리	- 청년 고용률 - 청년 실업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및 청년층 부가조사
	교육-훈련	- 청년 사교육비 부담액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주거	- 신혼부부임대주택 수혜율 - 대학 기숙사 수용률	- 국토부 행정통계 - 대학교육연구소
	참여-문화 활동	- 청년국회의원 및 시의원 수	- 행정조사 결과
	복지-건강	- 청년 채무율 - 청년 빈곤율 - 청년 건강검진율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건강검진 결과분석

\* 출처 : 저자 작성

# ○———— 제5장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언

- 1. 정책 추진 측면
- 2. 정책 진단 및 평가 측면



### 1. 정책 추진 측면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비전, 목표, 과제(안)을 청년 당사자 실태분석, 환경분석, 정책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이 2월에 제정되었고 8월에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고 곧바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매우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완료되면 부처와 지자체 간담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안)를 신규과제, 개선과제, 유지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신규과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 사업을

48)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담고 있어서 해당 부처와 추진 여부를 비롯하여 사업방향에 대한 조율과 구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신규과제나 주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문회의를 통해 신규과제를 검토하였다. 신규과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과제 제안 자체가 어려운 경우와 과제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복수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복수의 과제로 제안한 신규과제는 사회 첫 출발계좌 도입과 청년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이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판단하는 제일 적절한 방안을 토대로 과제를 제안하였으나 복수의 선택이 가능한 안을 같이 제안하고 있어 부처 협의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선과제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최근 코로나19이후 청년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각종 대책들이 매월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도 중요한 대책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연구에서는 7월까지 이루어진 새로운 대책들과 관련된 논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7월 22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 개선과제로 제시했으나 이미 신규 대책에 포함되어 개선과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바뀐 정책사업의 시행시점이 2021년인 경우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부처 및 지자체 협의에 있어서 개선과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지과제는 과제 자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 없어 보이나 청년정책 사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부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정책 사업으로 제출한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 과제와 사업을 추가하였다. 특히 정책 목표 중에서 청년 역량 증진과 권한 강화와

관련된 정책과제들 중에 부처에서 제출하지 않은 과제가 많았다. 이 과제들은 다른 기본계획 및 대책을 통해 해당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성폭력 등 청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위험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청년정책의 범위에 대한 입장이 부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청년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켜 추가한 과제들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전문위원회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면 비전과 목표, 과제(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좀 더 개선된 안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제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연구진이 제안한 비전과 목표, 과제(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진이 제안한 청년정책 세부 과제들은 27개이며 해당 과제에 포함된 정책 사업 수는 200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서 모든 과제들은 점검과 함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1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들을 정해 이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과제와 개선과제에서 선정하고 매년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1년이라는

짧은 예산집행주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핵심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5년 동안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김기현 외, 2020 : 338).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를 점검하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27개의 세부 과제 중 4-1 청년 정책 참여 및 권한 강화에서 다루어지는 한 가지의 정책 사업이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당사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덴마크의 마인드랩 운영방식처럼 정책총괄기구의 실무위원회는 정부부처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와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민간네트워크,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3중 나선구조로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네트워크는 일종의 청년 참여기구의 형태를 취하고 전국의 의견수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의 참여기구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독자적으로 정책사업 추진 시에 청년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는 것도 뒤따를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광역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각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므로 기존 틀과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간에 조율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1년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추진체계와 추진사업 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전환하거나 반대로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연령 정의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으로 지자체 조례에서 달리 정의하는 문제 역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정책 진단 및 평가 측면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21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 목표에 따라 정책과제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청년기본법의 정책 진단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2021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0년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14개에 이르고 있다. 비교적 많은 청년정책사업들을 추진 중인 곳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2021년 본격적인 시행계획 평가에 앞서 2020년 1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평가를 시행하였다(국무조정실, 2020). 평가 내용은 청년참여 기반구축, 소통 및 홍보, 참여 강화와 관련된 정책 인프라에 관한 부문과 정책 집행의 적절성, 정책의지 및 효과성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관한 부문으로 총 11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평가를 위한 추진 실적 자료는 2020년 12월까지 제출할 예정이어서 현재 어떤 평가 결과를 보여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는 2021년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에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방식보다는 각 정책 사업별 성과지표를 활용해 청년정책지수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각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목표치의 난이도를 달리 정해 실제 정책 성과보다는 지표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5% 이상 목표치 상향 기준도 사업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성과지표를 균등하고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행계획 평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 (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2020). 고용행정자료 통계.
- 고정희 (2019). 서울시 세대별 1인가구의 주거특성 분석 및 정책제언. 부동산학연구, 25(2), 67 - 86.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 관계부처 합동 (2018a).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18b).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 ~ 2022).
- 관계부처 합동 (2018c).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18d).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보도자료.
- 교육부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고등교육통계편.
- 교육부 (2019.09.10).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20).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 연보.
- 국세청 (2018). 국세통계.
- 국토교통부 (2018a). 주거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2018b).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토교통부 (2020a).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  
- 주거복지로드맵 2.0-

- 국도교통부 (2020b). 2020년 주거종합계획.
-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2015).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 17647.
- 김기현, 김형주, 박성재, 민주홍, 김종성 (2015).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배진우 (2019).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향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배진우, 이민정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협동연구총서 20 - 23 - 01). 세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현, 장근영, 김지경, 하형석, 유성렬, 배진우 (201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김도형, 박승규 (2017). 울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울산광역시 2017 정책이슈리포트.
- 김문길 (2020). 청년 복지·생활안정 정책의 추진 현황 및 정책 진단. 김기현 외 (편).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pp.220 - 238). 세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2014).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 10709.
- 김성태, 권영상 (2020). 도시빈곤 주거지로서 다가구·다세대주택 옥탑방의 형성과 변화 : 관악구 봉천동 일대 청년가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1(2), 25 - 40.
- 김안나 (2014). 가구유형별 빈곤과 배제의 특성 연구. 가족과 문화, 26(1), 237 - 265.
- 김영미, 김진경, 윤민중 (2018). 일반고 청소년의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 비진학 결정의 배경과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2), 455 - 474.
- 김유선 (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이슈페이퍼, 2019(17), 1 - 34.

- 김준영, 권혜자, 최기성, 연보라, 박비곤 (2018).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분석. 진천 : 한국고용정보원.
- 김종진 (2018). 지역 청년센터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시사점. 청년센터포럼 : 지역 청년공간 운영과 협력적 발전 모색 발표자료.
- 김지경, 변금선, 이민정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연구 보고 19 - R0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 · 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윤미 (2015).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비진학 사유 및 비진학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22(12), 193 - 217.
- 김학주 (2016). 경제적 요인이 한부모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건강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2), 191 - 214.
-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2016).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 4070.
- 김현수 (2019).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희망이슈, 45, 4 - 20.
-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승, 이길제, 이윤상 (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 세종 : 국토연구원.
- 디딤씨앗통장 (2020).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s://www.adongcda.or.kr/?goPage=107>.
-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2014).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 9701.
- 박미석, 김경아, 김미영, 전지원 (2019).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79 - 97.
- 박자경, 김종진 (2017). 청년층 장애인 일자리 특성 및 취업 결정요인. 한국직업 재활학회, 27(1), 1 - 22.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7). 청년기본법안. 의안번호 : 6739.

- 박주영 (2018). 청년층 여성장애인 고용특성과 취업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28(4), 37 - 66.
- 박해식 (2020). Z세대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금융브리프, 29(11), 1 - 3.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2016). 청년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 1620.
-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배진우, 이민정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세종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추진단.
- 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현황.
- 보건복지부 (2020.01.0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도 자료.
- 신보라의의원 대표발의 (2016). 청년기본법안. 의안번호 : 24.
- 여성가족부 (2018a).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8b).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 여성가족부 (2018c).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오호영 (2017). 켄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 유진성 (2018).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KERI Insight, 18(7), 1 - 30.
- 이미선, 김민아 (2019). 포토보이스를 통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삶 들여다보기.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66, 5 - 38.
- 이시균, 정재현, 김수현, 홍현균, 정순기, 이진면 (2017).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여 전망 : 2016 - 2030 (기본연구 2017 - 05). 진천 : 한국고용정보원.
- 이용우, 양호정 (2019). 양육미혼모의 자립과정에 대한 탐색 : 자립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0, 111 - 138.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6). 청년기본법안. 의안번호 : 1778.

- 이하나, 김승희 (2019). 한부모 가족의 주거이력에 관한 연구 : 한부모 형성과정의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7(3), 67 - 8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미디어 통계수첩. 진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세정, 김형용, 송나경, 최권호, 최보라, 강예은, 최준영 (2019).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익중 (2007). 참여정부의 아동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 14(2), 282 - 313.
-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1), 297 - 322.
- 정은진, 김기현 (2018).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9(1), 117 - 143.
- 정흥준, 장희은 (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 조선일보 (2019.05.01.). 저소득층 미혼 청년 41만 가구, 평균 월세 32만원. 7평 집에 산다.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청년정책추진단 (2020). 청년의 삶 개선방안.
- 최성은 외 (2017). 통합사회복지지출의 범위와 분류에 관한 연구 및 산출. 비공개.
- 최형아, 이화영 (2013). 우리나라 '캥거루 족' 규모 및 현황. *고용이슈*, 6(2), 6 - 25.
-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 통계청 (2018a).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18b). 기업생멸행정통계.
- 통계청 (2019a). 2018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2019b).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9c).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2020a).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0b).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0c).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0d). 2020년 4월 고용동향.

통계청 (2020e).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 <http://kosis.kr>.

통계청 (2020.06.29.).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빈곤통계연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한 눈에 보는 2019 장애인통계.

한국장학재단 (2019).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청년정책 부처 자체평가 결과 및 성과지표. 내부자료.

内閣府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子ども・若者ビジョン.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9). Die Jugend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https://www.bmfsfj.de/blob/jump/141>

940/in-gemeinsamer-verantwortung-politik-fuer-mit-und-von-jugend-data.pdf.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ssachusetts: Havard University Press.

Centre for the New Economy and Society (2018).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 Centre of the New Economy and Society (insight report) World Economic Forum.

European Union (2018).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 - 202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456, 18 December

201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C:2018:456:FULL>  
OECD Employment Outlook Online. Accessed on June 6, 2020.  
<https://read.oecd-ilibrary.org/>.



## 부 록

- 1. 청년 정책과제(안)
- 2. 청년정책 성과지표 부록표
- 3. 청년 감담회 주요 논의 결과
- 4. 전문가 델파이조사 조사표  
(1차, 2차)
- 5. 소득기준 적용 청년정책사업  
선정기준



---

# 부 록

---

## 1. 청년 정책과제(안)

### 1 일자리

#### 추진과제 1-1

####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 청년 대상 직장 갑질 및 성폭력 근절

- 청년 대상 직장 갑질 근절 및 처벌 강화(고용노동부) - 개선
  - 청년 직장인 대상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
  - 공공부문 중대 갑질 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구속, 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 처벌 강화) 내용을 민간부문 확대 적용 검토(18. 7.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방청에 개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따른 개선 지도 시에도 교육과정 참여 권고
  - 감정노동자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폭언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청년 대상 직장 성희롱·성폭력 감독 강화(여성가족부) - 개선

- 사회 초년생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사전처리지원단 현장 파견,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 센터 설치 확대 운영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내 1팀으로 운영
- 성희롱·성폭력 익명 상담 전화(☎735-7544) 운영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 의무 강화

## ■ 청년 산업 안전 보장

- 청년 산업안전 사고 근절 및 처벌 강화(고용노동부) - 개선
  -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에 기업 책임 강화, 하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하도급인의 산업안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재범 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 강화
  - 산재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 위험기계 끼임 사고, 화재사고 등 산재사고 예방
  -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개선 추진
  - 화재 및 폭발사고 우려가 큰 건설 및 조건업 현장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운영(한국판 뉴딜)
  -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관련 빅데이터 구축(한국판 뉴딜)
  - 산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및 근로 감독 강화, 근로 감독관 전문성 강화
- 연구실 안전 보장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지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 및 연구자 및 대학원생 안전 보호 강화

## ■ 청년 노동권익 보호

- 청년 및 청소년 노동조건 보호 강화(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유지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및 청소년 노동조건 보호 강화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고용노동부) 및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여성가족부)를 통한 청년 및 청소년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강화
    - ※ 만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중점 지원
-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고용노동부) - 유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법 위반 사례가 많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중대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추진과제 1-2

청년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직장환경 개선

## ■ 청년 일·생활 균형 보장

- 근로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고용노동부) - 유지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2년 1인 이상 사업 적용

-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통한 지원

- ※ 중소기업 근로자 간접노무비 1인당 40만원 지원, 주당 25 - 35 시간인 경우 40만원, 15 - 25시간인 경우 60만원 한도에서 임금감소 보전금 지급, 대체인력 채용 시 대기업 30만원, 중소기업 80만원 채용지원금 지급 등

- 청년 일·생활 균형 직장 문화 확산(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유지

-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방안별 사례 발굴 및 확산

- ※ (근무혁신 10대 제안) ①정시퇴근(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강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 부터 실천하기(관계부처 합동, 2017)

- 가정친화인증제 활성화 및 기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중심 지속 확충

- ※ 정부조달 시 가점 부여, 투자 및 용자 금리 우대 등, 청년강소기업 우대 사항 참고해 인센티브 확대

- 가사, 출산, 육아 참여 권리 보장(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유지

-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임신 초기 및 출산 직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참여 확대 및 아با육아휴직 보너스제 제공

## ▣ 청년 직장환경 개선

- 청년 친화기업 인증 및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고용노동부) - 신규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인 기업은 채용정보를 의무화하고 청년 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도 도입
  - 청년친화강소기업 참여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고려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강화
  - 청년 친화기업 인증 기업의 채용정보 및 충족요건(신규 취업 청년 이직률, 근로시간, 유급휴가 사용률, 육아휴직 취득률 등)에 대해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
- 청년 친화기업 정보통합 DB 구축 및 정보 제공(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 개선
  - 중소기업부(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청년 친화강소기업, 도제학교 참여기업, 워라밸 실천기업), 교육부의 선도기업(고졸 취업 우수기업), 산업자원부(우수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역 우수기업), 등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청년 친화 기업 정보에 대한 통합 DB 구축
  - 청년이나 기업,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친화 기업 정보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플랫폼 마련, 1단계로 중소기업부의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과 고용노동부의 청년 친화강소기업 등 통합 운영
-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 유지
  -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 샤워실 등 중소기업의 편의시설 확충
  - 청년을 2인 이상 채용한 기업이나 정부 및 지자체 인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

## ■ 청년 공정 채용 보장

-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고용노동부) -유지
  - 청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없애고 능력중심으로 평가해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확대
  -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부문별 가이드라인 제공,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정공제공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 유지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피해자 구제 등 사후조치 추진

## ■ 청년 구직활동 지원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 별도 유지 (고용노동부) - 개선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을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
    - ※ 2020년 5만 명 지원 4월 기준 조기집행으로 지원 대상 인원을 10만 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하반기부터 신규 졸업자 유입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2020년 대상자 기준 예산은 일반회계 164,198백만 원으로 2012년 5만 명 대상 확대 시 246,297백만 원임.
  - 2021년부터 추진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특례 부분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

-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 요건 개선 및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고용노동부) - 개선
  - 청년 내일채움공제 일시 휴직이나 휴업, 불가피한 사유(권고사직, 임금 체불, 직장내 괴롭힘, 성폭행 등)로 그만 둔 경우 납입 중지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2년형 자산형성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 지급을 통해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원 대상 확대
  - ※ (현행) 청년 300만 원 + 기업(정부지원) 400만 원 + 정부 900만 원 = 1,600만원
  - (개편) 중위 50% 청년 200만 원 + 기업(정부지원) 500만 원 + 정부 900만 원 = 1,600만원
  - 중위 80% 청년 300만 원 + 기업(정부지원)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1,200만원
  - 중위 120% 청년 300만 원 + 기업(정부지원) 200만 원 + 정부 500만 원 = 1,000만원
  - ※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확대 시 지원 방식을 유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 직장 체험 및 박람회, 청년 취업아카데미 활성화(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 유지
  -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 및 참여수당 지원
  - 청년 해외취업 박람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장병 취업박람회, 해기사 취업박람회,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등 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추진

## ▣ 청년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

- 청년여성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 완화(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지
  - 청년 여성 대상 진로설계 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 취업 연계
  - 청년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위기청소년 및 청년 사회복귀 지원(여성가족부, 법무부) - 유지
  -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통해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 및 실무교육, 인성교육 및 창업 기회 제공
- 청년 장애인 취업 지원(고용노동부) - 유지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및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중소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 탈북 청년 취업 지원(통일부) - 유지
  -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탈북 청년 대학생이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교육 등을 통해 취업 연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탈북 대학생 및 졸업유예자, 휴학생을 비롯하여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취업집중캠프 추진
- 청년 장병 및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국방부, 보건처, 병무청) - 유지

- 국방전직교육원 등을 통해 청년 장병에게 진로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행사 등 현장 채용행사 개최, 청년장병 취업사관 학교 개최 등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5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요원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수요 확대, 소집 전 상담 심리 및 치유프로그램 이수하고 소집 후에는 복무부실 우려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과제 1-4

####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인프라 체계화

### ▣ 청년 창업 내실화 및 소상공인 지원

-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유지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재료비, 마케팅비, 멘토링이나 교육 등 창업 사업화를 바우처 카드 제공 등을 통해 지원
    - ※ 청년 예비 창업자는 만39세 이하임.
  - 창업을 한 지 3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창업 코칭, 사업비 지원, 기술지원, 후속 연계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해 초기 창업 성공률 제고
- 분야별 청년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유지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추진, 청년 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및 주민공동체 청년 두레 지원

- 연구실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험실 창업 탐색 교육을 지원하여 시장 친화적 연구 개발 도모 및 창업 성공률 제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대학에 사업예산의 75% 지원하고 대학에서 25%를 부담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교육 및 대학 내 창업 활동 지원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일부 매장을 청년창업매장으로 지정하여 제공하고 줄임쉼터 청년 푸드트럭 운영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양수산분야 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해양신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 지원
  - 창업 3년 이내에 초기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백만 원을 최장 3년 간 정착자금으로 지원
    - ※ 만 40세 미만으로 어업경력이 3년 이하인 창업자 대상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임대형 실습용온실을 제공하고 교육 지원
-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체계화(중소벤처기업부) - 유지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를 통해 업종을 바꾸길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폐업자를 대상으로 특화형이나 비생계형 업종에 대한 창업준비부터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사업으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에 대한 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 등 지급
  -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하는 성장기반 자금과 일반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9세 이하 청년을 1년 이내에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특별자금 지원
  -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 ■ 청년 창업 인프라 체계화

- 청년 창업 지원체계 연계강화 및 통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 개선
  - 중소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각 부처의 지원체계 간에 연계 강화
  -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각 부처의 지원체계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마련
  
- 청년 창업 활동공간 확대 및 청년창업 청년 상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유지
  - 공공임대주택에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 간 상가 공급
    - ※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등 공공지원형 I은 감정가의 50%, 영세 소상공인은 감정가의 80%로 공급
    - ※ 소상공인은 최근 10년 간 영역경력이 1년 이상으로 전년도 가구당 중위 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 1순위로 공급
  
- 소셜 벤처 육성 및 사회적 기업 창업 체계화 (고용노동부) - 유지
  - 전국 대학 소셜 벤처 동아리에 대한 지원, 대학 캠퍼스 투어 실시, 사회적 경제 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 확대
  - 소셜 벤처 경연대회를 활용해 수상팀에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창업 지원 사업 진입 시에 우선 선발이나 가산점 부여로 사회적 기업 창업 사업화 유도
  - 소셜 벤처 경연대회 수상팀을 대상으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성장지원 센터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우수 입주 지원, 모태 펀드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금융 지원

## ▣ 청년 창업 펀드 조성

- 대학창업펀드 조성 및 확대(교육부) -개선
  -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이 참여하는 대학 창업 기업에게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
  - 대학기술지주회사가 개별 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조직의 협조를 받아 기업을 발굴하여 최종 투자 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 조성 및 창업펀드 추가조성(중소벤처기업부) - 유지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창업 3년 미만인 청년 중소기업 대표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이내의 창업 자금을 융자(기간 6년, 2.0% 고정금리)
  -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 교육, 창업 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창업 효과 제고
  - 모태펀드를 통해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출자하여 청년창업 펀드 조성
- 분야별 청년 창업 펀드 조성(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 유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벤처투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 문화계정을 조성하고 청년 콘텐츠 기업에 투자
    - ※ 대표 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전체 임직원 중 만 39세 이하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수산모태펀드를 출자하고 민간자금과 함께 수산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수산기업에 투자

- 한국벤처투자에 사업예산을 100% 출자하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뒤 민간자금과 함께 자펀드를 조성한 후 해양수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
- 은행권에서 사회공자금과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창업기업, 기술우수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운용 지원

### 추진과제 1-5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 ▣ 청년 일자리 확대

- 디지털 및 그린뉴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 신규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공공데이터 구축, 개발, 활용을 위한 공동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및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산업 육성, 스마트 물류체계 등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 확대
  - (그린 뉴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과 스마트 그린도시, 국토 및 해양 생태계 보존, 물 관리,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사용 등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 전환, 전기차 및 수소차 등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개편 (고용노동부) - 개선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청년 추가채용 1명 당 연 900만 원 지원
  - ※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으로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인 경우이나 성장유망업종 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기업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 완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 개선

- 단기 대응 방식의 사업에서 장기 사업으로 전환,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youth guarantee)를 참고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일자리 대표 사업으로 전환

※ 현행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사업 신청 후 정부와 지자체 매칭 (5:5, 서울은 3:7, 기업부담분 20% 별도)으로 추진 중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보장제 이행과 관련하여 ①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② 조기 개입(니트 상태에서 개입하는 시점을 4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대응), ③ 노동시장 통합(채용장려금, 임금보조금 등 실업자 지원과 니트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 촉진 지원 등을 통합해 운영), ④ 유럽연합 예산의 적극적 활용(회원국의 재정투자 외에 유럽사회기금, 청년고용 이니셔티브 등 EU 재정 연계), ⑤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유럽정착조정주기제도(European Semester) 등), ⑥ 신속한 이행(2013년까지 실행계획 수립) 등 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분야별 청년일자리 및 인턴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 유지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악화 대응으로 공공부문에 비대면 및 디지털 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및 인건비 지원, 공공기관이나 각종 협회, 단체에서 청년 일경험 확대

-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인문·사회계열 비IT 전공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관련 일자리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디지털아카데미로 개편

-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공공빅데이터 관련 전문교육 실시 및 행정 및 공공기관 인턴 제공을 통한 실무경험 (4 - 6개월) 제공
- 일자리 창출 기업 정책자금 지원 (금융위원회) - 유지
  - 청년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 별도의 인증기업에 대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 청년 해외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유지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알선, 정보제공 등을 해외취업 연계 지원
  - K-Move 스쿨 운영,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해외취업아카데미 운영, 해외 취업 정보망 운영 및 해외 진출 멘토링

## ■ 청년 일자리 질 제고

- 청년 고용의무제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 개선
  -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 대해서 청년채용 의무화
    - ※ 청년 연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임.
  - 정원이 10% 이상 감축되었거나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 경력을 갖춘 사람을 50% 이상 고용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외
  -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으로 2021년까지 적용이나 유효기간을 법률 효력기간인 2023년까지 확대

- 청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실화(고용노동부) - 유지
  - 공공부문 기간제 및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전환방법, 전환방식,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에 대해 정규직 전환심의 위원회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출자기관,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2단계 전환 및 일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3단계 전환 추진
  
- 직업계고 졸업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교육부) - 유지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반 졸업자가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총 4백 만원으로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 ■ 청년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 개선
  - 납입기간 현행 5년형에서 3년형 신설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 지급 적용
    - ※ (현행) 청년 720만 원 + 기업 1,20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3,000만원  
(개선) 청년 432만 원 + 기업 720만 원 + 정부 848만 원 = 2,000만원,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차등 적용
    - ※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확대 시 지원 방식을 유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 고용유지 확대 및 일시휴직자 지원(고용노동부) - 유지
  -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재직자들의 고용 유지 지원

## ■ 고용, 산재보험 단계별 지원 대상 확대

- 전 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청년 노동자 지원 (고용노동부) - 신규 (한국판 뉴딜)
  - 청년 예술인을 비롯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단계적으로 고용 보험 가입 확대 추진
  - 청년 예술인 및 특고 노동자 중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자 노무제공 계약의 당사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누리사업)
  - 청년 예술인 및 특고 노동자 출산전후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모성보호급여)

- 청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고용노동부) - 유지
- 청년을 비롯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 재직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2

## 교육·훈련

### 추진과제 2-1

###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 ▣ 청년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 대학생 진로탐색 기회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교육부) - 유지
- 진로탐색 기회 확대: 재학 중 휴학 없이 교과 외(전공심화과정 포함) 진로 탐색 활동이 가능한 대학 내 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활동을 설계·수행하고, 학교가 이를 평가하여 인정하는 제도 확산을 위해 시범 운영학교 선정 및 운영비 등 지원
- 해외연수 기회 확대:(전문)대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내역사업별로 단기 4주에서 최장 18개월까지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턴십 경험 제공을 위한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보험료, 생활비 등을 지원(대학 글로벌 현장학습(4~6개월): 100명, 1인 450~800만원 지원(저소득층 추가 지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4~6개월): 450명, 1인 290~540만원 지원(저소득층 추가 지원), 한·미대학생연수(WEST)(6~18개월): 275명, 1인 502~2,526만원 지원(소득분위별 차등지원), 파란사다리(4~6주): 1,600명, 1인 350만원 지원)
- 군 입대 청년 자기계발 지원(국방부, 병무청) - 유지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군 복무기간 동안 학력신장, 국가기술자격 취득,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등 군 복무 중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 지원

-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병역진로상담, 복무 중 자기개발 맞춤 정보,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각 군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추진

## ■ 청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청년 취성패 방식으로 변경(고용노동부) - 개선
  -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의 형태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
  - ※ (현행) 재학생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월 11.6만 원) 지급  
(개선) 단계별 지원, 1단계 참여수당 상담 및 진단 20만 원, 2단계 직업 훈련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자부담 15-50%),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6개월 지급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교육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 유지
  - 산업별 협·단체가 청년층(구직자·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칭 해소
  - 중앙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예산 100%를 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단(산업별 협·단체 + 공동훈련센터)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청년층을 위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실시

## ■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훈련 확대

-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방송통신위원회) - 유지

- 산업별로 맞춤형 교육, 현장실습, 국내외 연수 등 실무중심형 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 인프라 구축 및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

※ (과기부) 이공계 인재양성 및 전문기술 연수, (고용부)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국토부) 물류 및 스마트시티 청년인재 양성,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해수부) 수산업 및 선박분야 청년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청년 지역전문가 및 에너지 전문가 양성, (특허청) 차세대 지식재산 청년 전문인력 양성, (농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 전문인력 양성, (방통위) 미디어분야 청년 인재 양성, (문체부) 지역문화 청년 전문인력 양성, (식약처) 의료제품 청년 전문인력 양성

## 추진과제 2-2

## 학생 권한 강화 및 인권보장

### ▣ 학생 권한 강화

- 학교 의사결정기구 학생 참여보장 및 학내 민주주의 강화(교육부) - 유지
  -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학사제도협의회 등 학교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학운영에 학생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법률 개정(교육부) - 신규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 및 실효성 확대
    - ※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함(제11조). 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제19조의2)

- ※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구성을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정, 대학평의원회의 최소 인원을 11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학생평의원 수를 전체 평의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 대학평의원회, 학사제도협의회 등 기타 학교 의사결정기구 학생 참여 확대 법률 개정

## ▣ 학생 인권보장

- 대학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국가인권위원회) - 유지
  -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 대학인권센터 주요 현안 및 사례 등 업무 공유 및 협력 지원, 대학생 동아리와 대학 내 인권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대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대학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대학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국가인권위원회) - 유지
  - 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은 학교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문화로 인해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 개선
  - 국가장학금 하위 소득구간 학자금 외 생활비 추가 지원: 국가장학금 중 소득연계형 (1유형)의 경우 8개의 소득구간 중 하위 소득구간 (기초생계, 차상위계층)부터 학자금 지원 외에 생활비 (월 20만원 한 학기 120만원) 추가로 지원
    -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예산을 유지할 경우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 가능
  -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소득 8구간 이하 및 성적 70점 이상 대학생으로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지 구분에 따른 장학금 지원 (교내시급 9,000원, 교외시급 11,150원)
  - 전공별 장학금 지원 확대 (과기부, 농식품부, 교육부): 부처별 관련전공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사업 내실화 및 확대
    -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국내·외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학과(부) 입학·재학 중인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과학장학금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250만원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기당)),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기당)) 지원
    -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국내 농업계 및 일반대학 3~4학년생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부여),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
    - ※ 인문 100년 장학금: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 중인

우수학생 1·3학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 전문 기술인재 장학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하며, I유형(300명)은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00만원 / 학기, II유형(700명)은 등록금 전액 지원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에 대하여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
- 입학금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교육부) - 개선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이자 금리를 2020년 2.0%에서 1.85%로 낮춘데 이어 단계적으로 1.70%까지 낮추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 대출금리 0.2% 감소 시 312백만 원 추가예산 소요 예상
  -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국·공립대) '18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4년제 사립대) 평균 입학금(77.3만원) 미만 대학은 '21년까지(즉각폐지 포함), 평균 입학금 이상 대학은 '22년까지 입학금 폐지
-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교육부) - 유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45,880백만원 = 6,200명 × 2학기 × 3.7백만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에게 졸업 후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38,528백만원 = 11,200명 × 2학기 × 1.72백만원): 고졸 후 재직(경력 2년 이상) 중인 대학생(전문대)에게 졸업 후 재직 유지를 조건으로 지원

## ■ 청년 훈련비 부담 완화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고용부) - 유지
  - 공무원, 고소득 자영자와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훈련비의 45 ~ 100% 및 훈련장려금(월 11.6만원) 지원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지
  - 청년층을 주로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궤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 인력양성·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 과정운영(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 핀테크, 실감형 콘텐츠(AR·VR) 및 인공지공 등 기타 신기술분야)

### 추진과제 2-4

###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 ■ 학교 취업지원 역량 강화

- 고교 및 대학과 일자리 연계(가칭 청년 브릿지사업) 체계 구축(교육부, 고용노동부) - 신규
  -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직업계고 17개교 대상)을 본 사업으로 확대하고 직업계고와 더불어 일반계고 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졸업예정자(고3) 단계부터 졸업 후 5년까지 모니터링과 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신규 청년센터 연계 검토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과 유사하게 전문대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졸업예정자부터 졸업 후 3년까지 모니터링과 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대학일자리센터와 신규 청년센터 연계 검토
  - 고교 단계는 (중앙)취업지원센터가, 대학 단계는 대학일자리센터가 허브 역할 수행 검토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연계 강화(교육부) - 개선
  -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채용근거 마련 및 배치인원 확대: 직업계고에 배치되고 있는 취업지원관을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정원 조례에 포함해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 교육부 2022년까지 1천명 확대 목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능력 배양 교육을 결합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①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 지원 ②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등 추가 지원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졸업(예정)자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1인당 총 4백만원 지원
- 기업대학 확대(고용부) - 유지
  -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학위 무관), 훈련비 지원
  - 컨소시엄형 기업대학: 다수의 중소기업,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프라 및 훈련비 지원
  - 단독기업형 기업대학: 자사 또는 타사(자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훈련비 지원
- 일학습병행제 강화(고용부) - 유지
  -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체계적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 산업과 교육의 미스매치를 제거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자격으로 인정하여 노동시장에서 학습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

- 지원대상: ▲(학습기업) 상시근로자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이상 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학습 근로자)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훈련실시 이전 1년 이내 채용된자)
- 지원내용: 일학습병행 기업에 대하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전담인력 양성교육 지원, 기업현장교사·HRD 담당자 수당 지원 등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 현장실습제도 질 개선

-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교육부) - 개선
  -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참여지원금을 확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생이 신청하고 현장실습 이수 완료 및 요건 심사를 거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금을 지급
    - ※ 현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교육훈련 수당으로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나 운영매뉴얼 개정 시에도 최저임금 70% 이상은 권고 수준이어서 실질적 보장 차원에서 지원금 상향조정
    - ※ (현행) 월 60만 원, (개편) 월 100만 원
-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교육부) - 유지
  - 현장실습학기제 표준화·체계화: 현장실습학기제의 범위 체계화, 운영 절차 및 실습지원비 기준 마련, 대학 정보공시 개선
  - 참여학생 권익보호: 학생 권익 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학생 안전망 강화,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근로 계약 체결, 국가 전문자격 취득 실습형태의 개선

- 실습기관 지원 및 발전기반 구축: 산업체 주도형 현장실습학기제 발굴·확산, 재정지원방식 개선을 통한 실습기관 부담 완화, 우수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유도, 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의회 구성 등

## 추진과제 2-5

##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 ▣ 청년 교육 및 평생학습 플랫폼 확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교육부) - 유지
  - K-MOOC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 AI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K-MOOC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으로 인정받도록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 직업교육 MOOC 구축: 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이론 관련 MOOC 강좌 개발
    - ※ 직업교육 활용 촉진: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에서 MOOC(이론) + 실습이 이루어지는 융합교육 모델 활성화하고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 MOOC 강의 학점 인정 검토,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융합직업교육 선도 대학 육성
-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교육부) - 유지
  -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의 다양한 유·무료 콘텐츠가 공유·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K-MOOC 내 다양한 유료 서비스 개발을 통해 K-MOOC 자립화 기반 마련

- 청년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내실화(교육부) - 유지
  - 청년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유연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등록제 개선, ‘(가칭) 학점당학위제(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위 모델 시범 도입, 청년친화적 대학·전문대학 학사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지속 발굴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와 연계하여 학습이력의 학점화 → 자격 취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 청년 존중 교육문화 확립

-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지
  - 정부 R&D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 출연연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등의 개선 사항을 발굴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유급학습휴가제 확산(교육부) - 유지
  - 중소기업은 연간 훈련비 한도가 낮아(전체 기업의 96.5%가 연간 500만원) 장기유급휴가 훈련 실시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6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 3 주거

### 추진과제 3-1

###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 ■ 청년 주거권 보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부) - 개선

- 2018년부터 신설된 청년 우대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을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34세로 확대한 바 있으며 가입조건(연 3천만 원 이하)과 우대금리 지원, 비과세 혜택 확대
  - ※ 우대금리 지원은 적용금리를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하고 있으며 적용 조건은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적용,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연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적용
  - ※ 가입조건 연 3천만 원 이하에서 연 3,500만 원 이하로 확대, 우대금리 2.0%p 상향(현행 1.5%p 작용 3.3%)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국토교통부, 국세청) - 유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1.5억원 이하: 100% 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예정)(관계부처합동, 2020.07.10.)

## ■ 청년 주거교육 확대

- 주거 관련 정보·교육, 컨설팅 제공(국토교통부) - 개선
  -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과 부동산 계약 관련 기초상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 컨설팅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전문적이고 정례화 된 프로그램 운영(청년활력센터에서 주거복지상담 서비스 제공)
  - 현재 국토부는 주거복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주거복지사는 주거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상담 등을 제공함. 주거에

관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년층의 주거 관련 정보제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청년 주거정보에 대해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주거 관련 상담과 부동산 계약 관련해 정보를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SNS, 챗봇, 실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 제공하며, 청년주거 작은 연구모임, 청년 주거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광주는 주거복지 지원인력 양성교육(복덕방 청년들)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 인력을 양성함

### 추진과제 3-2

### 청년 주거부담 완화

#### ▣ 청년 주거부담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청년가구 분리 지급(국토교통부) - 유지
  - 주거급여를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분리 지급하는 방안 마련('20.11 사전신청)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 보장가구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사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RIR)은 35.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김혜승 외, 2019).
- ※ LH 주택조사자료('19.12.기준) '가구원 정보데이터' 파악 결과, 주거급여 가구 중 만19~29세 이하 청년 수는 16.5만명, 가구는 12.2만 가구(청년 1인 가구 제외), 이 중 임차급여 가구 중 청년 수는 14.1만명, 10.5만가구(청년 1인 가구 제외)임(김혜승 외, 2019).

- 취약청년 주거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 유지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청소년, 한부모 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함
  -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원 물량을 '19, 240호에서 '20, 360호로 확대(보건복지부, 2020.01.06.)
  - (쉼터퇴소청소년) 청소년 쉼터 퇴소 이후에도 자립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청소년대상 종합자립 서비스(주거 및 생활지도, 자립준비 및 정보제공 연계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확대 : '19(6개소) → '20(8개소)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에게 신혼부부 지원 공공주택 신청자격 부여, 한부모가족 기금지원(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 0.5%p,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1%p)

## ▣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및 개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개선
  -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 무주택 가구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자금의 저금리 전환 지원
  - 청년(만34세 이하) 전세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 → 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 → 1억원), 지원한도(5천만 → 7천만원) 확대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주택안정 7.10대책)

## ■ 저렴한 주거공급 확대

-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개선
  - 군 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도시 지역에 필요한주택을 청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주택공급 8.34대책)
  - 토지 및 건물 일체의 지분의 일부만으로 분양을 받고 최초 지분취득 후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기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방안 추진(주택공급 8.34대책)
  - 1인가구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연계형,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세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공급(30% 이상),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 (맞춤형 청년주택) 총 4.3만호 공급, 공공임대 2.9만호(건설형 1.4만호, 매입·전세임대 1.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소형 공공임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 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  
(공유주택)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 도입,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바닥면적 330㎡ → 660㎡, 3개층 → 4개층, '20.6)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 여건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 자리를 조성함('20 4곳).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30호 내외, 공공육아 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포함) 임대(최소 5년이상)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교육부, 국토교통부) - 유지
  -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 대학교 기숙사 확충

- (기숙사 확충) '22년까지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실입주 3만명)

#### 확충

(국립대BTL) 국립대에 임대형 민자사업 BTL 기숙사 건립

(행복기숙사) 국·공유지 및 대학부지를 활용한 공공·연합기숙사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 기숙사로 운영

(기타) 사립대 재정기숙사, 지방학사 등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국토교통부) - 개선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관계부처합동, 2020.07.10.)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 공급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최대 30%)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20%, 민간택지는 10% 이상 배정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신혼맞벌이 140%)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 ■ 청년 주거공급 체계화

- 청년 주거포털 운영 (국토교통부) - 유지

- 주거정책 종합정보제공 플랫폼인 마이홈 ([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을 통해 청년주거지원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제공

## ▣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 지옥고 등 청년 비주택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국토교통부) - 개선
  -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한 주거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창문이 없는 고시원, 지하, 옥탑방, 불법 쪼개기로 인한 열악한 주거공간에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이주지원 제공
  -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 ('20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19 4천호 → '20 6천호(노후고시원 리모델링 1천호))
  - (개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공간으로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물량 확대: 2021년 예산 규모 2,000호 2,850억 원 → 2,500호 3,550억 원으로 확대

## 4

## 참여·문화·활동

## ▣ 청년 정책참여 제도적 기반 강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및 운영 (국무조정실) - 신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 점검 및 지정 요청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책임관 지위와 임무에 대한 시행령 규정 이행 점검 및 이행 요청

- ※ 청년기본법 제16조를 법적 근거로 시행령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 청년정책책임관 업무 수행을 위해 5급이나 이에 상당하는 청년정책 전문인력 지정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 일정비율 청년 위촉(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청년 법률에 근거한 청년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청년 위촉 비율 시행령 준수 점검 및 수정 요청 추진
  -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청년 관련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청년 위촉 비율 시행령 준수 점검 및 수정 요청 추진
  - ※ 청년기본법 제15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시행령에 민간위원 중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 청년 관련 위원회로 국무총리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 청년 위촉
-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국무조정실) - 개선
  - 전국 단위로 청년참여단 구성 및 운영, 정책분과 및 소주제그룹 모임 형태로 참여, 자료 수집 및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청년정책 개선과제 발굴,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역할 수행
  - 온라인 공간을 통해 청년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정책의제 발굴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청년패널단 구성 및 운영
  -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계 프로그램인 청년정책 실험실 구성 및 운영
  - 청년 참여기구의 역할 중 각 지자체의 청년 참여기구들을 의견을 모으는 원탁회의를 청년의 날을 기해 추진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과제가 청년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정해 채택해서 운영하는 참여예산제 운영 검토

## ▣ 청년정책 추진 당사자 참여 활성화

- 청년참여 기반 청년정책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국무조정실) - 신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 사업 추진 시에 청년들이 기획, 과정, 평가, 피드백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정책 참여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요청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 청년 참여 및 모니터링 실시 (고용노동부, 통일부, 권익위원회) - 유지
  - 청년고용특별위원회 청년모니터링단에서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참여 및 모니터링 추진
  - 통일이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공론장 형성
  - 청년 제안이나 민원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의 삶의 영역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 추진과제 4-2

### 청년 사회통합역량 증진

## ▣ 청년 인권 및 시민의식 함양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선거관리위원회) - 유지
  -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연수 및 대학생 청년리더스쿨 등을 통해 선거 및 정치 참여 관련 체험형 교육 실시
- 청년 인권교육 활성화 (국가인권위원회) - 유지
  - 청년 중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시민사회의 인권 교육 지원 강화
  -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청년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 세대 간 상호이해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여성가족부) - 유지
  -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성평등 문화확산 및 의식 제고(여성가족부) - 유지
  - 청년참여성평등정책추진단 ‘성평등 드리머’로 청년들이 참여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제안
  -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성평등 교육콘텐츠 개발 성평등 캠페인 실시
  -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 추진과제 4-3

### 청년 문화, 교류,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 ▣ 청년 문화 및 교류활동 활성화

-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유지
  -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가 공연 기회 제공 및 공연비 지원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유망한 청년 예술가나 기획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비나 창작지원금 지급
  - 문화예술기금 등 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및 작품제작 지원

- 청년 문화 및 교류 사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문화재청) - 유지
-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와 문화 관련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총괄로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지역 문화시설에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배치 지원

## ■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유지
- 지역 활동 및 정착을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한 청년 공동체나 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지원, 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청년 두레 사업으로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분야 청년 사업체 활동비 지원 및 멘토링, 홍보마케팅 지원
-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 (행정안전부, 교육부) - 유지
- 청년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 대학생 대상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및 봉사학습 확대

### 추진과제 4-4

### 청년 참여 및 활동 추진여건 조성

## ■ 청년 참여 여건 조성

- 청년의 날 운영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 신규
-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청년의 날 행사 운영, 지자체 행사 운영 점검
-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진행

- 청년정책포럼 운영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 신규
  - 청년의 날 행사 일환이나 특정 시기를 정해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 발표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 ▣ 청년 활동 여건 조성

- 유스박스 · 유스카드 운영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 신규
  - 청년의 날 등 특정 시기에 청년에게 전국적으로 교통, 관광, 구매, 여행 시에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할인카드인 유스 카드 제공
  - 각종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안내 팸플릿, 유스카드와 바우처, 기념품 등이 들어있는 유스 박스 제공, 국가건강검진 참여를 유스박스를 받는 조건으로 연계 검토
- ※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 사업으로 유럽청년카드 (European Youth Card) 도입

유럽청년카드는 유럽지역에서 문화 활동, 상점, 교통, 외식 및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카드로 유럽연합에서 비행식, 무형식 학습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라스무스 + (Erasmus+) 일환임. 이 카드는 ① 고전적인 카드 (classic card), ② 학생 카드 (student card, 기존 할인카드에 학생증의 기능 추가), ③ 공동브랜드 카드 (co-brand card, 기업이나 기관, 지자체가 예산이나 기금 등을 지원하고 해당 로고 등을 포함) 등 3종류임. 세 카드 모두 유럽연합카드 로고(EYCA)와 청년브랜드 정책사업명칭을 포함해야 함. 발급대상은 26세 이하에서 30세로 확대, 1년 단위로 발급되며 회비(16년 14유로)가 있으나 청소년, 청년단체나 참여기구, 학교 등에서 공동구매해 지급하고 있으며 38개 회원국 40개의 단체를 대표하는 유럽청년카드협회 (<https://www.eyca.org/>)에서 운영, 유럽전역 80,000개의 할인 혜택이 있고 유럽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 발급 가능

- 생활 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유지
  - 주민 밀착형 문화공간이 생활문화센터 확대 및 청년 참여 활성화
- 청년 공간 조성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 유지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 공간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공간 사업 정보 제공

## 5 복지·금융·건강

### 추진과제 5-1

### 청년 금융역량 강화

#### ▣ 청년 재무역량 강화 및 금융교육 확대

- 청년 재무관련 컨설팅 및 금융교육 확대 (금융위원회) - 개선
  - 청년층의 신용·재산관리, 진로 탐색 등을 위한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재무컨설팅을 제공함
  - (금융교육 지원)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금융교육 콘텐츠 마련)과 대학교 등을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청년 사회첫출발계좌' 가입자 대상 교육과 연계 (재무컨설팅) 청년활력센터에 재무컨설팅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과 금융역량 강화

## ■ 청년 예방적 건강서비스 확대

-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보건복지부) - 유지
  - 20 ~ 30대 청년세대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청년기 위험질환 등을 예방하도록 함.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에서 → '10년중 한번\*'으로 변경해, 청년이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20.하)
  - ※ '19부터 미취업 상태에 있는 20 ~ 30대 청년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회 / 2년 일반건강검진 및 20·30세 2회 우울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함
- 군복무 청년 건강증진 지원 강화(국방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 유지
  - 병역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및 군인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함

## ■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 개선
  -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특화센터 17개 시도로 운영 확대 및 고위험군 외에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신규 청년센터와 기존 지역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정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청년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등을 통한 정신질환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마인드링크는 2020년 광주에 이어 7개 시도로 확대 추진 중이며 2021년

5개 시도 추가할 예정으로 2021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광주 센터 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 1:1 매칭이며 150백만 원, 2020년 12개 시도 확대 시 예산은 1,800백만 원 추정

- 청년기 자살예방 사업 생애주기 연계 내실화(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 유지
  - 청년 자살 실태 파악 및 자살예방 사업 연계 및 협조체계 강화
  - (청소년) 청소년·청년 등 자살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DB구축 및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협조체계 강화
    -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대학 평가 인증시 자살예방체계 관련 내용 포함
    - (직장)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자살예방 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주용 자살예방 관리 가이드 마련 및 보급
    - (군인) 일선부대 지휘관, 간부 및 병영생활 저문 상담관 등에 대한 자살 예방 및 게이트키퍼 교육 강화

### 추진과제 5-3

###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 ■ 청년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

- 취약청년 자립 지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유지
  -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청소년, 한부모 청년 등 취약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 등을 지원함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함.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함('19: 5,000명 → '20: 7,800명)

(시설퇴소 청소년)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훈련기간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을 지급함

(한부모 청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양육환경 조성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급여 지원, 자녀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등 지원,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한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실시, 모·부자 병원비, 분유·기저귀 등 양육용품 지원

○ 기초보장수급가구 청년 자립지원 (보건복지부) - 유지

- 자녀의 취업으로 인한 수급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취업시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연장함

- (가구분리 인정) 30세미만 미혼자녀는 세대원이 아니어도 동일가구로 간주.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취·창업자녀의 만 18세(2002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198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동일 보장가구원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수급가구 자격산정시 가구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 청년기 자산형성을 통한 사회출발 보장

○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신규

- 청년저축계좌, 청년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을 조정, 연계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가칭 : 청년 사회첫출발계좌)로 확대, 개선함

- (디딤씨앗통장) 지원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안내 하는 등 사업 연계방안을 마련함

- (청년 희망키움통장) 기초보장생활제도 생계급여 가구의 근로빈곤 청년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이나, 장기적으로 계좌유지 조건, 적립금 수령 기준을 청년저축계좌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함
-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가입 시점 기준 지난 6개월 간 최소 2개월 이상 소득 있는 경우(근로장학생, 군복무자 가입 허용)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유지조건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 군복무, 일시휴직 등인 경우 유예 허용. 3년형 외에 5년형을 신설하고 소득 100%까지 확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국방부) - 유지
  - 청년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학자금·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확대 개편함
  - 병사들의 목돈 마련 관련 은행 적금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 병사 개인당 적금 월납입한도 최대 40만원, 저축 우대금리(5% 이상)에 더해 비과세(월40만원의 범위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 추진과제 5-4

#### 청년 부채 경감

### ■ 청년 부채부담 완화

- 청년·대학생 햇살론(금융위원회) - 유지
  - 저소득·저신용 청년 및 대학생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과다채무 예방을 위해 저금리 대출 운영. 학업, 의료비, 주거비 등의 자금용도를 증빙한 경우, 증빙된 소요자금 내에서 최대 1,200만원(연간 600만원) 대출, 대상별 이자 혜택(대학생·미취업

청년 4.0%, 사회초년생 4.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청년층은 3.6%)

## ■ 사회초년생 신용지원

-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원회) - 유지
  - 개인신용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 등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간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함
  -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금융이력 부족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사회보험료, 통신비 납부실적 등의 비금융정보를 한정적으로 반영)를 개선(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의 반영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신용점수 불이익 완화
  -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 - 장학재단간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고, 학자금 채무 보유자에게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함. 채무자가 원할 경우, 채무조정 연계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 온라인교육 이수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일부 감면

추진과제 5-5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 ■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확대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보건복지부) - 유지
  - 근로능력 있는 청년빈곤층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인센티브 제공
  - (근로소득공제) 일하는 청년층(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함('17년 11월부터 시행)

(대학생 등록금지출 공제)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제) 본인 또는 가구원 근로소득에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한 등록금을 가구 근로소득에서 공제 처리('19년 1월부터 시행)

- 청년 저소득근로자 근로장려금 확대 (EITC) (국세청) - 유지
  - 저소득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30세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포함함
  - 근로소득이 단독(2천만원미만)~맞벌이(3,6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가구당 2억원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맞벌이 300만원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인하 (국세청) - 유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함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 ■ 청년 생활지원

- 청년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가입시한 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개선
  - 청년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상한연령을 현행 만29세에서 만34세로 높이고,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주식투자를 투자자산에 포함하는 한편 비과세 혜택 강화
  - ※ 2016년부터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 청년 ISA는 만기 3년 혹은 5년 가입,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부여 중

-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국방부) - 유지
  - 예비군 훈련이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19 시행)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 유지
  -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함
  - 버스 정류장, 전철역까지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 할인해주는 사업 시행 (마일리지 1회 교통비에 따라 최대 250원 ~ 450원 적립 → 월 1 ~ 2만원 적립)
  -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 (100원 ~ 200원) 부여함
  - ※ 1회 교통비 당 최대 마일리지 적립:
    - △ 2,000원 이하 : 일반 250원 vs 저소득 청년 350원
    - △ 2,000~3,000원 : 일반 350원 vs 저소득 청년 500원
    - △ 3,000원 초과 : 일반 450원 vs 저소득 청년 650원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발급제도 폐지 (외교부) - 유지
  -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이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18세이상 37세 이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동일하게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을 발급하도록 여권법령 개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개정 추진)

## 추진과제 6-1

##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 ▣ 청년기본법 개정

- 청년기본법 법률 개정안 마련 (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 연령 정의를 비롯한 청년기본법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청년 하한연령 개정 필요성 제기

### ▣ 청년 관련 법률 체계성 강화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관련 법률 제, 개정안 마련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 신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률 적용기간 2022년 (고용의무제는 2021년) 마련을 앞두고 법률 개정안 마련
  - 청년기본법 하위 법률체계 구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법률 제, 개정안 마련
- 아동, 청소년, 청년 생애 전반기 법률 연계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신규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생애 전반기 법률 연령 정의를 포함한 중복 문제 점검 및 개정 필요성 검토

■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 청년정책 추진체계 실효성 제고 (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정책조정위와 실무위, 전문위의 구성 및 운영
  - 각 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로 정책 실효성 제고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③항과 같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항 신설 검토(시행령 개정). 여성가족부에서는 시행령에 근거해 5명의 전문위원 운영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청년정책 전달체계 설치 근거 명확화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에 따른 청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근거해 청년정책 전달체계 설치 및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마련(법 개정)

국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법안(의안번호 2013684) 제26조(청년시설의 지원 및 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체계 구축 (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석평가 추진 및 평가체계(평가지표) 구축

- 각 부처 및 광역지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시행
  - ※ 기본계획 수립 전 2020년 14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추진계획 민관 합동평가단 평가 시행 및 결과 발표('21. 3)

## ▣ 청년정책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식 체계화

- 청년정책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정책 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 ※ 청소년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와 제54조(기금의 조성),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을 참고하여 청년정책 기금설치 및 조성 방안 마련 검토(법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 지원 개별 가구 인정 방식 검토 (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 정책 사업 청년 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 후 청년 개별 가구 인정 확대 추진

## ■ 청년센터 구축

- 청년센터 구축 및 확대(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 신규
  -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청년활력센터를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센터로 전환 구축, 전문인력 확보 지원 포함해 시범 운영 후 확대
    - ※ 행정안전부 2020년 신규로 청년활력센터 시범 운영 증으로 지자체에 센터 건축 및 운영으로 5억 원 지급,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전북 부안군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021년 17개 시도별 1개씩 지원할 경우 예산은 80억 원 규모임.
  -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 중 공모를 통해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 시범 운영 후 신규 설치 병행 운영 검토
  - 센터의 기능과 역할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사업 정보 제공(상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상시), 노무 및 주거, 금융교육 및 상담(주1회 등), 신규사업인 유스박스 및 유스카드 제공 등

## ■ 청년정책 추진 전문인력 양성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 전문인력 현황 점검 및 개선(국무조정실) - 신규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전문인력 현황 점검조사 실시
  - 청년정책 전문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 검토(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정책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및 추진 여부 결정

### ■ 청년정책 중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

- 총괄조정기구 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연계협력 (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등 총괄조정기구의 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로 부처간, 부처와 지자체간, 지자체간 연계 협력 강화

### ■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 청년정책 추진 청년단체 연계협력 활성화 (국무조정실) - 신규
- 청년단체의 청년정책 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

## 2. 청년정책 성과지표 부록표

부록표 2. 청년정책지수의 중요도 산정

구분	과제 번호	과제명	중요도	
전체 중요도(%)			100.00	
차원 중요도			33.37	
일 자리	요인 중요도		0.30	
	1-1 청년 노동기본권 보장	78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0.30	
	요인 중요도		0.02	
	1-2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8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0.00	
		141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0.02	
	요인 중요도		5.02	
	1-3 청년 공정 채용 및 구직활동지원	37	탈북 청년 취업·교육지원	0.00
		39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0.02
		40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0.07
		47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0.01
		68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0.03
		70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0.01
		82	해외취업지원	0.58
		85	중소기업탐방	0.03
		86	청년취업아카데미	0.18
		87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0.01
		89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공	0.73
		96	신직업 Making Lab	0.18
		99	국민취업지원제도	2.66
	100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내일이룸학교)	0.03	
102	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 지원	0.05		
118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0.00		
119	항공정비인력 양성채용	0.00		
120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0.00		
121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창출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 및 해외인프라 청년인턴 파견)	0.02		

구분	과제 번호	과제명	중요도	
	124	수산식품 청년 마케터 육성	0.00	
	125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마취업 청년해기인력 취업지원 강화)	0.00	
	126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0.00	
	138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0.01	
	140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운영	0.01	
	15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0.00	
	160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0.00	
	166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0.15	
	167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호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0.00	
	170	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	0.01	
	173	산업기능요원채용박람회	0.00	
	17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0.21	
	180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0.00	
	요인 중요도			6.69
	1-4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인프라 체계화	3	대학창업펀드 조성	0.14
		16	연구개발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0.54
		17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0.10
		51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0.24
53		청년두레 (관광두레 청년주민사업체) 지원	0.10	
56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0.43	
58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0.01	
59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0.00	
60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0.01	
6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0.18	
63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0.36	
110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0.00	
122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활성화	0.00	
128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0.06	
129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꾸쳐 지원	0.18	
130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1.07		
131	청년 창업가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대상 사업화 지원	1.00		
132	청년전용창업자금	1.54		

구분	과제 번호	과제명	중요도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36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0.15	
	137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0.00	
	139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0.58	
	145	대규모 창업혁신공간 조성	0.00	
	146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	0.00	
	147	신규 사업자에 대한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0.00	
	148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캠프)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0.00	
	요인 중요도			16.87
	1	고용증대세제(청년 고용시 공제액 우대)	0.00	
	2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0.00	
	36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0.99	
	44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4.88	
	46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0.02	
	48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0.06	
	49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0.02	
	50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0.01	
	5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0.79	
	57	농업법인 취업지원	0.01	
	61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0.02	
	76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청년사회서비스지원사업)	0.02	
	79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9.52	
	8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0.00	
	101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여성일자리 창출	0.00	
	115	도시재생사업 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유도	0.51	
	135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0.02	
	149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0.00	
	150	은행권 일자리펀드 운용 지원	0.00	
	171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0.00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요인 중요도			4.49
91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1.24		
13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25		
교육	차원 중요도			36.80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요인 중요도		21.68
	10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0.25	

구분	과제 번호	과제명	중요도
	14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0.01
	15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4.14
	19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0.28
	20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0.11
	21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0.12
	22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0.36
	23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0.79
	24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0.05
	25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0.54
	2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0.42
	27	SW중심대학	1.27
	28	SW마에스트로 과정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최고급 SW인재 양성)	0.14
	29	K-Shield 주니어	0.03
	30	차세대보안리더 (BoB)	0.06
	31	정보보호특성화대학	0.03
	32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0.08
	33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0.09
	34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	0.21
	41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0.23
	64	청년귀농 장기교육	0.02
	6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1.40
	66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	0.19
	67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0.05
	71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0.62
	77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0.01
	92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6.84
	93	일반고 특화과정 (일반고 고졸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도입)	1.07
	94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술기능인력 양성	1.91
	97	미래유망산업맞춤형훈련	0.00
	98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	0.20
	116	물류전문인력 (고교, 대학) 양성지원	0.01
	117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0.03

구분	과제 번호	과제명	중요도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172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포함) 추진	0.02		
	176	대졸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 제공	0.01		
	177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0.03		
	178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글로벌농업인재 양성)	0.03		
	179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0.05		
	요인 중요도			6.77	
	5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0.00		
	6	국가장학금 확대	6.19		
	7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0.32		
	9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0.16		
	1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0.09		
	55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0.01		
	요인 중요도			8.32	
	2-4 원활한 학교 - 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8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0.11	
		1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0.15	
		12	고교취업연계장려금	1.75	
		13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0.51	
		90	기업의 현장훈련과 학교·공동훈련센터의 교육을 병행하여 신규 입직자의 역량 강화	5.79	
	2-5 청년 맞춤 교육훈련 환경 조성	요인 중요도			0.00
35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0.00		
차원 중요도			10.92		
주거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요인 중요도			0.00
		1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0.00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요인 중요도			6.96
		113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6.96	
		153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0.00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요인 중요도			3.76
		4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0.13	
		54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0.01	
		106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1.15	
		107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매입·전세임대)	1.25	
108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주택)	0.46			

구분	과제 번호	과제명	중요도	
	109	대학생 기숙사 확충	0.10	
	111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0.46	
	112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0.18	
	181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0.00	
	3-4	요인 중요도	0.21	
청년 주거여건 개선	123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0.21	
	차원 중요도		0.47	
참여	요인중요도		0.05	
	4-1 청년 정책참여 및 관련부여 강화	38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0.00
		161	군·경 장병 대상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0.05
		162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추진	0.00
		163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참여 프로그램	0.00
		164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0.00
		165	2030세대 관련 민원 분석	0.00
	요인 중요도		0.42	
	4-3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4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0.11
		127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0.07
		168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0.24
	차원 중요도		18.43	
	생활	요인 중요도		1.50
5-1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72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실시	1.38
		73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지원 확대	0.00
		174	병역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0.12
		요인 중요도		4.55
5-2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42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0.00
		74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0.10
		80	청년내일채움공제	4.43
		103	후기청소년 (19 ~ 24세) 자립 지원	0.01
		10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0.02
	182	청년저축계좌 신설	0.00	
요인 중요도		0.28		
5-3 청년 부채 경감	152	청년 신용회복 지원	0.00	
	156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0.00	

구분	과제 번호	과제명	중요도
5-4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158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0.28
	159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0.00
	요인 중요도		12.10
	43	군인연금 미수해 전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 (협의중)	0.00
	69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11.01
	75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1.09
	143	청년 소비자층 보호정책	0.00
	144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0.00
	154	청년형 ISA 운영	0.00
	155	청년·대학생 금융현장소통	0.00
	157	청년 금융교육 지원	0.00

부록표 3.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개별 성과지표 검토 및 결과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변경 지표	
일 자리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78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신설	관련 노동쟁의 해결 수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8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설	강소기업 연간 선정 수
		141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신설	참여기업 수
	1-3 청년공정채용 및 구직활동지원	37	탈북 청년 취업·교육지원	진로탐색 프로그램 수료인원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39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자격증 취득자 수, 대학진학생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40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진로도움 프로그램 수혜자 수 : [(교육인원 + 상담인원) / 목표치 × 100]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47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양성인원 수 : 양성인원 수 합산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68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기업탐방 참여 청년 수 : 권역별 기업탐방 참여 기업수를 합산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70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지원인력대상설문조사를 통한 지원인력의 직무 만족도	만족도	변경	신규 석·박사 지원 수
		82	해외취업지원	정부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명)수	취업자수	유지	
		85	중소기업탐방	참여자 설문을 통한 일경험사업 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변경	참여자 수
		86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 : 취업자 수 / 수료자 수	취업률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87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89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공	지원인원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96	신직업 Making Lab	취업률	취업률	유지	
	99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을 제정 : 법률 제정 여부	수행여부/건수	변경	2차 년도 이후 참여율
	100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내일이룸학교)	지원인원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02	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 지원	멘토링 (멘티) 만족도 (5점 만점)	만족도	변경	새일여성센터 인턴 연계실적
	118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기중전문과정 훈련생 선발(명) : 훈련기관의 기존 전문 과정 선발 인원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19	항공정비인력 양성채용	先선발 後교육 훈련생 선발(명)인원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20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지원 인원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21	해외건설청년일자리창출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 및 해외인프라 청년인턴 파견)	지원 인원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변경	취업자 수
	124	수산식품 청년 마케터 육성	참여자 고용창출 수 : (직접고용)인건비 지출 / 고용지출액 : 1.95억원 / 0.4604억원 (G,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2명 (간접고용) 관리비 등 지출 / 고용지출 : 1.05 / 2.09 (01-004, 수산물) = 0.5명	취업자 수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125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미취업 청년해기인력 취업지원 강화)	청년해기인력 취업률 (%) : (청년해기인력 취업인원 / 200명) * 100	취업률	유지	
	126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수강생 만족도 =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 × 사업별 가중치)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138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채용연계 성사건수 또는 채용연계 인원수	취업자 수	유지	
	140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운영	지원인원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5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참여인원 : 박람회 등록자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60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수행건 수	수행건수/여부	유지	
	166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서비스 지원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수 (개)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한 일자리 수	취업자 수	유지	
	167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v-net가입 (취업상담 · 알선 등) : '20년도 v-net 회원 가입 인원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70	의료제품 전문 인력 양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 비율 (%) : 수료자 비율 (%) = (수료시험 합격자 수 / 교육 선발인원 수)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 반영)	유지	
	173	산업기능요원채용박람회	산업기능요원 신산업분야 편입률 : (신산업분야 편입인원 / 총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 × 100	취업률	유지	
	17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사회 진출 지원	수요인원		변경	참여인원 수
	180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해외산림인턴선발실적 (명) 인원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형	신설 / 변경 지표
1-4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인프라 체계화	3	대학창업펀드 조성	대학 창업강좌 만족도 (점) : 대학 창업강좌 수강생 대상 자기기업식 설문 조사 (7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만족도	변경	창업률
	16	연구개발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청년 취업률 : 연구개발성과기업이전 촉진사업 참여한 ① 청년TLO + ② 4차 인재양성과정의 미취업 이공계 학 · 석사의 취업률 (%) = 취업인원 / 사업 수혜자 × 100	취업률	유지	
	17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창업교육 이수율 (단위 : %) : 최종수료팀 수 / 창업탐색교육 지원팀 수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 반영)	유지	
	51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청년콘텐츠기업 투자펀드는 펀드결성 후 투자기간 (통상 3 ~ 4년) 내에 민간투자운용 사의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기업을 선정 ·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의 성격상 투자의 시기 · 금액 · 대상 등 사전예측이 어려움을 고려, 성과지표 설정 제외 필요		신설	취업자 수
	53	청년두레 (관광두레 청년주민사업체) 지원	신규주민사업체 : 연간 주민사업체 발굴 수 합산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56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지속률 (%) = (당해연도40세미만후계농의영농종사인원 / 당해연도40세미만후계농선발인원)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 반영)	유지	
	58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참여인원수 (단위 : 명) : '20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참여인원 집계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59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원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인턴쉽 협약을 체결한 인턴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60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창업Lab 지원대상팀 선정 건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6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당해연도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인원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63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율 (%) : 누적투자액 / 4개소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총사업비)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110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희망상가 임대 실적 '20년 희망상가 임대 호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122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활성화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채용인원	취업자 수	유지	
	128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 몰 당 20점포 이상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29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지원기업 수	참여기업 수	유지	
	130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신규 청년창업 비율 : '20년 지원 청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업자등록) 비율	창업률	유지	
	131	청년 창업가(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대상 사업화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사업화 성공률 : (초기창업자 사업화 성공기업수 / 초기 창업자 양성기업수) × 100	창업률	유지	
	132	청년전용 창업자금	고용증가율 (%) = (Σ당해년도 종사자수 - Σ전년도 종사자수) / Σ전년도종사자수 × 100	증감율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136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고용률(고용인원/창업자)	취업률	유지	
	137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신설	세금면제액 (예산액)
	139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신설	조성액으로 인한 창업률
	145	대규모 창업혁신공간 조성	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	수행여부/건수	변경	창업률
	146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공급 실적 :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실적 합산	예산액	변경	보증 건수
	147	신규 사업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여성전문금융협회 통계를 통한 우대수수료 환급액	예산액	변경	참여기업 수
	148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창업기업 직·간접 투자 추진 : 재단 직간접투자액을 합산 (성장금융 제외)	예산액	변경	데모데이지원 스타트업 수
	1	고용중대세제 (청년 고용 시 공제액 우대)			신설	참여기업 수, 취업자 수
	2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소득세 감면액
	36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인턴 선발 실적 : 한상기업 청년인턴 지원자 대상 기업 면접 에서 선발된 인원을 합산	취업자 수	유지	
	4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창출수 (단위 : 만 명) : Σ(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유지	
	46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사업 추진 일정 준수	수행여부/건수	변경	취업자 수
	48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청춘마이크 지원 공연팀 (개) : 지원 공연팀 수 합산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49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지원 건수 :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지원 건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50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신설	수혜자 수
	5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신설	취업자 수
	57	농업법인 취업지원	청년 지원 인원수 합산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61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AFLO) 운영	전략 국가 신규 바이어 발굴 수 (명) : 연도말 전략 국가에서 신규로 발굴한 바이어 총인원 (명)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76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청년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제공인력 채용 : 17개 사업단 × 10명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79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의 전년 대비 청년 고용증가율 (%) : (지원연도말 청년피보험자수 - 직전 연도말 청년피보험자수) / 직전 연도 말 청년피보험 자수 × 100 * '20년 장려금을 최초로 지원받은 기업 대상	증감율	유지	
	8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공공기관 청년신규고용비율 정원의 5% 이상 : 의무제 적용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자수의 합계 / 의무제 적용 공공기관의 정규직정원합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 제외)	취업률	유지	
	101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여성일자리창출			신설	취업자 수
	115	도시재생 사업 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유도	물류기업 취업자 수 : 사업시행기관 졸업생의 물류기업 취업자 수 및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135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산업인턴 수료율 (%) = (수료학생 / 지원대상자)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 반영)	유지	
	149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수 : 산은 · 기은 · 수은 제출자료 이용	수행여부/건수	변경	취업자 수
	150	은행권 일자리펀드 운용 지원	은행권 출자액	예산액	변경	취업자 수
	171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강화	조달 우대 수행건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91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훈련실시인원 : 컨소시엄 사업 훈련인원 산정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3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근로자 신규 가입자 수 : '20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40 코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10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만족도	변경	참여자 수
	14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교당 참여학생 수 (단위 : 명) : 인증위원회 최종 평가 학생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5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개인기초연구 중 청년 대상 과제 수 : 청년(만 34세 이하)이 연구책임자인 과제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9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연수생 취업률 (단위 : %) : 취업자수 / 연수생수	취업률	유지	
	20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기업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활용률 : 연구단별 당해연도 연구과제의 참여기업 활용현황 (해당기업이 결과물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수행여부/건수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21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참여기업 및 특화분야 유관기관 취업 실적 : 참여기업 및 특화분야 유관기관 취업인원 / 전체참여인원 (측정대상기간 : 매년 1.1 ~ 12.31)	취업률	유지	
	22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글로벌핵심인재양성지원 과정 참여 학생 만족도	만족도	변경	특허 건수/ 취업자 수
	23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 관련 R&D 역량 강화	등록특허등급 (Smart)지수 (단위 : 점) : (SMART등급 X 배점) / 등록특허건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24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매칭 실습생 수 : 학기별 연수업체 매칭이 확정된 실습생 (인턴) 수 합계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25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산업맞춤형 교육수료인원 (단위 : 명) : 전체 교육과정 수료인원 (교육과정 80% 이상 수강자, 조기취업자 등) 합계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2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인원수 : 전체 교육과정 수혜 인원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27	SW중심대학	교육생 만족도 : SW중심대학, SW마에스트로, ICT멘토링 수혜자 대상 만족도를 예산비중 가중치 적용하여 산출	만족도	변경	참여학생 수
	28	SW마에스트로 과정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최고급 SW인재 양성)	SW마에스트로 수혜인원 수 : SW마에스트로 과정 참여 수혜인원의 합계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29	K-Shield 주니어	교육 수료생 취업률 : 정보보호 구직자 교육과정 (K-Shield 주니어)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의 수료 후 1년간 취업률	취업률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30	차세대 보안리더 (BoB)	수혜자수 : 차세대보안리더 수혜자 수 합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31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수혜자수 :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수혜자 수 합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32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컨소시엄참여기업 만족도 : $\Sigma$ (참여기업별 만족도 / 참여기업수)	만족도	변경	관련업종취업자 수
	33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인력양성	전공취업률 : 전공취업자 / (졸업자 - 취업비대상자) × 100	취업률	유지	
	34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	인공지능대학원학생 만족도	만족도	변경	관련업종취업자 수
	41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자기개발학습 참여율 : (원격강좌참여자 + e러닝학습참여자 + 오프라인학습참여자) / 복무자수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64	청년귀농 장기교육	교육만족도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만족도	변경	관련업종취업자 수
	65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업			신설	관련산업 배출 석·박사 수
	66	혁신 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신규 파견 연구자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67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율 : (교육수료자 / 과정참여 대학생)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71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수(누적) :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누적 조성 개소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77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교육 만족도 (5점 척도)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9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률(%) : 취업자수 ÷ 수료자수 × 100	취업률	유지	
	93	일반고 특화과정 (일반고 고졸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도입)			신설	참여자 수
	94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술 기능인력 양성	학위과정 취업률	취업률	유지	
	97	미래유망산업 맞춤형훈련	훈련인원		유지	
	98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훈련	훈련실시 인원 (명) : 훈련 참여 인원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16	물류전문인력 (고교, 대학) 양성지원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교육생 수 측정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17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온·오프라인 취업상담 등 취업정보 제공 건수를 합산	수행여부/건수	유지	
	172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추진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포함)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률 : 취업맞춤특기병운영현황 ('19 ~ '20전역자중취업자수) / ('19 ~ '20전역자수) *100	취업률	유지	
	176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 제공	교육 수수료율 : 수료생 / 선발인원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177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농가 소득 향상률 : ((사업 후 소득 - 사업 전 소득) / 사업 전 소득) *100	증감율	유지	
	178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선발인원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79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선발인원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2-3 청년 교육훈련비 부담 완화	5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입학금 누적 감축 비율 (%) : 대학별 입학금 감축비율 / 전체대학수 × 100	증감율	유지	
	6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1인당 학기 평균 지원액 (만원) =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총액) + (‘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총액)] /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 (‘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예산액	변경	수혜자 비율
	7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 ‘20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증감율	유지	
	9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생 만족도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무작위 표본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I 유형 만족도 × 0.5 + II 유형 만족도 × 0.5) ※ II 유형 최초 측정에 따른 목표치 조정	만족도	변경	취업률
	1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이공계 우수학생 장학금 계속 수혜율 : 장학금성적기준 충족자수 / 계속수혜대상자수 (%)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55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8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장려금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변경	연간 사고절감 수
	1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학생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2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장려금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13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장려금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변경	참여인원 수
	90	기업의 현장훈련과 학교·공동훈련센터의 교육을 병행하여 신규 입직자의 역량 강화	일학습병행중도탈락률 : 훈련중단인원 / 훈련종료자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주 거	2-5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 조성	35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이행율 : 학생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 정책 발표 또는 규정 개정 시 100%	수행여부/건수	유지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1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지원계좌수 / 지원액	수행여부/건수	유지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113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 실적 : 청년층에 대한 기금 전·월세자금 지원 건수를 합산	수행여부/건수	유지	
		153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청년맞춤형전월세지원실적 : '20년 중 청년 전월세프로그램실행액	예산액	변경	수혜자 수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4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기숙사 수용인원 실적 : 전국 국립대 BTL, 행복기숙사, 사립대 재정기숙사 등 기숙사 수용인원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54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수 (누적) : 청년농촌 보급자리 조성사업 누적 조성 개소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106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행복주택 준공 실적 : '20년 행복주택 준공 호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107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매입·전세 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급 : 임대주택 준공	수행여부/건수	유지	
		108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 주택)	청년 공공지원 : 부지확보 기준	수행여부/건수	유지	
		109 대학생 기숙사 확충			신설	수혜자 수
		111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 : 공모 또는 입주 자모집을 기준으로 물량 합산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12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집주인임대주택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참여자 선정 (가구)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181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아트빌리지 조성계획안 수립 실적	수행여부/건수	변경	수혜자 수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123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신설	수혜자 수	
참여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부여 강화	38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대화 개최 횟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161	군·경 장병 대상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 (합의 + 상담해결 건수 / 민원상담 건수)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162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추진	청년체감 제도개선 의견수렴도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건수 / 당해연도 청년과제 제도개선 권고건수)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163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참여 프로그램	청년 아이디어의 정책반영률 : 청년제안으로 정책, 제도가 변화된 사례 / 청년 정책제안 건수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164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건수 / 신청건수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165	2030세대 관련 민원 분석	2030세대 민원분석 자료 생산건수 합산	수행여부/건수	유지	
	4-3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4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공동체 자체 설정 목표 달성도 (%) : (자체설정 목표 달성 공동체 / 전체 공동체) × 100%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127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해양분야 청년정책 인지도	증감율	변경	연도별 참여자 수
		168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참여자수	참여인원 수	유지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생활	5-1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72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실시	수혜자수	참여인원 수	유지	
		73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지원 확대	조기중재사례관리등록건수 : 7개 시도 × 20건	수행여부/건수	유지	
		174	병역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수혜자수	참여인원 수	유지	
	5-2 청년의 원활한 사회출발 보장	42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가입률 = 가입자(A) / 대상인원(B) × 100 * (A) 가입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수 * (B) 대상인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자격이 있는 인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74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율 : 통장유지자 및 지급해지자 수 / 가입자 수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8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참여자 수
		103	후기 청소년(19~24세) 자립 지원	전국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실적	수행여부/건수	유지	
		10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이용자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82	청년저축계좌 신설	청년저축계좌 지원율 : 통장유지자 및 지급해지자 수 / 가입자 수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유지	
		5-3 청년 부채 경감	152	청년 신용회복 지원	신복위 장학재단연계채무자수 : 신복위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장학재단으로 연계한 채무자 수 집계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56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비금융정보 반영 확대		변경	제도개선 건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형	신설 / 변경 지표
5-4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158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청년· 대학생 햇살론)	연간 공급액 합계	예산액	변경	수혜자 수
	159	청년· 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신설	수혜자 수
	43	군인연금 미수해 전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 (협의중)	군인의 고용보험가입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하고 협의지연을 대비하여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 * 개선 前 전직금 월25 ~ 50만원 6개월 → 개선 後 실업급여 168 ~ 185만원 5개월 지급		신설	수혜자 수
	69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급 대상자 만족도 실적치	만족도	변경	수혜자 수
	75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내용 없음		신설	수혜자 수
	143	청년 소비자층 보호정책	거래행태 시정건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144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대학생 대상 홍보 실시 : 지하철, 유튜브 등 매체에 홍보물 게시 수	수행여부/건수	유지	
	154	청년형 ISA 운영	청년형 ISA 계좌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55	청년· 대학생 금융현장소통	청년층 간담회 개최 실적	수행여부/건수	유지	
	157	청년 금융교육 지원	참여 인원 수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정책 추진 체계	6-1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체계성 강화	169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7·9급)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인원	취업자 수	유지	
	6-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84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인원수, 프로그램 수혜율	수행여부/건수	유지	
		88 청년고용지원			신설	진로취업 관련 컨텐츠 개발 수 / 보급 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측정방법)	성과지표 유형	변경 유무	신설 / 변경 지표
	95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고객만족도 (%) : 20.11월 홈페이지 (모바일, 웹)을 통한 측정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04	청년 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과제 수 : 중앙·지역에서 청년 주도로 추진한 과제 수 합산	참여 수 (인원/기업/대학)	유지	
	134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취업자 수 (단위 : 명) :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구직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유지	
	142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일자리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부록표 4.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개별 목표치 검토 및 결과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일 자리	1-1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78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신설	관련 노동쟁의 해결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2 청년 일·생활 균형 및 직장환경 개선	8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설	강소기업 연간 선정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41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신설	참여기업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3 청년공정채용 및 구직활동지원	37 탈북 청년 취업·교육지원	유지	취업자 수 (명)	16	13	15	14.7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39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유지	대학진학자 수 (명)	10	5	1	5.3	실적감소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40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유지	수혜자 수 (명)	27,342	100,442	120,000	126,00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47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유지	양성인원 수 (명)	214	217	217	216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68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유지	기업탐방 참여 청년 수 (명)	174	89	89	117.3	실적감소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70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변경	신규 석·박사 지원 수	52	89		93.5	실적 증가로 '19년 실적치 대비 5% 상승
	82 해외취업지원	유지	정부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 (명) 수	5,783	6,816	6,500	6,366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85	중소기업탐방	변경	참여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86	청년취업아카데미	유지	취업률 (%)	63.8	63.1	65	64.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87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 / 민간 블라인드 채용	유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 (%)		94.8		94.8	20년 목표치 부재로 19년도 실적치 적용
	89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공	유지	지원인원 수	187,000			187,000	20년, 19년 목표치 부재로 18년도 실적치 적용
	96	신직업 Making Lab	유지	취업률 (%)	63			63.0	20년, 19년 목표치 부재로 18년도 실적치 적용
	99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2차 년도 이후 참여율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00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내일이룸학교)	유지	훈련생 중도 탈락율 (%)	34.8	25.6	24	28.1	실적감소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02	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 지원	변경	새일여성센터 인턴 연계실적	7,410	7,351	6,177	6,979	실적감소로 3년('18~'20) 평균실적치
	118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유지	취업정보 제공실적 (명)	60,000	300,000	350,000	367,50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19	항공정비인력 양성채용	유지	기종전문과정 훈련생 선발 (명)	83	162	100	115.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20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유지	先선발 後교육 훈련생 선발 (명)	234	237	121	197.3	실적감소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21	해외건설청년일자리창출	변경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1-4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인프라 체계화	124	수산식품 청년 마케터 육성	유지	참여자 고용 창출 수	-	11	5	8.0	실적감소로 2년('19~'20) 평균 실적치
	125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유지	청년해기인력 취업률 (%)	-	89	75	82.0	실적감소로 2년('19~'20) 평균실적치
	126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변경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38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유지	채용연계 성사 건수 (명)	3,571	3,608	3,490	3,556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40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운영	유지	지원 인원 수 (명)			559	587	20년 목표치만 존재, 20년도 대비 5% 상승
	15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유지	참여인원 수 (명)	-	-	14,000	14,700	20년 목표치만 존재, 20년도 대비 5% 상승
	160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유지	수행건수	519			519	18년도 실적치만 존재해 18년도 유지
	166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유지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수 (개)	7,079	7,014	7,100	7,064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67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 취업 지원	유지	v-net 인원 (명) (취업상담 등)	-	89	106	111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70	의료제품 전문 인력 양성	유지	교육 수료율 (%)	78.7	77.3	77	77.7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73	산업기능요원채용박람회	유지	산업기능요원 신산업분야 편입률	44	45.3	45.5	44.9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7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변경	참여인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180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	유지	해외산림인턴 선발실적 (명)	20	20	20	2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3	대학창업펀드 조성	변경	창업률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6	연구개발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유지	청년 취업률 (%)	44.7	35.5	50.0	43.4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7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유지	창업교육 이수율 (단위: %)	95	100	96	97.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51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신설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53	청년두레 (관광두레 청년주민 사업체) 지원	유지	신규 주민사업체 수 (개)	68	113	124	130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56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유지	4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지속률 (%)	91.4	91.3	91	91.2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58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유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참여인원 수 (단위: 명)	202	210	210	207.3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59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유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 수 (명)	38	50	50	46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60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유지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팀)	21	23	30	31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1-5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6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유지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 (명)	-	104	200	210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63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유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율 (%)	-	50	70	73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10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유지	희망상가 임대 실적 (실)	114	101	80	98	실적 감소로 3년 ('19 ~ '20) 평균 실적치
	122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활성화	유지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고용인원)	94	8	24	42	실적감소로 3년 ('18 ~ '20) 평균 실적치
	128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유지	청년상인 창업지원 (명)	140	100	60	100	실적감소로 3년 ('18 ~ '20) 평균실적치
	129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유지	지원기업 수 (개)	8,698	6,336		6,336	20년 목표치 부재로 19년도 실적치 적용
	130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유지	신규 청년창업 비율 (%)	97.0		97.0	97.0	19년 목표치 부재로 20년도 목표치 적용
	131	청년 창업가(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대상 사업화 지원	유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사업화 성공률 (%)	50.1	55.9	59.3	62.3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32	청년전용 창업자금	유지	고용증가율 (%)	42.7	45.8	46.2	48.5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36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유지	고용창출률 (명) (고용인원 / 창업자)	-	0.42	0.45	0.44	실적유지로 2년 ('19 ~ '20) 평균 실적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137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신설	세금면제액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39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신설	창업률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45	대규모 창업혁신공간 조성	변경	창업률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46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	변경	보증 건수 (개)	10,174	12,089		12,693	실적증가로 '19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47	신규 사업자에 대한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변경	참여기업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48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변경	데모데이지원 스타트업 수	514	805	900	945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	고용증대세제(청년 고용 시 공제액 우대)	신설	참여기업 수,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2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소득세 면제액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36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유지	인턴 선발 실적 (명)	166	327	200	231.0	실적유지로 3년('19~'20) 평균 실적치
	4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수 (단위: 명)	11,100	36,400	27,200	24,900	실적유지로 3년('19~'20) 평균 실적치
	46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변경	취업자 수 (명)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48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유지	청춘마이크 지원 공연팀 (개)	194	276	410	43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49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유지	지원 건수 (건)	54	49	48	50.3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50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신설	수혜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5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신설	취업자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57	농업법인 취업지원	유지	청년 지원 실적 (명)	180	210	200	196.7	실적유지로 3년('19~'20) 평균 실적치
	61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AFLO) 운영	유지	전략 국가 신규 바이어 발굴 수 (명)	-	-	200	200.0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76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청년사회서비스지원사업)	유지	제공인력 채용	-	119	170	178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79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유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기업의 전년 대비 청년 고용증가율 (%)	18.4	24.6	25	22.7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8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유지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비율 정원의 5% 이상(%)	6.9	7.4	5.9	6.7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01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여성일자리 창출	신설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15	도시재생 사업 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유도	유지	물류기업 취업자 수	453	466	470	493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1-6 청년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	135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유지	산업인턴 수료율 (%)	98.7	99.4	93.9	97.3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49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변경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50	은행권 일자리펀드 운용 지원	변경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71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강화	유지	수행 건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91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유지	훈련실시인원 (명)	223,402	150,510	160,000	177,97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3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유지	청년근로자 신규 가입자 수 (명)	36,031	37,358	38,000	39,90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2-1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10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변경	참여자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4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유지	교당 참여학생 수 (단위 : 명)			30	332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5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 (신진연구, 생애 첫 연구)	유지	개인기초연구 중 청년 대상 과제 수	-	-	430	451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9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유지	연수생 취업률* (단위 : %)	73.5		73.5	73.5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20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유지	기업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활용률 (%)	31	21	25	25.7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21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유지	참여기업 및 특화분야 유관 기관 취업 실적	40	29.2	40.6	36.6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실적치
	22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변경	특허건수 /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23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 관련 R&D 역량 강화	유지	등록특허등급 (Smart)지수 (단위: 점)	4.2	3.84	4.09	4.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24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유지	매칭 실습생 수 (명)	222	221	400	42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25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유지	산업맞춤형 교육수료인원 (단위: 명)	1,107	1,400	1,700	1,785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2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인원수	-	-	750	787.5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27	SW중심대학	변경	참여학생 수 (명)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28	SW마에스트로 과정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최고급 SW인재 양성)	유지	SW마에스트로 수혜인원 수	100	150	150	157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29	K-Shield 주니어	유지	교육 수료생 취업률	-	76	66.9	71.5	실적유지로 2년('19~'20) 평균 실적치
	30	차세대 보안리더 (BoB)	유지	수혜자 수	158	192	200	210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31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유지	수혜자 수	151	155	120	142.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32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변경	관련업종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33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인력양성	유지	전공취업률 (%)	58	58	58	58.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34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	변경	관련업종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41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유지	자기개발학습 참여율 (%)	-	-	40	42.0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64	청년귀농 장기교육	변경	관련업종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65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업	신설	관련산업 배출 석·박사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66	혁신 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유지	신규파견연구자 수 (명)		100		100.0	19년도 실적치만 존재해 19년도 유지
	67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유지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과정 이수율 (%)	93.8	95.5	90	93.1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71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유지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수 (누적)	-	4	4	4.0	실적유지로 2년('19~'20) 평균 실적치
	77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변경	취업자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9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유지	취업률 (%)			63.8	67.0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93	일반고 특화과정(일반고 고졸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도입)	신설	참여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94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술 기능인력 양성	유지	학위과정 취업률 (%)	81.1	-	80.0	80.6	실적유지로 2년('18, '20) 평균 실적치
	97	미래유망산업 맞춤형훈련	유지	훈련인원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98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훈련	유지	훈련실시 인원 (명)	-	-	3,000	3,150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16	물류전문인력 (고교, 대학)양성 지원	유지	스마트시티 인력양성사업 교육생 수 (명)	265	375	360	333.3	실적감소로 3년('19 ~ '20) 평균 실적치
	117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유지	취업정보 제공실적 (명)	60,000	300,000	350,000	367,500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72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취업맞춤 특기병 확대 포함) 추진	유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률 (%)	52.9	53.6	54	56.7	실적 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76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분야 전문교육제공	유지	교육 수료율 (%)	-	85	85	85.0	실적유지로 2년('19 ~ '20) 평균 실적치
	177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유지	청년농가 소득 향상률 (%)	-	-	10	10.5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78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유지	선발인원 (명)	89	71	63	74.3	실적감소로 3년('18 ~ '20) 평균 실적치
	179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유지	선발인원 (명)	105	110	110	108.3	실적유지로 3년('18 ~ '20) 평균 실적치
2-3 청년 교육훈련비	5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유지	입학금 누적 감축 비율 (%)	29.7	43.4	56	58.8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부담 완화	6	국가장학금 확대	변경	수혜자비율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7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유지	학자금대출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	2.20	2.20	1.85	1.76	실적 감소로 '20년 목표치 대비 5% 하락
	9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변경	취업률 (%)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유지	우수학생 장학금 계속 수혜율 (%)	88.6	89.4	88.5	88.8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55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변경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2-4 원활한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8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변경	연간사고 절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유지	참여학생 수 (명)	-	427	786	825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2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변경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3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변경	참여인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90	기업의 현장훈련과 학교·공동훈련 센터의 교육을 병행하여 신규 입직자의 역량 강화	유지	일학습병행 중도탈락률	28.7	23.7	26.0	26.1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주 거	2-5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환경 조성	35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유지	학생인건비 관련 제도(규정) 개선 이행율 (%)	100	100	100	100.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3-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주거교육 확대	1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유지	지원계좌 수(개)		191,810		191,810	19년도 실적치만 존재해 19년도 유지
	3-2 청년 주거 부담 완화	113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유지	청년 전·월세자금 지원 실적(만호)	62,000	141,000	80,000	94,333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53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변경	수혜자 수(만 명)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3-3 청년 주거공급 확대 및 체계화	4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유지	기숙사 수용인원 실적(명)	6,448	7,446	6,000	6,631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54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유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수(누적)	-	4	4	4.0	실적유지로 2년('19~'20) 평균 실적치
		106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유지	행복주택 준공 실적(만호)	2.7	2.4	2.5	2.5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07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유지	매입임대주택 공급(호)	3,000	4,000	6,000	6,30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08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주택)	유지	청년 공공 지원(실)	20,821	25,347	24,000	23,389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09 대학생 기숙사 확충	신설	수혜자 수(만 명)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11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유지	사회임대주택 운영·관리(호)		1,563	2,000	2,10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3-4 청년 주거여건 개선	112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유지	집주인임대주택 (호)	7,228	5,014	5,000	5,747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81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변경	수혜자 수 (명)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23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신설	수혜자 수 (명)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참 여	4-1 청년 정책참여 및 권한부여 강화	38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유지	청년대화 개최 횟수 (회)	-	4	4	4.0	실적유지로 2년('19~'20) 평균 실적치
		161	군·경 장병 대상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유지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	47.7	50.4	54.9	57.6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62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추진	유지	청년체감 제도개선 의견수렴도 (%)			90	94.5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63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참여 프로 그램	유지	청년 아이디어 정책반영률 (%)	-	-	20	21.0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64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유지	응모 건수 (개)	518			518.0	18년도 실적치만 존재해 18 년도 유지
		165	2030세대 관련 민원 분석	유지	2030세대 민원 분석 (건수)	5	5	7	7.4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4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지	청년공동체 자체 설정 목표 달성도 (%)	-		70	73.5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4-3 청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127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변경	참여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168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유지	참여자 수			650	682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생활	5-1 청년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72	20 ~ 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 검진 확대 실시	유지	수혜자 수 (만 명)		719	719	19년도 실적치만 존재해 19 년도 유지	
		73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지원 확대	유지	조기중재사례 관리등록건수	-	-	140	147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74	병역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유지	수혜자 수	185,372			185,372	18년도 실적치만 존재해 18 년도 유지
		42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유지	프로그램 가입률 (%)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74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율	98.0	92.6	90.0	93.5	실적감소로 3년('18 ~ '20) 평균 실적치	
	8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참여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03	후기 청소년 (19 ~ 24세) 자립 지원	유지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개소수	4	6	8	8.4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0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유지	미혼모·부자거점 기관 이용자 수	1,296	1,386	1,390	1,459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82	청년저축계좌 신설	유지	청년저축계좌 지원율 (%)	-	-	95	99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5-3 청년 부채 경감	152	청년 신용회복 지원	유지	신복위 → 장학 재단 연계채무자수	-	1,543	1,700	1,785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56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변경	제도개선 건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5-4 복지 및 생활안정 여건 조성	158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청년·대학생 햇살론)	변경	수혜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59	청년·대학생햇살론재출시	신설	수혜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43	군인연금 미수혜 전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협약중)	신설	수혜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69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변경	수혜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75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신설	수혜자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143	청년 소비자층 보호정책	유지	거래행태 시정건수			1	1.1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144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유지	대학생 대상 홍보회	1	1	1	1.0	실적유지로 3년('18~'20) 평균 실적치	
	154	청년형 ISA 운영	유지	가입자 수(명)	36,349	41,677	42,000	44,100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55	청년·대학생 금융현장소통	유지	간담회 실시(회)	-	5	4	5	실적유지로 2년('19~'20) 평균 실적치	
	157	청년 금융교육 지원	유지	대학생 수료자	140,000	150,000	-	150,000	20년 목표치 부재로 19년도 실적치 적용	
정책 추진	6-1 청년기본법 및 관련 법률체계성 강화	169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7·9급)	유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	-	140	147	20년 목표치만 존재해 20년도 대비 5% 상승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지표 상황	지표 정의	3개년 실적 치			'21년 목표치	비고	
					'18	'19	'20			
체 계	6-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84	대학일자리센터	유지	상담인원 수 (명)	1,564,317			1,564,317	18년도 실적치만 존재해 18년도 유지
		88	청년고용지원	신설	진로취업 콘텐츠 개발 수 / 보급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95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센터)	유지	온라인청년센터 이용자 수 (명)	14,000	34,000		35,700	실적증가로 '19년 실적치 대비 5% 상승
		104	청년 성평등 문화 확산	유지	추진 과제 수 (개)	27	33	40	42	실적증가로 '20년 목표치 대비 5% 상승
		134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유지	중소기업취업자 수 (단위 : 명)	2,657	3,520	3,000	3,059	실적유지로 3년 ('18 ~ '20) 평균 실적치
		142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변경	취업자 수					담당부서 자료수집 후 수요 추이에 따라 목표치 결정

### 3. 청년 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구분		주요 의견		
		청년단체 간담회 주요 내용	일반 청년 간담회 주요 내용	연구진 검토의견
비전 타당성	원하는 삶 사는 청년	‘원하는 삶’이라는 표현에 대해 만족함. 모호한 표현 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설계하거나 꿈을 실현 한다는 표현보다는 청년에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함 청년을 주체적 존재로 보지 않고 국가가 기회를 제공 해주겠다는 시혜적인 시각이 느껴지기도 함	‘원하는 삶’이라는 표현은 나쁘지 않음. 매우 만족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대체될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 대안들보다는 적절한 표현일 것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청년들이 존재할 것. 이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기보다는 주관적 상태인 행복, 만족 등으로 순화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원하는 삶’이라는 표현은 유지하되, 더 체계적인 설명을 추가 하는 것으로 보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는 표현에 만족 청년에 대한 ‘보장’에 강조점이 가야함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5년의 방향을 담기엔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함 더 도전적인 비전으로 설정 필요 비전 자체는 타당하나,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이어져야 할 것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우리 사회가 단지 ‘기회’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함.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 한다는 느낌 우리 사회가 ‘기회를 보장’ 해줄 수 있는 사회인가, 현재 보장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있음. 현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음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보장’의 의미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 설계
목표 타당성	표현된 내용 자체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청년에 대한 권한부여의 의미 중요 정책 거버넌스에서 청년의 권한부여와 참여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권한부여는 현재까지 없었던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권한강화 등의 표현이 적합 도전보다는 활동으로 변경 필요	권한부여가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함 거시적 맥락에서 청년 국회의원이나 단체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일상에서의 권한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	권한부여를 권한강화로 수정	

구분	주요 의견		
	청년단체 간담회 주요 내용	일반 청년 간담회 주요 내용	연구진 검토의견
정책 영역 및 추진 과제 타당성	일자리	<p>노동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야 함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피해자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안내 필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육과 같은 노동권교육이 필요함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방안 필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과제 수립 필요 (산업안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일자리의 공정과 공평에 대한 청년들이 관심이 높음.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전환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함</p>	청년창업 활성화를 청년 창업 내실화로 수정 노동권익과 노동환경에 대한 과제 보강
	교육· 훈련	<p>교육 영역에서의 권한부여가 불분명함 일선의 청년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 있으므로 질적 개선이 필요</p>	학습자로서의 청년의 권한강화 과제 추가
	주거	<p>일반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 주거가 불안정한 것이 가장 큰 걱정 부동산 계약에 대한 부담 및 불안이 크므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이 제공되면 좋을 것임 주거의 우선순위는 적절한 금액에 프라이버시가 보장 되고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임. 따라서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를 선호하지는 않으나, 일부는 입지나 비용에 의해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p>	주거교육 등의 과제 추가 적절한 금액의 주거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강

구분	주요 의견		
	청년단체 간담회 주요 내용	일반 청년 간담회 주요 내용	연구진 검토의견
		<p>생활동반자법 등 1인가구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함</p> <p>1인 여성 단독가구의 안전 등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도 매우 중요</p> <p>대출정책보다는 수당이나 바우처 제도를 희망함</p> <p>현재 청약제도가 신혼부부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점이 아쉬움</p> <p>공유주방, 거주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욕구는 낮았으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p>	
참여활동	<p>성인지적인 고려를 한 정책 참여 촉진 필요</p> <p>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추가 필요</p>	<p>활동바우처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음</p> <p>지역사회 내에서의 청년활동이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개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이었음. 더 장려되었으면 함.</p>	<p>청년 활동에 대한 정책</p> <p>과제를 세분화하여 반영</p>
복지·건강	<p>복지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부여도 필요</p> <p>상담서비스 강화로는 부족함. 생활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p> <p>구직의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는 얽혀있으므로, 심리 상담과 직업상담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양성되어야 함</p> <p>'원활한' 이라는 의미 불분명</p>	<p>청년층 내에서 심리 상담에 대한 욕구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함</p> <p>전문적 상담은 상담자의 연령이 중요하지 않지만, 인생에 관한 조언은 상담자의 연령을 고려할 것임 (내담자의 선택이 보장되어야 함)</p> <p>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 필요</p>	<p>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의</p> <p>전달체계를 청년센터로</p> <p>지정하는 방안 고려</p> <p>초기 청년기에서부터의</p> <p>건강검진서비스 제공</p>
영역설정 및 과제 전반에	<p>금융 영역이 포함되어야 함</p>	<p>금융 영역이 포함되어야 함</p> <p>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정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음</p>	<p>금융을 복지·건강</p> <p>영역에 추가하여 복지·</p> <p>금융·건강 영역으로</p>

구분	주요 의견			
	청년단체 간담회 주요 내용	일반 청년 간담회 주요 내용	연구진 검토의견	
대한 의견		20대 후반 - 30대는 일·가정, 일·생활 양립이 중요하며,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과제설정의 명료성이 필요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음	수정 일자리 영역에 일·생활 양립과 관련된 과제 추가	
핵심 과제 타당성	일자리	대학 일자리 센터 모델이 많은 청년들을 포괄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코로나19이후 경직된 노동시장과 청년의 불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복잡화, 불안정해지면서 졸업, 구직, 취업, 퇴사 후 다시 구직 등 반복적으로 정책대상이 될 수 있음. 생애 1회 지원은 부족함	한국형 청년보장과 같이 이행기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공감	코로나19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정리하여 추가
	교육훈련	학자금 금리 완화 추진 시 기존 연체된 학자금의 대출 이자에 대한 논의 필요함. 고교 졸업생(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지원 필요	대학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이율 인하에 기본적으로 공감 다만 장학금 선정방식의 한계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 현재의 방식으로 생계비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우려	대학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율을 인하하여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
	주거	주거수당이 지급된다면 중위소득기준 100% 선 위로 설정되어야 함 임대주택 공급, 셰어하우스 제공 정책은 독립적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청년의 욕구를 만족할 수 없음 전반적인 주거 여건 개선과 함께 인간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거 면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거 형태를 보면 청년은 원룸 같은 곳에 살아야 한다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낌. 청년 주거 욕구의 다양함을 인정 필요 청년들은 안정되고 안전한 독립적인 주거를 희망하고 있음. 셰어하우스 등은 일부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지만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형태는 아님 지옥고 등 열악한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주택 제공할 수 있도록 강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존 대책은 신중 검토

구분	주요 의견		
	청년단체 간담회 주요 내용	일반 청년 간담회 주요 내용	연구진 검토의견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잘못된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러움 주거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복지건강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을 수준은 아니나 우울감이 높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정신건강 관련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서비스 제공이 분절적으로 이뤄짐.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 많이 필요함.	심리정서 상담에 대한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 상담서비스의 질이 중요하고, 자신과 잘 맞는 상담가를 찾는 것은 몇 차례 반복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고려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서비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공 필요	심리정서 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에 대한 다양한 검토 전문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참여활동	청년센터는 진입문, 이후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청년센터 평가시 정량지표에 대한 재고 필요(기존 정량 지표의 한계 극복 필요) 전달체계에서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함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청년의 당사자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이 명시되어야 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역 청년위원회의 역할 조정, 위원회의 청년 대표성과 전문성 문제가 지적됨. 유스카드는 사용자, 사용목적 등 제한을 지나치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음. 참여활동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험이 필요. 다양한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 등 창의적 활동모델 개발 필요	청년센터는 설립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와 연관 되어 있음 청년센터를 당장 이용하지 않을 청년들도 상당수 존재 하지만, 시장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청년센터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청년센터가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형성을 도울 수 있다면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청년센터 수립 방안 검토 유스카드와 유스박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

구분	주요 의견		
	청년단체 간담회 주요 내용	일반 청년 간담회 주요 내용	연구진 검토의견
기타 의견	<p>코로나19에 대한 긴급지원이 담겨야 함</p> <p>정책 성과 측정 지표가 기존의 지표 대신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함 (ex. 사회적 자본, 행복감, 다양성)</p> <p>중앙정부가 지방의 청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매뉴얼, 인력, 공간 계획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함</p> <p>청년의 환경 분석에서 자산불평등도 중요한 문제임</p> <p>기본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지점이 드러나면 좋겠음</p> <p>청년이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각종 사업 아이디어나 욕구를 실험적으로 실천해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많아져야 함 (ex. 청년허브 공모사업)</p>	<p>청년정책의 대부분이 소득을 기반으로 제공된다면 '가난경쟁'을 할 수도 있음</p> <p>젠더적 관점, 성적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으면 좋겠음</p>	<p>코로나19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정리하여 추가 젠더적 관점을 적용하되, 청년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부정적 일들을 각각 개선하는 전략으로 접근</p>
종합 의견	<p>청년층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깨는 계기로서 청년 정책을 만들어야 함</p> <p>젠더 관점, 젠더불평등의 현실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p> <p>보편적인 정책을 해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음</p> <p>수도권 청년 중심의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함. 지역 청년들의 상황과 수도권 청년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청년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p> <p>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장기계획도 필요</p>	<p>현재 수준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p>	<p>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특별한 욕구를 지닌 청년에 대한 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접근</p> <p>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p>

#### 4. 전문가 델파이조사 조사표(1차, 2차)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1차 델파이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수탁과제로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은 청년 실태 및 정책 여건 분석과 청년 관련 계획 및 정책방안의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청년실태 분석 및 (현)청년정책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두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6월 23일(화) 정오(12:00)까지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연구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락처 김기현 ☎044-415-2234 / ✉ e-mail: [kilune@nypire.kr](mailto:kilune@nypire.kr)  
유민상 ☎044-415-2194 / ✉ e-mail: [mevyoo@nypire.kr](mailto:mevyoo@nypire.kr)  
변금선 ☎044-415-2128 / ✉ e-mail: [gbyun@nypire.kr](mailto:gbyun@nypire.kr)  
배정희 ☎044-415-2242 / ✉ e-mail: [bjh@nypire.kr](mailto:bjh@nypire.kr)

응답자 성명	소속기관	부서(학과)명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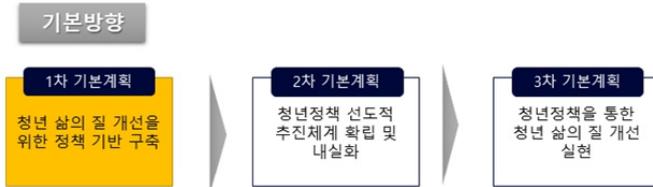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본인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설문조사 수당(1회당 15만원)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 I.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검토

### 1. 기본방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청년정책 추진방향으로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 ▶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정책기반 구축으로 정한 이유는 2020년에 처음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각 부처별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나 실효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본방향

1-1. 1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음) 1-----2-----3-----4-----5 (매우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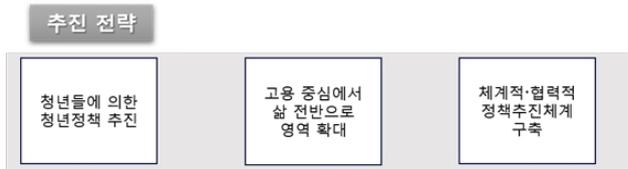
답변

☞ 1-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기본방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 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인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 추진, ②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③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 ▶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들은 청년정책이 대상자 중심의 정책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이 고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삶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중심 정책은 당사자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능 중심에서 정책이 추진되보다 다양한 부처 간에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부처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청년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세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2-1. 이하 추진전략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전략	타당성 정도
	1-----2-----3-----4-----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타당함)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 추진	답변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답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답변
☞ 2-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추진과제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 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전략	위에서 1,2,3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 혹은 개선의견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 추진	답변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답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답변

## II. 비전, 목표, 추진과제 검토

### 3. 비전 및 목표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른 대상 중심 기본계획들을 참고하여 청년정책의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인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향'과 '대상을 둘러싼 환경 개선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향으로는 정부 입장이 아닌 청년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청년의 권리를 이제 정부가 보장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로 설정하였습니다.
-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량증진과 권한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고, 인제든지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비전에 따른 세 가지 목표를 "역량증진과 권한부여",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3] 제1차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3-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는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음) 1-----2-----3-----4-----5 (매우 타당함)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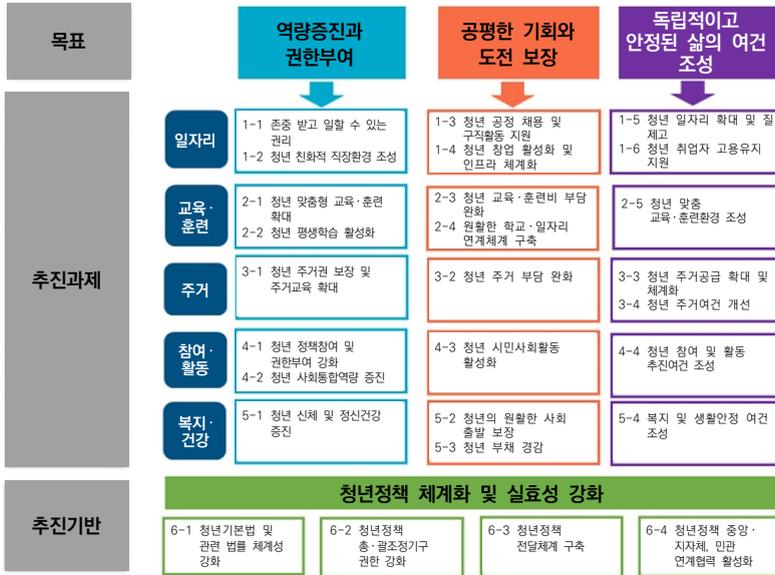
☞ 3-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비전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이하 목표는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타당성 정도
	1-----2-----3-----4-----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타당함)
역량증진과 권한부여	답변
공정한 기회와 도전 보장	답변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답변
☞ 3-4.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목표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위에서 1,2,3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 혹은 개선의견
역량증진과 권한부여	답변
공정한 기회와 도전 보장	답변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답변

#### 4. 목표별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청년정책의 영역은 크게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생활안정·건강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 추진과제들은 제1차 기본계획의 3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부처에서 시행중인 청년정책 사업 분석 및 청년 실태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른 영역별 추진과제를 [그림3]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 ▶ 먼저, 역량증진과 권한부여와 관련된 5대 영역별 추진과제를 도출 하였으며 (파란색 박스), 공정한 기회와 도전 보장을 위한 5대 영역별 추진과제 (주황색 박스),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영역별 추진과제 (보라색 박스)를 도출하였습니다.
- ▶ 나아가, 이러한 세부 추진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년정책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네 가지 추진과제(초록색 박스)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4] 제1차 청년정책 추진과제

4-1. 목표별 추진과제의 구성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 구성	타당성 정도	
	1-----2-----3-----4-----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일자리 (과제 1-1 ~ 1-6)	답변	
교육·훈련 (과제 2-1 ~ 2-5)	답변	
주거 (과제 3-1 ~ 3-4)	답변	
참여·활동 (과제 4-1 ~ 4-4)	답변	
복지·건강 (과제 5-1 ~ 5-4)	답변	

4-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목표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견에 대해 영역별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4-3. 위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과제, 혹은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명**과 **사유**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III.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평가

5-1. 지금까지 살펴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들은 다음의 사항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도움 정도				
	1	2	3	4	5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매우 도움 됨)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답변				
청년정책의 내실화	답변				
취약 계층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답변				
모든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답변				

5-2.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하거나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2차 델파이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수탁과제로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은 청년 실태 및 정책 여건 분석과 청년 관련 계획 및 정책방안의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1차 델파이에 이은 2차 델파이 조사이며, 2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7월 6일(월) 정오(12:00)까지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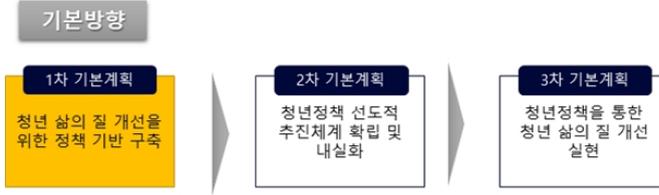
	<p>연구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연락처 김기현 ☎044-415-2234 / ✉ e-mail: <a href="mailto:kihuns@npi.re.kr">kihuns@npi.re.kr</a> 유민상 ☎044-415-2194 / ✉ e-mail: <a href="mailto:msyoo@npi.re.kr">msyoo@npi.re.kr</a> 변금선 ☎044-415-2128 / ✉ e-mail: <a href="mailto:gbyun@npi.re.kr">gbyun@npi.re.kr</a> 배정희 ☎044-415-2242 / ✉ e-mail: <a href="mailto:bjh@npi.re.kr">bjh@npi.re.kr</a></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응답자 성명</td> <td style="width: 25%;">소속기관</td> <td style="width: 25%;">부서(학과)명</td> <td style="width: 25%;"></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td> <td></td> </tr> </table>	응답자 성명	소속기관	부서(학과)명			연락처	
응답자 성명	소속기관	부서(학과)명						
	연락처							

-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본인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설문조사 수당(1회당 15만원)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 I.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검토

### 1. 기본방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지난 1차 조사에서 제시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1] 청년정책 기본계획 기본방향

- ▶ 위 청년정책 기본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응답 및 귀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방향	타당성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전체 평균 (표준편차)	1차 델파이 조사 귀하의 응답
	4.21 (0.71)	4

- ▶ 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신 후, 기본방향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1-1. 1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음) 1-----2-----3-----4-----5 (매우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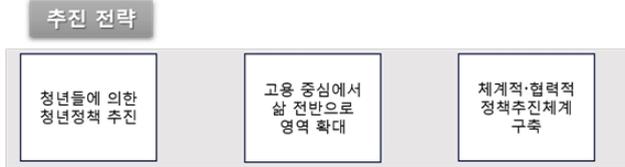
답변

☞ 1-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기본방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 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2.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성 평가

▶ 지난 1차 조사에서 제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 위 청년정책 추진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응답 및 귀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전략	타당성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전체 평균 (표준편차)	1차 델파이 조사 귀하의 응답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 추진	3.88 (0.88)	4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4.46 (0.87)	5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4.54 (0.58)	5

▶ 타당성 응답 결과에 따라, 첫 번째 추진전략인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 추진"은 "청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후, 수정된 추진전략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2-1. 이하 추진전략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전략	타당성 정도
	1-----2-----3-----4-----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타당함)
청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	답변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답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답변
2-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추진과제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 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전략	위에서 1,2,3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 혹은 개선의견
청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	답변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답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답변

## II. 비전, 목표, 추진과제 검토

### 3. 비전 및 목표에 대한 타당성 평가

- ▶ 지난 1차 조사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3] 제1차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 ▶ 위 청년정책 추진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응답 및 귀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및 목표	타당성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전체 평균 (표준편차)	1차 델파이 조사 귀하의 응답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3.63 (0.81)	2
목표1: 역량증진과 권한부여	3.83 (0.90)	2
목표2: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3.96 (0.73)	4
목표3: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4.29 (0.54)	4

- ▶ 타당성 응답 결과에 따라, 첫 번째 목표인 "역량증진과 권한부여"는 "역량증진과 권한 강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신 후, 수정된 비전 및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타당성을 여쭙고자 합니다.

3-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는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음) 1-----2-----3-----4-----5 (매우 타당함)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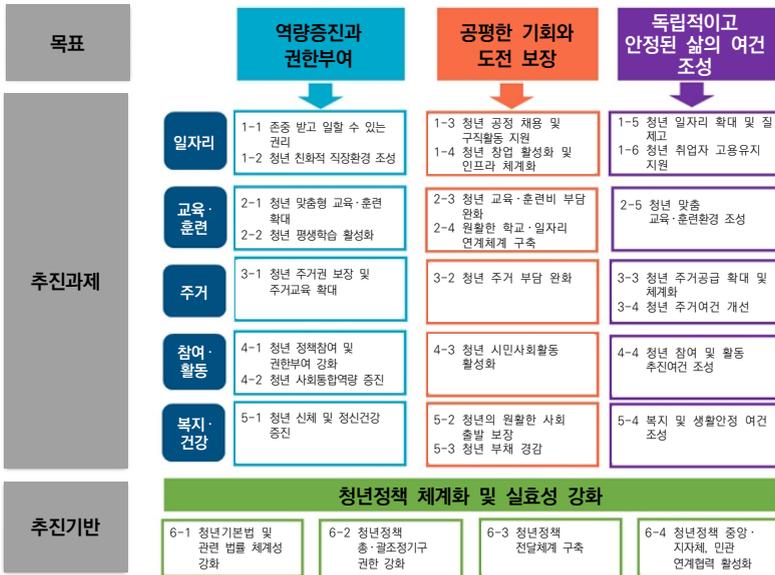
☞ 3-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비전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이하 목표는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타당성 정도
	1-----2-----3-----4-----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타당함)
역량증진과 권한강화	답변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답변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답변
☞ 3-4.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목표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견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위에서 1,2,3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 혹은 개선의견
역량증진과 권한강화	답변
공평한 기회와 도전 보장	답변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	답변

#### 4. 목표별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성 평가

▶ 지난 1차 조사에서 제시한 목표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4] 제1차 청년정책 추진과제

- ▶ 위 청년정책 추진과제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 응답 및 귀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타당성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전체 평균 (표준편차)	1차 델파이 조사 귀하의 응답
일자리	3.88 (0.67)	3
교육·훈련	3.67 (0.75)	3
주거	3.71 (0.79)	2
참여·활동	3.75 (0.72)	3
복지·건강	3.83 (0.80)	4

- ▶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분류 중 '참여·활동'을 '참여·문화·활동'으로, '복지·건강'을 '복지·금융·건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영역명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4-1. 목표별 추진과제의 구성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 구성	타당성 정도
	1-----2-----3-----4-----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타당함)
일자리 (과제 1-1 ~ 1-6)	답변
교육·훈련 (과제 2-1 ~ 2-5)	답변
주거 (과제 3-1 ~ 3-4)	답변
참여·문화·활동 (과제 4-1 ~ 4-4)	답변
복지·금융·건강 (과제 5-1 ~ 5-4)	답변

4-2. 위에서 1, 2, 3번으로 응답하신 경우, 위의 추진과제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 혹은 개선의견에 대해 영역별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 소득기준 적용 청년정책사업 선정기준

부록표 5.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사업 선정기준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비고
교육 훈련	국가장 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8구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li> <li>- 소득산정 방식 : 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기초보장과는 별도 환산방식 적용함</li> <li>○ 미혼 : 본인 + 부모</li> <li>○ 기혼 : 본인 + 배우자</li> </ul>	한국 장학 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만 35세 이하 대학 학부생</li> <li>- 소득산정 방식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근로소득 등 공제한 상환기준소득은 1,32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li> <li>* 장기미상환자 (졸업후 3년 경과 혹은 상환 후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 5% 미만인 경우)는 본인,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에 의해 지정 안내 후 의무상환</li> </ul>	한국 장학 재단 국세청
일 자 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18~34세 청년 중 ③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④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li> <li>- 소득산정 방식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보료 합산, 형제자매는 원하는 경우 합산가능)</li> <li>* 가구원 파악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합산</li> <li>① 미혼 : 부, 모, 본인,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경우 담당자 직권 으로 소득없으면 포함, 있으면 대상선정에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li> <li>② 기혼 : 본인, 배우자, 자녀 합산</li> <li>* 타제도도 중복급여* :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수급자는 동시참여 불가, 순차 참여 가능, 취성때는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는 해당사업 참여 후 6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도 동일, 직업훈련은 장려금만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가능,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6개월 경과, 직접일자리사업은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유예 6개월이나, 주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총족시 순차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동시 참여 불가, 순차참여 가능, 가입기간 겹치면 취업성공금 지급불가</li> </ul>	고용 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I 유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II유형 만18 ~ 34세 청년 (고졸비진학 청년, 대학 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연매출 1억5천만 이하 영세자영업자 등)</li> <li>- 소득산정 방식 : 최근 3개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I유형, I유형 중 일부 특정계층* 과 II유형 중 34세 이하 청년층은 별도 소득요건 없음</li> <li>* (I 유형 중 특정계층)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 (부) · 한부모, 국가유공자, FTA 피해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설</li> </ul>	고용 노동부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비고																												
	<p>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p> <p>* 가구원파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개별가구 판단기준 (주민등록 세대원, 세대원의 30세 이하 미혼자녀, 세대원의 배우자,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생계책임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따름, 가구 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p> <p>*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p>																													
국민 취업 지원 제도	<p>- 대상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재산 상한은 6억원 범위내 결정) 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월 50 × 6개월) 지급</p> <p>* 단, 청년 (18 ~ 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p> <p>- 소득산정 방식 : 등록된 가구원 전체 소득 (2021년 1월 시행 예정)</p>	고용 노동부																												
청년 행복 주택	<p>- 대상 : 대학생계층 (대학생, 졸업후 중퇴한지 2년 이내 취준생), 청년계층 (만 19 ~ 34세 청년, 취업한지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추직후 2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는 재취업 준비생 + 미혼 + 주택청약가입), 신혼 부부 등</p> <p>- 소득산정 방식 (대학생계층)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100% (3인이하 540만원) (청년계층) 세대주인 경우 본인과 부모님소득 (3인이하 540만원, 본인소득 432만원) 세대원인 경우 본인소득 432만원 단독세대주인 경우 본인소득 432만원</p>	국토부																												
주거	<p>- 대상 :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만 19세 ~ 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p> <p>보증금 7천, 월세 50만원 대출지원</p> <p>- 소득산정 방식 : 미혼자 본인, 기혼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p> <table border="1" data-bbox="354 1106 961 1548"> <thead> <tr> <th data-bbox="354 1106 413 1161">구분</th> <th data-bbox="413 1106 583 1161">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th> <th data-bbox="583 1106 778 1161">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th> <th data-bbox="778 1106 961 1161">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4 1161 413 1275">신청 대상</td> <td data-bbox="413 1161 583 1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24세</li> <li>소득 5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ul> </td> <td data-bbox="583 1161 778 1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34세</li> <li>소득 5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li>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li> </ul> </td> <td data-bbox="778 1161 961 1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34세</li> <li>소득 2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ul> </td> </tr> <tr> <td data-bbox="354 1275 413 1348">대상 주택</td> <td data-bbox="413 1275 583 1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이하</li> <li>보증금 0.5억원 이하</li> </ul> </td> <td data-bbox="583 1275 778 1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이하</li> <li>보증금 2억원 이하</li> </ul> </td> <td data-bbox="778 1275 961 1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이하</li> <li>보증금 0.5억원 이하</li> <li>월세금 60만원 이하</li> </ul> </td> </tr> <tr> <td data-bbox="354 1348 413 1385">대출 금리</td> <td data-bbox="413 1348 583 1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 2.7%</li> </ul> </td> <td data-bbox="583 1348 778 1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li> </ul> </td> <td data-bbox="778 1348 961 1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 : 1.8%</li> <li>월세금 : 1.5%</li> </ul> </td> </tr> <tr> <td data-bbox="354 1385 413 1457">대출 한도</td> <td data-bbox="413 1385 583 14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li> </ul> </td> <td data-bbox="583 1385 778 14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억원 (보증서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100% 또는 80%)</li> </ul> </td> <td data-bbox="778 1385 961 14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 : 3.5천만원</li> <li>월세금 : 960만원 (임차보증금의 80%)</li> </ul> </td> </tr> <tr> <td data-bbox="354 1457 413 1503">대출 기간</td> <td data-bbox="413 1457 583 1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td> <td data-bbox="583 1457 778 1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td> <td data-bbox="778 1457 961 1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td> </tr> <tr> <td data-bbox="354 1503 413 1548">전달 체계</td> <td colspan="3" data-bbox="413 1503 961 15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수탁은행 또는 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를 통해 대출 신청 ]</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24세</li> <li>소득 5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34세</li> <li>소득 5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li>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34세</li> <li>소득 2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ul>	대상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이하</li> <li>보증금 0.5억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이하</li> <li>보증금 2억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이하</li> <li>보증금 0.5억원 이하</li> <li>월세금 60만원 이하</li> </ul>	대출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 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 : 1.8%</li> <li>월세금 : 1.5%</li> </ul>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억원 (보증서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100% 또는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 : 3.5천만원</li> <li>월세금 : 960만원 (임차보증금의 80%)</li> </ul>	대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전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수탁은행 또는 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를 통해 대출 신청 ]</li> </ul>			금융위
구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24세</li> <li>소득 5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34세</li> <li>소득 5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li>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 34세</li> <li>소득 2천만원 이하</li> <li>순자산 2.88억원 이하</li> <li>무주택 세대주</li> </ul>																											
대상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이하</li> <li>보증금 0.5억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85㎡이하</li> <li>보증금 2억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이하</li> <li>보증금 0.5억원 이하</li> <li>월세금 60만원 이하</li> </ul>																											
대출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 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 : 1.8%</li> <li>월세금 : 1.5%</li> </ul>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억원 (보증서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100% 또는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 : 3.5천만원</li> <li>월세금 : 960만원 (임차보증금의 80%)</li> </ul>																											
대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4회 연장, 최장 10년)</li> </ul>																											
전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수탁은행 또는 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를 통해 대출 신청 ]</li> </ul>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비고
청년 전월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정 방식 : (버팀목)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중소기업) 외벌이가구 단독세대주 (3천5백만원) or 배우자 합산소득 (5천만원), 국세청 자료 활용 (청년전용보증부월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총소득 2천만원 이하, 국세청 자료 활용</li> </ul>	국도부
청년 희망키움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청년 (만15세 ~ 39세)</li> <li>- 소득산정 방식 :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 소득인정액</li> </ul>	복지부
청년 저축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 청년 (만15 ~ 39세)</li> <li>- 소득산정 방식 :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 소득인정액</li> </ul>	복지부
복지 금융 건강	<p><b>** 1세대 구성 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과 배우자</li> <li>○ 다음 요건 충족하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①·직계비속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li> <li>② 동거입양자 포함</li> </ul> </li> </ul> <p>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주소·거소 거주</li> </ul> <p>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p>	
	<p><b>2 가구단위로 지급 - 가구원 중 1명에게만 지급</b></p> <p>동일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판단</p> <p>※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더라도 형제(부양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제외), 사촌이거나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p>	국세청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생계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li> <li>소득산정 방식 :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 소득인정액</li> <li>① 30세미만 미혼자녀는 세대원이 아니어도 동일가구로 간주.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gt; 부모가구가 자녀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는 것 방지</li> </ul>	복지부

구분	대상자 선정기준	비고
	②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취·창업자녀의 만 18세 (2002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 (198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동일 보장가구원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가구 자격산정시 가구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부모가구가 자녀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는 것 방지	

11-1092000-000067-01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인 쇄** 2020년 7월  
**발 행** 2020년 7월  
**발행처**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866-6384 대표 이호분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 (학술정보관)